

2025년 독도연구소 국제학술회의

러일전쟁과 영토의 지정학적 조명

Geopolitical Illumination of the
Russo-Japanese War and Territory

러일전쟁과 유라시아 지정학의 변천

| 일시

2025. 2. 25.(화) 13:00 ~ 18:00

| 장소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2025년 독도연구소 국제학술회의

러일전쟁과 영토의 지정학적 조명

Geopolitical Illumination of the
Russo-Japanese War and Territory

러일전쟁과 유라시아 지정학의 변천

| 일시

2025. 2. 25.(화) 13:00 ~ 18:00

| 장소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 목 차 ◆

환 영 사 ----- 7

박지향 Park Jihang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제 1 부

20세기 초 유럽에서의 러시아 문제와 고전 지정학의 형성 ----- 11

The Russian Question and the Formation of Classical Geopolitics in Early 20th Century Europe

이진일 Lee Jin-Il (성균관대학교 교수)

A.T. Mahan이 바라본 러일전쟁과 러일해전 ----- 37

The Russo-Japanese War and the Russo-Japanese Naval Battle as Seen by A.T. Mahan

김영수 Kim Young-Soo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생존경쟁과 영토팽창 : 동경대 7박사 집단이 제시한 러일전쟁 개전론의 사상적 배경 검토 ----- 55

Struggle for Survival and Territorial Expansion: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the Russo-Japanese War Opening Argument Presented by the Seven Doctors Group

박해운 Park Hae-Woon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제 2 부

러일전쟁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 러일관계 ----- 81

Russo-Japanese Relations from the Russo-Japanese War to World War I

이나바 치하루 Inaba Chiharu (메이조대학교 교수)

냉전 전후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개념과 독일-러시아 관계 ----- 99

Geopolitical Concepts of Eurasia Before and After the Cold War and the German-Russian Relationship

요르그 도스탈 J.M. Dostal (서울대학교 교수)

전후 일본 외교에서 미중소 관계의 지정학적 해석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일소국교정상화,
중일국교정상화 교섭을 중심으로 ----- 139

Geopolitical Interpretation of US-China-Soviet Relations in Postwar Japanese Diplomacy:
Focusing o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Japan-Soviet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and China-Japan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송병권 Song Byeong-Kwon (상지대학교 교수)

지정학적 관점으로 본 푸틴의 유라시아 전략 ----- 159

Putin's Eurasian Strategy from a Geopolitical Perspective
이주연 Lee Ju Yeo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제 3 부 ----- 175

종합토론

- o 구자정 Koo Ja-Jeong (대전대학교 교수)
- o 석주희 Suk Ju Hee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o 정준영 Jung Joon-Young (서울대학교 교수)
- o 송휘영 Song Hwi-Young (영남대학교 교수)
- o 손석의 Sohn Suk Eui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o 서인원 Seo In-Won (독도학회 이사)
- o 최덕규 Choi Deok-Kyoo (고려대학교 교수)

러일전쟁과 영토의 지정학적 조명

Geopolitical Illumination of the Russo-Japanese War and Territory

러일전쟁과 유라시아 지정학의 변천

| 주최 동북아역사재단

| 일시 2025. 2. 25.(화) 13:00 ~ 18:00

| 장소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개회식 (Opening Ceremony)		사회 : 석주희 Suk Ju Hee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3:00 ~ 13:20	환영사 (Welcome Remarks) 기념 촬영 (Photo Time)	박지향 Park Jihang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제1부 러일전쟁과 고전 지정학 The Russo-Japanese War and Classical Geopolitics		사회 : 도시환 Doh See-Hwan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장)
13:20 ~ 13:45	20세기 초 유럽에서의 러시아 문제와 고전 지정학의 형성 The Russian Question and the Formation of Classical Geopolitics in Early 20th Century Europe	이진일 Lee jin-Il (성균관대학교 교수)
13:45 ~ 14:10	A.T. Mahan이 바라본 러일전쟁과 러일해전 The Russo-Japanese War and the Russo-Japanese Naval Battle as Seen by A.T. Mahan	김영수 Kim Young-Soo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4:10 ~ 14:35	생존경쟁과 영토팽창 : 동경대 7박사 집단이 제시한 러일전쟁 개전론의 사상적 배경 검토 Struggle for Survival and Territorial Expansion: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the Russo-Japanese War Opening Argument Presented by the Seven Doctors Group	박해운 Park Hae-Woon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14:35 ~ 14:50	휴식 (Break Time)	
제2부 러일전쟁 이후 유라시아 지정학 논의 Discussion of Eurasian Geopolitics after the Russo-Japanese War		사회 : 도면희 Do Myoun-Hoi (대전대학교 교수)
14:50 ~ 15:15	러일전쟁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 러일관계 Russo-Japanese Relations from the Russo-Japanese War to World War I	이나바 치하루 Inaba Chiharu (메이조대학교 교수)
15:15 ~ 15:40	냉전 전후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개념과 독일-러시아 관계 Geopolitical Concepts of Eurasia Before and After the Cold War and the German-Russian Relationship	요르그 도스탈 J.M. Dostal (서울대학교 교수)
15:40 ~ 16:05	전후 일본 외교에서 미중소 관계의 지정학적 해석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일소국교정상화, 중일국교정상화 교섭을 중심으로 Geopolitical Interpretation of US-China-Soviet Relations in Postwar Japanese Diplomacy: Focusing o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Japan-Soviet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and China-Japan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송병권 Song Byeong-Kwon (상지대학교 교수)
16:05 ~ 16:30	지정학적 관점으로 본 푸틴의 유라시아 전략 Putin's Eurasian Strategy from a Geopolitical Perspective	이주연 Lee Ju Yeo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6:30 ~ 16:50	휴식 (Break Time)	
제3부 종합토론 (Comprehensive Discussion)		사회 : 김종근 Kim Jong-Geun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16:50 ~ 18:00	구자정 Koo Ja-Jeong(대전대학교 교수), 석주희 Suk Ju Hee(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정준영 Jung Joon-Young(서울대학교 교수), 송휘영 Song Hwi-Young(영남대학교 교수), 손석의 Sohn Suk Eui(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서인원 Seo In-Won(독도학회 이사), 최덕규 Choi Deok-Kyoo(고려대학교 교수)	

환영사

환영사

(러일전쟁과 영토의 지정학적 조명 학술회의)

안녕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박지향입니다.

먼저 저희 재단 독도연구소에서 개최하는 이번 학술회의에 외국인 학자로 참석해주신 이나바 치하루(稲葉千晴) 메이조대학 교수님, 요르그 도스탈(J.M. Dostal) 서울대학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표를 비롯하여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선생님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술회의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는 그 동안 영토 및 해양 관련 주요 현안들을 중심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일본의 독도침탈 120년의 역사적의의를 조명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영토 의식은 근대 민족국가의 성립을 전후하여 ‘민족’의 연대감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민족의 내부 결속과 자아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였고, 동시에 주변국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러일전쟁과 유라시아 지정학의 변천’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러일전쟁은 1904년 2월 8일에 발발하여 1905년 9월까지 이어진 전쟁으로, 지정학적으로 한국을 둘러싼 러일간의 충돌이었습니다. 1905년, 러시아와 일본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의 의미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러일전쟁 및 이후 국제질서 형성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지정학 이론을 통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충돌에 대해 분석합니다.

둘째, 독일 지정학의 수용을 통한 일본의 생존경쟁 및 러일전쟁 개전의 정당화 논리를 비롯하여, 이후 러일협약을 통해 만주와 한국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강화된 과정을 조명합니다.

셋째, 푸틴의 유라시아 전략과 신유라시아주의 개념을 통해 현대 러시아의 지정학 전략을 분석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대외정책 방향을 논의합니다.

따라서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러일전쟁과 지정학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국제적 시각에서 동북아 지역의 역사적 사건을 재해석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러일전쟁과 독도침탈 등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연계된 현재의 문제에 대한 조명을 통해 향후 동북아 질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학술회의를 기획하고 준비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25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박지향

러일전쟁과 영토의 지정학적 조명

제1부 러일전쟁과 고전 지정학

The Russo-Japanese War and Classical Geopolitics

발표 1

20세기 초 유럽에서의 러시아 문제와 고전 지정학의 형성

The Russian Question and the Formation of Classical Geopolitics in Early 20th Century Europe

이진일 Lee Jin-Il (성균관대학교 교수)

발표문 1

20세기 초 유럽에서의 ‘러시아 문제’와 고전 지정학의 형성:
“위기는 동쪽에서”

이진일 (성균관대학교 교수)

목차

- I. 문제의 제기: 러시아와 지정학의 두 뿌리
- II. 19세기 러시아의 부상과 유럽의 반러시아주의
 1.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반러주의
 2. 독일의 반러 전통
- III. 고전 지정학의 전개와 러시아
 1. 대륙 지정학: Ratzel - Kjellen
 - 1) 랫젤의 유기체적 국가론
 - 2) 쉘렌의 국가학
 2. 해양 지정학: Mahan
- IV. 러일전쟁 이후 유럽의 지정학적 전개
- V. 맺음말: 1차 세계대전을 향하여

I. 문제의 제기: 러시아와 지정학의 두 뿌리
지정학이란 영토상의 지배와 경계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다루는 학문이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여러 이론가들은 지정학적 충돌의 역사를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이후의 육상세력과 해양세력간의 충돌의 역사로 이해해 왔다. 즉 지구 공간을 대륙과 바다로 나누면서 한 국가의 지배력이 이 양 세력 중 어디에 위치짓게 되느냐에 따라 전 지구적 지배와 세력 확보의 문제가 결정된다는 사고가 서구 지정학의 전통적 틀을 규정해왔다. 이에 따라 지리적 위상이 국가적 충돌과 국경의 확장에서 결정적 틀을 제공했고, 지리가 국가간 교역과 관계 설정, 지역적 통합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지정학적 이론틀을 구성한 이들의 중심에는 앵글로-색슨 지리학자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지정학적 전략의 성립의 배경에는 19세기 후반 이후 전개된 제국주의적 침탈과 영제국의 지속적 세계시장 지배를 위한 전략적 고려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지정학 이론의 다른 한편에는 독일 지리학이 중심이 된 국가유기체론이 자리한다.¹⁾ 인간은 공간 속에서 성장, 운동하며, 공간의 지배를 추구하고, 자신의 종족을 위해 가장 적절한 공간을 선택하고자 하지만, 제한된 공간은 인간으로 하여금 분배의 갈등을 일으키게 만든다. 이를 랫젤은 ‘생존공간’(Lebensraum)으로 명명했다.²⁾ 즉 공간을 두고 벌어지는 투쟁은

1) 일반적으로 지정학을 ‘geopolitics’로 표현하지만, 지정학이 갖는 독일적 뿌리, 혹은 쉘렌(Rudolf Kjellen)이 주조한 지정학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를 ‘Geopolitik’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도 특별히 독일적 지정학을 의미할 경우에만 ‘지정학(Geopolitik)’으로 표현하였다.

2) Friedrich Ratzel, *Der Lebensraum*, Darmstadt 1901, p. 3.

인간 존재를 위한 투쟁의 중심이 되며, 한 나라가 성장하고자 한다면 다른 나라들을 향해 일어나 싸우고 교류하며 그들에 의지해 성장해야 한다고 서술한다. 제국주의 시대 그의 이러한 이론은 맥킨더를 비롯해 당대의 수많은 정치, 지리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공통적으로 이들 지정학 이론의 두 뿌리에는 당대의 확장하는 러시아에 대한 전적인 경계와 의심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객관적 진실과 무관하게 서유럽인에게 러시아는 반(反)문명적 야만과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러일전쟁을 정당화시킬 필요가 있던 일본이 러시아를 대하는 시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냉전이 끝난지 3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러시아라는 충격이 유럽을 넘어 전 세계를 흔들고 있음을 지켜보고 있다. 과장된 혐오와 배제 뒤에는 흔히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한다. 19세기 이후 다양했던 유럽의 위기와 전쟁의 배경에도 많은 부분 러시아와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사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유라시아를 배경으로 벌어진 크고 작은 전쟁들의 대부분에는 러시아가 개입되어 있음을 본다. 크림 전쟁(1854-56), 러시아-터키 전쟁(1877-78), 2차 아프간 전쟁(1879), 러일전쟁(1904-05), 1/2차 발칸 전쟁(1913-14), 1/2차 세계대전(1914-18/1939-45), 한국전쟁(1950-53) 등이 그 목록이다. 어쩌서 러시아는 제국주의가 가장 정점에 이른 시대에 유라시아 대륙의 동과 서에서 이처럼 거의 모든 국제적 갈등에 발을 담그게 된 것일까?

전통적으로 유럽 열강들의 러시아에 대한 감정은 양가적이었다. 한편으로는 러시아를 차르 체제하의 미개한 국가로 보면서 무시 내지는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의 문화를 찬양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영토적 팽창이 필연적으로 서유럽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상충된 감정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유럽인들에게 러시아는 한편으로는 1917년 혁명 이후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고자 야욕에 불타는 경계와 타도의 대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전간기 독일에서는, 소련도 바이마르 공화국과 마찬가지로 앵글로-색슨 세계가 주도하는 전후 구도에서의 동일한 희생자이며, 같은 'have-not'에 속하는 국가로서, 연대해 이들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구도에 대항해 함께 싸워나가야 할 '운명공동체'(Schicksalsgemeinschaft)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본 글에서는 국가유기체론을 통해 지정학 이론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패권국으로서의 해양력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한 랫젤과, 그와는 달리 영국의 해양 제국주의적 팽창을 모범 삼아 해양세력으로서의 미국의 세계 진출 전략을 제시했던 마한을 분석의 중심에 놓으면서, 이들 초기 지정학자들이 러시아라는 유라시아 중심의 거대 국가를 놓고 구성하는 상충하는 지정학적 논의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는 19세기 중반 이후 유럽에서 진행된 반러시아적 논의와 담론들을 거쳐 러일전쟁을 하나의 변곡점으로 1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구성되는 지정학적 담론의 초기 형성의 역사를 러시아와의 관련성을 중심에 두고 살펴봄으로써 전 지구적 차원에서 오늘날 확대되고 있는 지정학적 충돌의 뿌리를 확인하고자 한다. 다른 한편 초기 지정학자들의 고전적 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충돌이 실제로는 제국주의적 각축 속에서의 '러시아 문제'³⁾의 해결을 위한 방책이었음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⁴⁾ 분석의

3) 역사 정치학 용어로서 '독일 문제'(Deutsche Frage/ German Problem)라는 용어는 있지만, '러시아 문제(Russian Problem)'라는 용어는 없다. '독일 문제'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단순히 독일이 유럽에서 일으키는/일으켰던 다양한 문제들을 총괄해서 부르는 일반적 지칭이 아니라, 유럽 내에서 독일의 특별하고도 왜곡된 발전의 역사가 만들어 낸 특정한 영향력과 상황들을 의미하는 고유한 개념이다. 그렇기때문에 여기에서는 '러시아 문제'를 러시아가 유라시아 반도의 동서양에서 일으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일반적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4) 지정학이 전개되는 역사를 구분할 때 지정학이 처음 학문으로서 성립되는 시기나 명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이견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전 지정학'으로 명명하면서, 랫젤에서 시작되어 쉘렌에 의해 'Geopolitik'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19세기 후반에서 1차 세계대전

주된 텍스트로는 랫젤과 쉘렌의 지정학 관련 일련의 저술들, 그리고 1900년 Alfred Mahan의 해양사 저서들과 당대의 아시아 세계를 지정학적으로 분석한 저술들이 될 것이다.

II. 19세기 러시아의 부상과 유럽의 반러시아주의

1.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반러주의의 부상

유라시아 대륙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을 논할 때 핵심적 요소는 “러시아가 아시아와, 또한 유럽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라는 질문일 것이다. 지리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역사, 문화적으로도 러시아가 동양과 서양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인식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와 이해를 나누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게도 오랫동안 공유되어 왔다. 러시아 스스로도 이 둘 사이 어디에도 소속을 정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내부적 자각과 충돌의 과정을 겪는다: “러시아에서 이 양가성은 동과 서 사이의 일종의 존재적 불확정성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다시 말해 거의 3세기 동안 불가항력적으로 몹시 성가시게 이 사회의 자의식의 정중양을 관통해 온, 진정한 지리적 정신분열증이라고 할 수 있다.”⁵⁾

물론 어느 국가나 지리적 위상이 국가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국민성과 주변 이웃 국가들의 인식을 결정적으로 지배해 오기는 했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유라시아 대륙 한가운데에 차지하고 있는 나라라면 지리적 위상이 주는 영향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특별히 더 강력할 것임은 상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국을 향한 여정의 시작으로 평가되는 16세기 차르 이반 4세에 의한 동부로의 확장은 1552년부터 1917년까지 해마다 평균 10만 제곱킬로미터씩 영토를 확장했다.⁶⁾ 그런 한편 표트르 대제 이래 러시아는 끊임없이 자신들이 유럽에 속한 국가임을 증명하고자 시도한다. 3차에 걸친 폴란드 분할(1772, 1793, 1795년)과 1809년 핀란드의 합병으로 마침내 유럽 동부와 북부에 안착할 수 있었다. 또한 19세기 제정 러시아는 카프카스 지역과 투르키스탄을 통해 중앙아시아까지 세력을 넓혀간다. 유라시아 대륙의 서부에서 러시아는 무엇보다 발칸반도에 교두보를 확보해 보스포로스 해협과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자 했다. 크림전쟁(1853-56) 이후 영국의 목표는 파리조약(1856년)을 통해 러시아가 동지중해를 위협하거나 영국의 영토와 인도행 행로를 교란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다. 그러나 프랑스가 1870년 프로이센과의 전쟁에 패배하면서 파리조약의 정치적 토대가 무너진다. 러시아는 프랑스의 약화를 틈타 오스만 제국을 침략하고자 노렸고, 흑해함대 건설을 밀어 붙이면서 흑해 동안의 도시 포티(Poti)에 새로운 군항도시를 건설한다. 1878년 산스테파노 조약에 의해 오스만이 물러나면서 불가리아의 영토가 발칸 반도에서 확대되자 유럽의 열강들은 그 배후에 있는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긴장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의도와 여긔나게 발칸반도에서 불가리아가 거듭 영토를 확대시켜 나가자 러시아는 불가리아 군주를 납치해

종전까지의 시기를 지정학의 형성기로 삼았다. 투아타일(Gearóid Ó Tuathail)은 <The Geopolitics Reader>에서 ‘제국주의적 지정학’/‘냉전의 지정학’/‘지정학의 새로운 질서’ 등으로 구분하면서 하우스호퍼(Karl Haushofer)와 스파이크만(Nicholas Spykman)까지 하나의 카테고리로 넣는다. 이에 반해 오루린(John O’Loughlin)은 <Dictionary of Geopolitics>에서 1870-1920년까지를 ‘고전 지정학의 시대 (the period of ‘classical geopolitics’)'로, 1920-45년까지를 파시스트 지정학과 민주적 지정학의 대결 시대, 1945년 이후의 미국 주도의 지정학시대, 1980년대 이후의 비판지정학(critical geopolitics)의 출현 등 네 시대로 구분한다. Gearóid Ó Tuathail, Simon Dalby (ed.), *The Geopolitics Reader*, London, NY 1998, p. 5. John O’Loughlin, *Dictionary of Geopolitics*, Westport 1994, Introduction 참조

5) 마크 바신, “아시아”, 니콜라스 르제프스키 (역음), 『러시아 문화사 강의』, 그린비 2011, p. 102-143, p. 103.

6) 헨리 키신저, 『세계질서』, 민음사, 2016, p. 66. 제인 버뱅크, 프레더릭 쿠퍼, 세계제국사, 책과함께 2010, p. 282ff.

강제로 퇴위시키는 등 불가리아를 복종시키고자 했으나 실패한다. 영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가 불가리아를 지지하자 러시아로서는 불가리아와 전쟁을 치를 수도 없는 형편이 된다.

러시아는 범슬라브주의의 실현을 명분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내 슬라브족을 지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남동유럽에서 오스만의 뒤를 이어 이곳에서 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또 다른 제국인 오스트리아-헝가리와 부딪힐 수 밖에 없었다. 한쪽은 튀르크 부족에 맞서 유럽의 동쪽 관문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또 다른 한쪽은 발칸반도의 정교회와 슬라브 민족의 수호자로 서로를 견제하고 밀어내고자 한 것이다.⁷⁾

광대한 영토를 소유한 국가의 지정학적 운명은 정치적 통일에 있다고 받아들인 러시아는 19세기 말이면 지정학적 실체로서 완전히 그 형태를 갖추게 된다. 하지만 19세기 중반 이후 확장된 동부 영토는 인구가 낮거나 거의 없는, 근대 문화와 기술의 영향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지역들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확장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된 것은 그들이 동아시아에 대해 어떤 선호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지역이 유럽에 비해 정복하기 쉽고 저항도 적었다는 점에 연유할 것이다.⁸⁾ 1865년 모스크바 언론계의 차르로 불리던 M. N. Katkov는, “러시아가 아시아에서 확장하는 일은 러시아를 유럽에서 약화시킬 것이다. 여기에 열강으로서의 러시아의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부의 경계 영지를 지배하고 흑해에 다다를 때 생겨난다. 우리의 역사가 수행되는 곳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다”⁹⁾ 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도스토예프스키는 1881년,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유럽에서 이루지 못한 국가적 쇄신을 아시아를 통해 이룰 수 있음에 아시아에 의미가 있다고 쓴다: “당신들은 보지 못합니다, 아시아로 새로이 돌아감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아메리카 발견 당시 유럽에게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 그 사명, 아시아에서 우리의 문명 교화 사명은 우리에게 활기를 줄 것입니다. ...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해나가기만 한다면.”¹⁰⁾ 즉 아시아가 러시아를 유럽으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와 국가적 정체성의 표현이었으며, 동시에 자신들을 제대로 된 유럽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서구에 대한 적대감의 표현이기도 했다.

이미 러일 전쟁의 발발 오래 전부터 광대한 동아시아 제국을 획득할 전망에 사로잡힌 고문들에 둘러싸여 있던 니콜라이 2세(1894-1917 재위)는 북중국으로, 요동반도와 조선 북부로 꾸준히 진출하며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갔다. 1860년 블라디보스톡을 만들면서 극동 정복과 동해 접근이 완성되었지만 1896년 조선 국왕의 러시아 공사관 피신과 1897년 12월의 요동반도 점령은 일본을 자극했다. 1899년에는 러시아가 부설하는 남만주철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며, 1903년에는 동청철도의 전 노선이 개통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가 다시금 유럽 열강들의 긴장을 고조시켰지만,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받아들인 국가는 일본이었다: “러시아가 한반도에 괴력을 지닌 팔을 뻗는 날이 즉 일본의 인내심도 폭발하는 날이라는 것은, 만주문제가 제기된 첫 단계부터 구미 여론이 기대했던 바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실로 이마저도 참았다. ... 일본 국민의 성질을 이해하는 열강들 역시 사실 이와 같은 인내가 일본에게는 얼마나 커다란 고통인지 양해할 것이다.”¹¹⁾

7) 1903년 세르비아에서의 국왕 암살과 이를 둘러싼 발칸 국가 내에서의 요동치는 국제관계에 대해서는 크리스토퍼 클라크, 『몽유병자들』, 책과함께 2019, p. 39ff에서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8) 마크 바신, “아시아”, p. 110-116. Mark Bassin, *Imperial Visions. Nationalist Imagination and Geographical Expansion in the Russian Far East, 1840-1865*, Cambridge 1999, p. 19-36.

9) Dietrich Geyer, *Der russische Imperialismus 1860-1914*, Göttingen 1977, p. 77 재인용.

10) 마크 바신, “아시아”, p. 128-9

11) <도쿄아사히신문> 사설 (1903. 10. 28.), 와다 하루키, 『러일 전쟁. 기원과 개전 2』, 한길사 2019,

극동에서 프랑스-러시아가 자치령을 소유하게 될 가능성에 놀란 일본은 영국과 동맹을 맺기를 원했고, 영국 또한 영일동맹(1902)을 통해 지금까지의 '영광의 고립'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 동맹은 극동에만 제한된 동맹이었다. 러시아의 만주 변경에서 일본 지상군이 가하는 위협은 영 제국의 북인도 변경의 취약한 상태를 상쇄할 것이고, 일본 함대는 러시아 함대에 대항해 균형을 맞춰줄 것이었다.¹²⁾ 영국이 보기에 문제의 핵심은 러시아의 권력과 영향력 증대였다. 그래서 영국은 일본 편에 서서 러시아의 위협을 견제하고자 했고, 동시에 러시아의 도전에 대응해 제국 세력권 분할 협정으로 러시아를 속박하려 했다.

러일전쟁을 정당화하고 일본에서 주전론을 이끌었던 상충하는 다양한 논리들 가운데 하나가 전쟁을 야만과 문명간의 전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었다. 가토 요코는 러일전쟁 발발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남만주의 문호를 폐쇄하는 러시아가 문명국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위의 권리로 응징해야 된다는 당대의 논리(1904년)를 인용한다:

“우리들이 러시아의 영토확장 그 자체에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다만 그 영토확장 정책이 반드시 가장 비문명적인 외국무역의 배척을 수반하기 때문에, 맹연히 자위의 권리를 대항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¹³⁾

즉 그 기준이야 무엇이든 비문명국이라면 전쟁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정당하고, '문명의 적'을 응징한다는 논리가 당대에 국민들을 움직일 수 있는 설득력을 가졌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문화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덜 발전된 국가를 식민화하고 더 넓은 공간을 획득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당화했다. 이러한 논리의 배경에는 인종주의적, 인류학적 요소들과 지리 결정주의가 결합했다: “황화라는 말이 타타르 인종의 침입을 의미한다면 나는 도리어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하는 것이 황화라고 생각한다”¹⁴⁾ 즉 한편으로 일본은 스스로를 서구 문명에 동일화시켜 아시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인식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동양 문명을 대표해 러시아에 패배를 가함으로써 아시아에서의 특권을 강조해야만 했다.

러시아 또한 “유럽 기독교 문명의 다른 주역들과 함께 신의 뜻에 의해 화석화된 동양사회에 계몽과 문명을 가져다줄 사명을 지게 되었다는 확고한 신념”¹⁵⁾에 기대어 스스로의 정체성을 서구 제국들에 묶어놓으려 했다. 하지만 서구인들이 바라보는 러시아에 대한 시각도 일본이 보는 그들에 대한 시각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이곳 러시아인들은 나를 즐겁게도 하고 놀라게도 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콘스탄틴의 정원에 있는 훈족이나 고트족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우리의 문명을 좋아하고 경멸하며,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것이 되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명 성장의 과실들을 관찰하고 있으며, 그것이 익기를 기다려 와서 취하고자 합니다.”¹⁶⁾

많은 서유럽인들에게서 러시아는 “유럽적 외피를 쓴 아시아 국가”¹⁷⁾거나, “유럽의 심장에 대초원의 활력을 안겨주는 혼혈아 같은 존재”였다¹⁸⁾. 기본적으로 이런 '문명 대 야만'이라는

p. 913 재인용.
 12) 크리스토퍼 클라크, 『몽유병자들』, p. 236.
 13)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정로(征露)의 목적”, 『신인(新人)』, 1904년 3월호, 가토 요코, 『근대 일본의 전쟁 논리』, 태학사, 2003(2002), p. 135 재인용.
 14) 다구치 우키치(田口卯吉), 『파황화론(破黃禍論)』, 1907, 야마무로 신이치, 『사상과제로서의 아시아』, 소명, 2018, p. 114 재인용.
 15) 마르크 바신, “아시아”, p. 121.
 16) Cecil Spring-Rice가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루즈벨트에게 보낸 편지 (1897.8.1.), Sönke Neitzel, *Weltmacht oder Untergang. Die Weltreichslehre im Zeitalter des Imperialismus*, Paderbornd 2000, p. 242 재인용.
 17) 박노자, 『전쟁 이후의 세계』, 한겨레 2024, p. 39.

이분법은 인종주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전개되었고 다시금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환원되었다. 후일 카를 비트포겔에 의해 유명해진 “동양적 전제주의”(Oriental Despotism)라는 도식에 따르면 차르 전제정은 동양식 전제주의의 러시아적 변형에 불과하며, 러시아 독재정 제도는 모스크바 공국과 러시아 제국의 사회를 정치적으로 더 다자화된 유럽국가들의 사회로부터 구별하는 근거가 되었다.¹⁹⁾

2. 독일의 반러 전통

위협에 대한 강조는 상대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다. 독일의 러시아 대한 두려움은 19세기 전체를 관통해온 오래된 현상이다. 전통적으로 독일은 유럽의 동부에 대해 양가적 감정을 갖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가능성과 불안이 늘 있어왔고, 독일의 동쪽 국경과 서쪽 국경 양 쪽으로부터 동시에 전선을 맞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들이 이미 1860년대 말부터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동부 유럽 민족에 대한 근거없는 우월감에 바탕해 이들 지역으로의 독일 영토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거나 부분적으로는 이주를 실행에 옮겨왔다. 즉 두려움과 우월감이 한데 섞이면서 동유럽, 슬라브족, 러시아를 향한 진격이 민족 확대의 필연적 전제로 변형되었다.²⁰⁾ 나치 시대 ‘동부로의 진격’(Drang nach Osten)이라는 표어로 상징되는 동부 유럽과 남동유럽을 향한 침략 욕구는 부분적으로는 중세시대부터 진행된 유럽 동부에서의 독일인의 식민과 이주에 연원을 두고 있지만,²¹⁾ 인종적 우월감과 비문명 지역에 대한 개화의 사명이 겹쳐지면서 기존 주민에 대한 일방적 집단추방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사고는 빌헬름 2세 황제 시대 주로 반러 사고를 지닌 언론인들과 범독일연맹(Alldeutscher Verband) 등 게르만 민족주의적 극우 단체들에 의해 주장되고 확산되었고 러시아에 대한 선제공격의 주장으로까지 이어진다: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이 25년 동안 제대로 설 수 없을 만큼 러시아가 많은 피를 흘리게 해야 한다. 우리는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는 그들 정부를 황폐화시키고, 그들의 해안도시를 폭격하며, 그들의 산업과 상업을 파괴함으로써 러시아의 경제적 원천을 장기간 흔들어야만 한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들 세계의 기반이 되고 있는 북해와 흑해의 양 바다로부터 러시아를 쫓아내야 한다.”²²⁾

비스마르크의 목적은 유럽에서의 세력균형이었고, 다른 열강들이 반독일 동맹을 결성해 만들어질 중부 유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는 1879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18) 헨리 키신저, 『세계질서』, p. 63.

19) 마르크 바신, “아시아”, p. 109.

20) 1870년대 이후 독일인의 반러감정과 적대상(敵對像)의 형성에 대해서는 Fritz Fischer, *Krieg der Illusion. Die deutsche Politik von 1911-1914*, Düsseldorf 1974, p. 77 “Ideologie der Russlandfeindschaft” 장에서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21) 예를 들어 베사라비아(Bessarabia)는 러시아가 터키와의 전쟁(1806-1812)의 결과 흑해 연안에 새롭게 획득한 영토로서, 19세기 초 독일인들이 집단 이주해 살던 곳이다. 1800년대 초 이전에는 오스만 제국,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루마니아의 영토가 된다. 그러나 나치는 이 지역을 ‘독일 민족의 품’으로 되찾았고, 1940년 다시금 소련의 영토로 귀속된다. 소련의 패망 이후 이 지역은 몰다비아와 우크라이나 영토로 나뉘게 되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재는 다시 러시아가 일부를 점령 중인 지역이 되었다. Dieter Langewiesche, “Wo der deutsche Osten lag”, Annette Grossbongardt, Uwe Klussmann, Norbert Pötzl (ed.), *Die Deutschen im Osten Europas*, München 2011, p. 140.

22) 빌로우가 홀슈타인 수상에게 (1887. 12.10), Fritz T. Epstein, “Der Komplex ‘die russische Gefahr’ und sein Einfluss auf die deutsch-russischen Beziehungen im 19. Jahrhundert”, in: Immanuel Geiss, Bernd J. Wendt (ed.), *Deutschland in der Weltpolitik des 19. und 20. Jahrhundert*, Düsseldorf 1973, p. 145-6. 재인용.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대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방어조약을 체결하며, 이는 1881년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3제동맹으로 발전한다. 그 목적은 프랑스가 러시아와 반독일 동맹을 맺지 못하도록 함에 있었다. 1882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를 묶는 3국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독일은 유럽의 중앙부에서 서쪽은 프랑스에, 동쪽은 러시아에 대항하는 견고한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비스마르크는 1887년 러시아와의 재보장 조약을 통해, 한쪽이 제 3국과의 전쟁에 관여할 경우 중립을 지키기로 약속했지만,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하거나, 러시아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공격할 경우에는 중립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독일과 프랑스간의, 혹은 러시아와 오스트리아-헝가리 간의 전쟁 시도는 단념될 수밖에 없었다.²³⁾ 또한 조약은 러시아의 보스포루스 해협 장악을 인정하기로 했다. 바로 이런 비스마르크의 애매모호한 외교정책 덕에 발칸반도는 20년 이상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을 수 있었다.

1888년 빌헬름 2세가 새롭게 독일제국의 황제로 등극하고, 그 2년 후 비스마르크가 실각하면서 그동안 유럽 열강의 균형 내에서 자제해 왔던 독일의 제국주의 정책은 새로운 단계를 맞게 된다. 새 수상 카프리비(Georg Leo Graf von Caprivi)는 유럽에서의 세력균형 유지를 통한 독일의 안전 보장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유럽 중심부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힘을 합쳐 프랑스, 영국, 러시아와 경쟁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이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이었다. 카프리비가 보기에 러시아와의 재보장 조약은 실효성도 없고 독일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보호해 줄 이유도 없었다. 독일은 더 많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독자정책을 펴야했다. 그래서 그는 1890년 러시아와의 재보장조약의 연한이 다 되자 자동 소멸되도록 방치한다²⁴⁾. 이는 무엇보다 러시아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러시아는 당연히 독일에 맞설 수 있는 견제 세력을 찾았고, 프랑스가 기꺼이 이에 호응했다. 프랑스로서는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 둘은 영국과 독일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경계한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입장이었다. 이처럼 1882년 양국간의 합의는 2년 후 양국간의 군사조약으로 발전한다. 프랑스는 러시아가 독일로부터 공격받거나 독일과 연합한 오스트리아로부터 공격받을 경우 러시아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반대로 러시아는 프랑스가 독일에 의해 공격받거나 독일과 연합한 이탈리아에 의해 공격받을 경우 프랑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프랑스와 러시아의 '어울리지 않는'(incongruous) 연합"²⁵⁾의 뿌리는 1870년 독일제국의 알자스-로렌 지방 병합에 뿌리를 대고 있었다. 이후 프랑스는 오로지 이 지역을 되찾기 위해 국민 여론을 부추겼으며, 반독일 연맹을 결성해 독일을 견제하는 것을 외교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만일 프랑스가 러시아와 동맹을 맺는다면 독일은 동과 서, 양 전선에서 적대국과 맞부딪게 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독일이 먼저 러시아를 동맹체제 안에 끌어들이는 방법(삼제동맹, 1873년) 밖에 없었다. 하지만 발칸 반도를 두고 러시아와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이 동맹은 불안정할 수 밖에 없었고, 만일 독일이 이 양

23) 크리스토퍼 클라크, 『몽유병자들』, p. 212.

24) 독일의 각료들은 빌헬름 2세를 신뢰하지 않아, 정책 수립과정에서 그를 멀리했으며, 러시아와의 재보장 조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서도 빌헬름 2세는 관여하지도,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고 한다. 전적으로 전혀 외부 경험이 없던 수상인 카프리비의 결정이었다. 독일에서 카이저가 일시적으로 행동의 자유를 되찾는 경우는 모로코 위기에서처럼 고위 관료들의 정책이 실패한 경우였다. 크리스토퍼 클라크, 『몽유병자들』, p. 297 참조.

25) Frederick J. Teggart, "Geography as an aid to statecraft. An appreciation of Mackinder's 'Democratic Ideals and Reality'", *Geographic Review* Vol. 8, N. 4/5, 1919, p. 241. 맥킨더는 이를 민주정과 전제정 간의 동맹이라면서, 프랑스가 독일이 동유럽에서 위협의 중심지임을 일찌기 간파해 러시아와 동맹을 맺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나름의 일관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맥킨더, 『심장지대』, 글항아리 2022, p. 178-180.

국 중 하나를 골라야만 한다면, 오스트리아의 후견인을 자처하는 독일로서는 러시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와 독일의 외교방식을 비교해 키신저는 다음과 같이 독일의 대처를 비판한다: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의 제안이 거부되자 독일 지도자들은 심기가 불편해졌고, 호전적으로 돌변했다. 이런 식의 접근법은 느리면서도 점진적인 절차를 거쳐 합의를 받아들였던 프랑스와 현저하게 대조되었다. 프랑스는 러시아를 20년 동안 기다렸고, 또다시 영국을 15년 동안 기다리면서 합의를 제안했다. 비스마르크 이후 독일은 자신이 초래한 소란에도 불구하고 외교정책이 상당히 아마추어처럼 서툴렀고, 근시안적이었으며, 심지어 자신이 야기한 대결 구도에 막상 직면하면 소심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²⁶⁾

영국은 프랑스-러시아간 동맹이 지속되는 한 독일의 침공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고, 굳이 독일과 유대를 강화해 프랑스와 러시아 양국으로부터 적대감을 살 이유도 없었다. 그리고 1904년 영국-프랑스간의 화친협정(Entente Cordiale)이 맺어지자 독일은 고립무원에 빠지게 된다. 독일에 남은 카드는 외교가 아닌 오로지 군비증강과 자력으로만으로 위기를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독일 정치인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유독 느리게 깨달았는데, 주된 이유는 세계 제국들 사이에 계속되는 갈등 자체가 그들이 독일에 맞서 결코 단합하지 못할 것을 보장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독일 정책 수립자들은 화해정책을 통해 고립을 타파하기는커녕 자립 추구를 지도 원리로 격상했다. 이 노선을 드러낸 가장 중요한 징후는 대규모 해군 증강 결정이었다.”²⁷⁾

이처럼 독일은 1870년 통일 이후 전 세계를 긴장시켰지만, 그들의 노력에 비해 얻은 소득은 사실상 없었다. 빌헬름 2세의 소위 ‘세계정치’(Weltpolitik)는 오히려 불안정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불필요한 경계만 증가시켰다. 독일은 ‘러시아의 위협’ 뿐 아니라 ‘황화’(gelbe Gefahr)에 대한 두려움도 컸다. 러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04년 2월 4일 독일 제국의 수상인 빌로우(Bülow)는 독일 황제에게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확장에 대한 러시아의 도전을 칭찬하면서 만일 러시아가 이를 회피한다면 20년 내에 모스크바와 폴란드는 일본에 위협 아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⁸⁾

독일의 민족주의 보수 역사가이면서 세계를 여행한 인종연구가이기도 한 비르트 (Albrecht Wirth, 1866-1936)는 1905년, 자신의 저서 『황색인종과 슬라브인의 위협』에서 독일이 당면한 러시아의 위협과 황색인종의 위협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어느 위협이 더 급박한가에 대해 비유적으로 주장한다: “슬라브의 위협과 황색 위협, 이 두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이 두 악조건 중에서 우리는 보다 작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의 교주만은 현재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들으면 조급해진다. 이 질문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완전히 균형을 상실했다. 분명, 그렇다, 확실하게 동아시아에서의 우리의 소유물은 위협당하고 있다. 어찌면, 아마도, 우리는 그것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전적으로 손가락 하나를 잃는 것일 뿐이다; (그에 비하면, 필자) 유럽, 우리의 동쪽 국경에서는 팔 전체를 잃는 문제이다.”²⁹⁾

26) 헨리 키신저, 『외교』, 김앤김북스, 2203, p. 182.

27) 크리스토퍼 클라크, 『몽유병자들』, p. 249

28) Fritz T. Epstein, “Der Komplex ‘die russische Gefahr’ und sein Einfluss auf die deutsch-russischen Beziehungen im 19. Jahrhundert”, Immanuel Geiss, Bernd J. Wendt (eds.), *Deutschland in der Weltpolitik des 19. und 20. Jahrhundert*, Düsseldorf 1973, p. 144.

29) Albrecht Wirth, *Die gelbe und die slawische Gefahr*, Berlin 1905, p. 34.

Ⅲ. 고전 지정학의 전개와 러시아

1. 대륙 지정학: Ratzel - Kjellen

1) 랫젤의 유기체적 국가론

아직 ‘지정학’(Geopolitics/Geopolitik)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이전 ‘정치지리학’(politische Geographie)은 주로 국가의 경제, 인구, 정치 등에 관한 다양한 통계를 기후나 식생과 같은 자연지리적 요소와 연결시켜 서술하는 방식이었다.³⁰⁾ 여기에 독일 지리학자 프리드리히 랫젤(Friedrich Ratzel, 1844-1904)은 자연지형이 갖는 정치적, 전략적 기능을 핵심으로 하는 학문분과를 처음으로 구상했다. 해외에서 벌이는 거대한 정복 전쟁들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들을 제시해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할 것인가?: 제국주의 시대의 정치지리학은 당대 제국주의 국가들이 갖고 있던 패권세력으로서의 정복욕에 대한 강력한 ‘자연법칙적’ 근거를 제공했다. 동물학자이자 자연지리학자였던 랫젤은 이러한 논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지정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하는 근간을 만든다. 그가 ‘Politische Geographie’(정치 지리학)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던 문제는 유기체적 국가의 공간적 확장의 문제였다. 민족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공간상태까지 팽창하면 자연적으로 국가는 확장과 정복을 시도하게 된다. 인간에게는 <성장하는 공간의 법칙>이란 것이 있으며³¹⁾, 이는 동물의 왕국에서 목숨을 걸고 하는 싸움과 같은 것이다. 그는 동물학이나 식물학적 법칙이 통용되는 자연과학적 원리를 세계사 해석에도 적용해, ‘생존공간’(Lebensraum)이란 개념을 1901년 처음 만들어 사용한다.³²⁾ 그는 해양세력인 영국과 육상세력인 독일은 서로가 완전히 다른 삶의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영국만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섬 국가로서의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을 이용하는 법을 이해한 국가이며, 최근에는 일본 또한 영국의 예를 따르고자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³³⁾ 그렇지만 랫젤은 독일이 육상에서의 세력 확대만을 추구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토의 확장이 필요하지만, 이미 유럽 대륙의 고정된 정치 체제 안에서는 한계에 달했고, 이제는 바다로의 진출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본 것이다. 과거 그리스나 로마부터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까지 제국주의 국가들처럼 독일도 무역은 해군 깃발을 따르고, 이들의 보호 아래 자신들의 무역의 자유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엄청난 공간에 대한 지배가 바다를 통한 접근으로 가능하며, 세계 지배 또한 우선 바다로의 접근이라는 작은 걸음의 시작에서 성장하게 된다. 바다는 스스로를 가두기도 하지만, 바다의 모든 부분들은 대양의 일부이고, 그 자체로서 자유이다. ... 공간관계에서 바다가 지구의 가장 거대한 통일적 현상임은 육지보다 훨씬 분명하게 드러난다. 모든 국가의 발전은 좁은 공간에

30) 이러한 이론들이 학문적으로 정립되기 전인 19세기 후반 시도된 이러한 이론화는 주로 지리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에 따라 학문적 개념도 ‘정치 지리학’(Political Geography)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다. ‘지정학’(Geopolitik)이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17년 쉘렌(Rudolf Kjellen)에 이르러서다. 헤트너(Alfred Hettner) 등 유럽을 하나의 독립된 대륙이 아니라 아시아 대륙의 서쪽 반도로 보기 시작하는 시각도 이들 19세기 후반 유럽의 지리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들 세기 전환기 유럽 지리학의 흥성에 대해서는 Iris Schröder, “Das Europa der Geographien: Deutsch-Französische Geographien Europas im späten 19. und frühen 20. Jahrhundert”, H. Kaelble, *Selbstverständnis und Gesellschaft der Europa*, Frankfurt/M., 2008, p. 29-60.

31) Friedrich Ratzel, “Die Gesetze des Räumlichen Wachstums der Staaten. Ein Beitrag zur wissenschaftlichen Politischen Geographie”, *Petermanns Mitteilungen*, XLII 1896, p. 97-107.

32) ‘Lebensraum’의 단어상 의미로는 일상적 ‘생활공간’으로 통용되는 의미와 특별히 지정학적 용어로 덧씌워진 개념의 두 의미가 있다. 여기서는 이 후자를 ‘생존공간’으로 표현하였다.

33) Friedrich Ratzel, “Inselvölker und Inselstaaten. Eine politisch-geographische Studie”, *Kleine Schriften*, Bd. 2, München 1906, p. 294-310.

서 넓은 공간으로의 발전이라는 법칙하에 놓여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해양의 지배도 점증하는 공간의 법칙에 따라 발전하며 바다는 이 법칙을 대륙보다 훨씬 분명하게 보여준다. 왜냐하면 바다의 광활함과 평평함이라는 면에서 공간은 그 자체로서 훨씬 탁월하기 때문이다. 바다에서 가장 큰 문제는 거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이며, 그것에 비하면 육지에서의 교통에 영향을 주는 다른 많은 부수적 요소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³⁴⁾

랏젤은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자였다. 이미 젊은 시절부터 <범독일연맹>등을 통해 극우 민족주의 그룹의 해외 식민지에 대한 욕망에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독일 해군의 급격한 확장이 독일이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길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엄청난 필력으로 다양한 당대 문제에 관해 언급하는데, 1884년 해외 팽창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에 이어, 1900년에는 해양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해군력 증강을 강조해 해군주의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어내기도 했고, 해양을 “민족의 규모를 결정하는 원천”이라고 공개적으로 찬양하면서 당대의 전함 건설 붐에 기름을 붓는다.

1900년의 저서 『민족 규모의 원천으로서의 해양』에서 랏젤은 “독일의 세계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양에서도 강력해져야만 한다”면서, 자신의 해양력 강화에 대한 사고는 이미 독일에서 전함 건설을 두고 거센 논쟁이 일기 이전부터 <정치 지리학>(Politische Geographie, München 1903)등의 저서를 통해 주장해왔음을 밝힌다. “모든 국가의 발전은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의 전개라는 법칙 하에 놓여있다”³⁵⁾ 라고 표현함으로써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넓은 공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유기체적 특성을 설명한 랏젤의 유명한 문장도 바로 이 저서에 기원한다. 이 문장에 이어 그는 바다가 갖는 육상보다 우월한 통일적 모습에 대한 서술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모든 해양에 대한 지배 또한 확장하는 공간의 법칙에 따라 성장하며, 바다는 이 법칙을 육지보다 훨씬 분명하게 보여준다. 왜냐하면 공간 자체가 바다의 광활함과 평평함 속에서 훨씬 순수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 세계 열강이 된다는 것은 곧 해양세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거기에 독일의 해군 문제의 결정적 의미가 있다”³⁶⁾는 것이다. 그는 영국이 세계의 해양권을 점령하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았다: “대륙 세력의 해군이 영국에 의해 파괴되고 난 이후 수십년간 세계의 모든 바다는 영국의 손에 넘어갔었으며, 과거에 없던 차원의 해양 세계제국을 이룩해 냈다. 오늘날 새롭고 거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으며, 그 시작은 프랑스가 1830년 지중해에서 알제리를 정복하고 지중해의 해양세력이자 식민지 세력으로 복귀했을 때부터였다.”³⁷⁾

또한 그는 세계사에서 지배적 민족과 그 밑에 복속하는 민족은 언제나 있어 왔다면서,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망치가 될지, 아니면 그 밑에 놓여진 모루가 될 것인지는 그 민족이 세계적 상황의 요구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인식하는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았다.³⁸⁾ 랏젤에게 있어 중부유럽은 사실상 독일과 동일하며, 독일의 중부유럽 정책은 세계정책과 동일한 의미였다. 한 가운데 위치한 국가는 인구상의 압력과 중심적 위치로 인해 강자의 정치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는데, 독일이 갖는 중심적 위치의 가장 큰 문제는 프랑스와 러시아를 통해 양 옆이 집게처럼 눌러있게 되는 것이었다. 만일 독일의 외교정책이 이러한 학문적 지식에 기반한 불

34) Friedrich Ratzel, *Das Meer als Quelle der Völkergrösse*, München 1900/11, p. 5.

35) “Alle Staatenentwicklung steht unter dem Gesetz des Fortschreitens von engen zu weiten Räumen.” Ratzel, *Das Meer als Quelle der Völkergrösse*, München 1900/11, p. 5.

36) Friedrich Ratzel, 앞의 책, p. 5, 378.

37) Friedrich Ratzel, 앞의 책, p. 378.

38) Friedrich Ratzel, “Flottenfrage und Weltlage” (1897), *Kleine Schriften*, Bd. 2, München 1906, p. 377.

가피성을 소홀히 한다면, 주변 이웃국가들에 의해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예측했다. 그는 독일을 중부유럽의 지도적이고 지리적으로 보장된 세력으로서, 러시아, 영제국, 미국 등과 동등한 권한을 인정받는 세계적 국가로 치켜세운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계획으로서 그는 독일에 의해 지배되고 제어되는 ‘중부유럽 경제연합’ (mitteleuropäischen Wirtschaftsverein)의 창립을 지지했다.³⁹⁾

국가를 거대한 유기체로 파악하는 시각, 더 나아가 ‘생존공간’의 요구는 전적으로 지정학이 만들어낸 발명품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하나의 다듬어진 논리로서 작용하면서 이미 러일 전쟁 이전부터 독일의 팽창적 사고를 지탱하는 이론적 배경이 된다.

랏젤은 순수하게 해양권력만으로는 지배적 권력을 유지할 수 없으며, 그래서 “유일하게 세계권력의 기반을 추구할 수 있는 대 정책의 이상형은 ... 대륙적 모티브와 대양적 모티브를 결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⁴⁰⁾ 그 결과 러시아가 태평양과 아시아로 진격하는 것은 지배적 지위를 취하기 위한 하나의 자연스런 과정으로 보았고 진정한 패권국가로서의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러시아는 도나우 강 하부에서 우수리강까지 지역의 경화되고 욕구없는 민족의 힘을 주도했으며, 이들은 정치적으로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유럽 쪽 튀르키예,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중국, 조선이 와해되고 새롭게 건설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 모든 지점에서 러시아는 영국과 만나며, 대륙국가로서의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힘을 넓은 기반 위에 지속적으로 여기에 투입할 수 있음에 비해 영국에게는 자신과 이들 현상들 상이에 바다가 가로놓여 있다. 러시아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서울까지 여기에서 자신들의 절대적 힘을 대단히 잘 발휘할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다.”⁴¹⁾

2) 셸렌의 국가학

19세기 후반, 독일인이 아니면서 랏젤의 이론을 수용해 독일적 시각으로 세계를 보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자신만의 이론을 구성하고 있던 학자가 있었다. 셸렌(Alfred Kjellen, 1864-1922)은 1900경년부터 예테보리 대학(Gothenburg University)에서 세계 열강에 대한 강연을 시작하며, 그 첫 결과를 1905년 두 권의 저술로 내놓는다.⁴²⁾ 그는 당대의 패권 국가로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총 8국가를 선택하고, 각 국가마다의 국가적 기원, 제국으로서의 위상, 민족, 사회 및 국가체제, 외교 문제 등을 국가학적 입장에서 그들 고유의 지정학적 특성에 기반해 분석한다.

셸렌의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은 1809년 러시아의 핀란드 합병을 이웃 국가로서 지켜본 다른 스칸디나비아인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에게서 러시아는 수세기 동안 경제적 융성에 대한 노력없이 무자비하게 자신들 국가의 외적 경계를 넓히기 위해서만 진력해온 국가였다. 그들은 유럽 역사에서의 전형적 특징들, 즉 기사제도나 학술제도, 르네상스, 계몽 등등에 참여하지 않

39) Friedrich Ratzel, “Der mitteleuropäische Wirtschaftsverein”, *Grenzboten*, 1904, 1, p. 253-259, p. 258.

40) Friedrich Ratzel, *Das Meer als Quelle der Völkergrösse*, p. 72.

41) Friedrich Ratzel, “Politisch-geographische Rückblicke. 3. Das russische Reich”, *Geographische Zeitschrift* 1898, 4, H. 5, p. 268-274, 268.

42) Rudlof Kjellen, *Stormakterna: Konturer kring samtidens storpolitik (the Great Powers: Contours of contemporary high politics)*, I/II, Stockholm 1905. 이후 그는 1911-13년 사이 초판을 더 확장시켜 발간하며,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20년 제목을 <*The Great Powers and the world crisis*>로 바꿔 전후 바뀐 현실에 맞는 개정판이 나온다. 그의 책은 1930년까지 23판을 거듭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15년 라이프치히/베를린에서 출간된 독일어본을 참고하였다. *Die Grossmächte der Gegenwart*, Leipzig/Berlin 1915.

고 문화적으로 오직 자신들만의 뿌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크림전쟁을 통한 강제적 접촉 이후 유럽의 문화적 이상을 향한 새로운 개혁의 시기를 맞는다: 농노제의 폐지, 일종의 자치제의 도입 및 철로의 건설이 그 결과이다. 19세기 말이면 근대적 산업발전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세기가 시작하면서 외적 팽창이 실패로 돌아가자 헌법제정과 농업개혁 등이 이루어졌다. 이제야 비로써 러시아는 외관상 서구 문화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자신들의 비잔틴적 국가교회와 황제정치적 국가정신(cäsaristischen Staatsgeist)을 유지하고 있고 세계관과 관습에 있어 여전히, 나아가 그들의 문자나 낱자계산에 있어서까지 유럽 너머 자신들만의, 절반은 아시아에 속해있다.”⁴³⁾

셀렌은 랏젤을 인용하면서 러시아 민족성의 종속적 성격과 유럽인의 자유로움을 비교한다: “러시아 제국의 전례없는 확대는 러시아 민족의 오리엔탈적 국민성과 함께 카이사르주의(caesarism)를 자연스러운 국가형태로 이끌었다. 이런 상황이 유럽이 대 민족이동을 통해 그들이 살던 가까운 지역 대신 바다를 건너 서부로 들어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동부에서 사람들은 ‘찬 바람 속에 있는 것 같이’(랏젤) 느꼈던 것이다.”⁴⁴⁾

당대의 많은 언론인과 학자들이 거대한 대륙 국가로서의 러시아와 미국의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비교하는 서술들을 남기지만, 많은 경우 미국에 대해서는 그들의 지리적, 혹은 경제적으로 요소들을 비교적 사실에 근거해 기록함에 비해, 러시아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 차르 제국으로 대표되는 야만적이고 전체적 군주국가로서의 위험과 예측 불가능성을 강조한다. 셀렌도 러시아가 갖고있는 지리적 특성들을 설명하면서 기존 유럽이 갖고 있는 러시아적 황량함에 대한 인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서로 상반되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러시아의 경관 유형은 그저 단순한 한가지일 뿐이다: 툰드라, 숲, 무한히 뻗어있는 스텝. 거대한 확산 자체의 이면에는 러시아 제국의 자연적 지세의 단조로움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것이 러시아의 발전에 일정 정도 무기력을 부여한다. 또한 전체 제국의 3/4정도를 구성하고 있는 아시아적 부속 건물에서뿐만 아니라 나머지 본토에 해당하는 곳에서도 국가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강력한 퇴조는 명백하다.”⁴⁵⁾

이어서 셀렌은 러시아를 전쟁에서 패퇴시킨 일본에 대해 호의적 시각을 보이면서 러일 전쟁을 계기로 미래의 러시아의 파국을 예견한다:

”시작에서는 러시아가 더 무게가 있었다. 러시아는 외교적 방식으로 (독일과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뤼순항을 넘어 그 적들을 직접적으로 조종하였고, 1898년에는 직접 중국으로부터 조차지를 획득하고 1900년 보어전쟁 기간 동안 만주에서 확고하게 입지를 다짐으로서 이 거대한 나라가 영원히 이 지역을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듯 보였다. ... 백해의 얼음과 흑해의 막다른 골목 사이에 끼인 거인이 마침내 황해를 향한 팔 하나를 자유롭게 뻗게 된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미 대파국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1904-5년 일본과의 전쟁은 그 웅장한 건물이 그저 세계사의 포템킨적 허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태평양을 향한 길이 다시금 막힌 것이다. - 추측컨대 영원히.”⁴⁶⁾

랏젤의 지정학적 시각을 이어받아 셀렌은 기본적으로 독일 중심주의적 세계관의 기반 위에서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독일이 갖는 지리상의 중심적 위치로부터 두 개의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사실들을 끌어내는데,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포위의 위험이다. 이는 오직 대대적인

43) R. Kjellen, *Die Grossmächte der Gegenwart*, Leipzig/Berlin 1915, p. 157.

44) R. Kjellen, *Die Grossmächte der Gegenwart*, p. 169.

45) R. Kjellen, *Die Grossmächte der Gegenwart*, Leipzig/Berlin 1915, p. 158.

46) R. Kjellen, 앞의 책, p. 176-7.

전쟁무기 확보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안에서의 자연에 기반한 지도자적 위치이다. 독일이 놓인 자연지리적 강제력이 빌헬름 제국의 군사주의와 제국주의를 그 어떤 비판과 제어의 외곽에서 독립적으로 대응하면서 자립적 경제를 쫓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비록 한 사람은 자연과학자에서 시작했고 또 다른 이는 사회과학자로서 국가학적 입장에서 이 주제를 다루었지만, 두 사람 공히 세계 패권국가로서 독일이 지향해야 할 외교정책과 유럽 정책의 핵심 열쇠를 지리적 상관관계들 안에서 규정하는 공동의 결과에 도달했다. 러시아를 유럽의 가장 큰 위협의 대상으로 보고 경계함에서도 동일했다. 중부유럽 내 독일의 공간적 확장에 있어 랫젤과 쉘렌 사이에는 오직 한 가지 차이만 있었는데, 랫젤은 그 핵심을 서쪽에서 동유럽으로의 확장에 있다고 보았음에 비해, 쉘렌은 베를린-바그다드 축이라는 의미에서 남동유럽 공간을 강조했다.⁴⁷⁾

2. 해양 지정학: Mahan

유럽 대륙에서 랫젤과 쉘렌이 국민의 삶과 국가의 성장을 공간에 대한 자연법칙적 성장과 소멸의 원리에 입각해 설명하고자 시도했다면, 유럽 대륙 건너 영국과 미국에서는 해양세력과 육상세력 간의 필연적 충돌이라는 또 다른 지리결정론적 해석에 입각해 국가간의 충돌을 설명함으로써 고전 지정학의 또 다른 기반이 만들어진다. 지금까지 세계 열강들은 각자 자신의 지리적 위상에 따라 바다나 대륙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해 왔지만, 이제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패권을 결정함에 있어 자신들이 위치한 세력 기반을 넘어서는 문제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의 연장에서 세계사의 전개 자체를 육상세력과 해양세력의 대결로 해석하면서 지금까지 역사에서 해양세력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지배해 왔다면, 20세기를 맞아 육상세력에 의해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논의를 주도했던 이들이 앵글로-색슨적 배경을 갖고 있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영미권에서 처음으로 역사 속 해양세력의 절대적 부상을 가장 대중적으로 각인시킨 사람은 미국의 해양사학자겸 제독 알프레드 마한(Alfred Mahan, 1840-1914)이었다. 그는 이미 1890년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을 발간해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고, 근대 해군 전략과 해군 정책 이론의 총체적 기반을 마련해 ‘해양의 클라우제비츠’라는 명성을 얻기까지 했다.⁴⁸⁾ 그는 이 책을 통해 강대국들의 승패는 주로 해상에서의 군사행동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유지되리라는 것이다. 당연한 귀결로 함대의 증강을 통한 미국 해양력의 강화를 주장한다.⁴⁹⁾ 영국에서도 마한의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1660-1783>은 ‘해군주의자들

47) R. Kjellen, 앞의 책.

48) Alfred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Boston 1890 (알프레드 마한,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1/2, 책세상, 2006). 일본에서는 1897년 마한의 책이 <해상권력사론>으로 번역되어, 당대 러일전쟁시 연합함대 사령장관의 작전참모 아키야마 사네유키 등에 의해 널리 소개된다. 그의 영향력으로 제해권과 통상지배의 확보가 해상권력의 목표라고 하는 발상과 함대결전을 제해권 확보의 핵심으로 보는 견해가 일본에 널리 유포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카토 요코, 『근대 일본의 전쟁논리』, p. 139. 러일 전쟁시 대한 해협 해전에서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격파했던 우리유 소토카치(瓜生外吉, Uryu Sotokichi)는 마한의 해군사관학교 교관 시절 그의 직접적 제자였으며, 이 해전 계획을 수립한 참모 아키야마 사네유키(秋山真之, Akiyama Saneyuki) 중령은 미국 유학 중 마한을 직접 찾아가 1897년 뉴욕에서 직접 그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Sadao Asada, *Culture Shock and Japanese-American Relations*, Columbia 2007, p. 64.

49) 해양력과 해군력은 구분되어야 한다. 여기서 해양력(sea power)을 “넓은 의미의 해양력은 무력에 의해 바다나 바다의 일부분을 지배하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통상과 해운도 포함하고 있다”는 마한의 견해를 받아들인다. 마한,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1, p. 70. 같은 시기, 즉 1893년 미국의 역사가(Fredrick J. Turner)는 “The Significance of the Frontier in American History”를 발표하면서, 대륙 서부의 미개척지를 향해 뻗어가던 미국의 확장도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다는 테

의 바이블'이 되면서 찬사와 공경의 대상이 되었다.⁵⁰⁾

그는 세계적 패권 국가는 동시에 언제나 해양세력이었다면서, 1660년, 즉 30년 전쟁이 마무리된 이후부터 1783년 인도양에서 벌어진 영국과 프랑스의 해전까지 서구 국가들이 벌인 약 30개의 해전을 분석하고 그 경과를 서술함으로써, 세계사의 중요한 해전을 통해 국가 해양력의 제고를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전략들을 끌어내고자 했다. 그에게서 영국 해군은 미국 해군이 따라야 할 역사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해양국가였다.

그는 강력한 해양력 획득을 위한 일반적 조건으로서 다음의 여섯가지를 제시한다:⁵¹⁾

- 1) 국가의 지리적 위치
- 2) 자원, 기후, 해안선과 같은 물리적 조건들
- 3) 영토의 크기
- 4) 인구
- 5) 국민성
- 6) 정부 형태와 그에 수반하는 정치 제도.

이 여섯 가지 조건들이 적절하게 조합할 때 강력한 상선단과 함선단의 건설은 국가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 도구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그는 한 국가의 해양력을 해외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서 '식민지'를 추가한다: "영국의 해군기지는 전 세계에 퍼져있다. 그래서 영국 함대는 자국의 기지를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기지들 사이의 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기지들을 은신처로 삼을 수 있다."⁵²⁾ 당대의 다른 모든 지리/지정학자들처럼 그 또한 철저한 식민주의자였으며, 미국의 문호개방정책 (open door-politic)에 앞장선 전도사였다.⁵³⁾

마한의 영향력과 함께 때마침 가열되는 식민지 쟁탈 각축은 해군력 증강에 대한 세계적 경쟁으로 이어진다. 여기에는 발전하는 함정 건조 기술도 큰 몫을 한다. 함정의 크기가 급속히 커졌고, 건조비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이 국가재원의 많은 부분을 함대 건설에 쏟아 부으면서 영국이 18세기 이후 이루고 유지해온 해양강국으로서의 절대적 위상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⁵⁴⁾ 1883년까지 영국 전함의 수는 세계의 다른 모든 국가들의 전함을 합친 것과 맞먹는 수였으나, 이제 점차 그 간격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각국의 전함 보유수 (1883-97)⁵⁵⁾

	1883년의 전함	1897년의 전함 (건조중인 전함 포함)
영국	38	62

제를 발표함으로써 식민지 개척에 대한 미국의 팽창주의적 의지를 지정학적으로 뒷받침한다.

50) 영국에서의 마한의 역할을 독일에서는 랫젤의 *Das Meer als Quelle der Völkergröße*가 한다.

51) 알프레드 마한,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1, p. 76-153.

52) 알프레드 마한,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1, p. 144-5.

53) 마한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해에 서거한다. 마한의 영향력에 힘입어 1차 세계대전의 발발기까지 대부분의 강국들이 전함 확장에 주력하지만, 막상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전쟁에서 해군의 역할의 한계는 보다 분명해진다. 전함을 바다에서 결정짓기에는 육상과 공중에서의 무기들의 발전과 공급이 너무도 다양해진 것이다. 그럼에도 그가 남긴 저서들이 오늘날에도 해병 교육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고전으로 남아있음은 역설적으로 이 부문에 달리 더 이상 발전 될 여지가 없어서가 아닐까?

54) 폴 케네디, 『영국 해군 지배력의 역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 p. 347-353.

55) 폴 케네디, 앞의 책, p. 384

프랑스	19	36
독일	11	12
러시아	3	18
이탈리아	7	12
미국	0	11
일본	0	7

각국의 전함 보유수 1911(1913)⁵⁶⁾

	총 톤수	해군 병사	전함	대형 순양함	건설 중	드레드노트 전함 (Dreadnoughts) 1913년 가을
영국	198000 0	131000	61	38	8	28
독일	720000	45000	29	16	12	17
프랑스	626000	44000	17	21	10	8
러시아	624000	42000	13	3	4	4
이탈리아	540900	30500	19	5	4	4
오스트리 아-헝가리	236000	13400	10	3	2	4
튀르크	62500	3000	4	4	-	-

마한이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을 출간했던 1890년 5월은 마침 빌헬름 2세에 의해 비스마르크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두 달 후였다. 이제 홀로써야만 하는 제국의 젊은 황제는 마한을 읽고, 독일이 유럽을 넘어 세계적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영국처럼 해양으로 팽창해나갈 수밖에 없음을 확신한다. 그는 한 편지에서 “나는 지금 막 마한 함장의 책을 읽고 있다. 아니 씹어 삼키면서 외우고자 노력한다. 이 책은 일급의 책이며, 모든 측면에서 고전이다. 나의 모든 배들에는 이 책이 한 권씩 비치되어 있으며, 나의 장교들과 함장들은 부지런히 이 책을 활용하고 있다.”⁵⁷⁾고 쓴다.

근대 육군의 가장 중요한 모델을 제공한 프로이센의 전통을 이어받은 독일은 전통적으로 육군에 집중해왔다. 해군은 육군을 보충하는 또 다른 병과에 불과했다. 이는 독일이 유럽 내에서 가장 지배적인 육상세력으로 남고자 하는 전략에 따른 것이지만, 식민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점차 해양으로 나가야 한다는 견해들 또한 퍼져가고 있었다. 1890년대 중반부터는 대규모 해군을 건설하라는 국내적 압력이 ‘해군주의자들’의 주도로 급증했다.⁵⁸⁾ 비스마르크에게서 독일은 유럽에서 철저히 육상세력으로 남아야 했지만, 바로 그 점이 젊은 황제에게는 못마땅한 점이었고, 1890년 그가 물러난 이후 이제 독일이 ‘양지바른 곳’(Platz an der Sonne)을 찾아 세력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소위 ‘세계정책’(Weltpolitik)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안락했던 항구를 벗어나 거친 바다로 나가야만 했다. 1897년 제국 해군부장관에 임명된 티어피츠(Tirpitz)는 빌헬름 2세에게 “영국에 맞서는 군의 입장은 가능한 많은 수의 전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소위 ‘티어피츠-계획’(Tirpitz-Plan)이 채택되었고, 1898년에는 해

56) Friedrich Ratzel, *Das Meer als Quelle der Völkergrösse*, München 1911, p. 90.

57) W. E. Kivezey, *Mahan on Sea Power*, Oklahoma 1947, p. 63. Dirk van Laak, “Von Alfred T. Mahan zu Carl Schmitt: Das Verhältnis von Land- und Seemacht”, Irene Diekmann u.a. (eds.), *Geopolitik*, Bd. 1.1, Potsdam 2000, p. 260 재인용. 1898년 독일 제국해양부는 적어도 2,000부 이상 마한의 책을 배포했다.

58) 폴 케네디, 『영국 해군 지배력의 역사』, p. 357.

군양성법안이 마련된다. 그는 기술적으로 진보된 함선의 건축을 통해 해군의 전력을 높여 영국 해군의 위협을 막아내고자 했다: “국가는, 그것이 바다든 아니면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다른 어떤 것이든, 세계적 이해가 있는 한 이를 대변해야 하며, 자신의 영토적 범위를 넘어서 그 힘을 감지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의 세계 무역, 세계 산업, 원양 어업과 세계 교통, 식민지에 이르기까지 공격이 가능한 선단(Flotte) 없이는 불가능하다. 만일 국가의 힘이 해양, 즉 우리 해역 너머에서 뒤를 받쳐주지 못한다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국가들간의 이해 충돌과 자본과 무역세계에 대한 부족한 신뢰는 한 국가의 이런 삶의 외현들은 죽도록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아예 드러나지도 못하게 만들 것이다. 선단의 가장 우선적인 쓸모는 바로 여기에 있다.”⁵⁹⁾

하지만 독일 해군의 확장은 티어피츠의 예상과는 반대로, 영국으로 하여금 적대감만 증강시키고 그들을 전통적 고립으로부터 탈출시켜 새로운 동맹을 찾도록 만들었다. “1902년 경부터 독일은 영국 외교정책과 국방정책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었고 멀리 분산되어 있던 (영국의, 필자) 전함대대들을 북해로 끌어드리는 자석 역할을 하였다.”⁶⁰⁾ 결과적으로 독일 내에서의 티어피츠와 해군 지휘부의 군비경쟁은 요란한 수사와는 달리 변변치 못한 성과로 끝났고, 이미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영국과의 군비경쟁을 공식적으로 포기한다. 독일의 군함 건조는 전적으로 ‘세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구상된 것이었지만, ‘세계정책’ 안에는 구체적인 정책도 명확한 정의도 없었다. 이 시기 독일은 마리아나 제도, 캐롤라인 제도, 사모아 섬의 일부, 그리고 산동반도의 교주만을 얻었을 뿐이었다.⁶¹⁾

해양 세력, 즉 식민지 강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육상 세력으로 남을 것인가는 빌헬름 제국 이후 독일의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었다. 대독일 (Grossdeutschland)을 향한 독일의 경로는 ‘세계제국’(world empire)을 추구하는 ‘세계정책’(world policy/Überseepolitik)과 ‘유럽의 맹주’(Kontinental Macht)를 추구하는 ‘대륙정책’(Festlandspolitik/(Kontinentalpolitik)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린다. 비록 범독일연맹 (Alldeutscher Verband)같은 급진적 민족주의 집단에서는 이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취해야 할 목표라고 주장했지만,⁶²⁾ 1914년을 향한 국제적 긴장이 높아갈수록 제국 내부에서도 이 두 목표의 동시 추구가 지속되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다. 그리고 마침내 베트만 홀벡 제국 수상은 1911년 11월 제국의회에 출석해, “독일은 세계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먼저 유럽 대륙에서 살아남아야 한다”⁶³⁾고 선언하기

59) A. von Tirpitz, Taktische und Strategische Dienstschriften des Oberkommandos der Marine, Nr. IX vom 16. 6. 1894. Dirk van Laak, “Von Alfred T. Mahan zu Carl Schmitt: Das Verhältnis von Land- und Seemacht”, p. 261 재인용.

60) 폴 케네디, 『영국 해군 지배력의 역사』, p. 417.

61) 독일의 ‘세계정책’이 무엇보다 국내의 중산층과 국내 노동자 계급을 염두에 두고 국내 결속을 위해 구상된 정책이라는, 소위 ‘사회제국주의’(Sozialimperialismus) 이론은 1970년대 Hans-Ulrich Wehler와 이후 Wolfgang Mommsen 등에 의해 개진되었고, 제국주의를 해석하는 중요한 하나의 통로로 인정받는다. Hans-Ulrich Wehler, *Das Deutsche Kaiserreich 1871-1918*, Göttingen 1973; Wolfgang Mommsen, *Grossmachtstellung und Weltpolitik*, Frankfurt/M 1993.

62) Theodor Reismann-Grone, Eduard von Liebert, *Überseepolitik oder Festlandspolitik?* Alldeutsche Flugschriften 22. München 1905.

63) 브랜든 심스, 『유럽, 1453년부터 현재까지 패권투쟁의 역사』 II, p. 82; Volker Berghahn, *Germany and the approach of war in 1914*, NY 1993, p. 136-155. 하지만 그렇다고 독일이 완전히 해군 증강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1912년 티어피츠는 추가해군법을 통과시킨다. 그는 3척의 전함 건조 계획을 추가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독일 함대에서 활동 중인 함정수를 전함 17척과 전투 순양함 4척에서 전함 25척과 전투 순양함 8척으로 증가시킬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폴 케네디, 『영국 해군 지배력의 역사』, p. 410.

에 이른다. 1896년 이후 추구해 오던 해군 세력 증강정책에 대한 사실상의 폐기 선언이었고, 육군에 기반한 전통적 정책, 즉 '대륙정책'으로의 회귀를 의미했다.

해양 국가론은 민족적 열광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기는 했지만, 유럽의 중위에 위치해 있으며, 서부와 남부로의 확장의 길이 사실상 막혀있는 독일의 현실에서 목소리는 컸지만 소수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선박뿐 아니라 철로 등 교통수단의 발전과 문호가 개방된 세계 무역의 발전은 공간과 시간을 넘어 인간으로 하여금 장소가 주는 제한을 극복하게 만들었다. 지정학적으로도 해양을 통해 보다 짧고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해양 교통로의 전략적 중요성을 증가시켜가고 있었다. 1869년 처음 열린 수에즈 운하는 가장 대표적 표상이었고, 동시에 영국 해양력의 상징이기도 했다. 더우기 1914년 개통된 파나마 운하를 통해 수천 마일의 해상을 돌아가지 않아도 되었다. 그럼에도 해양교통은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무엇보다 기술의 발달은 배에 의한 물자 수송을 상대화시켰는데, 육상에서의 점차 촘촘해지는 철로망은, 특히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해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의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하필이면 러일전쟁 중 개통이되었다) 그 빠르기와 가격에서 해상 수송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간편한 수단이었다. 또한 도로 건설의 증가와 자동차의 증가는 해상 교역을 훨씬 넘어서기 시작했다.

물론 전함은 전쟁에서 전략적 총괄 계획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해전만으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게 되기는 어려웠다. 현실에서도 해양세력과 육상세력이 전적으로 전쟁에서 맞붙는 일은 드물며, 더욱이 전함이 전쟁의 결정적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아직 전투기가 일반적인 전쟁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마한은 러일전쟁을 설명하면서도, 또는 역사적 해전들을 예로 들면서도 전략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런 면에서 그의 저서들은 군사사라는 측면에서는 고전일 수 있으나, 해양의 경제적, 문화적 의미들을 강조하는 근대적 사회사 서술로서의 해양력의 역사로서는 한계가 분명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르사이유 조약에 의해 독일 해군이 무장 해제된 후 티어피츠는 자신의 회고록의 끝에 다음과 같이 씩씩한 소회를 적는다: “독일 민족은 해양을 이해하지 못했다.”⁶⁴⁾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오직 단 한번 영국 함대와 마주쳤지만 그 어떤 결정적 전투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어서 마한은 1900년 <아시아 문제와 그것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출간한다. 그는 책 전체를 통해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한다.⁶⁵⁾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의 문호개방의 실천 전략으로서의 해양력 증강이며, 두 번째는 어떻게 세계가 러시아의 전진을 막을 것인가였다. 마한에게서 ‘아시아 문제’란 곧 ‘러시아 문제’였다. 그는 다가올 육상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투쟁은 북위 30-40도 사이의 ‘주인없는 땅’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가 주인없는 땅이라고 표현했던 지역은 러시아의 남하에 필요한 공간이며, 그래서 이에 대응하는 러시아와의 싸움, 그리고 이에 대응해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이라는 네 해양 패권국가들이 하나의 동맹으로 뭉칠 것을 제안한다. 러시아의 남진과 확산을 열강의 포위를 통해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앵글로-색슨이 개입해 중국이 슬라브의 영토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까지의 러시아의 일반적 전진이라는 사실은 대부분 한 세대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지금 그 창의 끝은 아프가니스탄과 페르시아 사이로 들어가고 있고, 이는 페르시아를 관통해

64) Richard Hennig, *Geopolitik. die Lehre vom Staat als Lebenswesen*, Leipzig/Berlin, 1931, p. 97. 재인용.

65) A. T. Mahan, *The Problem of Asia and its Effect upon International Policies*, Boston 1900.

페르시아 만까지 전진하고자 하는 유혹과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한다. ... 이처럼 극동에서나 극서에서 우리는 끝없는 동일한 에너지를 발견하게 되며, 그 증상에 있어 간헐적이기보다는 열병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다. 러시아는 자연법칙과 인종적 본능에 복종해 지리적으로 양 측면에서 아시아의 남부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시아의 중심부가 아프가니스탄의 산맥들과 동투르크스탄과 몽골의 사막으로 덮혀 있기 때문이다. 비록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내적 행동을 통해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 팽창된 양 측면의 길이가 길다는 것이 물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결코 약점이 되는 요소가 아니다. 이 다양한 부분들의 상호 원조: 그래서 러시아의 중심부는 깨질 수 없다.”⁶⁶⁾ 마한은 독일과 일본에 호의적이었고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러시아의 팽창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IV. 러일전쟁 이후 유럽의 지정학적 전개

러일전쟁에서의 러시아의 패배는 러시아의 외교정책을 다시금 유럽에 집중하게 만든다. 러시아가 지난 10년간 극동에서 군사적, 외교적 한 노력은 모두 잃었다. 극동을 향한 러시아의 야심은 실질적으로 무너진다. 어렵게 유라시아 끝까지 연결했던 철도는 일본에게 빼앗기고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패퇴된다. 돌이켜보면 러시아가 패배한 이유는 러시아의 군사력이 일본에 비해 약해서라기 보다는 조만간 전쟁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던 그들의 막연한 낙관론에 있을 것이다. 어쨌든 전쟁에서의 패배는 러시아 자신을 바꾸게 한다. 국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팽창정책에만 몰두했던 차르 정권은 1905년의 혁명과 전쟁을 겪으면서 가능한 국내정치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단행한다. 외교적 위기로 인해 다시 혁명의 소용돌이로 빠져들면 안될 일이었다: “전쟁에서 패한 그해 10월 러시아 정부는 임의체포를 폐지하고, 연설, 종교의식,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는 차르의 성명을 발표한다. 또한 각종 법안은 두마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고, 징병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정치적 근대화 없이는 이제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이다.”⁶⁷⁾

러시아의 만주와 대한해협에서의 패전을 바라보는 서구 열강들의 심정은 복잡했다. 비스마르크의 퇴임 이후 어렵게 유지되던 유럽의 세력균형은 다시 무너지고 있었고, 러시아 군사력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이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다. 1908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병합은 비록 러시아 외무장관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발칸 반도에서조차 러시아가 물러나야만 하는 것을 의미했다. 러시아의 동부 확장정책은 결과적으로 발칸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켰고, 그 결과 러시아는 영국에게도 독일에게도 더 이상 위협적 대상이 아니게 된다. 그렇다고 서유럽에서 동쪽으로부터의 위협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이제는 독일 제국이 서유럽을 위협하는 주된 형상으로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러일전쟁의 결과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부에서의 갈등이 어느 정도 잦아들자 다시금 갈등의 초점은 유럽 대륙으로 옮겨오게 된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면서 영국으로서는 프랑스를 지원하는 길만이 프랑스를 독일의 침입으로부터 구해내고 유럽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길이었다. 영국 해군의 세계적 지위가 도전받는 만큼, 영국에게 유럽 대륙에서의 독일의 지배를 막는 일은 절실한 일이었다. 러일전쟁은 영국이 극동 문제에서 숨을 돌리고, 유럽, 즉 독일 문제, 즉 독일의 대규모 해군 확장 문

66) A. T. Mahan, 앞의 책, p. 25-6.

67) 브랜트 심스, 『유럽. 1453년부터 현재까지 패권투쟁의 역사』 II, 애플미디어, 2014, p. 69. 크리스토퍼 클라크, 『몽유병자들』, p. 303-309.

제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의 승리로 영국은 5척의 전함의 극동 주둔 함정을 영국 해협함대(Channel Fleet)로 돌려보낼 수 있게 되었다.⁶⁸⁾ 러시아의 압력이 줄어드는 만큼 영국은 1906년 인도 병력 증강안을 보류한다⁶⁹⁾. 그리고 1907년에는 러시아와 협약을 맺어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티베트를 둘러싼 지난 100년간의 분쟁을 해소하는 조약을 체결한다. 중앙아시아를 두고 러시아와 영국간 벌여졌던 ‘그레이트 게임’이 잠정적으로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한편 독일에서는 수많은 언론이 그동안 러시아의 확장 의도와 그 위협을 과대하게 다루어 왔지만, 러시아가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비로소 러시아에 대한 과장된 평가는 어느 정도 가라앉는다. 하지만 그에 대한 경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전쟁으로 강력하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러시아라는 괴물은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 ... 그리고 거대한 공격의 순간이 오게되면 1억6천만의 슬라브인들이 러시아의 지휘하에 비슬라강의 넓은 하류를 넘어 흘러 넘어올 것이며, 그 홍수는 오스트리아까지 합쳐도 기껏해야 9천만에서 1억 정도가 될 독일인을 향해 덮칠 것이다. 만일 이들을 막지 못한다면 독일인의 역할은 실패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되면 슬라브 무리들은 마치 훈족이 갈리아족이나 이탈리아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유럽 전체를 휩쓸어버리게 될 것이다.”⁷⁰⁾

셀렌도 러시아가 물론 유럽에게는 전적으로 위협적 존재이기는 하지만, 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로 인해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압력은 완화되었고, 차르 제국은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서 “전달과 상쇄의 완충장치”가 되었다고 평가한다.⁷¹⁾ 러일전쟁 이후 빌헬름 2세는 무엇보다 동아시아에서의 소극적 대응을 통해 러시아나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꾀하고자 했다. 독일이 매번 일본에 가깝게 다가 갔던 것은 일본에 대한 호의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실망의 반작용이었을 뿐이다.⁷²⁾ 궁극적으로 빌헬름 제국의 ‘세계정책’ 안에서 일본은 기껏해야 2차적 고려사항이었고, 일본 또한 이제와서 영국, 프랑스 등과의 동맹을 끊고 독일과 연합할 이유가 없었다.

러시아 또한 독일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자신들이 발칸으로 세력을 확장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오스트리아지만, 그 뒤에는 독일이 지키고 있다고 보았다. 대부분의 두마 의원들은 독일에 반감을 갖고 있었고, 나아가 독일 민족과의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지식인 출신의 장교당(Kadettenpartei) 지도자면서도 범슬라브주의나 러시아 쇼비니즘에 반대했던 밀류코프(P. N. Miljukov)조차도 “유럽에서의 슬라브인들의 실질적인 집단화는 우리와 대등하게 동맹을 맺으면서 게르만주의에 맞서서 나갈 것이다”고 당에 보고한다.⁷³⁾

V. 맺음말: 1차 세계대전을 향하여

20세기로 접어드는 즈음 지정학적 담론과 적대적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는 배경에는 식민/제국주의적 각축이 있었지만, 또한 담론을 만들어내는 국가들이 처한 내적 상황도 중요한 역할

68) 폴 케네디, 『영국 해군지배력의 역사』, p. 400-4. 그러나 영국 내 비판자들은 영국이 독일의 위협에 사로잡혀 지구의 나머지 부분을 포기했다고 비난했고, 극동에서는 일본의 해군력을 확장시켜 인도뿐 아니라 태평양에 있는 영제국령의 방어가 위협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69) 크리스토퍼 클라크, 『몽유병자들』, p. 238.

70) Otto Stern, 1905, Sönke Neitzel, *Weltmacht oder Untergang*. Paderbornd 2000, p. 115. 재인용.

71) Rudolf Kjellen, *Die Grossmächte der Gegenwart*, p. 83.

72) Christian W. Spang, Rolf-Harald Wippich, *Japanese-German relations until 1945*, NY 2006, p. 6.

73) Miljukov의 ZK der Kadettenpartei 보고서, 1909, 3. 1. D. Geyer, *Russische Imperialismus*, p. 223 재인용.

을 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19세기를 열병처럼 휩쓸어갈 만들었던 민족주의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으며, 이를 통해 보수 우파 세력은 자신들의 세력을 결집시키고자 진력한다.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인간 개개인들, 민족, 자연, 생존공간 등 간의 전적인 조화를 목표로 세웠고⁷⁴⁾,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척하고 정복해야 할 적대적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며, 지정학은 당대의 사회진화론적 담론들과 결합해 민족의 생존공간을 넓혀갈 지리적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공교롭게도 위협적이고 물리쳐야 할 야만적 적들은 언제나 동쪽에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에게는 독일과 러시아가, 독일에겐 동유럽과 러시아가, 러시아에게는 중앙아시아 평원을 넘어 몽골과 시베리아, 일본이 기다리고 있었다. 동쪽, 오리엔트라는 공간은 언제나 야만인이 살고있는 미지의 세계였으며, 동시에 자신들의 지정학적 상상력을 실현시킬 실천의 공간이기도 했다.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자 맥킨더는 1904년 자신이 발표했던 논문 <역사의 지리적 축>을 더욱 확장시켜 <민주주의적 이상과 현실>을 출간한다. 쉘렌도 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열강과 세계의 위기>를 출간한다.⁷⁵⁾ 독일의 지리학자 칼 하우스호퍼(Karl Haushofer)는 랫젤의 생물학적 개념을 기반으로 전쟁 중 진중에서 익힌 맥킨더와 쉘렌의 지정학을 두루 혼합한 전후 지정학적 체계를 만들어간다.⁷⁶⁾ 1924년에는 자신의 지리학 동료들과 지정학지<Zeitschrift für Geopolitik>를 창간하고 편집장으로 활동한다. 그는 맥킨더가 영국인에게 보내는 독일에 대한 경고와 대응책을 장차 독일이 지정학적으로 취해야 할 미래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이론을 구축한다.

한편에선 랫젤-쉘렌, 다른 한편에선 마한-맥킨더 등으로 이어지던 고전 지정학의 시대는 1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끝이 나지만, 이어지는 다음 세대에서는 앞세대의 논의로부터 거의 진전되지 못한 채, 지정학은 전적으로 파시즘과 전쟁을 통한 영토 확대의 정당화 논리로 쓰여질 터였다. 그 모든 이론적 구성은 랫젤에서 시작되었지만 러일전쟁을 거쳐 1차 세계대전까지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자신들의 논리들을 보충한다.⁷⁷⁾ 어느 면에서는 그 다양한 논리들이 하우스호퍼에 이르러 종합되는 측면이 있었으며, 그만큼 바이마르(Weimar)와 전간기 서구 지정학은 이론적 독자성없이 파시즘의 지정학으로 향하는 연결고리거나 준비단계 정도로서의 역할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돌이켜보면, 한 국가의 지리적 위상과 관련된 논리들을 자신들이 처한 필연적 전제로서 받아들인 결과 지정학은 자연지리학과 문화지리학이 갖는 요소들간에 차별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지리결정론에 기반한 이데올로기에 갇혀버리게 되었다. 학문이 정치적 정당화에 복무하게 될 때 자기성찰이라는 미덕은 사라지게 된다. 그 결과 세계는 오랫동안 제국주의적 침탈과 나치가 일으킨 전쟁의 혼돈 속에 휩싸여야 했다. 하지만 전쟁을 일으킨 것은 학문이 아니라 인간이었다. 인간의 상상력이 발휘된 학문은 그 자체로서 인간을 파괴할

74) Thomas M. Lekan, *Imagining the Nation in Nature. Landscape Preservation and German identity, 1885-1945*, London 2004.

75) Rudolf Kjellen, *Stromakterna och världskrisen*, Stockholm 1920 (The Great Powers and the World Crisis). 독일어 번역본은 1921년 출간된다.

76) Karl Haushofer, *Geopolitik des Pazifischen Ozeans, Studien über die Wechselbeziehungen zwischen Geographie und Geschichte*, Berlin 1924; 이진일, “생존공간(Lebensraum)과 ‘大東亞共榮圈’ 담론의 상호전이 - 칼 하우스호퍼의 지정학적 일본관을 중심으로”, 『독일연구』, 2015, No.29, p. 199-240.

77) 맥킨더 또한 랫젤의 유기체 국가론을 받아들여 자신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나의 목표는 이런 저런 인물들의 영향력에 대해 논의하거나, 지역 지리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세계 유기체(world organism)라는 생명의 일부로서 드러내하고자 하는 것이다.”, H. Mackinder,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Geographical Journal*, Bd. 23, 1904, p. 422.

수 없다.

하지만 전 지구화의 급속한 진행과 테크닉으로 무장한 오늘날의 세계 구도에서 해양세력 대 육상세력의 대결이라는 고전 지정학의 문제의식이 여전히 오늘날 국제 관계와 지정학적 사고에 있어 기본적 틀을 구성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러한 양대 세력구도의 구분은 영국이라는 해양제국의 세계경영을 기본 틀로 등장한 것이며, 그 속에서 대륙세력은 이에 도전하는 세력으로서 역할한 것이다. 그 충돌이 첨예화된 정점에 1차 세계대전이 있었다. 영국의 세계 패배가 저물면서 이들이 만들어낸 각축구도 또한 함께 종말을 고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는 오늘날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구도이다. 그럼에도 이같은 육상세력과 해양세력으로의 양분화된 카테고리를 오늘날에도 분석의 기본 틀로 삼는다면 이는 제국주의 시대 서구의 세계 진출 경로를 좇으면서 유럽 국가 간의 각축이라는 시각을 답습하게 될 위험이 있다. 한반도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 또한 오늘날 세계를 구성하는 공간질서는 100년 전과 다르다. 당연히 오늘날 한 국가가 지구 상에서 위치하게 되는 공간적 위상에 대한 해석과 전략은 한 가지 틀에만 종속될 수는 없으며, 21세기의 변화된 국제환경에도 조응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계에 대한 시각, 즉 지정학 담론 자체를 보다 다원화해야 된다.⁷⁸⁾

또한 우리가 특정 국가 - 예를 들어 러시아에 대해 - 지정학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러시아의 지리와 지정학적 전통, 러시아의 역사 속에서의 지리적 발전의 조건들과 그들의 지정학적 비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방식과 사고를 갖고 자신들의 영토관을 형성해 왔기 때문이다.

78) 과거 우리가 “문화의 충돌”(Samuel Huntington)이나 “역사의 종말”(Francis Fukuyama) 담론에서 보았듯이 상황을 양분해 거칠게 일반화시키는 위험을 피해야 한다. 우리에게 적절한 지정학 담론의 생성을 위해서는 기존 지정학적 세계관의 역할이나 이들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보다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고전 지정학을 넘어 “비판 지정학”(critical geopolitics), “포스트구조주의 지정학”(poststructural political geography), 혹은 아날 학파가 발전시킨 지문화(geoculture) 등으로 연구 영역을 넓혀야 하는 이유이다.

참고문헌

1차 사료

Kjellen, Rudolf, Die Grossmächte der Gegenwart, Leipzig/Berlin 1915.

Mackinder, Halford J.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The Geographical Journal, 23, 4, 1904, p. 421-437.

Mackinder, Halford J. Democratic Ideals and Reality, London 1942 (『심장시대』, 글항아리, 2022).

Mahan, Alfred T., The Influence of Seapower upon History 1660-1783, 1890.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1/2, 책세상, 2006).

Mahan, Alfred Thayer, The Problem of Asia and its effect upon international Policies, Boston 1900.

Ratzel, Friedrich, Das Meer als Quelle der Völkergrösse, München 1900/11.

Ratzel, Friedrich, "Der mitteleuropäische Wirtschaftsverein", Grenzboten, 1904, 1, p. 253-259.

Ratzel, Friedrich, Kleine Schriften, Bd. 1/2, München 1906.

Ratzel, Friedrich, "Politisch-geographische Rückblicke. 3. Das russische Reich", Geographische Zeitschrift 1898, 4, H. 5, p. 268-274

2차 사료

Baumgart, Winfried, "Deutsch-Russische Beziehungen 1890-1914/18", Winfried Baumgart u.a., Preußen - Deutschland und Rußland. vom 18. bis zum 20. Jahrhundert, Berlin 1991, p. 105-118.

Berghahn, V. R., Germany and the approach of war in 1914, London 1993 (copyband)

Binder-Iijima, Edda, "Der Russisch-Japanische Krieg und die Orientalische Frage", Sprotte, Maik Hendrik (ed.), (Der) Russisch-Japanische Krieg, 1904/05 : Anbruch einer neuen Zeit?, Wiesbaden 2007, p. 1-22.

Chapman, John W. M., Chiharu, Inaba (ed.), Rethinking the Russo-Japanese War, 1904-05. Vol 2. The Nichinan Papers, Kent 2007.

Eley, Geoff, "Empire by Land or Sea?" Germany's Imperial Imaginary, 1840-1945", Bradley Naranch and Geoff Eley (eds.), German Colonialism in a Global Age, Ch.1. p. 19-45.

Epstein, Fritz, "Der Komplex 'Die Russische Gefahr' und sein Einfluss auf die deutsch-russischen Beziehungen im 19. JH", Imanuel Geiss u.a. (ed.), Deutschland in der Weltpolitik des 19. u. 20. Jahrhunderts, Düsseldorf 1973, p. 143-160.

Faber, Karl-Georg, "Zur Vorgeschichte der Geopolitik. Staat, Nation und Lebensraum im Denken deutscher Geographen vor 1914", Heinz Dollinger u.a. (ed.), Weltpolitik, Europagedanke, Reginalismus, Münster 1982, p. 389-406.

Geyer, Dietrich, Der russische Imperialismus : Studien über den Zusammenhang von innerer und auswärtiger Politik 1860-1914, Göttingen 1974.

Geyer, Dietrich, "Ostpolitik und Geschichtsbewusstsein in Deutschland",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34, 1986, H. 2, p. 147-159.

Heffernan, Michael, "Fin de Siecle, Fin du Monde? On the origins of European geopolitics, 1890-1920", David Atkinson, and Klaus Dodds (eds.), Geopolitical Traditions : Critical Histories of a Century of Geopolitical Thought, London, 2000, p. 27-51.

Hillgruber, Andreas, "Die deutsch-russischen politischen Beziehungen (1887-1917) : Grundlagen, Grundmuster, Grundprobleme" (mit Diskussion), Saeculum 27, 1976, p. 94-108.

Kennedy, Paul, "Mackinder vs. Mahan", MGM 2/1974, p. 39-66.

Koenen, Gerd, "Rom oder Moskau" Deutschland, der Westen und die Revolutionierung Russlands 1914-24, Diss. 2003.

Kreiner, Josef ed., Der Russisch-Japanische Krieg, Göttingen 2005.

Kusber, Jan, "Der russisch-japanische Krieg 1904-05 in Publizistik und Historiographie", Jahrbücher für Geschichte Europas, 1994, Bd. 42, H. 2, p. 217-234.

Mommsen, Wolfgang, Grossmachtstellung und Weltpolitik. Die Aussenpolitik des Deutschen Reiches 1870-1914, Frankfurt 1993

Strachan, Hew, "Kontinentales Kernland oder maritime Küstenzonen: Zur Geopolitik des Ersten Weltkrieges", Michael Geyer u.a. ed., Zeitalter der Gewalt. Zur Geopolitik und Psychopolitik des Weltkrieges, Campus Frankfurt 2015, p. 67-92.

Schöllgen, Gregor, "Die Grossmacht als Weltmacht. Idee, Wirklichkeit und Perzeption deutscher 'Weltpolitik' im Zeitalter des Imperialismus", Historische Zeitschrift 248, 1, 1989

Steinberg, Jonathan, "Germany and the Russo-Japanese War", AHR 75/1975, p. 1965-1986.

Teggart, Frederick J., "Geography as an aid to statecraft. An appreciation of Mackinder's 'Democratic Ideals and Reality'", Geographic Review Vol. 8, N. 4/5, 1919, p. 227-242.

Tuathail, Gearóid Ó, Dalby, Simon (ed.), The Geopolitics Reader, London, NY 1998.

김기윤 외 6인, 『제국주의 유산과 동아시아』, 동북아역사재단, 2014.

박노자, 『전쟁 이후의 세계』, 한겨레 2024.

조명철, "러일전쟁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역사학회 엮음,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2006, p. 348-374

가토 요코, 『근대 일본의 전쟁 논리』, 태학사, 2003(2002).

다날렘스키, 니콜라이, 『러시아와 유럽』, 지만지 2009.

르제프스키, 니콜라스 (엮음), 『러시아 문화사 강의』, 그린비 2011

심스, 브랜드, 『유럽. 1453년부터 현재까지 패권투쟁의 역사』 II, 애플미디어, 2014

케네디, 폴, 『영국 해군 지배력의 역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

클라크, 크리스토퍼, 『몽유병자들』, 책과함께 2019

키신저, 헨리, 『세계질서』, 민음사, 2016.

키신저, 헨리, 『외교』, 김앤김북스, 2203.

호프커크, 피터, 『그레이트 게임』, 사계절 2008(1990).

제1부 러일전쟁과 고전 지정학

The Russo-Japanese War and Classical Geopolitics

발표 2

A.T. Mahan이 바라본 러일전쟁과 러일해전

The Russo-Japanese War and the Russo-Japanese Naval Battle as Seen by A.T. Mahan

김영수 Kim Young-Soo(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A.T. Mahan이 바라본 러일전쟁과 러일해전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목차

- I. 머리말
- II. 해군전략으로 바라본 러시아의 요새함대와 일본의 현존함대
- III. 러시아함대의 해전전략과 러일해전
- IV. 로제스트벤스키의 해군전략과 러일의 동해해전
- V. 마한의 동해해전에 관한 분석
- VI. 맺음말

I. 머리말

그동안 서구학계는 마한의 사상, 마한의 해양전략 및 미국의 대외정책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었다.⁷⁹⁾ 한국학계도 마한의 생애를 소개하면서 그의 해양력, 해군전략론, 대외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전명석은 국내에 처음으로 마한의 생애와 저작을 소개하면서 마한의 해군전략을 간략히 소개했다는데 의미를 갖고 있다.⁸⁰⁾

김세웅은 서구의 선행연구와 마한의 저작에 기초하여 마한의 해상권이론을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그는 마한의 해상권이론이 미국의 팽창주의정책에 영향을 준 사실을 추적했는데 마한의 해상전략 중 주력함대이론과 함대집중원칙이 미국 해군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했다.⁸¹⁾ 김성준은 마한의 해양력의 개념과 요소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마한의 해양사 이론이 식

79) W.D. Puleston, *Mahan: The Life and Work of Captain Alfred Thayer Mahan*. New Haven: Yale Univ. Press, 1939 ; Margaret Tuttle Sprout, "Mahan: Evangelist of Sea Power," in *Makers of Modern Strateg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 William Reitzel, *Mahan on the Use of the Sea*, *Naval War College Review*, May-June, 1973 ; Robert Seager II, Doris D. Maguire, *The Letters and Papers of Alfred Thayer Mahan*, Vol. 2,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75 ; Robert Seager II, *Alfred Thayer Mahan: The Man and His Letters*, Annapolis: U.S. Naval Institute Press, 1977 ; R.W. Turk, *The Ambiguous Relationship: Theodore Roosevelt and Alfred Thayer Mahan*, Westport: Greenwood, 1987 ; J.B. Hattendorf, *History Monographs 9: The Influence of History of Mahan*. New Port: Naval War College, 1991 ; G.W. Baer, *One Hundred Years of Sea Power: The U.S. Navy, 1890-1990*.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93 ; J.T. Sumida, *Alfred Thayer Mahan, geopolitician*,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22. No. 2-3, 1999 ; J.R. Holmes, Toshi Yoshihara, *The Influence of Mahan upon China's Maritime Strategy*, *Comparative Strategy*, Vol. 24-1, 2005 ; Greg Russell, *Alfred Thayer Mahan and American Geopolitics: The Conservatism and Realism of an Imperialist*, *Geopolitics*, Vol. 11-1, 2006 ; Asada Sadao(麻田貞雄), *From Mahan to Pearl Harbor*.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06 ; J.S. Rofe, 'Under the Influence of Mahan': Theodore and Franklin Roosevelt and their Understanding of American National Interest.", *Diplomacy and Statecraft*, Vol. 19-4, 2008 ; Thomas F.X. Varacalli, *National Interest and Moral Responsibility in the Political Thought of Admiral Alfred Thayer Mahan*,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92, 2016.

80) 전명석, 「해상전략에 대한 사적 고찰 : Mahan 전략(戰略)을 위주(爲主)로 하여」, 『국방연구』 2, 1958, 117-123

민주의와 제국주의 면모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⁸²⁾

이주천은 제국주의자로 변신한 마한을 살펴하면서 미서전쟁(美西戰爭)에서의 마한을 역할을 추적했다. 마한은 해양전략 원칙을 제해권, 집중, 전략적 위치, 해상교통로의 4가지로 분류했는데 미국이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해군기지와 석탄저장소의 설치할 수 있는 식민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⁸³⁾

김동은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마한의 해군전략론, 지정학적 위협인식, 대외정책론을 살펴보면서 미국의 해군전략의 변화를 추적했다. 마한은 미국이 과거부터 주시해왔던 유럽 열강의 ‘동쪽으로부터의’ 위협과 아시아 패권국의 등장으로 인해 직면할 ‘서쪽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으로 인해 미국의 안보가 위협에 다다르게 될 지정학적 포위를 우려했다. 김동은은 마한의 대외정책론에 대해서 국부 축적 및 군사·경제적 강대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현실주의적 국익을 고려한 선택적 개입을 방법으로, 해군력·자유무역·미국적 가치를 수단으로 파악했다.⁸⁴⁾ 한편 이상호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의 외교정책의 변화와 해군력의 확장 과정의 역사를 추적했다. 그는 미국의 문호개방정책이 태평양제국으로의 미국의 등장과 함께 이상주의를 수반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동시에 실질적 수단으로서 해군력의 확장을 불러와 미국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시킨 정책이라고 평가했다.⁸⁵⁾

해군소장 마한(머한 A.T. Mahan, 1840-1914)은 1840년에 태어났고 1856년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함정에서 근무한 다음 1886년부터 1892년까지 해군대학에서 해전사 교수로 근무했다. 마한은 해군에서 전역한 다음 국가와 해군정책에 대해 자문을 수행했다. 그는 미국과 칠레의 관계가 악화된 1891-1892년에 해군장관의 자문관이 되었고,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해군차관을 수행할 때 자문했고, 1899년 헤이그평화회의에 파견되었고, 해군 재조직위원회와 해군문제 위원회에서 활동했다.⁸⁶⁾ 마한은 미국 해군의 건설을 기초했을 뿐만 아니라 해양 중심의 지정학을 기초한 중요한 인물이었다.

마한은 1890년 미국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의 교수로 근무하면서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이라는 그의 대표적인 서적을 출판했다. 이 책은 1660년부터 1783까지 유럽의 해전사를 살펴하면서 해양력이 유럽과 미국의 역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다.⁸⁷⁾

81) 김세웅, 「1890년대 미국의 팽창주의에 관한 고찰 : A. T. Mahan 해상권을 중심으로」, 『사학지』, 16-1, 1982, 328-329쪽

82) 김성준, 「알프레드 마한(A.T. Mahan)의 해양력과 해양사에 관한 연구」, 『해운물류연구』 26, 1998

83) 이주천, 「알프레드 마한(Alfred T. Mahan)의 帝國의 戰略과 美西戰爭」, 『미국사연구』 15, 2002, 41쪽

84) 김동은, 「알프레드 T. 마한의 해군전략론과 20세기 초 미국의 해군전략 변화」, 『군사』 119, 2021, 128쪽; 김동은, 「알프레드 T. 마한의 지정학적 위협인식 및 대외정책론과 20세기 초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4-1, 2022, 13-27쪽.

85) 이상호, 「19세기 미국의 해군력 확장과 태평양 시대의 개막」, 『미국사연구』 48집, 2018, 198쪽. 그 밖에 마한 관련 한국의 해군과 육군에서 진행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창국, 「알프레드 마한의 해양전략 사상 연구」, 국방대학원 석사논문, 1989 ; 박영준, 「Alfred T. Mahan의 해양전략론에 대한 연구」, 『육사논문집』 4, 1993 ; 임인수, 「해양전략의 기본개념 연구」, 『해양전략』 88, 1995 ; 김현기, 『현대해양전략사상가』,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 윤혁민, 「마한(Alfred T. Mahan)의 해양 전략 적용을 통한 태평양해전에 관한 연구: 진주만 기습과 미드웨이 해전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윤석준, 『海洋戰略과 國家發展』,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0 ; 이학수, 「마한의 해양전략이론 재해석」, 『해양연구논총』 42, 2011.

86) 김주석,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의 생애와 업적」,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2, 책세상, 2022, 874-878쪽

87) A.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890(1889년 12월 완성. 1890년 5월 초판 발간) ;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 『해양력이 역사

마한의 저서는 1889년 12월 완성되었고 1890년 5월 초판이 나왔다. 마한은 18세기 유럽 상황에 해군이 미친 영향력을 보여줌으로써 해양력의 역사적 양상을 제시했다. 해군 옹호론자들은 마한의 저술을 해군 축소론자들을 반박할 무기로 간주하게 되었다. 마한의 사상은 해군 대학의 학생 장교들에게 계속 교육되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해군은 미국 해군보다 먼저 마한의 이론을 받아들임으로써 세계적 해군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러일해전에서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격파한 계획을 수립한 도고의 참모 아키야마 사네유키(秋山真之) 중령을 들 수 있다. 아키야마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마한에게 직접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을 받아들였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마한의 이론에 대한 강의가 지속되고 있다.⁸⁸⁾ 특히 일본해군성 수로부장 기모쓰키 가네유키(肝付兼行 1853-1922)는 1894년 10월 24일부터 11월 1일에 걸쳐 고쿠민신문(國民新聞)에 「해상의 권력」이라는 기사를 8회에 걸쳐 연재했다. 기모쓰키는 러일전쟁 전후 해군대학교교장(海軍大學校長)으로 활동했는데 마한의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일본에 소개하고 일본의 해상권 제패 즉 ‘해권론(海權論)’을 주장했다.⁸⁹⁾

필자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분석하지 않은 마한이 바라본 러일전쟁과 동해해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 이유는 마한이 해전사 연구에서 러일해전을 중요하게 다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마한의 핵심적인 해군전략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러일전쟁은 러시아와 일본이 만주와 한국에서 전쟁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러일전쟁의 결과 을사늑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에 영향력을 강화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마한의 저서에 기초하여 마한이 바라본 러일전쟁과 동해해전을 추적할 것이다. 첫째 마한은 1911년 『해군전략(Naval Strategy)』을 출판했는데 이 책은 그가 1887년부터 1911년까지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에서 해군전략에 관한 강의에 기초한 것이다.⁹⁰⁾ 마한은 해군대학에서 근무하면서 해군 전술에 관한 논문과 서적을 외부에 주

에 미치는 영향』 1-2, 책세상, 2020-2022. 마한에 따르면 해군전략은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한 국가의 해양력을 건설하고 지원하며,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나는 가장 훌륭한 장교들 관련 전투에서 나타나는 전술, 특정시대 군대에 나타나는 전술의 차이점을 분석할 것이다. 인간의 천성은 거의 변하지 않는데, 개인적인 차이도 틀림없이 존재한다.(알프레드 세이어 마한,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1, 책세상, 2020, 153쪽) 마한의 저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A.T. Mahan, *The Gulf and Inland Waters*, 1883 ; A.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890 ; A.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the French Revolution and Empire, 1793-1812*,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894 ; A.T. Mahan, *Admiral Farragut*, New York ; D. Appleton and Company 1892 ; A.T. Mahan, *The Interest of America in Sea Power, Present and Future*,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1897 ; A.T. Mahan, *Lessons of the War with Spain, and Other Articles*, 1899 ; A.T. Mahan, *The Problem of Asia and Its Effect Upon International Policies*,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00 ; A.T. Mahan, *Sea Power in Its Relation to the War of 1812*,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05 ; A.T. Mahan, *Naval administration and warfare : some general principles, with other essays*,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08 ; A.T. Mahan, *The Harvest Within: Thoughts on the Life of the Christian*,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09 ; A.T. Mahan, *Naval Strategy: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Military Operations on Land*,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11 ; A.T. Mahan, *Armaments and Arbitration; The Place of Force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States*, 1912 ; A.T. Mahan, *The Major Operations of the Navies in the War of American Independence*, Th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13 (https://en.wikipedia.org/wiki/Alfred_Thayer_Mahan)

88) 김주석,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의 생애와 업적」,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2, 책세상, 2022, 896쪽

89) 김영, 「해군성 수로부장 기모쓰키 가네유키(肝付兼行)에 관한 고찰」, 『한일군사문화연구』 23, 2017, 189-194쪽

문했는데 자신의 해군전략 원칙이 전략에 관한 저작들에 전적으로 의존했다고 밝혔다.⁹¹⁾ 마한은 이 책의 13장 「러일전쟁 토론」에서 요새함대와 현존함대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러시아가 요새함대를 지향해서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4장 「러일전쟁 토론」에서 러시아해군은 현존함대를 무시하고 전투와 탈출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마한은 로제스트벤스키의 해군전략을 비판했다. 둘째 마한은 1906년 4월 러시아와 일본의 공식 보고서를 입수하여 1905년 5월 27일(러역5.14) 동해해전(the Battle of the Japan Sea)을 분석하여 「러일해전에서의 반성과 역사(Reflections, Historic and Other, Suggested by the Battle of the Sea of Japan)」라는 논문을 발표했다.⁹²⁾ 마한은 이 논문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1905년 동해해전의 전투 과정을 분석하면서 군함의 속도와 무장에 관한 전략을 평가했다.

II. 해군전략으로 바라본 러시아의 요새함대와 일본의 현존함대

1. 일본의 해군전략과 현존함대

마한은 러일전쟁 당시 일본의 해군작전을 분석하면서 현존함대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첫째 일본군대는 첫 번째 어뢰 공격과 동시에 황해로 진입하여 제물포로 향했는데 약 50,000명에서 60,000명으로 추정되는 증원군대였다. 이는 일본이 뤼순함대와 발트함대의 모든 조건이 가져오는 위협, 그리고 그들의 교통로에 대한 위협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현존함대로부터의 다양한 위협을 인식하면서도 감행했다. 만약 적이 동등하거나 우세한 함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상황은 전혀 다르다. 하지만 현존함대 이론은 열세의 함대가 미치는 마비 효과를 강조한다. 일본은 뤼순함대의 열세를 파악하고 증원군을 과감히 수송했다.

둘째 육상 전쟁에서 교통을 위협하는 요새를 유능한 분견대로 단순히 감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 열세의 함대가 갑작스럽고 은밀한 행동에 의존하여 효과를 발휘하는 게릴라 작전은 약탈에 불과했다. 예를 들면 블라디보스톡함대는 단 3척의 장갑순양함으로 동해(Sea of Japan)에서 포위 포대의 기차를 실은 일본 수송선을 침몰시켰다. 이 손실은 뤼순의 포위전을 연장시키고 발틱함대가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그 결과 일본은 뤼순항을 함락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로만 수송을 제한했다.⁹³⁾

마한은 러일전쟁 당시 일본의 해군전략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일본의 해군전략은 진단의 정확성, 목적의 집중, 행동의 일관성으로 특징지어졌다. 일본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개념을 고수했다. 그런데 일본은 전함을 보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 일본은 러일전쟁 초기 하쓰세와 야시마(Hatsuse and Yashima)가 침몰되자 불안함에 빠졌다.

둘째 일본이 전투를 시작했을 때 물질적인 힘에서 러시아의 전체 해군이 일본의 해군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러나 일본은 대규모의 공격적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바다를

90) A.T. Mahan, *Naval Strategy: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Military Operations on Land*,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11, pp.IV

91) A.T. Mahan, *Naval Strategy: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Military Operations on Land*,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11, pp.11

92) Mahan A.T. *Reflections, Historic and Other, Suggested by the Battle of the Sea of Japan*. *Proceedings magazine*, April 1906. Vol. 32/2/118,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93) A.T. Mahan, *Naval Strategy: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Military Operations on Land*,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11, pp.400-402

넘어 침략해야 했는데 이는 작전의 지속성을 위해서 해양의 통제에 의존해야 했다. 일본은 러시아와 달리 요새 함대에 대한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은 해군의 유일한 목적이 바다를 통제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완전히 이해하고 행동했다.

셋째 일본은 두 가지 방식을 전개했는데 ①일본은 러시아가 뤼순에 함선을 집결하도록 허용하여 뤼순과 블라디보스톡 함대로 나뉘도록 내버려두었다. ②일본은 적의 함대 중 자신들에게 노출된 반쪽을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포격, 기뢰 설치, 수로를 차단하려는 시도 등이 포함된다. 이 모든 노력은 하나의 원칙인 적의 함대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넷째 일본은 자국 함선에 대한 주의와 적에 대한 공격을 모두 바다의 통제라는 하나의 원칙에서 수행했다. 또한 일본은 육상 포격으로 러시아 조선소의 기술자를 쫓아내었고, 이로 인해 8월 10일 뤼순함대의 출항 시도가 결정되도록 도왔다.

다섯째 모든 수단인 포격, 기뢰, 수로 차단 등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 일본의 주력함대는 뤼순 근처에서 어뢰 공격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엘리엇 섬으로 철수했다. 일본은 자국의 함선과 보급품을 보존함으로써 바다의 통제를 증진시켰다. 엘리엇 섬 주변은 육상 및 해상 작전의 전진 기지가 되었으며 가능할 경우 한 점에 집중하는 이점을 가졌다. 그동안 뤼순함대는 일본이 엘리엇 섬을 기반으로 하여 주변 수역을 포괄하는 정교한 배치 때문에 싸우지 않고는 탈출할 수 없게 되었다.

여섯째 일본의 배치는 “울타리(fences)”라는 용어로 요약되었다. ①뤼순의 입구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기뢰가 동심원 형태로 설치되었는데, 이는 일본 육군이 랴오둥 반도의 고지대에 있는 감시탑에서 낮과 밤으로 감시했다. 기뢰는 적이 접촉할 경우 침몰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본질적 기술적 가치는 일본함대가 도착할 시간을 만들어 주는데 있었다. ②이러한 기뢰들 바로 바깥쪽에는 어뢰정과 구축함이 형성하는 두 번째 선이 있었다. ③세 번째 선은 2급 및 3급 순양함으로 구성된 함정이었다. ④네 번째 울타리는 엘리엇 섬에 있는 일본의 주력함대였다. ⑤다섯 번째 울타리는 카미무라(Kamimura)의 장갑순양함이 블라디보스톡 앞에서 한국 해협(Straits of Korea) 또는 쓰시마(Tsushima)로 이동한 것이다. 실제 8월 10일 뤼순함대가 탈출할 때 카미무라는 쓰시마에서 황해 남부로 약 200마일을 향해했다. 그곳에서 그는 탈출하는 러시아 함대의 경로에 가장 확실히 위치했고 러시아 함대는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일본 신문에 따르면 “만약 러시아가 1904년 8월 10일 봉쇄를 뚫고 몇 척의 전함과 순양함이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했다면, 뤼순을 오랫동안 포위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은 발트함대가 도착한 이후의 전략에 있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⁹⁴⁾

2. 러시아의 해군전략과 요새함대

1896년 대공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Alexander Mikhailovitch)는 태평양에 러시아의 강력한 해군을 창설할 필요성을 설명하는 계획서(memorandum)를 작성했다. 그 이유는 바다를 장악하지 않으면 시베리아 철도를 영원히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에 따르면 1906년까지 일본은 해군 준비를 완료할 것이며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1908년까지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마한은 러시아의 해군이 대공의 제안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한은 러시아의 해군전략을 살펴보면 함대를 공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요새를 지원하는 데 전념하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마한은 해군전략(해군작전)인 요새함대

94) A.T. Mahan, *Naval Strategy: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Military Operations on Land*,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11, pp.421-426

(Fortress Fleet)와 현존함대(Fleet in Being)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및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의 해군전략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첫째 요새함대는 러시아의 실천과 원칙에 미친 궁극적인 영향을 증명했다. 요새함대는 러시아의 군사 및 해군 사상에서 지배적인 개념이었다. 러일전쟁 직전 해군소장 비레니우스(A.A. Bирениус) 제독은 “뤼순과 블라디보스토크를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기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군의 효율성보다 요새에 의존하는 것을 전제로 한 함대의 분배였다. 요새함대의 장점은 해안 요새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데 그 요새가 국가의 외국 영토에 있을 때 더욱 그렇다. 일본은 잠재적 적에 대한 중앙집중적 배치였다.

둘째 러시아해군 참모본부는 현존함대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다. 러시아해군 참모본부는 제해권 장악을 요구했다. 그러나 러시아정부는 현존함대를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요새 함대라는 상반된 요인이 러시아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현존함대는 러시아의 국가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요새함대가 계속해서 현존함대를 러시아의 국가적 개념으로 만들지 못하게 만들었다. 결국 뤼순에서는 러시아가 요새함대도 얻지 못했고 현존함대도 얻지 못했다. 뤼순함대는 뤼순의 방어에 기여하지 못했고 현존함대로도 활용되지 못했다.

셋째 요새함대 개념이 국가적 특성을 반영한다. 요새함대는 방어적 개념을 의미하고 현존함대는 공격적 개념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전쟁 유형은 방어전쟁이었는데 러시아는 1812년 나폴레옹 전쟁, 크림 전쟁, 러일전쟁을 방어전쟁으로 수행했다. 러시아는 광대한 영토와 거대한 인구에 힘입어 적에게 자신을 내맡기며 생존을 유지했다. 러시아는 공격의 개념을 국가적 또는 정부적 결정으로 파악하지 못했고 방어와 공격의 적절한 균형을 군사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다.

넷째 마한은 “여러 부대를 상호 지원이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여 적의 개별적인 공격을 막아야 한다”는 군대의 전략적 격언에 해당하는데 “평화 시 해군의 배치가 전쟁 발발의 가장 가능성 있는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뤼순과 블라디보스토크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새함대라는 영향 아래 전투함대를 두 개로 나누었다.⁹⁵⁾

그 결과 마한은 러시아의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의 군사원칙(군사작전)을 분석하면서 요새함대의 문제점과 현존함대의 효율성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첫째 요새함대라는 잘못된 원칙이 러시아정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요새함대를 ①극동에서 함대를 집결하는 방식으로 채택했고 ②함대가 배치된 위치 선택에 적용시켰다. 마한은 러시아가 “함대를 집결하는 방법, 집결의 규모, 집결된 위치와 주둔지는 모두 잘못된 군사 원칙을 나타냈다”라며 요새함대의 기본 개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둘째 마한은 현존함대의 효율성에 따라 전쟁의 결과가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러시아의 2척의 전함은 어뢰 기습으로 손상되었지만 다시 전선에 배치될 만큼 수리가 가능했다. 그럼에도 뤼순함대는 전투를 위한 시점이 명확히 정의되지 못했다. 결국 뤼순함대는 뤼순을 떠났는데 정박지가 곧 유지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뤼순함대는 오랫동안 요새에 묶여 있었고, 이는 일본의 현존함대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요새에 대한 모호한 도움의 그림자에 불과했다.⁹⁶⁾ 결국 마한은 러시아가 요새함대의 문제점을 해군전략에

95) A.T. Mahan, Naval Strategy: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Military Operations on Land,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11, pp.391-394

96) A.T. Mahan, Naval Strategy: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Military Operations on Land,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11, pp.403-404

반영하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

Ⅲ. 러시아함대의 해전전략과 러일해전

1. 러시아함대의 해군전략

마한은 뤼순함대의 출항 결정에 따른 해군작전을 분석하면서 ‘탈출과 전투’의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첫째 뤼순함대는 뤼순에 남을 수 없고 로제스트벤스키의 도착 전에 파괴될 것이 분명해졌을 때 러시아는 뤼순함대를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전하는 결정만 내렸다. 뤼순함대의 제독은 전체 힘을 통합할 때까지 싸우지 않는 것이었는데 3척의 장갑순양함을 보유한 블라디보스토크함대도 한국 해협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이런 전략은 뤼순함대와 블라디보스톡함대가 모두 전투를 피하고 공해에서 합류하는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 결국 러시아는 러일전쟁 직후 뤼순함대와 블라디보스톡함대가 모두 각각 싸워야 했고 매우 멀리 떨어져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둘째 마한은 러시아가 뤼순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 결정에 대해서 목적의 조정이 없이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뤼순 제독은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했다. ① 뤼순함대는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여 지휘를 집중하고 항구의 시설을 이용해서 전투를 위한 최상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② 반면 선박의 속도 요구가 무장 요구를 방해하는 것처럼 문제는 일본의 함대였다. 일본함대는 경험적으로 가까이 존재하며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뤼순함대는 일본함대를 만날 경우 발틱함대에게 최상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전투의 필요성이 분명했다.

셋째 마한은 뤼순함대가 출항 계획을 수립할 때 탈출과 전투를 모두 고려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뤼순함대는 ‘원하는 탈출과 가능한 전투’를 분명히 구분해야 했는데 이는 조건의 차이를 인식하고 예측 가능한 상황에 따른 행동 방식을 계획해야 하는 것이었다. 만약 무사히 탈출한다면 전투는 피해야 했다. 만약 전투가 불가피하다면 수행해야 했다. 예를 들면 1척의 군함이 심하게 손상되어 따라갈 수 없다면 탈출을 포기하고 뤼순함대는 전체가 하나의 몸체처럼 적에게 돌진해야 했다. 그 이유는 패배하더라도 승자는 싸울 힘이 남지 않기 때문이었다.

넷째 마한은 일본함대가 뤼순함대를 이길 때까지 발틱함대에게 해를 끼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러시아의 탈출과 전투라는 행동은 모두 궁극적인 목적이 일본함대의 파괴에 있었다. 뤼순함대의 탈출과 전투 사이의 타협은 있을 수 없으며 유일한 목표는 적의 파괴였다. 마한은 뤼순함대가 부분적으로 탈출하는 방식으로 전투하는 것을 조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투 이전 블라디보스톡함대가 합류할 수 있다면 최상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뤼순함대는 합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같은 절박함으로 전투를 개시해야 했다.

다섯째 마한은 뤼순 러시아제독이 고려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행동을 확실히 규정했다면 러시아 군함이 요새로 후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명확한 의지를 가진 사령관의 정신은 그의 몸이 죽는 순간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만약 뤼순함대가 한 척도 남지 않고 침몰했다면 러시아해군에게 도덕적으로 귀중한 이득을 안겨주었고 일본함대도 최소한 일시적인 손상을 입었을 것이다.

그밖에 마한은 “두 분리된 함대가 적의 진영 안에서 집중 지점을 찾지 않는다”는 오랜 격언을 인용했다. 따라서 마한은 블라디보스톡이 뤼순함대와와의 합류 지점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마한은 블라디보스톡의 3척의 장갑순양함은 블라디보스톡에 남아서 뤼순함대의 결함을 기다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⁹⁷⁾ 결국 마한은 뤼순함대가 궁극적인 목적인 일본함대의 파괴

전투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 러시아함대의 러일해전 패배

마한은 러시아의 뤼순과 블라보스톡 항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비교했는데 러시아 요새함대의 문제점을 다양하게 지적했다.

첫째 마한은 “요새함대라는 잘못된 개념이 (러시아의) 함대를 잘못된 위치에 배치했다”라고 주장했다. 요새함대의 개념이 방어적 함대를 구성했고 소중한 요새를 지원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러시아 쇄빙선은 블라디보스톡의 자유로운 출구를 보장할 수 있었는데 블라디보스톡은 향해 편의성에서 공격을 위한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러시아는 함대를 뤼순에 주둔시켰는데 그 이유는 일본의 공격이 뤼순에 가해질 것으로 예상했고 함대를 공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으로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러시아는 요새의 기능을 주로 방어적으로 인식하고 공격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함대를 오로지 방어적으로만 행동하도록 인식했다. 뤼순함대는 1904년 5월 21척의 구축함 중 16척이 기동 중이었다. 뤼순함대는 마지막 순간에도 방어적 역할에 집착했고 적의 포격으로 이미 손상된 상태에서 전투가 아닌 도주를 위해서 출항했다.⁹⁸⁾ 뤼순함대는 요새에 포를 상륙시키고 마지막 순간 요새의 포대를 지원하는 것 외에는 요새 방어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

셋째 마한은 뤼순함대가 블라디보스톡 항구에 있을 때 더 효과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극동지역 러시아 함대는 주력이 뤼순에 있었으며 요새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러시아 태평양함대가 블라디보스톡에 집중되었다면 전쟁터의 한쪽 면에 위치하여 일본의 주요 작전 지역으로 향하는 교통을 측면에서 압박할 수 있었다. 이는 함대가 요새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요새가 함대를 지원하고 수리할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역사적으로 열세인 현존함대는 적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했다. 뤼순의 러시아 현존함대는 일본군의 수송을 막지 못했는데 일본함대는 뤼순함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⁹⁹⁾

무엇보다도 마한은 해안요새의 선택지가 중요하며 러일전쟁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만약 전체 러시아 태평양함대가 블라디보스톡에 집중되었다면 뤼순처럼 포위되었을 것이다. 만약 뤼순함대가 로제스트벤스키가 접근할 때까지 저항했다면 로제스테벤스키는 두 항구에 모두 진입할 수 있었다. 도고 제독은 로제스트벤스키가 뤼순에 들어가서 정비하고 수리하는 것을 묵인했거나, 블라디보스톡의 감시를 포기하고 두 러시아 함대가 합류할 수 있게 허용해야 했다. 일본은 뤼순의 함락과 로제스트벤스키의 도착 사이의 긴 시간의 간격 덕분에 함대 정비를 위한 귀중한 기회를 가졌다.

둘째 러시아 태평양함대가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상황이라면 일본은 뤼순과 블라디보스톡을 동시에 축소하려 했을 것이다. 블라디보스톡 함대는 서로 다른 관심 지점을 부여하여 일본의 노력을 분산시킬 수 있었다.

97) A.T. Mahan, *Naval Strategy: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Military Operations on Land*,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11, pp.403-408

98) A.T. Mahan, *Naval Strategy: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Military Operations on Land*,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11, pp.397

99) A.T. Mahan, *Naval Strategy: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Military Operations on Land*,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11, pp.396-399

셋째 일본은 러시아가 함대를 분산시키도록 자극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위험한 뤼순항구에 집중하도록 강요했다. 러시아는 뤼순함대를 한국과 만주 침공이 시작될 때 뤼순항구 근처에 배치함으로써 일본을 도왔다. 또한 러시아는 뤼순함대를 요새에 묶어 두었다. 러시아는 확실히 뤼순을 보존하고자 하는 바람과 요새함대라는 나쁜 이론 때문이었다. 즉, 함대가 요새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요새가 함대에 종속되는 것이다.

넷째 일본은 러시아군함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뤼순에 있는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군대를 수송해야 했다. 일본은 발틱함대가 출항하기까지 결정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라고 인식했다.

다섯째 태평양함대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다면 일본은 포위하고 봉쇄하도록 강요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이 포트 아서를 동시에 공격했다면, 두 작전은 만주에서 진군 중인 군대에서 15만 명을 빼앗아 갔을 것이다. 또한 두 번째 포위는 일본의 재정을 크게 압박하는 비용을 추가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분명히 일본이 평화를 원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었다. 100) 결국 마한은 러시아가 뤼순함대를 잘못 운영하여 요새함대와 같은 잘못된 원칙으로부터 발생하는 재앙적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IV. 로제스트벤스키의 해군전략과 러일의 동해해전

1. 발틱함대의 이동과정의 문제점

마한은 발틱함대 로제스트벤스키의 이동과정과 발틱함대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첫째 마한은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의 행동과 조치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이는 상하이 근처의 새들 해협(Saddles Strait)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항해 과정을 주목한 것이었다. 발틱함대가 양쯔강(Yang-tse-Kiang) 입구 근처의 새들 제도(Saddle Islands)에서 정박할 때 전쟁의 전략적 지역에 들어섰다. 그 이전 일본함대는 싱가포르까지 정찰 전대를 파견하고 페스카도르 제도와 포모사 해협 주변에 기뢰를 배치했다. 그러나 도고 제독은 한국 해협에 함대를 집중시키기로 결정하고 그 시점에 도달하기 전에 러시아를 괴롭히려는 시도가 없었다.

둘째 마한은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이 직면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파악했다. 로제스트벤스키는 발트해에서 출발하여 긴 항해 동안 긴장 상태에 처했는데 의존할 자원이 없었고 다른 국가의 우호적 중립성만 의지했다. 이는 발틱함대가 불만족스러운 상태였고 블라디보스토크의 2척 전함 이외에는 보강할 수 있는 자원이 없었다.¹⁰¹⁾

그런데 러일전쟁 당시 로제스크벤스키는 확실하게 자신의 목적지를 노출했다. 그 이유는 발틱함대가 단 하나의 항구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도고는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하는 마산포에 미리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도고 제독은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과 뤼순의 항구를 가지고 있었다면 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도고는 플로리다(Florida) 반도와 유사한 한국 반도의 돌출부로 인해 크게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키 웨스트(Key West *플로리다)와 마산포(Masampo)의 위치는 매우 유사하지만 규모의 큰 차이로 인해 로제스트벤스키는 미국의 동부 해안에 접근하는 것보다 가능성이 적었다. 심지어 마산포는 사실상 일본이 소유한 항구였다.¹⁰²⁾

100) A.T. Mahan, Naval Strategy: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Military Operations on Land,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11, pp.440-442

101) A.T. Mahan, Naval Strategy: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Military Operations on Land,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11, pp.409-410

102) A.T. Mahan, Naval Strategy: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the Principles and Practice

무엇보다도 마한은 발틱함대의 내부상황을 분석했는데 선박의 지휘를 맡은 장교는 자신의 주의 부족이나 비효율적인 행동이 이익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째 발틱함대는 카르란만(인도차이나 *베트남)에서 출항하기 직전 해군참모본부(Naval General Staff)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받았다.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는 장비가 부족하고 시베리아 철도에 의한 보급도 어렵다는 것이었다.

둘째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은 전함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만큼 모든 종류의 보급품을 최대한 실어야 했는데 보조 증기선 세 척과 캄차카(Kamchatka)는 최대한 보급품을 싣고서 발틱함대를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네보가토프(Nebogatoff) 제독은 발틱함대가 “전투 시작 시 석탄을 약 3,000마일 정도의 거리를 커버할 수 수준이었는데 쓰시마 해협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900마일 이내 였다”라고 군사재판에서 진술했다.

셋째 마한은 절대적인 저항 불능 상태를 제외하고는 다른 이익이 손상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한 ‘항복’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로제스트벤스키는 8월 10일 휘순함대의 비효율적인 행동으로 패배한 것처럼 9개월 후 쓰시마 해전에서의 패배했다. 결국 마한은 로제스트벤스키가 자신의 목적지를 노출하여 일본함대가 동해해전에서 유리했다고 주장했다.

2. 로제스트벤스키의 해군전략과 실패이유

마한은 러일해전 당시 로제스트벤스키의 해군전략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첫째 로제스트벤스키의 첫 번째 목표는 전투 없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은 해상 지배에 달려 있었고 해상 지배는 적의 함대를 파괴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었다. 그 파괴는 포격을 통한 전투로 함대가 서로 충돌하는 방식이었다.¹⁰³⁾

둘째 로제스트벤스키의 두 번째 목표는 만약 탈출할 수 없다면 전투 시 발틱함대가 전술적으로 최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고 적이 그의 배치에 대해 사전에 아는 이점을 박탈시켜야 한다는 동일한 개념의 통일성이 요구되었다. 로제스트벤스키는 탈출과 전투라는 두 가지 상황 모두 일정 부분 가능성이 있으므로 두 가지 모두를 계획에 고려해야 했다.

그런데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은 겨우 천 마일을 남겨두고 발틱함대를 석탄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이것은 전술적 효율성에 해를 주었는데 탈출에 불리하는 것은 물론 속도와 기동력에도 장애가 되었다. 이는 전투 당시 수면 아래로 너무 낮아진 장갑 벨트를 더욱 침수시켰고, 가연성 물질로 가득 채워져서 상부 구조물의 화재 위험이 증가했다.

셋째 마한은 로제스트벤스키가 자신의 전략적 문제를 명확히 생각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단일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석탄의 과도한 준비는 필수 목표인 승리를 달성할 기회를 줄였다. 로제스트벤스키는 공급 문제와 블라디보스토크 도착에 집착했는데 탈출 또는 전투가 그의 마음속에서 명확하게 지배하지 못했다.

넷째 마한은 로제스트벤스키가 분열된 마음을 노출했는데 ‘현존함대’ 이론의 과장된 형태도 작용되었다고 주장했다. 만약 발틱함대의 일부가 블라디보스토크로 도망친다면 이는 ‘현존함대’로 간주될 수 있다. 전투를 수행하겠다는 결의는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제공했지만 로제스트벤스키의 탈출이라는 생각에 의해서 제한되었다.

마한은 로제스트벤스키가 주요 목표를 부수적인 것에 희생시키는 타협을 수행했다고 비판했

of Military Operations on Land,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11, pp.437
103) A.T. Mahan, Naval Strategy: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Military Operations on Land,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11, pp.410-413

다. 러일해전 직전 로제스트벤스키에 따르면 그는 발틱함대의 일부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다면 일본의 교통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전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마한에 따르면 감소된 함대가 전투의 판도를 바꿀 수는 없다. 싸워야 한다면 그 순간 도망이나 미래의 보급 문제에 의해 흐려져서는 안 된다. 적의 함대를 지금 당장 파괴하겠다는 결심 외에는 어떤 성공도 가능하지 않았다.

다섯째 마한은 로제스트벤스키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의 상상 속에서 열세의 현존함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장된 평가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로제스트벤스키는 과도한 석탄 적재 외에도 수송 열차를 함께 데리고 갔다. 또한 그가 스스로 전진 정찰을 시도했거나, 일본의 정찰선을 쫓아내려 했다는 증거도 없었다. 그 결과 도고 제독은 그의 배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데 로제스트벤스키는 적의 주요 세력을 보기 전까지 도고에 대한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마한은 로제스트벤스키가 러일해전 당시 다음을 고려하며 해군전략을 펼쳐야 했다고 주장했다.

첫째 마한은 역사학자 랑케가 언급한 “정책(policy)이 전략(strategy)의 쌍둥이 형제”라고 인용했는데 “결단이 오직 하나의 목표, 즉 사물의 흐름에 의해 강요된 목표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마한은 ‘목적의 배타성(exclusiveness of purpose)’에 따라 고려사항을 종속시키고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략의 오류는 개념의 통일성과 목적의 배타성 부족에서 기인하는데 잘못된 전술과 나쁜 관리로 연결되었다.

둘째 로제스트벤스키는 유일한 목표가 일본 함대의 파괴였다. 발틱함대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달하는 것은 그 목표를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만약 전투가 강요된다면 발틱함대는 탈출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이 전투를 수행해야 했다. 전투 중에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린다면 함대는 이미 반쯤 패배한 것이다.

셋째 로제스트벤스키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거리와 필요한 석탄의 소모량을 충분히 계산해야 한다. 또한 선박은 조종에 가장 적합한 흘수(draft)를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함대의 집결 장소가 바다의 좁은 부분이나 일본의 조선소 근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로제스트벤스키는 한국 해협(Straits of Korea *용어가 중요함)에서 전투가 시작될 것을 예측했어야 했다. 그렇다면 발틱함대는 해협에 도달할 때까지의 최소한의 석탄 소모량을 적재하여 최적의 전술적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만약 발틱함대가 패배한다면 수송선은 러시아에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성공한다면 정해진 집합소에서 수송선을 호출하면 되는 것이다.

넷째 마한은 로제스트벤스키가 도고를 피했다면 갑판에 실린 석탄이 향후 작전에서 큰 가치가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의 필수 요소, 즉 전투의 날에 최대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에 종속된다. 이는 타협하려는 경향이 얼마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로제스트벤스키의 해군전략은 탈출과 전투라는 두 마리 말을 동시에 타려는 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주었다.

다섯째 로제스트벤스키의 행동은 탈출과 전투의 혼합인 타협의 결과였다. 로제스트벤스키는 전략적 실책을 전술적 실수(tactical error)로 드러냈다. 석탄의 과적재, 석탄 적재에 따른 화재 위험 증가, 장갑 벨트(armor belts)의 침수, 속도와 전술 능력의 상실, 정찰의 소홀, 수송선의 동반 등이 바로 그것이다. 마한에 따르면 로제스트벤스키의 행동은 불안한 항해에 수반되는 보급에 대한 심각한 걱정으로 인해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로제스트벤스키는 “행동을 위한 목적의 집중과 행동을 위한 숫자의 집중이 있다”라는 중대한 과제를 놓친 것이다.¹⁰⁴⁾ 결국 마한은 로제스트벤스키가 일본함대를 파괴하는 전투의 목표를 일관되게 수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V. 마한의 동해해전에 관한 분석

마한은 1905년 5월 27일(러역5.14) 러시아와 일본의 동해해전의 전투과정을 분석하면서 군함의 속도와 무장에 관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러시아함대는 1905년 5월 27일 정오에 일본함대를 발견했는데 12노트의 속도로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오후 2시 8분 함포사격을 개시했다. 일본함대는 러시아함대와 가까운 거리에서 평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일본함대는 러시아함대의 예상경로를 파악하고 사전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 러시아함대는 방어를 중심으로 선택하면서 일본함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블라디보스톡으로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로제스트벤스키는 방어전략을 최우선으로 설정했는데 그는 일본과 해전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최소의 해전으로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할 것, 러시아 기함을 일본함대와 동일한 조건에서 최대한 가깝게 배치할 것, 러시아함대가 최대한 기함과 인접할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러시아함대는 이동속도가 날씨와 석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요소였는데 군함의 자체 속도가 이동속도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았다. 러시아함대는 느린 군함의 속도에 보조를 맞추어 함대의 이동속도를 줄였다. 마한은 러시아함대가 최대한 속도를 끌어 올렸더라도 해전 없이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로제스트벤스키는 일본함대에 돌격하여 빠른 군함이 탈출하는 방법, 기함을 중심으로 공격하는 방법(pinhead battle)을 선택할 수 있었다. 로제스트벤스키는 결국 핀헤드 공격을 선택하고 일본함대와 평형을 이루면서 우측으로 우회했다. 하지만 러시아함대는 2열종대로 진행하여 측면의 모든 공격을 빠르게 사용할 수 없었고 함포사격의 효율성도 떨어졌다.

일본함대는 주력함대가 마산포(Masampo)에 위치했는데 마산포는 러시아함대가 동해를 통해 블라디보스톡으로 진출하거나 쓰가루(Tsugaru 津輕) 해협을 통해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하거나 언제든지 추격하여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었다. 마산포는 러일해전의 장소에서 80-85마일 떨어져 있었다. 도고 제독은 군함의 속도와 관계없이 신속한 정보, 정확한 위치의 선택, 신속한 출항 준비 등의 요인으로 러시아함대보다 30마일 더 짧게 이동할 수 있었는데 러시아함대를 침몰시킨다는 전략을 실행할 수 있었다. 도고 제독은 현명한 위치 선택 덕분에 러시아함대 바로 건너편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러시아함대는 2열 종대로 배치되어 오키노시마와 쓰시마섬 사이로 진행했다. 일본함대는 오키노시마(Okino-shima 沖ノ島) 북쪽 10마일 위치에 집결했다.

일본함대는 동해해전에서 군함의 측면에 포탑과 함포를 배치했다. 일본함대는 측면에 주포 17문을 보유했는데 12인치 16개와 10인치 1개 포탑이었다. 또한 측면에 총 110문의 소형 포대(secondary battery)를 보유했다. 그 결과 전함 오슬랴바(Ослябя)는 포탄(gunfire)으로 침몰했고, 전함이자 기함인 공작 수보로프(Князь Суворов)는 돛대 1개와 2개의 연돌을 상실하면서 어뢰공격까지 받아서 침몰했다. 전함 보르지노(Бородино)와 전함 황제 알렉산드르 3세(Император Александр III)는 포탄으로 침몰했다. 전함 오렐(Орёл)은 12인치 포탑의 총구와 전방의 상판이 떨어져 나갔다. 결국 러시아군함의 침몰은 대부분 배가 물에 잠기는 흡수선(吃水線) 근처 또는 그 아래를 관통하는 포격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 결과는 일본함대가 러시아함대 보다 2배 이상의 소형 포대(the secondary battery)로 무장한 화력의 우위성과 효과

104) A.T. Mahan, Naval Strategy: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Military Operations on Land,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11, pp.414-421

를 입증해 주었다. 측면의 함포 없이 포탑만 가진 군함은 연돌의 파괴에 따라 속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마한은 바다에서 속도가 적을 피하는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1905년 5월 27일 러시아함대는 장기간의 출항, 정박의 장기화 등의 불리함에도 12노트의 속도를 유지했고 일본함대는 15노트 이상의 속력을 내지 않았다. 즉 러시아와 일본 함대는 동해해전에서 서로 속도에 집중하지 않았다. 마한은 20노트 속도의 군함이 원칙적으로 변수가 많기 때문에 18노트 이하의 속도만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한은 동해해전의 결과를 분석하면서 군함이 함포를 줄여서 속도를 얻는다면 접근 전투에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마한은 엔진의 개선으로 군함의 속도를 증가시키면 이점이 있지만 측면의 함포를 포기하고 속도를 증가시키면 단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마한은 접근 전투에서 다수의 함포 공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마한은 군함의 속도와 화력이 모두 중요하지만 접근 전투에 대비해서 화력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마한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속도가 빠른 대형 군함의 건조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마한은 중간급 함선(medium class of vessel)이 함대의 최고의 구성 단위라고 인식했는데 유사시 강력한 포대(heavier batteries)로 강화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마한은 측면의 화력을 중요시했는데 16인치 주포 2문이 장착된 포탑 2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측면의 소형 함포를 설치하여 접근전에 대비할 것을 주장했다. 마한은 소규모 4인치 또는 8인치 함포의 배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발사의 속도와 규모 면에서 엄청난 공격을 실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마한은 동해해전의 결과에 근거하여 소형 함포를 희생하여 속도를 높인 군함이 거리를 두는 방어적인 성공을 달성할 수 있지만 화력의 취약함으로 인해 접근 전투에서 재앙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마한은 전함이 공격과 속도라는 두 가지 특성의 타협으로 제작되었지만 공격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마한은 군함의 크기보다는 숫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더 많은 군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함이 크고 숫자가 적을수록 석탄 등을 적재하기 위해서 입항할 경우 손실이 커진다고 판단했다. 마한에 따르면 순양함(cruiser)은 정찰용이든 공격용이든 정보전달용이든 속도가 중요한 요소였다. 순양함은 화력과 장갑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속도를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전함(battleship)은 속도가 아닌 공격력이 핵심인데 화력에 중점을 맞추어 설계해야 한다. 결국 마한은 해전에서 속도보다는 무장이 더 중요한 요소이며, 중간급 군함을 많이 건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다.¹⁰⁵⁾ 결국 마한은 러시아함대가 속도의 부족, 2열중대의 불안전 대형, 측면 함포의 부재 등으로 동해해전에서 패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VI. 맺음말

마한은 해군전략에서 요새함대와 현존함대의 개념을 통해 러시아가 요새함대를 지향함으로써 러일 해전에서 패배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나폴레옹의 전략에서 목적의 배타성을 강조하며 해군 전략에서도 현존함대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마한은 러시아 해군이 현존함대를 무시하고 뤼순해전과 동해해전에서 '전투와 탈출'을 동시에 시도했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뤼순함대가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있을 때 더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도 마한은 러시아함대가 분산되어 신속한 집결을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러일 해

105) Mahan A.T. Reflections, Historic and Other, Suggested by the Battle of the Sea of Japan.(러일해전에서 제시한 반성과 역사) Proceedings magazine, April 1906. Vol. 32/2/118,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pp.447-472.

전에서 패배했다고 판단했다. 첫째 그는 러시아함대의 신속한 집결 실패가 러일해전 패배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러일 전쟁 당시 러시아는 도고 제독이 뤼순 함대를 격파하면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이 안전하게 진군할 수 있다는 잘못된 해군 전략을 구사했다. 뤼순 함대는 예비 함대를 위해 전장을 비워주는 절망적인 전투를 치렀다.¹⁰⁶⁾ 둘째 마한은 러시아가 러일전쟁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분산되었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함대는 대서양(Atlantic)과 태평양(Pacific) 해안 사이에 분산되어 있었으며, 함대 집중의 원칙이 위반되었다. 비록 러시아 군대가 총체적인 힘에서는 우세했지만, 계속해서 가장 늦게 도착하고 적은 병력을 보유하게 되었다.¹⁰⁷⁾

한편 마한은 러시아의 전체적인 러일전쟁 전략이 하얼빈을 기점으로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러시아군대는 방어 가능한 지점을 점령하며 후퇴할 계획으로, 랴오양에서 하얼빈으로 퇴각할 것이다. 러시아군대는 하얼빈에 도착하면 축적된 병력과 물자를 보강하여 방어를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병력을 증원할 예정이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러시아군대는 충분한 병력으로 반격을 개시할 것이다. 둘째 마한은 하얼빈 중심의 쿠로파트킨 계획이 본질적으로 올바르다고 평가하며, 일본이 평토펜(봉천)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협상 의사를 나타냈다고 언급했다. 셋째 러시아의 러일 전쟁 전략에서 뤼순방어는 필수적인 요소로, 일본이 10만 명이 넘는 병력을 분리하도록 자극했다. 일본은 발틱함대가 도착하기 이전에 뤼순 함대를 무력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한편 만주 지역의 러시아 주력군대는 뤼순 주둔군의 규모만큼 줄어들었지만, 일본육군은 뤼순 주둔군을 무너뜨리기 위해 2-3배의 병력을 투입해야 했다. 넷째 러시아군대의 배치는 필수적인 첫 번째 목표인 지연에 기여했으며, 뤼순 항구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로제스트벤스키가 도착할 때 뤼순 함대가 존재했다면 일본의 해상교통(sea communications)에 위협이 되었을 것이다. 일본 해군은 "서둘러!"라고 외쳤고, 러시아 해안 요새는 "지연!"이라고 응답했다. 다섯째 러시아의 러일전쟁 계획은 '지연'이라는 하나의 원칙으로 작동하며 각자의 역할을 다했지만, 뤼순 요새의 지휘관은 미숙했고 요새 함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지연이 충분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고, 개선되지 않으면 기회 역시 쓸모없게 된다. 마한은 뤼순의 저항으로 얻어진 지연이 러시아의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지만, "이는 러일 평화 협상에서 일본의 협상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¹⁰⁸⁾

결국 러시아군대는 육군전략에 따라 하얼빈에서 병력과 물자를 보강한 후, 충분한 병력으로 일본군대를 공격할 계획이었다. 뤼순 방어는 일본의 병력을 분리하는 데 기여했지만, 궁극적인 러시아의 승리를 이끌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뤼순의 저항은 일본의 병력을 분리하고 러일전쟁을 지연시키는 상황을 초래했고 러시아군대는 하얼빈에서 방어를 강화하고 반격을 준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러시아는 포츠머스조약에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러일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106) A.T. Mahan, Naval Strategy: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Military Operations on Land,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11, pp.9

107) A.T. Mahan, Naval Strategy: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Military Operations on Land,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11, pp.11

108) A.T. Mahan, Naval Strategy: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Military Operations on Land,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11, pp.443-445

참고문헌

- 김동은, 「알프레드 T. 마한의 지정학적 위협인식 및 대외정책론과 20세기 초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4-1, 2022
- 김동은, 「알프레드 T. 마한의 해군전략론과 20세기 초 미국의 해군전략 변화」, 『군사』 119, 2021
- 김성준, 「알프레드 마한(A.T. Mahan)의 해양력과 해양사에 관한 연구」, 『해운물류연구』 26, 1998
- 김세웅, 「1890년대 미국의 팽창주의에 관한 고찰 : A. T. Mahan 해상권을 중심으로」, 『사학지』, 16-1, 1982
- 김영, 「해군성 수로부장 기모쓰키 가네유키(肝付兼行)에 관한 고찰」, 『한일군사문화연구』 23, 2017
- 김주석,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의 생애와 업적」,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2, 책세상, 2022
- 김창국, 「알프레드 마한의 해양전략 사상 연구」, 국방대학원 석사논문, 1989
- 김현기, 『현대해양전략사상가』,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 박영준, 「Alfred T. Mahan의 해양전략론에 대한 연구」, 『육사논문집』 4, 1993
-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1-2, 책세상, 2020-2022
- 윤석준, 『海洋戰略과 國家發展』,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0
- 윤혁민, 「마한(Alfred T. Mahan)의 해양 전략 적용을 통한 태평양해전에 관한 연구: 진주만 기습과 미드웨이 해전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상호, 「19세기 미국의 해군력 확장과 태평양 시대의 개막」, 『미국사연구』 48집, 2018
- 이주천, 「알프레드 마한(Alfred T. Mahan)의 帝國의 戰略과 美西戰爭」, 『미국사연구』 15, 2002
- 이학수, 「마한의 해양전략이론 재해석」, 『해양연구논총』 42
- 임인수, 「해양전략의 기본개념 연구」, 『해양전략』 88, 1995
- 전명석, 「해상전략에 대한 사적 고찰 : Mahan 전략(戰略)을 위주(爲主)로하여」, 『국방연구』 2, 1958
- A.T. Mahan, The Gulf and Inland Waters, 1883
- A.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890
- A.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the French Revolution and Empire, 1793-1812,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894
- A.T. Mahan, Admiral Farragut. New York : D. Appleton and Company 1892
- A.T. Mahan, The Interest of America in Sea Power, Present and Future,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1897
- A.T. Mahan, Lessons of the War with Spain, and Other Articles, 1899
- A.T. Mahan, The Problem of Asia and Its Effect Upon International Policies,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00
- A.T. Mahan, Sea Power in Its Relation to the War of 1812,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05

A.T. Mahan, Reflections, Historic and Other, Suggested by the Battle of the Sea of Japan. Proceedings magazine, April 1906. Vol. 32/2/118,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A.T. Mahan, Naval administration and warfare : some general principles, with other essays,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08

A.T. Mahan, The Harvest Within: Thoughts on the Life of the Christian,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09

A.T. Mahan, Naval Strategy: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Military Operations on Land,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11

A.T. Mahan, Armaments and Arbitration; The Place of Force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States, 1912

A.T. Mahan, The Major Operations of the Navies in the War of American Independence, Th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13

제1부 러일전쟁과 고전 지정학

The Russo-Japanese War and Classical Geopolitics

발표 3

생존경쟁과 영토팽창: 동경대 7박사 집단이 제시한 러일전쟁 개전론의 사상적 배경 검토

Struggle for Survival and Territorial Expansion: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the Russo-Japanese War Opening Argument Presented by the Seven Doctors Group

박해운 Park Hae-Woon(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생존경쟁과 영토팽창: 동경대 7박사 집단이 제시한 러일전쟁 개전론의 사상적 배경 검토

박해운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목차

- I. 머리말
- II. 생존경쟁, 헤켈의 진화론과 라첼의 레벤스raum
- III. 메이지 시대 집단주의적 사회진화론의 일본 유입과 형성 과정:
칠박사 사건 이전 시대적 상황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IV. 칠박사 집단의 개전론에 투영된 영토 팽창 논리
- V. 맺음말

I. 머리말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던 1903년 6월 24일, 도쿄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 법학부 교수 도미즈 히론도(戸水寛人), 오노즈카 기헤이지(小野塚喜平次), 다카하시 사쿠에(高橋作衛), 가나이 노부루(金井延), 도미이 마사아키라(富井政章), 데라오 도루(寺尾亨)와 가쿠슈인대학(學習院大學) 교수 나카무라 신고(中村進午)는 지난 6월 10일 정부에 제출했던 대러시아 정책에 대한 건의서를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에 게재하였다. 이들 중 도미즈를 필두로 한 급진파의 여론몰이로 인해 1903년 10월 개전론이 주류가 됨으로써, 소위 ‘칠박사 사건(七博士事件)’은 러일전쟁 발발에 큰 역할을 하였다.¹⁰⁹⁾

현재까지 이 사건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자의 정치적 자율성, 이들의 여론전이 전쟁 개시에 끼친 영향, 그리고 사건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¹¹⁰⁾ 한편으로 이들이 주장한 개전론의 내용에 대해서는 박양신(朴羊信)이 잘 정리해 놓았다. 그는 칠박사 집단이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과 경제 확장을 위해 전쟁을 주장했으며, 전쟁을 선악의 가치 판단이 아닌 나라의 발전과 일본의 자위라는 명목으로 합리화했다고 설명하였다.¹¹¹⁾ 이는 동시대 일본 지식인의 대외관과 러일전쟁의 상관성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러한 사고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어디서 끌어왔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박양신은 영국에서 유학한 다카하시가 국제법 이론과 마한(Alfred Mahan)의 해양력에 영향을 받았다고 서술하였으나, 이들이 주장한 전쟁을 통한 영토 팽창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론과 유사한지는 제시하지 않았다.¹¹²⁾

칠박사 사건과 그 이후의 전개 과정은 다치바나 다카시(立花隆)의 『천황과 도쿄대 1』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그는 전쟁 도중 바이칼 박사로 불렸던 이 사건의 주동자인 도미즈의 팽창론이 라첼(Friedrich Ratzel)의 ‘레벤스raum(Lebensraum)’과 흡사하다고 제시하였다.¹¹³⁾ 그러나 그는 도미즈의 주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레벤스raum 개념과 유사한지에 대한

109) 宮武実知子, 2007, 「「帝大七博士事件」をめぐる輿論と世論: メディアと学者の相利共生の事例として」,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70, 177~173쪽; 前原淳史, 2018, 「「七博士事件」の再検討: 「金井延日記」を中心として」, 『社会科学』 48(2), 278~279쪽.

110) 宮武実知子, 2007, 위의 글; 前原淳史, 2018, 위의 글.

111) 朴羊信, 1998, 「「七博士」と日露開戦論」, 『北大法学論集』 48(5), 964~970쪽, 973~976쪽.

112) 朴羊信, 1998, 위의 글, 978~979쪽.

직접적인 분석은 시도하지 않았다.

라첼은 다윈(Charles Darwin)의 진화론을 바탕으로 집단주의적 사회진화론을 주장한 헤켈(Ernst Haeckel)의 제자로 진화론의 영역을 지리학으로 확장시킨 인물이었다. 그는 ‘생존경쟁(struggle for existence)’¹¹⁴⁾을 “공간을 위한 투쟁”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생존경쟁을 위해 일으킨 전쟁에서 승리한 집단이 레벤스raum(생활공간)을 확보할 수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개념을 국제정치학에 적용한다면 레벤스raum은 생존을 위해 팽창하는 국가가 타국과의 전쟁을 통해 확보한 영토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레벤스raum은 일본에서 ‘생존권(生存圈)’이라고 번역되어 왔다. 그런데 철박사 집단의 건의서와 이들이 전쟁 전과 도중에 발표한 글에는 ‘생존’이라는 단어는 발견되지만 ‘생존권’이란 단어는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이 국가의 생존을 위해 전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점, 그리고 독일 유학파인 오노즈카가 1903년에 출간한 『정치학대강(政治学大綱)』의 참고문헌에 라첼의 『정치지리학(Politische Geographie)』이 수록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¹¹⁵⁾ 라첼의 이론을 기반으로 논리를 전개했을 가능성이 있다.¹¹⁶⁾

비록 생존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일본이 생존을 위해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라첼의 레벤스raum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이 이유는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비록 라첼은 레벤스raum이라는 단어를 1897년에 발표한 『Ueber den Lebensraum. Eine biogeographische Skizze(레벤스raum에 대하여: 생물지리학적 스케치)』에서 처음으로 제시하였지만 이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한 시점은 『레벤스raum: 생물지리학적 연구(Der Lebensraum: Eine biographische Studie)』이 출간된 1901년이었다. 오노즈카가 1901년에 귀국했기 때문에 이 책을 입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프랑스법 전공자였던 도미이를 제외한 다른 박사들 역시 오노즈카와 마찬가지로 라첼이 학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며 식민지 확보를 통한 과잉 인구의 해결을 역설하기 시작한 1880년대 중반 이후 독일에서 공부하였다. 따라서 이들 역시 라첼의 이론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오노즈카를 제외한 다른 박사들이 라첼에 대해 몰랐을지라도 이들 역시 당시 독일 정부가 추진한 세계정책(Weltpolitik), 그리고 독일인들의 식민지 획득과 지리적 팽창에 대한 열망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었다. 따라서 철박사 집단이 제시한 러일전쟁 개전 논리에 내포된 독일식 집단주의적 사회진화론의 측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들이 집단주의적 사회진화론을 처음 접한 곳은 독일이 아니라 일본이었다. 18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던 진화론은 개인 간의 자유 경쟁과 국가 간섭의 최소화를 강조한 스펜서(Herbert Spencer)의 이론이 아닌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를 통해 유입된 헤켈의 진화론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생존을 위해 전쟁이 필요하다는 철박사 집단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진화론의 기본 원리가 어떻게 일본에 유입되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연구자들은 가토의 국가주의적 진화론에 대한 헤켈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관해 간접 인용에 그침으로써 ‘생존경쟁’이라는 개념이 일본에서 어떻게 메이지 시대 권위주의적 정부 체제의 확립과 팽창 정책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밀도 있는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¹¹⁷⁾

113) 다치바다 다카시 지음, 이규원 옮김, 2008, 『천황과 도쿄대』 1, 서울: 청어람미디어, 364쪽.

114) 영어 ‘struggle for existence’와 독일어 ‘Kampf ums Dasein’의 올바른 번역어는 ‘생존투쟁’이다. 하지만 당시 일본에서 이를 ‘生存競争’이라 번역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생존경쟁’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겠다.

115) 小野塚喜平次, 1903a, 『政治学大綱』 上, 東京: 博文館.

116) 藏原惟昶(編), 1903, 『滿州問題ニ關する七博士の意見書』, 『日露開戦論纂』, 東京: 東京國文社.

따라서 본고는 우선 헤켈을 중심으로 하여 다윈 진화론의 독일 유입 과정과 라첼의 레벤스라움이 내포한 사회진화론적 함의를 논의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일본에 진화론을 최초로 소개한 에드워드 모스(Edward Morse)의 이론과 가토가 제시한 사회진화론의 특징, 그리고 그의 이론이 반영하는 시대적 상황과의 연관성을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라첼의 영토 팽창 이론과 칠박사 집단이 제시한 개진 논리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박양신이 주장한 것처럼 일본의 사회진화론자들의 이론에 나타나는 비윤리적 측면, 일본 사회에 국민의 통합과 계층의 위계화를 강조한 집단주의적 사회진화론의 확산 과정, 칠박사의 전쟁론에 내포된 국가의 생존을 위한 영토 팽창에 대한 이해와 함께 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전쟁을 생존 수단으로 간주했는지에 대한 원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II. 생존경쟁, 헤켈의 진화론과 라첼의 레벤스라움

1844년 바덴 대공국의 수도 카를스루에에서 태어난 라첼은 하이델베르크대학, 예나대학, 베를린대학에서 동물학을 수학한 후 1868년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이 시기 라첼은 다윈의 자연선택설과 예나대학 시절 스승 중 한 명인 헤켈의 진화론을 기반으로 어떻게 무기체가 유기체로 진화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¹¹⁸⁾ 그리고 그는 1870년대에 진화론을 지리학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그의 레벤스라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윈과 헤켈이 주장한 진화론, 그 중에서도 ‘생존경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실제 이 개념을 최초로 구체화한 사람은 다윈이 아닌 맬서스(Thomas Malthus)였다. 맬서스는 『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에서 기독교의 세계관을 거부하고 인간이 자연계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닌 다른 유기체와 같은 자연 법칙에 따라 생존하는 존재로 규정하였다.¹¹⁹⁾ 한편으로 맬서스는 당시 계몽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세계관을 거부하였다. 그에 의하면 동물과 식물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후손들을 증가시키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¹²⁰⁾ 맬서스는 지구는 늘어나는 개체군에게 무한한 공간과 자원, 그중 특히 식량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는 식물과 동물의 경우 자원의 한계에 의해 약한 개체군이 제거됨으로써 적정수를 유지하며, 인간의 경우 질병, 전쟁, 기아 등을 통해 인구의 균형이 유지된다고 주장하였다.¹²¹⁾ 한편으로 맬서스는 인간 사회가 인구 증가로 인해 식량 부족에 빠졌을 때 이주를 통해 다른 집단과의 전쟁을 통한 생존경쟁을 벌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강한 집단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는 것을 일종의 자연 법칙으로 본 것이었다.¹²²⁾

다윈은 맬서스의 『인구론』을 1838년 10월에 접하였는데 맬서스의 생존개념 개념은 다윈의 진화론에 큰 영향을 주었다.¹²³⁾ 다윈은 맬서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을 특별한 존재가 아닌 자연계의 일원이라고 보고, 맬서스가 인간 사회에 한정해 설명했던 생존경쟁을 자연계 전체에

117) 김도형, 2014,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의 진화론수용 이해 - 「疑堂備忘」 독해를 중심으로」, 『日本思想』, 27.
 118) F. Ratzel, 1869, *Sein und Werden der organischen Welt: Eine populdre Schipfungsgeschichte*, Leipzig: Gebhardt und Reisland, pp. 83~89.
 119) 김호연, 2009, 『우생학, 유전자 정치의 역사』, 서울: 아침이슬, 46~47쪽.
 120) T. Malthus, 1993(1802),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2n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18.
 121) T. R. Malthus, 1993(1802), 위의 책, pp. 14~17.
 122) T. R. Malthus, 1993(1802), 위의 책, pp. 25~27.
 123) N. Barlow(ed.), 1958, *The Autobiography of Charles Darwin*, New York: W·W·Norton & Company·INC, p. 120.

적용하려 하였다. 그리고 그는 생존경쟁에 의한 종의 자연선택 과정을 『종의 기원(On the Origins of Species)』 제 3장 「Struggle for Existence」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이 장에서 맬서스를 언급하며 모든 유기체들은 물리적 생활 조건 내에서 자신들이 생존할 수 있는 수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생존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윈은 생존경쟁은 같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특히 동일한 식량을 두고 경쟁하는 생물종 간에서, 또 종 내 개체군 사이에서 강하게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는 종들의 개체군 증가를 저지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서술하였으나, 기후 변화를 포함한 생활 조건의 변화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추측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존에 더욱 유리한 종이냐 개체군이 자연선택에 의해 살아남는다고 제시하였으며, 자연 상태에서 생물종은 수많은 변이를 일으키고, 그중 생존경쟁에 유리하게 개량된 변이가 유전되면서 종의 진화가 일어난다고 가정하였다.¹²⁴⁾

하지만 다윈의 생존경쟁 개념은 맬서스와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다. 맬서스는 과잉 인구에 의해 발생하는 생존경쟁을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전쟁과 기아의 원인으로 판단하였다. 또 타 집단과의 생존경쟁에서 승리한 집단도 역시 기하급수적인 인구의 증가에 의해 파멸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반면에 다윈은 생존경쟁에 의해 자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종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에 불리한 형질들을 제거된다고 추측하였다.

영국에서 다윈의 이론에 대한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던 1860년대, 독일의 일부 젊은 지식인들은 다윈의 진화론을 열렬히 수용하였다. 당시 독일의 다윈 추종자들은 대체로 자유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독일의 통일과 구체제의 개혁을 위해 발발한 1848년 혁명이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던 귀족층과 교회의 반대에 의해 실패한 이후인 반동의 시대에 청소년기를 거친 인물들이었다. 혁명의 실패를 경험한 이들은 인간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는 계몽주의의 기본 원칙을 거부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에 개입하고 있던 교회, 그 중에서도 특히 통일에 반대하던 가톨릭에 대해 부정적이었다.¹²⁵⁾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중 일부는 인간이 기독교의 신이 창조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동물과 같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진화하는 존재라는 다윈의 진화론을 열광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를 대표하는 학자가 바로 1834년 2월 프로이센의 포츠담에서 태어난 헤켈이었다.

독일 통일을 지지하던 상층 중간계급 자유주의자 집안에서 태어난 헤켈은 1850년대 중반 과학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기독교, 그 중에서도 특히 가톨릭의 반과학적인 종교관을 비판하기 시작하였으며, 1860년대 초반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였다.¹²⁶⁾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기 다윈은 자신의 진화론을 인간계에 적용하는 것에 주저했던 반면 헤켈은 1863년 ‘생존경쟁’과 ‘자연선택’에 의해 사회가 ‘진보(progress)’하여 ‘시민사회’에 도달하는 것이 자연 법칙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이다.¹²⁷⁾ 그는 인간 사회 역시 자연 법칙에 의해 운영되므로 자연계에서 단순한 하등 생명체가 복잡한 고등 생명체로 진화하듯 인간 사회도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진화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 정점이 시민사회라 주장하였는데 이는 바로 그의 정치관

124) C. Darwin, 1859, *On the Origins of Species*, London: John Murray, Albermale Street, pp. 63~79, p. 433.

125) W. Smith, 1991, *Politics and the Science of Culture in German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91~94.

126) R. Richards, 2008, *The Tragic Sense of Life: Ernst Haeckel and the Struggle over Evolutionary Though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44~49.

127) R. Weikart, 1993, “The Origin of Social Darwinism in Germany, 1859-1895”,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 54(3), p. 473.

을 반영한 것이었다.

헤켈의 진화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생물학적·자연과학적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그의 정치적 입장과 연결되는 분야만 검토해 보겠다. 인간 사회의 진화와 관련한 헤켈의 진화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1867년에 창당한 독일국가자유당(Nationalliberale Partei)의 지지자였음을 알 필요가 있다.¹²⁸⁾ 당시 국가의 통합과 자유를 강조했던 독일국가자유당은 크게 두 가지 분파로 구성되었다. 그중 우파는 자유와 문화적 진보를 위한 선결 조건이 국가의 권위주의적인 권력이라 주장하였으며, 좌파는 시민의 자유와 의회 권력이라 판단하였다.¹²⁹⁾ 그중 헤켈은 우파로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의 권위주의적인 통치와 민족(volk)의 통합을 지지하였다.

헤켈은 무자비한 “생존을 위한 경쟁”이 자연의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소수의 선택된 개체만이 이 경쟁을 성공적으로 견뎌낼 수 있고, 대다수의 경쟁자들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받고 멸망할 것이라 주장하였다.¹³⁰⁾ 그런데 그는 종 내 또는 집단 내에서 각각의 개체가 벌이고 있는 생존경쟁에 의해 어떻게 부적응한 개체가 제거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당시 독일은 산업혁명에 의한 도시화가 진전되고 있었으며 계급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계급 분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는 노동의 분화(Arbeitsteilung)를 진화의 추동력이라 판단했다. 그는 노동의 분화가 집단 내 계급의 분화를 수반하는데 계급 간의 협력이 하등한 낮은 단계에서 고등한 높은 단계로 진화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생물계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세포의 경우 진화 과정에서 핵, 체, 막으로 분화되는데 각각의 구성체는 각자 다른 역할을 하지만 세포의 생존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관된다. 따라서 생명체가 진화할수록 각자의 역할을 하는 구성체의 분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생물이 진화할수록 기능적으로 분화된 노동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집중화된다는 것이다.¹³¹⁾

헤켈은 인간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불평등한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유기체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였다. 그는 세포를 질서 있는 문화국가에서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로 비유하였으며, 시민사회는 분업을 통해 진보한다고 판단하였다. 식물의 경우 세포가 비교적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동물의 경우 세포가 위계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생각한 헤켈은 이를 인간 사회에 적용하였다. 즉 “조직(tissues)”에서 형성된 “기관(organs)”은 국가의 “부서(departments) 및 기관(institutions)”과 같고,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의 “통치(rule)”는 “뇌의 신경 중심 권력(the power of the brain as nerve centre)”과 비교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¹³²⁾

헤켈은 기본적으로 높은 문화에 도달한 국가가 “aristokratische”¹³³⁾에 의해 운영된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이 단어는 “귀족제”로 번역되나 혈통과 관계없이 능력 있는 소수에 의해 운영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 그는 당시 프로이센과 독일제국의 토지귀족이었던

128) R. Weikart, 1993, 위의 글, p. 473.

129) P. Otto, 2014, *Bismarck and the Development of Germany*, Volume I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167.

130) E. Haeckel, 1908(1878), *Freie Wissenschaft und freie Lehre Eine Entgegnung auf Rudolf Virchow's Munchener Rede uber "Die Freiheit der Wissenschaft im modernen Staat"*, Leipzig: Alfred Kröner Verlag, p. 67.

131) E. Haeckel, trans by E. Lankerster, 1880(1868), *The History of Creation (Natürliche Schöpfungsgeschichte)* Vol. I, York: D. Appleton and Company, pp. 187~188, p. 284.

132) P. Weindling, 1981, “Theories of the Cell State in Imperial Germany”, In C. Webster(ed.), *Biology, Medicine and Society 1840-194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19.

133) E. Haeckel, 1908(1878), 앞의 책 p. 68.

윙커(Junker)를 증오하였다. 헤켈은 1866년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소독 일주의를 채택한 윙커 출신 비스마르크를 맹비난하였지만, 민족주의의 고양, 중간계급 이익의 보장, 권위주의적인 국가 운영을 추구하던 비스마르크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었다.¹³⁴⁾

또한 그는 높은 문화를 지닌 사회를 노동의 분화가 고도화된 산업사회라 정의했는데 이는 곧 산업사회를 지도하는 계층이 과학자, 기술자, 지식인과 같은 상층 중간계급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헤켈은 이들의 능력이 산업사회에 적합한 유전형질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곧 유전적으로 선택된 엘리트들이 사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¹³⁵⁾ 헤켈은 각 개인은 불평등한 존재이며 시민사회 모든 구성원의 권리, 의무, 재산, 권력이 동등하지 않은 것이 자연법칙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사회의 각 구성원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위에 따라 국가라는 유기체의 운영을 위한 역할을 기능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¹³⁶⁾ 따라서 헤켈은 계몽주의의 자유의지(free will)와 민주주의를 거부하였으며, 공동체의 유대와 사회를 위한 개인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이 지점에서 헤켈의 진화론은 스펜서의 사회진화론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자유방임과 개인의 경쟁을 강조한 스펜서는 극빈층을 생존경쟁에서 실패한 집단으로 간주하여 이들에 대한 구제에 반대하였다. 반면 헤켈은 국가가 가난한 계급을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조건 개선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³⁷⁾ 이는 헤켈이 서양 인종이 공유하는 유전적 우월성에 의해 서구사회가 분업화에 바탕을 둔 고도화된 산업사회를 이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¹³⁸⁾ 인구의 증가, 산업의 발달, 노동의 분화 과정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상층 중간계급과 같은 인종에 속한다고 간주하였다. 따라서 이들도 사회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¹³⁹⁾ 유전적으로 이들보다 뛰어난 계층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가 유전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헤켈이 제시한 생존경쟁의 사례는 사회 집단 내가 아닌 집단 간의 대결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생존경쟁의 과정과 관련해 ‘더욱 발전하고 규모가 큰 집단이 더 뒤처지고 더 작은 집단을 희생시키면서 더 많이 퍼지게 되는 긍정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자에 의한 약자의 소멸을 합리화하였다.¹⁴⁰⁾ 그는 생존경쟁을 벌이는 집단을 크게 인종과 국가로 구분하였다. 그는 신생대 제3기 말에 존재했을, 직립보행 하는 “사람 같은 유인원(men-like ape, Pithecanthropi)”을 인간의 공통 조상으로 가정하였다.¹⁴¹⁾ 그리고 사람 같은 유인원에서 “원시인간(primitive man)”이 출현하였으며, 이 집단이 다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여러 인간 “종(species)”으로 분화하였고, 이 과정 내에서 생존경쟁에 실패한 수많은 인간 종이 멸종하였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리고 당시 가장 우수한 인종인 생존경쟁에서 패배한 흑인(negros), 호주 원주민 등의 “야만인(savage)”이 멸종해 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¹⁴²⁾

헤켈은 국가라는 정치체를 문명사회의 특징으로 간주하고, 노동의 분화 단계가 높고 중앙

134) R. Richards, 2008, 앞의 책, pp. 176~177.

135) E. Haeckel, trans by J, McCabe, 1904, *Wonders of Life: A Popular Story of Biological Philosophy(Die Lebenswunder)*, London: Haper & Brothers Publisher, p. 425.

136) E. Haeckel, 1908(1878), 앞의 책, pp. 68~70.

137) E. Haeckel, trans by J, McCabe, 1904, 앞의 책, p. 117.

138) E. Haeckel, trans by J, McCabe, 1904, 위의 책, p. 60.

139) E. Haeckel, trans by J, McCabe, 1904, 위의 책, p. 425.

140) E. Haeckel, trans by E. Lankester, 1887(1868), *The History of Creation (Natürliche Schöpfungsgeschichte)*, Vol. II, York: D. Appleton and Company, p. 324.

141) E. Haeckel, trans by E. Lankester, 1887(1868), 위의 책, pp. 292~294.

142) E. Haeckel, trans by E. Lankester, 1887(1868), 위의 책, pp. 321~325.

집권적인 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영국과 독일을 당대 가장 발전한 국가로 분류하였다.¹⁴³⁾ 헤켈은 영국인이 인종적으로 독일인과 비슷하며 이 두 나라는 비슷한 문화를 공유한다는 이유로 영국을 호의적으로 보았다. 하지만 한편으로 헤켈은 영국이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식민지 획득과 팽창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국을 독일의 생존경쟁 대상으로 간주하였다.¹⁴⁴⁾ 제국주의자였던 헤켈은 1890년대 독일의 팽창을 본격적으로 부르짖기 시작하였으며 1910년대에는 독일이 새로운 레벤스raum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¹⁴⁵⁾ 즉 산업의 발전에 의한 무역의 확대와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독일제국의 해결책이 바로 레벤스raum의 확대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레벤스raum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개념화한 사람은 헤켈이 아니라 그의 제자 라첼이었다. 그런데 레벤스raum의 기본 개념은 그가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1897년 이전에 발표한 저작들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1882년 출간한 『인류지리학(Anthropogeographie)』에서 라첼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토지가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강한 민족이 팽창하여 약한 민족을 정복하게 되는 것을 자연법칙이라 주장하며, 독일이 식민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¹⁴⁶⁾

라첼이 레벤스raum의 확장을 주장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정치적 성향과 당시 독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스마르크의 주도로 아프리카의 분할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될 예정이었던 베를린 회담(The Berlin Conference, 1884년 11월 15일~1885년 2월 26일) 직전인 1884년 9월 16일, 뮌헨에서 독일국가자유당의 창당기념식이 열렸다. 당원이던 라첼은 『국가불평론자들을 반대하며(Wider die Reichs Nörgler)』라는 연설문을 공개하였다. 라첼은 이 연설문에서 독일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 좁은 영토로 인한 자원 부족의 해결, 산업 발전에 의한 무역 확대를 위해 식민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¹⁴⁷⁾

19세기 중반 이후 독일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1840년에서 통일되기 직전인 1871년까지의 독일 내 각 국가들의 인구 자연증가율은 평균 약 10퍼센트였으며, 1871년 이후 14년 동안에는 독일의 인구가 약 300퍼센트 증가하였다. 당시 독일의 경우 공업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수많은 농민이 유입됨에 따라 산업도시는 과밀화되고 있던 반면, 농촌의 경제 성장은 정체되고 있었다.¹⁴⁸⁾ 게다가 1873년에 시작한 장기불황(Long Depression)의 여파로 공산품과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독일인들이 일자리와 농지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었다.¹⁴⁹⁾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880년대 비스마르크는 식민지 개척을 시도하였고 라첼은 바로 이 정책을 지지한 것이었다.

이후 라첼은 독일의 식민지 개척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레벤스raum의 이론적인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인류지리학이 생물지리학과 동일 선상에서 출발한다고 정의함

143) E. Haeckel, trans by E. Lankerster, 1887(1868), 위의 책, p. 281.

144) D. Gasman, 1971, *The Scientific Origins of National Socialism: Social Darwinism in Ernst Haeckel and the German Monist League*, London: Macdonald & Co. LTD, pp. 127~129; E. Haeckel, 1925(1890) "Algerische Erinnerungen", *Teneriffa bis zum Sinai*, Leipzig: Kroner, pp. 84~85.

145) D. Gasman, 1971, 위의 책, p. 131.

146) F. Ratzel, 1882, *Anthropogeographie*, Stuttgart: Verlag Von J. Engelhorn, pp. 166~167.

147) F. Ratzel, 1884, *Wider die Reichs Nörgler*, München: Oldenbourg Wissenschaftsverlag.

148) J. Reulecke, 1977, "Population Growth and Urbanization in Germany in the 19th Century", *Urbanism Past & Present* No. 4, pp. 22~23.

149) W. Smith, 1974, "The Ideology of German Colonialism, 1840~1906",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46(4), pp. 641~645.

으로써 ‘공간을 위한 경쟁’을 자연 법칙으로 간주했다.¹⁵⁰⁾ 그에 의하면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데 여기서 공간이란 식량을 제공하는 토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기후환경의 변화와 함께 라첼은 서식밀도의 증가를 레벤스라움의 팽창 이유로 제시하였다. 즉 개체수가 공간이 부양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면 그 종의 일부는 협소한 공간에 적응하기보다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려 하고, 이에 따라 기존에 살고 있던 비슷한 자원을 이용하는 종과 대립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레벤스라움이 더욱 넓게 확장될수록 생물의 경우 이용 가능한 자원이 증가함에 따른 다양한 조건에 적응하기 마련이고, 이에 개체수가 증가하여 다른 종을 압도하게 되어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라첼이 제시한 이론이었다. 그는 패배한 종은 서식지의 한계로 인해 결국 퇴화되고 멸종한다고 주장하였다.¹⁵¹⁾ 따라서 라첼은 맬서스와는 다르게 개체수의 과잉을 종의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간주하였다.

『레벤스라움: 생물지리학적 연구』 출간 이전 라첼은 오노즈카가 인용한 『정치지리학』에서 “동식물계의 생존경쟁이 항상 공간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것처럼 국가 간 투쟁도 대부분은 영토를 둘러싼 투쟁일 뿐이다.”라고 주장하였다.¹⁵²⁾ 그는 국가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초과 인구를 인구가 희박한 인근 지역으로 보내게 되고 이로 인해 전쟁이 발생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라첼은 국가 간의 전쟁을 영토, 즉 레벤스라움을 확장하는 본질적인 수단으로 보고, 전쟁을 과잉 인구 해소와 국가의 생존을 위한 방어 수단으로 생각하였다.¹⁵³⁾ 그런데 당시 유럽은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러시아 등의 강대국의 역사적인 전쟁을 통해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따라서 그는 과잉 인구의 해소를 위해 유럽 내에서의 전쟁을 통한 레벤스라움의 확보보다는 해외 식민지의 개척을 통한 영토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¹⁵⁴⁾

라첼은 서구 열강의 해외 식민지 개척을 “문화민족(Kulturvölker)”이 “자연민족(Naturvölker)”을 정복하는 과정이라고 합리화하였다. 그는 토지의 가치에 대한 인식, 기술적 발전 수준과 이를 다룰 수 있는 문화적인 능력이 이 두 민족을 가르는 핵심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자연민족의 경우 이 수준이 낮거나 또는 인구 감소로 인해 이것이 퇴화되었다고 제시하였다.¹⁵⁵⁾ 그는 문화민족인 유럽인이 자연민족인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땅을 정복함으로써 원주민들이 비옥한 토지에서 밀려난 결과 이들 집단의 인구가 급감했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주민 집단은 생존경쟁에서 패배한 존재라는 것이었다.¹⁵⁶⁾ 그리고 퇴화된 종이 멸종하는 것이 자연 법칙에 따른 것이듯, 이들의 소멸도 당연하다는 것이 라첼의 생각이었다. 따라서 라첼은 해외 식민지에서 이주민과 원주민의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닌 본국 이주민의 대체 과정으로 판단하였다. 문화민족의 인구폭발에 의한 식민지의 건설, 그리고 이주민들의 자연적인 인구 증가는 결국 식민제국의 팽창과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었다.

독일에서 레벤스라움의 확보에 대한 논의는 경쟁 대상인 협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파리강화회담(Paris Peace Conference, 1919~1920)에서 해외 식민지뿐만 아니라 서프로이센과 포젠을 포함한 13퍼센트의 영토를 상실한 독일인들은

150) F. Ratzel, 1901, 앞의 책, p. 1.

151) F. Ratzel, 1901, 위의 책.

152) F. Ratzel, 1903, 앞의 책, p. 381.

153) F. Ratzel, 1897, “Ueber den Lebensraum. Eine biogeographische Skizze”, *Die Umschau* 21(1) pp. 363~367; 1903, *Politische Geographie* 2nd edition, Berlin: Druck und Verlag von R. Oldenbourg. p. 93~94, p. 100, p. 141.

154) F. Ratzel, 1903, 위의 책, pp. 246~251.

155) A. Stoginno, 2019, *The Genesis of Geopolitics and Friedrich Ratzel*, Cham: Springer, p. 203.

156) F. Ratzel, 1901, 위의 책, pp. 54~56.

이제 복수심에 가득 차게 되었다. 결국 이는 레벤스라움의 확대를 선언한 나치가 1933년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게 된 원인 중 하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칠박사 집단 중 영토팽창론자들이 제시한 러시아와의 대결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일본의 급증하는 인구에 대한 해결이었다는 점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이지 시대 독일식 사회진화론의 일본 유입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III. 메이지 시대 집단주의적 사회진화론의 일본 유입과 형성 과정: 칠박사 사건 이전 시대적 상황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다윈의 진화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한 서구 국가가 독일이라면 그 외 지역에서는 일본이었다. 1800년대 중반 일본은 ‘생존경쟁’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일본의 막부 정부는 1853년 페리 제독의 무력시위에 저항하지 못했다. 그리고 개항 후 일본 정부는 서구 열강과 불평등조약을 맺었다. 이후 일본은 사쓰에이 전쟁(薩英戦争)과 시모노세키 전쟁(下関戦争)에서 근대적 무기로 무장한 서양 세력의 위력을 경험했다. 마침내 1868년 국가의 생존을 위해 ‘부국강병(富國強兵)’과 ‘식산흥업(殖産興業)’을 기치로 내세운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었다.

다윈의 이론을 일본에 본격적으로 소개한 사람은 미국 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의 회원인 미국의 진화론자 모스였다. 1877년 6월, 문부성(文部省)은 연구를 위해 일본을 방문한 패류 전문가 모스를 도쿄대학(東京大學)의 초대 동물학 담당 교수로 임명하였다. 이는 미시간대학에서 개최된 모스의 특별 강연에 깊은 감명을 받은 후 귀국해 도쿄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도야마 마사카즈(外山正一)의 소개 덕분이었다. 이 특별 강연에서 모스는 다윈의 진화론을 소개했다.

모스는 도쿄에서 학교라는 울타리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1877년 10월 그는 도쿄대학에서 세 차례 진화론에 대한 특별 강연을 실시했는데, 당시 강연에 참석했던 교수들, 그들의 부인, 5~600명의 학생들의 열띤 참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¹⁵⁷⁾ 이후에도 그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설립한 게이오의숙(慶應義塾)을 포함한 도쿄 내 각지에서 명사들과 지식인들을 상대로 진화론에 대한 강연을 실시하였다.¹⁵⁸⁾ 강연에서 그는 동물이든 인류든 변화하는 환경에서 생존경쟁에서 승리한 개체나 종이 살아남는다고 설명하였다.¹⁵⁹⁾ 그리고 모스는 월승이와 공통 조상에서 번영한 인류가 다시 인종으로 분기되는데, 유전에 의해 짐승처럼 싸우는 하등한 인종은 전쟁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인종에 의해 패배한다는 인종주의적 진화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모스는 전쟁에 유리한 인종을 같은 정부 아래에서 같은 목표를 위해 단합하는 집단으로 정의함으로써 구성원의 단결이 집단적 생존경쟁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다.¹⁶⁰⁾ 따라서 모스가 일본에 전파한 다윈의 진화론은 헤켈의 진화론과 매우 흡사하다. 그에 의해 다윈의 이론인 ‘생존경쟁’이 일본에서 널리 확산되었다.¹⁶¹⁾ 따라서 메이지 시대 인종주의적이고도 집단주의적 사회진화론이 지식인 사회에 널리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한 사람은 모스로 볼

157) E. Morse, 1979 *Japan Day by Day* Vol. 1, New York,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p. 138.

158) S. Cross, 1995, “Prestige and Comport: The Development of Social Darwinism in Early Meiji Japan, and the Role of Edward, Sylvester Morse”, *Annals of Science* 53, p. 338.

159) エトワルト・モース 口述, 石川千代松 筆記, 1967(1883), 「動物進化論」, 『明治文化全集. 27, 科學篇』, 明治文化研究會 編輯, 東京: 日本評論社, 329~331쪽.

160) エトワルト・モース 口述, 石川千代松 筆記, 1967, 위의 글, 35~357쪽.

161) 矢田部良吉, 1967(1883), 「緒言」, エトワルト・モース 口述, 石川千代松 筆記, 1967, 「動物進化論」, 『明治文化全集. 27, 科學篇』, 明治文化研究會 編輯, 東京: 日本評論社, 321쪽.

수 있다.

비록 모스가 일본에 다윈의 진화론을 소개했으나 당시 일본인들의 지적 환경에서는 이 이론을 직접 생물학에 적용할 수 없었다. 실제 일본 과학계에서 진화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모스의 제자인 이시카와 지요마쓰(石川千代松)가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1889년에 시작되었다.

그런데 1880년대 초반 일본 사회를 고민했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이 유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생존경쟁의 스펜서식 표현인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보다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로운 개인들의 경쟁에 의한 사회 발전한다는 스펜서의 ‘산업사회(industrial society)’ 이론에 주목하였다.¹⁶²⁾ 이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다. 1874년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가 주도한 「민선의원설립건백서(民撰議院設立建白書)」의 제출 이후, 일본에서는 입헌군주제 설립을 위한 자유민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¹⁶³⁾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도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이에 당시 정부를 주도하던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는 헌법 제정과 국회 개설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이토는 독일식과 영국식 중 무엇이 적합한지 정확한 노선을 정하지 않았으나, 후쿠자와와 친밀하게 지낸 오쿠마는 영국형의 의원내각제를 지지하였다. 1881년 3월 오쿠마는 이토나 이노우에와 상의하지 않고 아리스가와노미야 다루히토 친왕(有栖川宮熾仁親王)에 보낸 의견서에서 헌법을 제정한 뒤 1883년 초에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기반으로 한 국회를 개설하자고 건의하였다. 이토는 이러한 급진적인 헌법 구상에 반발하며 격노하였으며, 이노우에는 후쿠자와로 상징되는 정부를 향한 여론전을 주도하던 도시민권파(都市民權派)가 배후에 있다고 의심하였다. 결국 1881년 10월 12일 메이지 천황이 1890년 국회를 개설하기로 발표한 직후 오쿠마의 사직과 함께 도시민권파와 연결된 정부 관료들이 해임되었다.¹⁶⁴⁾

소위 ‘메이지 14년의 정변’이라 불리는 이 사건을 전후로, 자유민권론을 지지하던 지식인들은 게이오의숙을 중심으로 스펜서의 진화론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들은 스펜서의 적자생존 개념보다는 그가 제안한 ‘군사사회(militant society)’에서 ‘산업사회’로의 진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스펜서는 권위주의적인 중앙집권적인 정부, 개인에 대한 통제, 엄격한 사회계층화로 특징되는 ‘군사사회’에서 평등한 도덕적인 개인의 자발적인 협동에 의해 운영되는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것을 ‘일반적인 법칙(universal law)’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자유민권론자들은 당시 일본 사회를 전제적인 ‘군사사회’로 정의하고 이를 민주적인 ‘산업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스펜서의 진화론을 무기로 정부와 투쟁한 것이었다.¹⁶⁵⁾

이런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에서 가토의 ‘사상적 전향’ 사건이 일어났다. 가토는 1873년 결성된 일본 최초의 계몽 학술단체인 메이로쿠샤(明六社)에서 후쿠자와 등과 함께 활동하였지만 1882년 10월에 출간한 『인권신설(人權新說)』에서 천부인권이란 없고 권리라든 것은 치열한 권력 경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획득한 것이라 주장함으로써 자유민권론자들을 공격하였다.

이 책에서 가토는 집단주의적, 사회진화론적 시각에서 국가의 성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국가가 생기기 전 인간 사회에서는 생명을 빼앗는 가혹한 ‘우승열패(優勝劣敗)’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전제 권력을 가진 최대 우승자가 등장하여 국가를 창설했을 때, 우승열패

162) D. Howland, 2000, “Society Reified: Herbert Spencer and Political Theory in Early Meiji Japan”,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42(1), p. 70.

163) 이태진, 2022, 『일본제국의 ‘동양사’ 개발과 파시즘』, 서울: (주)사회평론아카데미, 67~72쪽.

164) 松沢裕作, 2016, 『自由民権運動: 「デモクラシー」の夢と挫折』, 東京: 岩波書店, 131~137쪽.

165) 山下重一, 1975, 「明治初期におけるスペンサーの受容」, 『年報政治学』 26.

를 제한하고 사회와 개인의 안전을 위해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가토가 1877년 12월 30일 작성하기 시작한 연구 노트 『의당비망(疑堂備忘)』 1에는 생존 경쟁이라는 단어와 다윈, 헤켈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¹⁶⁶⁾ 도쿄대학의 총리였던 가토는 모스와 친밀한 관계였다. 하지만 모스는 당시 일본 지식인들의 학문, 특히 생물학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은 관계로 다윈의 진화론을 상당히 간략한 형태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어 구사자였던 가토는 다윈의 진화론을 『종의 기원』이 아닌 1868년에 출간된 헤켈의 저작 『자연창조사(Natürliche Schöpfungsgeschichte)』를 통해 받아들였다. 『의당비망』을 검토하면 가토가 ‘선택설(Selektionstheorie)’, ‘생존경쟁(Kampf ums Dasein)’, ‘자연선택(Natürliche Zuchtwahl)’, ‘적응(Anpassung)’ 등 다윈이 제시한 기본적인 개념과 ‘유전(Vererbung)’, ‘인위적 선택(Künstliche Zuchtwahl)’, 생명체와 인류의 진화과정 등 헤켈이 강조한 개념을 『자연창조사』를 통해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⁶⁷⁾ 모스와 헤켈을 통해 진화론에 접근한 가토는 이제 다윈이 피하고자 했던 생존경쟁의 인간사회에 대한 적용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집단의 생존을 위해 유전적으로 선택된 엘리트들이 사회를 주도해야 한다는 헤켈의 주장은 가토에게 있어서 집단 내부의 생존경쟁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 가토는 『인권신설』에서 헤켈과 유사하게 ‘능력과 재능, 도덕성, 품행, 학예, 재산, 농업, 공업, 상업 등의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정신적 우수한 상등평민’이라 칭할 수 있는 사람들이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⁶⁸⁾ 그리고 헤켈이 이들이 생존경쟁에서 승리한 이유를 유전적인 요소 때문으로 판단한 것처럼, 가토는 상등평민이 즉 “우수한 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회를 주도할 권리가 있다고 역설하였다.¹⁶⁹⁾

헤켈은 당시 사민주의자들의 급부상에 반발하여 자연계의 불평등성을 당대 독일 사회에 적용한 것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토는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가던 전직 사무라이, 대기업 보호에 불만을 품은 소규모 상인 및 산업가, 과중한 세금으로 고통 받는 소규모 토지 소유자, 하급 무사 계층, 소상공인, 소작농,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던 자유민권운동을 비판하기 위해 『인권신설』을 발표한 것이었다.

『인권신설』이 출간된 후 야노 후미오(矢野文雄), 우에키 에모리(植木枝盛), 바바 다쓰이(馬場辰猪)와 같은 자유민권론자뿐만 아니라 1876년 가이세이학교(開成學校)에서 일본 최초로 스펜서를 강의했던 도야마도 가토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가토는 이들의 비판에 대한 답변으로 1883년 1월 『인권신설』 제3판을 출간하였다.¹⁷⁰⁾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 점점 자유민권론자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다. 강력한 정부의 필요성을 느낀 토지소유주와 산업가들의 이탈, 대정부 투쟁의 과격화, 빈농층과 도시 하층민이 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과정 속에서, 1884년 10월 31일 지치부(秩父)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이에 정부는 군을 동원하여 이 봉기를 강경 진압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자유민권운동은 종언을 맞았다.¹⁷¹⁾

166) 加藤弘之, 1990a, 「疑堂備忘一」 『加藤弘之文書 1』, 上田勝美, 福嶋寛隆, 吉田曠二 共編, 京都: 同朋舎, 188쪽.

167) 加藤弘之, 1990b, 「疑堂備忘二」 『加藤弘之文書 1』, 上田勝美, 福嶋寛隆, 吉田曠二 共編, 京都: 同朋舎.

168) 加藤弘之, 1882, 『人權新說』, 東京: 谷山楼, 37~40쪽.

169) 加藤弘之, 1882, 위의 책, 39쪽.

170) 『인권신설』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가토의 대응에 대해서는 김도형, 2015, 앞의 글, 550~566쪽 참조.

171) 松沢裕作, 2016, 앞의 책, 191~199쪽; M. Nagai, 1954, “Herbert Spencer in Early Meiji Japan”, *The Far Eastern Quarterly* 14(1), pp. 59~60.

무력을 동원한 정부의 힘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유로운 개인의 경쟁에 의한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이라는 민권론자들의 유토피아적 진화론은 이제 일본에서 힘을 잃게 되었다.

일본 사회가 극단적으로 분열된 1882년 3월 이토가 헌법 제정을 위한 조사 차 유럽으로 파견되기 직전 정부 수뇌부는 독일 헌법을 기반으로 일본 헌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1889년 2월 11일 천황 주권과 신민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된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이 공포됨으로써 권위주의적 정부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헌법과 동시에 공포된 「중의회선거법(衆議院議員選舉法)」은 선거권을 토지세나 소득세 15엔 이상 납부하는 25세 이상 성인 남성(당시 전체 인구 중 1.1%)으로 제한함으로써 하층 중간계급과 하층민의 정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¹⁷²⁾

가토는 1893년 『강자의 권리의 경쟁(强者の權利の競争)』을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 그는 권리(사권과 공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 즉 ‘강자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책에서 그는 유럽의 사례를 들어 메이지 헌법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즉 유럽에서는 절대군주제에서 입헌제로 이행하였는데, 이를 추진한 동력은 지능과 부의 발전에 의해 ‘자유권(강자의 권리)’을 획득한 피치자들이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책은 대체로 그가 『인권신설』과 그 이후 발표한 글들을 구체화하여 소수 엘리트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일본식 입헌군주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⁷³⁾

소수로 구성된 지도층의 국정 주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토는 이 책에서 국가유기체설을 도입하였다. 헤켈과 마찬가지로 가토는 국민을 세포로 간주했는데 ‘사회 생물 즉 국가의 주된 목적은 국가 전체와 그 세포가 되는 각 개인의 유지와 진보’라 주장하며 국가에 대한 개인의 종속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가토는 같은 해 출간한 『도덕법률진화의 이(道德法律進化の理)』의 증보개정판에서 삼단계의 유기체설을 구체화하였다. 이 책에서 가토는 그의 이론이 헤켈의 제자인 헤르트비히(Oscar Hertwig)¹⁷⁴⁾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첫 번째 단계의 유기체를 단세포 생물이나 세포로 규정하였고, 세포의 집합체인 생명체를 “이기심”을 지닌 두 번째 단계의 유기체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단계의 유기체가 생존경쟁에 의해 고등 생물, 즉 인간으로 진화하였으며, 세 번째 단계의 유기체인 사회는 인간의 생존경쟁 과정에서 생성된다는 것이었다.

사회를 국가로 인식한 가토는 ‘국가라는 세 번째 단계의 유기체는 반드시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의 유지와 발전을 꾀하기 위해 그 세력의 미치는 한도 내에서 타국과 경쟁하고(공격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이를 통해 타국을 자신의 생존 필요에 맞추려는 것이 당연하다.’¹⁷⁵⁾고 주장하며 국가 내 생존경쟁에서 국가 간의 생존경쟁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였다. 이 지점에서 가토는 두 번째 단계의 유기체인 국민에게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을 요구하였다. 즉 ‘이타적 행동에 의해 국민의 일치와 협력이 견고할 때 국가적 사회의 강력한 이기심이 생기고, 이 사회는 타국과의 경쟁에서 자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의 일치와 협력이 약할 때는 도저히 국가가 이기적 정신을 발휘할 수 없게 되므로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다’¹⁷⁶⁾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가토는 우승열패의 개념을 주변국과의 관계로 확장하여 적용하기 시작한

172) 清水唯一朗, 2013, 「日本の選挙制度—その創始と経路—」 『選挙研究』 29(2), 12쪽.

173) 가토의 천황제에 대한 합리화하기 위해 제시한 입헌 군주 박삼헌, 2010,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의 후기사상 -입헌적 족부통치론을 중심으로-」, 『사총』 70 참조.

174) 加藤弘之, 1893b, 『道德法律進化の理』 増補改定版, 東京: 博文館, 2쪽.

175) 加藤弘之, 1893b, 위의 책, 246쪽.

176) 加藤弘之, 1893b, 위의 책, 246~247쪽.

것이였다. 그가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국가유기체설을 주장했던 이유는 당시의 국제 정세와 관련이 있다.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메이지 유신은 바로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방어, 즉 생존을 위해 일어난 것이였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인접국인 청의 군비 확장과 러시아의 동진에 위협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1880년대 일본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 두 나라와 충돌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내각총리대신 야마가타 아리모토(山縣有朋)는 러시아가 시베리아 철도 계획을 발표하자 1890년 12월 6일 제국의회에서 국가의 독립과 방위가 일본의 ‘주권선’(국경)에만 그치지 않고 ‘이익선’(조선)의 확보에 있다고 연설하였다. 이는 일본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일본이 군사적인 수단을 통하여 조선에 대한 종주권, 즉 한반도라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였다.¹⁷⁷⁾ 이에 일본 정부의 전략은 일종의 공세적 방어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강자의 권리의 경쟁』이 출간된 1893년은 조선을 둘러싸고 일본과 청의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일본이 무력을 통해 국가 간의 생존경쟁에 참여를 시도하고 이 시기, 가토는 이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이였다.

실제 가토는 청일전쟁 기간 중 일본군이 청군에 연승하고 있는 원인으로 일본 사회의 집단적인 통합, 도덕적, 진화적 우월성 등을 제시하였다.¹⁷⁸⁾ 『도덕법률진화의 이』에서 가토는 서구식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 도덕이 충만한 문명국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는 헤켈과 유사하게 문명국이 국가 간의 경쟁에서 실패한 미개 사회를 잔인하게 대하는 것이 자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⁷⁹⁾ 그런데 이 책에는 중국도 문명국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지중해인을 제외하고는 몽골인종만이 “실제 역사(actual history)”를 가지고 있으며 “문명(civilization)”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한 『자연창조사』의 내용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¹⁸⁰⁾ 하지만 청일전쟁 기간 도중 보여준 청나라 군대의 졸전을 보며 가토는 스스로 개화에 성공한 일본이 미개를 벗어나지 못한 중국, 그리고 그 미개국에 종속된 조선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우승열패라는 진화의 과정으로 합리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청일전쟁 이후의 상황은 가토의 예측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1893년 가토는 유럽 열강들이 이제 하나의 유기체, 즉 세계국가로 통합되어 간다고 하는, 비현실적인 진화 과정을 제시하였다.¹⁸¹⁾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유럽 열강이 도덕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인데 이들이 동일한 도덕적 목표를 지향하고, 그로 인해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 때문에 하나의 유기체, 즉 세계국가로 통합되어 간다고 판단한 점에 있다. 그리고 그는 일본이 이 세계국가에 합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당시 독일, 프랑스, 러시아는 삼국간섭을 통해 일본의 요동반도 확보를 저지하였다. 특히 1896년 동청철도(東淸鐵道)에 대한 부설권을 획득한 러시아는 1900년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만주를 점령하였다. 1890년대 후반 일본 정부의 목표는 대한제국을 러시아와 분할 점령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의화단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방어를 위해 러시아에게 만주와 한반도를 교환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는 대한제국까지 노리던 러시아의 거부로 실패하고 만다. 일본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러시아에게 대항하고자 일본의 지도층은 일본의 이익선인 조선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군을 만주에서 축출

177) 이승환, 2022, 「19세기 말, 일본의 지정학적 상상력과 국방전략에 대한 고찰: 야마가타 아리모토(山縣有朋)의 구상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3(1), 1929~1931쪽.

178) 자세한 내용은 김도형, 2018, 「가토 히로유키의 진화론과 전쟁인식- 청일·러일전쟁 관련 저술분석을 중심으로 -」, 『日本思想』 35, 16~19쪽 참조.

179) 加藤弘之, 1893a, 앞의 책, 201~236쪽.

180) E. Haeckel, 1887(1868), 앞의 책, p. 324.

181) 加藤弘之, 1893a, 위의 책, 201~236쪽.

하기 위한 외교 정책으로 전환하였다.¹⁸²⁾

결국 청일전쟁 이후 동아시아는 결국 개별 국가 간의 치열한 생존경쟁의 장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 과정 속에 일본이 급부상하였다. 이제 문명국의 협력을 통한 세계제국의 건설이라는 가토식의 유토피아적 세계관은 일본 사회에서 비현실적인 이론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당시 일본 사회에서 가토가 제시한 국가유기체설은 더욱 맹위를 떨쳐갔다. 1880년대 중반 자유민권운동이 실패하자 대다수의 일본 지식인들은 우승열패를 강조하는 가토의 집단주의적 진화론을 수용하였다.¹⁸³⁾ 그리고 청일전쟁 이후 일본에서 국가유기체설은 사무라이의 ‘무사도(武士道)’ 개념과 결합하였다. 즉 사회구성원으로서 개인은 선과 악과 같은 보편적인 윤리를 따르는 존재가 아닌 천황과 국가의 생존을 위해 충성, 복종, 희생하는 존재라는 사고가 일본 사회에서 널리 확산되었다.¹⁸⁴⁾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엘리트 양성소인 도쿄제국대학에서는 도미즈로 대표되는 개진론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칠박사 중 도미즈, 도미이, 가나이, 테라오, 나카무라 이 다섯 명은 이미 1900년 당시 총리 야마가타에게 러시아의 만주 점령에 대해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개시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이들의 사고는 도미즈가 1901년 3월 『윤리계(倫理界)』에 게재한 「침략주의와 도덕(侵略主義と道徳)」이라는 글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침략주의, 영토확장주의, 적국박멸책 등은 모두 필요한 것이며,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조상에 대한 불효이며, 황실에 대한 불충이며, 한 마디로 말하자면 부도덕한 것이라 생각한다. 보통 도덕가에게 묻는다면, 타국을 점령하는 등의 행위는 상당히 부도덕한 행위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로서는 타국을 침략하지 않는 것이 매우 부도덕한-부도덕의 극치라고 생각한다.¹⁸⁵⁾

이러한 도미즈의 주장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 곧 자연법칙이라는 가토가 소개한 헤켈식 진화론과 무사도가 결합한 사고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미즈는 당시 일본 정부의 외교 원칙인 일본의 생존을 위한 방어적 무력 사용을 넘어 침략 전쟁을 통한 영토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요구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도미즈가 영토, 곧 일본의 공간 확보를 강조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그는 넓은 영토를 강국의 기본 조건으로 간주하였다. 둘째 그는 일본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 때문에 넓은 영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¹⁸⁶⁾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시기 일본의 인구통계는 높은 출산율과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출산율이 사망률보다 약 10퍼센트 이상 높았다.¹⁸⁷⁾ 비록 당시 농업 기술의 발전으로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었지만, 인구 증가와 함께 쌀 소비량도 증가했다. 이로 인해 1890년대 일본의 쌀 자급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떨어졌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이미 1892년 대장성(大藏省)은 쌀 생산의 증가 이상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 결론 내렸다.¹⁸⁸⁾ 결

182) 조명철, 2002, 「근대 일본의 대외정책과 동아시아 : 의화단사건과 동아시아의 정세변화 - 일본의 외교전략을 중심으로 -」, 『이화사학연구』 29, 51~56쪽.

183) 이성철, 2024,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변형」, 『사회사상과 문화』 27(1), 196쪽.

184) H. Unoura, 1999, "Samurai Darwinism: Hiroyuki Katō and the reception of Darwin's theory in modern Japan from the 1880s to the 1900s", *History and Anthropology* 11(2-3), pp. 245~247.

185) 戸水寛人, 1901, 「侵略主義と道徳」, 『倫理界』, 2, 6쪽.

186) 戸水寛人, 1901, 위의 글, 3쪽.

187) 岡崎陽一, 1986, 「明治大正期における日本人口とその動態」, 『人口問題研究』 178, 1~2쪽, 7쪽.

188) 日本 農林水産省 홈페이지, 「その1 : お米の自給率」,

국 당시 일본은 소위 ‘맬서스의 덫’에 갇히게 된 것이었다.

이 문제는 가토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청일전쟁 직전인 1894년 3월에 출간한 『200년 후의 우리(二百年後の吾人)』에서 맬서스를 언급하며 일본의 인구 증가를 우려하였다.¹⁸⁹⁾ 그런데 문명국의 협력을 통한 세계 단일 제국의 출현을 예측했던 가토는 아시아의 일부 문명국과 유럽의 문명 인종이 인구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식민지를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야만 인종이 생존경쟁에서 패배하여 사라지게 된다고 판단하였다.¹⁹⁰⁾ 따라서 이 지점에서 가토는 일본의 식민지 확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전 세계에서 목축과 농경에 적합한 토지의 면적은 유한하기 때문에 결국 문명국의 인종도 약 200년 후에는 맬서스의 덫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다고 예측함으로써 공간의 확장, 즉 식민지의 확보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맬서스의 관점을 공유하고 있었다.¹⁹¹⁾

도미즈의 경우 200년 후의 미래보다는 당시의 현실이 더 큰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토와 마찬가지로 강국이 소국을 병합하는 것이 자연 법칙이라 판단한 그는 지금 당장 영토를 확장하여 인구를 이주시키지 못한다면 일본이 20세기에 멸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¹⁹²⁾ 따라서 도미즈는 당시 일본을 위협하고 있던 그가 강국으로 정의한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 일본의 방어뿐만 아니라 당장의 생존을 위해 영토, 즉 식민지의 확보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러시아라는 서구 열강과의 생존경쟁을 통한 영토 확장을 정당화할 새로운 형태의 이론이 일본의 사회진화론자들에게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정치학을 연구하며 라첼의 이론을 접한 오노즈카가 1901년 가을 귀국한 후 도쿄제국대학 초대 정치학 담당 교수로 임명되었다. 유학 전 만민평등주의와 박애주의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오노즈카는 당시 열강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던 유럽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만국평등주의를 거부하고 애국주의자로 변모하였다.¹⁹³⁾ 일본이 러시아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1903년 5월, 오노즈카는 대학 내에서 전쟁 개전의 여론을 주도하던 도미즈 그룹에 합류한 후 그들과 함께 건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소위 ‘칠박사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IV. 칠박사 집단의 개전론에 투영된 영토 팽창 논리

칠박사 집단이 개전 건의서를 내각 총리 가쓰라 다로(桂太郎)에게 제출한 1903년 6월 10일은 일본과 러시아의 갈등이 극으로 치달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 해 4월 「만주철군협정(滿洲撤軍協定)」에서 약속한 2차 철군 시기를 어긴 러시아는 용암포를 점령하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열린 각료 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만주에 대한 러시아의 권리를 인정하고 대신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보장받는 ‘만한교환론(滿韓交換論)’을 채택하였다.¹⁹⁴⁾ 이러한 상황에서 칠박사 집단은 그들의 건의서를 6월 24일 공개하였다.¹⁹⁵⁾

칠박사는 건의서에서 이익선에 기반을 둔 만한교환론에 반대하였다. 즉 ‘조선을 지키고자 한다면 만주가 러시아에 넘어가는 막아야 하며 만약 러시아가 만주를 차지한다면 일본의 방어

https://www.maff.go.jp/j/zyukyu/zikyuu_ritu/ohanasi01/01-03.html, 2024년 9월 8일 접속.

189) 加藤弘之, 1894, 『二百年後の吾人』, 東京: 哲學書院, 43~44쪽.

190) 加藤弘之, 1894, 앞의 책, 53~56쪽.

191) 加藤弘之, 1894, 앞의 책, 59쪽, 83~85쪽.

192) 戸水寛人, 1901, 앞의 글, 3쪽.

193) 南原繁, 蠟山政道, 矢部貞治, 1963, 『小野塚喜平次 - 人と業績-』, 東京: 岩波書店, 64쪽.

194) 홍용덕, 2023, 위의 책, 353쪽.

195) 花見朔巳, 1939, 위의 책, 120~121쪽.

가 위험해진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들의 주장은 전쟁을 통한 국경선의 확대가 국가의 방어를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는 라첼의 생각과 매우 흡사하다.

이후 이들은 만주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거듭했다. 그 과정에서 도미즈의 과격한 전쟁론에 대해 반대하던 오노즈카와 도미이가 이탈하였다. 오노즈카는 『정치학대강』에서 ‘외교정책은 평화적이어야 하며, 군부의 선동이 외교 당국자를 압박할 때 당국자는 전체적인 상황을 계산하여 소신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지나친 평화주의에 의해 타국의 강압적 행동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전쟁은 마지막 수단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⁹⁶⁾

도미즈의 과격한 주장에 반대한 오노즈카와 도미이를 제외한 나머지 5인에 더해, 새롭게 가세한 도쿄제국대학 문학부 교수 다케베 돈고(雄邨遯吾) 및 제국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일본은행에 재직하고 있던 문학사 와타나베 지하루(渡邊千春)는 1903년 9월 그들의 의견을 정리한 논문을 모아 『일로개전논찬(日露開戰論纂)』을 간행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과격 주전론자들의 주장은 라첼의 영토 팽창 이론과 매우 비슷하다.

가나이는 이 책에서 그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고백하였다.¹⁹⁷⁾ 실제 이 책의 저자들의 성향을 분류하면 도미즈, 데라오, 다케베, 나카무라를 포함하는 과격파와 가나이, 다카하시, 와타나베를 포함하는 온건파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과격파에 대해 살펴보면, 데라오는 대외 팽창을 통한 국가의 ‘생존’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일본인이 작은 섬에서 생존하기만 한다면 발전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일본이 멸망할 지라도 강대국 러시아와 싸워 이김으로써 만주를 획득하여 경제적 이득과 국운의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¹⁹⁸⁾ 즉 그에게 있어서 영토 팽창은 익한 강대국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며 러일전쟁은 일본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결전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이렇게 전쟁을 원한 이유는 바로 영토의 확보 때문이었다. 과격파 중 나카무라를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은 급증하는 일본의 인구증가를 일본이 영토를 확장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하였다.

특히 다케베는 당시 일본의 인구와 식량의 증가율을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메이지 23년을 중심으로 한 전후 5년간 평균 쌀 생산량은 3,860만 석, 보리 생산량은 1,460만 석이었다. 메이지 31년을 중심으로 한 전후 5년간의 평균은 쌀이 3,960만 석, 보리가 1,910만 석이었다. 이 8년간 쌀은 연간 약 0.3%, 보리는 약 3% 증가한 것이다... 즉, 매년 인구 1,000명당 2.3명에 해당하는 식량이 부족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인구 증가가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¹⁹⁹⁾

위의 글을 보면 다케베가 주장한 일본이 식량 위기 상황에 빠진 이유의 근거가 인구 급증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케베가 당시 서양 문명국의 인구 증가율이 일본을 포함한 황인의 증가율에 비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지적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약 100년 후 백인의 인구가 2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황인은 7~8억에 머무를 것’이라는 것이다.²⁰⁰⁾

196) 小野塚喜平次, 1903b, 『政治学大綱』 下, 東京: 博文館, 103~104쪽.

197) 金井延, 1903, 「法學博士 金井延君論文」, 藏原惟昶(編), 『日露開戰論纂』, 東京: 東京國文社, 34~35쪽.

198) 寺尾亨, 1903, 「法學博士 寺尾亨君論文」, 藏原惟昶(編), 『日露開戰論纂』, 東京: 東京國文社, 20쪽, 29~32쪽.

199) 雄邨遯吾, 1903, 앞의 글, 80쪽.

200) 雄邨遯吾, 1903, 위의 글, 78쪽.

도미즈 역시 ‘19세기 초에 백인 인구가 1억 7천만 명이었지만 20세기 초에 5억에 도달했으며 일본의 인구 증가율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언급하였다.²⁰¹⁾

이 지점에서 다케베는 라첼과 마찬가지로 높은 인구증가율을 국가의 팽창을 위한 희망적인 요소로 판단하였다.²⁰²⁾ 그는 서구 사회가 산업의 발달에 의해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본토와 식민지를 포함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인구 밀도가 일본의 수준에 도달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일본이 이들보다 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영토를 확장시켜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그는 일본의 성장을 위해서 한반도와 만주를 일본의 식민 영토로 편입시키고 이를 방해하는 러시아와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²⁰³⁾

건익서 제출을 주도했던 도미즈는 더욱 노골적으로 과잉 인구 해소를 위한 식민지 확보를 강조하였다. 그는 급증하는 일본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천만 명 이상의 일본인을 조선에 이주시켜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1천만 명에서 1천 5백만 명 정도의 일본인이 조선에 정착해야 하며, 이후 점차 증가하는 일본인을 수용하기 위해 만주도 점령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²⁰⁴⁾ 이 논문을 발표할 당시 도미즈는 조선을 식민지화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만주에 대해서는 일본의 영토로 할 것인지 아니면 후대의 만주국과 같은 괴뢰국가를 설립해야 할지 결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단지 만주의 비옥한 땅을 일본의 통제 하에 둘 것을 제안하였다.²⁰⁵⁾ 이러한 도미즈의 생각은 당시 일본 정부의 기본 전략이었던 공세적 방어, 즉 만주의 중립지대화를 부정한 것이었다.²⁰⁶⁾ 전쟁 도중 일본의 영토를 바이칼 호수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부르짖던 도미즈는 포츠머스 조약의 체결을 반대하였다. 이에 1905년 8월 문부성은 도미즈에게 휴직 처분을 내림으로써 소위 ‘도미즈 사건(戶水事件)’이 발생하였다.²⁰⁷⁾

반면에 온건론자 중 가나이는 과격 주전론자와는 다르게 만주를 확보하기보다는 중국의 주권을 회복시켜 만주를 중국의 영역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즉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일본은 자위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동양 전체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고는 것이었다.²⁰⁸⁾ 그리고 와타나베는 만주의 점령보다는 청의 주권 회복을 통한 완충 지대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²⁰⁹⁾ 하지만 이 둘 역시 만주에서 전쟁을 통한 일본의 경제적 이익 추구에는 찬성하였다.²¹⁰⁾

그러나 다카하시는 개전론은 이들과는 상당히 다르다. 우선 그 역시 다른 박사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생존을 위해 러시아와의 전쟁을 촉구하였다. 칠박사의 개전론 중 자위권은 다카하시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국제법 전공자였던 다카하시는 국가의 자위권은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발동해야 한다는 영국 유학 시절 은사 웨스트레이크(John Westlake)의 의견에 대하여, 국제법상 한 나라의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

201) 戶水寬人, 1903, 앞의 글, 7쪽.

202) 雄邨遯吾, 1903, 앞의 글, 78쪽.

203) 雄邨遯吾, 1903, 위의 글, 80~89쪽.

204) 戶水寬人, 1903, 위의 글, 13쪽.

205) 戶水寬人, 1903, 위의 글, 16~18쪽.

206) 와다 하루키 지음, 이웅현 옮김, 2010, 『러일전쟁: 기원과 개전』, 서울: 한길사, 782~783쪽.

207) 宮武実知子, 2007, 앞의 글, 166~167쪽.

208) 金井延, 1903, 위의 글, 57쪽.

209) 渡邊千春, 「文學史 渡邊千春君論文」, 藏原惟昶(編), 『日露開戰論纂』, 東京: 東京國文社, 117~118쪽.

210) 金井延, 1903, 앞의 글, 58~60쪽, 渡邊千春, 위의 글, 118쪽.

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위권에 그러한 제한을 두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였다.²¹¹⁾

국가의 자위권을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경우 사용하는 폭력적 방법'이라 정의한 다카하시는 일본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 러시아와의 개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자위권'이란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는 자국에 직접적인 이해가 없더라도 강대국 사이에 포위된 작은 국가가 한 강대국에 침공당하여 다른 강대국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경우 다른 강대국이 이에 개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²¹²⁾ 즉 러시아가 일본을 침공하지 않더라도 만주를 점령하고 조선에 군대를 보내는 행위가 일본의 생존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본은 외교적인 방법이 실패한 당시의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러시아와 전쟁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카하시는 다음과 같이 영토 팽창론자들을 비판하였다.

세상에서 대외 강경파로 불리는 논자 중 일부는 만주의 변환을 일본 국민의 증가와 일본 영토의 협소함, 국운 발전의 필요에 기반을 두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 만약 일본 국민의 필요와 일본의 영토 협소함 때문에 만주의 땅을 강탈하여 국운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왜 러시아가 그 영토를 확장하여 국운을 발전시키는 것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²¹³⁾

즉 다카하시는 일본의 경제적, 영토적 생존권 확대를 목표로 러시아와의 개전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참전의 명분을 앗아간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일본 정부가 영국과 미국 등 다른 강대국과 협상하여 국제 조약을 통해 만주를 중립지대, 즉 완충지화 해야 하며, 이후 일본군이 만주에서 철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¹⁴⁾ 결국 다카하시는 이후 강경론자들과 결별하고 영토 팽창을 부르짖던 도미즈를 "천박하다"고까지 표현하며 비난하였다.²¹⁵⁾

이러한 상황에서 강경론자들과 결별한 후 침묵하던 오노즈카가 전쟁이 한창 전개되던 1904년 8월 「국가팽창범위의 정치학적 연구(國家膨脹範圍ノ政治學的研究)」라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그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오노즈카는 다카하시와 마찬가지로 전쟁을 최후 수단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그는 이 논문에서 러일전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큰 사건의 발생을 기회로 팽창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전쟁을 지지하였다.²¹⁶⁾

오노즈카는 이 논문에서 라첼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라첼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을 많이 제시하였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인접국과의 생존경쟁의 성공과 실패에 결정된다고 판단한 오노즈카는 라첼과 마찬가지로 국가 팽창의 최대 동기가 과잉 인구의 처리에 있다고 인식하였다.²¹⁷⁾ 특히 라첼과 오노즈카의 가장 큰 공통점은 국가의 팽창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인구 과잉과 문화를 조합한 것이었다. 오노즈카는 "우수한 문화"를 가진 강국이 어떤 방법으로 그 인접 지역에 있는 "열등한 약국"을 팽창 범위, 즉 식민지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이 논문에서 제시하였다.²¹⁸⁾ 그 대상국이 어디인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열등국은 청과 대한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오노즈카는 라첼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사례를 들어 이주민들이 본국의 문화적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라첼은 미국에 거주하는 약 8백만 명의 독일인이 더 이상 독일어를 사용하지 않고 독일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것을 걱정하며 이들이 고향의 문화

211) 朴羊信, 1998, 앞의 글, 978쪽.

212) 高橋作衛, 1903, 「法學博士 高橋作衛君論文」, 藏原惟昶(編), 『日露開戰論纂』, 東京: 東京國文社, 123쪽.

213) 高橋作衛, 1903, 위의 글, 120쪽.

214) 高橋作衛, 1903, 위의 글, 143~145쪽, 155쪽.

215) 다치바다 다카시 지음, 이규원 옮김, 앞의 책, 379쪽.

216) 小野塚喜平次, 1904, 「國家膨脹範圍ノ政治學的研究」, 『法學協會雜誌』, 1059쪽.

217) 小野塚喜平次, 1903a, 앞의 책, 158~163쪽; 小野塚喜平次, 1904, 앞의 글, 1056쪽.

218) 小野塚喜平次, 1904, 「國家膨脹範圍ノ政治學的研究」, 『法學協會雜誌』, 1057쪽.

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¹⁹⁾ 이와 마찬가지로 오노즈카는 미국으로 이주한 대다수의 독일인이 “언어, 사상, 감정에서 독일 민족과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라고 언급하였다.²²⁰⁾ 따라서 오노즈카가 열등국으로의 영토 팽창을 시도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가 소위 자연민족의 공간에 식민지를 건설함으로써 본국인과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라첼의 이론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식민지에서 자연민족의 소멸을 예상한 라첼과 다르게 오노즈카는 식민지민들을 보호해야 하며 그들을 문화민족으로 동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²²¹⁾ 이는 독일과 일본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1880년대 이후 독일은 소위 인구가 희박하고 유색인종이 거주하고 있던 남태평양의 섬들(독일령 뉴기니)과 현재의 나미비아, 탄자니아 등의 아프리카 지역을 식민지화하였다. 하지만 당시 일본이 노리던 만주와 한반도는 높은 인구 밀도와 함께 메이지 유신 직후 일본인과 함께 몽골인종, 그리고 반개인(半開人)으로 분류되던 중국인과 한국인의 거주 지역이었다. 비록 청일전쟁의 승리 이후 일본인들은 타 동양인에 대해 인종적 우월감을 가질 수 있었지만, 오노즈카가 염려하였듯이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던 중국과 조선에서 억압 정책을 실시할 경우 이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²²²⁾ 이에 오노즈카는 식민지인의 문화적 발전과 진보를 위해 일본이 팽창한다는 논리를 구축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의 경우 열강과의 협상, 또는 구입을 통해 식민지를 획득했던 반면에 당시 일본은 서구 열강 중 하나인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 영토 팽창을 시도하고 있었다. 따라서 오노즈카는 이 논문에서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식민지 획득 열망에 대한 서구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지역을 보호국화 하여 내정을 감독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노즈카는 “그 팽창 범위 내의 인민은 문화적, 경제적으로 진보의 이점을 누리고 … 조약으로 팽창 국가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히 하고 열강으로 하여금 이를 인정하게 해야 한다.”²²³⁾라고 주장하며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국제법에 의해 인정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오노즈카는 ‘약한 나라가 보호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강국이 실력으로 이를 인정시킨다.’²²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결국 청과 대한제국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일본이 만주와 한반도를 침공할 수 있다는 명분을 제시한 것이었다. 즉 일본도 서구 열강과 마찬가지로 무력을 통해 식민지를 확보해야 함을 역설한 것이었다.

결국 유럽에서 공부했던 칠박사 집단의 박사들은, 건의서 제출 이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던 도미이, 영토 확장과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에 의한 개전을 반대한 다카하시를 제외하고는 일본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인보다 열등한 인종이 살고 있는 만주와 한반도의 식민지화에 대한 의견을 학자의 권위에 입각해 제시한 것이었다.

V. 맺음말

19세기 중반 소위 흑선(黑船)의 무력시위에 의해 개항한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상징되는 서구식 근대화의 추구를 통해 국가의 생존을 도모하였다. 이를 위해 메이지 시대 초기 일

219) F. Ratzel, 1884, 앞의 글, p. 10.

220) 小野塚喜平次, 1904, 앞의 글, 1056쪽.

221) 小野塚喜平次, 1904, 앞의 글, 1060쪽.

222) 小野塚喜平次, 1904, 위의 글, 1060쪽.

223) 小野塚喜平次, 1904, 위의 글, 1059~1060쪽.

224) 小野塚喜平次, 1904, 위의 글, 1061쪽.

본 정부는 독일제국의 정치체제를 모델로 삼아 막부시대의 분산적 권력을 중앙에 집중하려 하였다. 따라서 당시 일본에 본격적으로 수용된 사회진화론은 시민들을 자유 경쟁을 통한 민주주의적 사회발전을 제시했던 영국의 스펜서식의 진화론이 아니라, 국민을 세포로 간주하고 엘리트의 사회 주도를 강조했던 헤켈의 이론이었다. 그리고 이 헤켈의 사회진화론을 일본에 본격적으로 소개한 사람이 바로 가토였다. 가토는 헤켈의 진화론을 기반으로 저술한 『인권신설』에서 스펜서식의 민주주의적 산업사회를 추구하던 자유민권론자들의 의견을 반박하였으며, 결국 일본 정부는 독일식 입헌군주제를 채택함으로써 독일제국과 마찬가지로 군국주의 사회로 나아가게 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헤켈의 집단주의적 사회진화론의 문제점은 인간을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생존경쟁에 처한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이타성과 윤리를 비과학적인 것으로 매도하고 집단의 생존과 이익 추구를 강조했다는 점에 있다. 이는 일본의 대외 정책에 극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1889년 메이지 헌법 발표 이후 일본은 주변국인 중국과 조선을 생존경쟁의 희생양, 즉 정복의 대상으로 삼고, 근대화에 실패한 열등한 중국과 조선에 대한 이권의 추구를 사회진화론의 논리로 정당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당시 근대화를 추구하던 일본은 1870~80년대 독일과 마찬가지로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식량 부족이라는 맬서스의 덫에 갇히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늘어나는 인구를 위한 새로운 생활공간과 상품의 수출 시장, 그리고 자원의 공급처인 식민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대만을 식민지화하였으며, 이후 동쪽으로 팽창하고 있던 러시아와 만주에서 충돌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최고 엘리트 집단이었던 제국대학 법학부 출신 학자들이 모여 칩박사 집단을 구성했다. 독일 유학 경험이 있었던 이들은 당대 독일의 팽창 논리, 그중에서도 증가하는 인구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쟁을 통해 식민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동식물계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강자에 의한 약자의 소멸을 정당화한 라첼의 이론과 유사한 개념을 제시하며 러일전쟁 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사실은 러일전쟁을 통한 영토 팽창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강경론자 중 한 명인 다케베는 도야마의 제자로 스펜서주의자였다는 점이다. 실제 당시 일본에서 대부분의 스펜서주의자들은 자유주의를 추구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에는 찬성하였다. 이 문제는 사실 일본에서 집단주의적 사회진화론이 어떻게 앞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무사도와 같은 일본 전통 사상, 그리고 유학(儒學)과 결합되는지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 일본식 사회진화론의 형성과 특징에 대한 주제는 추후 자세히 논의하겠다.

또 한 가지 지적할 사실은 라첼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오노즈카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라첼의 영향을 받아 지정학(geopolitic)을 개념화한 스웨덴의 지리학자 쉘렌(Rudolf Kjellén)의 이론을 언급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그의 제자인 국제정치학자 가미카와 히코마츠(神川彦松)가 라첼과 쉘렌의 지정학을 바탕으로 만주사변과 태평양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문제도 추후 검토하겠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적자생존’의 가토식 표현인 ‘우승열패(優勝劣敗)’를 바탕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다. 하지만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서 서구 열강의 눈치를 보던 일본은 한일합방이 조선의 문명화를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평화의 정착을 위해 설립된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의 상임이사국이 됨으로써 자국이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문명국임을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한 이후 일본은 방어적 공세와 국제 사회로의 편입에 의한 일본의 이익 추구가 아닌 무력행사에

의한 영토 팽창을 본격화하였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서구 열강과의 생존경쟁의 장을 벌이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 지점에서 칠박사 사건으로 상징되는 메이지 시대 비윤리적인 독일식 집단주의적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정착화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전까지 일본의 팽창과 제국주의적 침략의 기본 원리로 작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웹페이지

日本 農林水産省 홈페이지, 「その1: お米の自給率」,
https://www.maff.go.jp/j/zyukyu/zikyu_ritu/ohanasi01/01-03.html, 2024년 9월 8일
접속.

단행본

- 김호연, 2009, 『우생학, 유전자 정치의 역사』, 서울: 아침이슬.
- 다치바다 다카시 지음, 이규원 옮김, 2008, 『천황과 도쿄대』 1, 서울: 청어람미디어.
- 미와 료이치 지음, 권혁기 옮김, 2004 『근대와 현대 일본경제사』, 서울: 보고서.
- 이태진, 2022, 『일본제국의 ‘동양사’ 개발과 파시즘』, 서울: (주)사회평론아카데미.
- 와다 하루키 지음, 이웅현 옮김, 2010, 『러일전쟁: 기원과 개전』, 파주: 한길사.
- 홍용덕, 2023, 『19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서울: 동연.
- 加藤弘之, 1882, 『人權新說』, 東京: 谷山楼.
- , 1893a, 『强者の權利の競争』, 東京: 哲學書院.
- , 1893b, 『道德法律進化の理』 増補改定版, 東京: 博文館.
- , 1894, 『二百年後の吾人』, 東京: 哲學書院.
- 南原繁, 蠟山政道, 矢部貞治, 1963, 『小野塚喜平次 - 人と業績-』, 東京: 岩波書店.
- 小野塚喜平次, 1903a, 『政治学大綱』 上, 東京: 博文館.
- , 1903b, 『政治学大綱』 下, 東京: 博文館.
- 松沢裕作, 2016, 『自由民権運動: 「デモクラシー」の夢と挫折』, 東京: 岩波書店.
- Barlow, N(ed.), 1958, *The Autobiography of Charles Darwin*, New York: W·W·Norton & Company·INC.
- Darwin, C, 1859, *On the Origins of Species*, London: John Murray, Albermale Street.
- Gasman, D, 1971, *The Scientific Origins of National Socialism: Social Darwinism in Ernst Haeckel and the German Monist League*, London: Macdonald & Co. LTD.
- Haeckel, E, trans by E. Lankerster, 1880(1868), *The History of Creation (Natürliche Schöpfungsgeschichte)* Vol. I, York: D. Appleton and Company.
- , 1887(1868), *The History of Creation (Natürliche Schöpfungsgeschichte)*, Vol. II, York: D. Appleton and Company.
- Haeckel, E, 1908(1878), *Freie Wissenschaft und freie Lehre Eine Entgegnung auf Rudolf Virchow's Munchener Rede uber "Die Freiheit der Wissenschaft im modernen Staat"*, Leipzig: Alfred Kröner Verlag.
- Haeckel, E, trans by J, McCabe, 1904, *Wonders of Life: A Popular Story of Biological Philosophy(Die Lebenswunder)*, London: Haper & Brothers Publisher.
- Malthus, T, 1993(1802),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2n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Morse, E, 1979 Japan Day by Day Vol. 1, New York,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Otto, P, 2014, Bismarck and the Development of Germany, Volume I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Ratzel, F, 1869, Sein und Werden der organischen Welt: Eine populäre Schöpfungsgeschichte, Leipzig: Gebhardt und Reisland.

-----, 1882, Anthropogeographie, Stuttgart: Verlag Von J. Engelhorn.

-----, 1901, Der Lebensraum: Eine biographische Studie, Tübingen: H. Laupp.

-----, 1903, Politische Geographie 2nd edition, Berlin: Druck und Verlag von R. Oldenbourg.

Richards, R, 2008, The Tragic Sense of Life: Ernst Haeckel and the Struggle over Evolutionary Though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mith, S, 1991, Politics and the Science of Culture in German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toginno, A, 2019, The Genesis of Geopolitics and Friedrich Ratzel, Cham: Springer.

논문

김도형, 2014,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의 진화론수용 이해 - 「疑堂備忘」 독해를 중심으로」, 『日本思想』, 27.

-----, 2015,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의 《人權新說》과 천부인권논쟁 재고」, 『동아인문학』 33.

-----, 2018, 「가토 히로유키의 진화론과 전쟁인식- 청일·러일전쟁 관련 저술분석을 중심으로 -」, 『日本思想』 35.

박삼헌, 2010,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의 후기사상 -입헌적 족부통치론을 중심으로-」, 『사총』 70.

이성철, 2024,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변형」, 『사회사상과 문화』 27(1).

이승환, 2022, 「19세기 말, 일본의 지정학적 상상력과 국방전략에 대한 고찰: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의 구상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3(1).

조명철, 2002, 「근대 일본의 대외정책과 동아시아 : 의화단사건과 동아시아의 정세변화 - 일본의 외교전략을 중심으로 -」, 『이화사학연구』 29.

加藤弘之, 1990a, 「疑堂備忘一」 『加藤弘之文書 1』, 上田勝美, 福嶋寛隆, 吉田曠二 共編, 京都: 同朋舎.

-----, 1990b, 「疑堂備忘二」 『加藤弘之文書 1』, 上田勝美, 福嶋寛隆, 吉田曠二 共編, 京都: 同朋舎.

岡崎陽一, 1986, 「明治大正期における日本人口とその動態」, 『人口問題研究』 178.

高橋作衛, 1903, 「法學博士 高橋作衛君論文」, 藏原惟昶(編), 『日露開戦論纂』, 東京: 東京國文社.

宮武実知子, 2007, 「「帝大七博士事件」をめぐる輿論と世論: メディアと学者の相利共生の事例として」,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70.

- 金井延, 1903, 「法學博士 金井延君論文」, 藏原惟昶(編), 『日露開戦論纂』, 東京: 東京國文社.
- 渡邊千春, 「文學史 渡邊千春君論文」, 藏原惟昶(編), 『日露開戦論纂』, 東京: 東京國文社.
- 朴羊信, 1998, 「「七博士」と日露開戦論」, 『北大法学論集』 48(5).
- 寺尾亨, 1903, 「法學博士 寺尾亨君論文」, 藏原惟昶(編), 『日露開戦論纂』, 東京: 東京國文社.
- 山下重一, 1975, 「明治初期におけるスペンサーの受容」, 『年報政治学』 26.
- 矢田部良吉, 1967(1883), 「緒言」, エトワルト・モールス 口述, 石川千代松 筆記, 1967, 「動物進化論」, 『明治文化全集. 27, 科學篇』, 明治文化研究會 編輯, 東京: 日本評論社.
- 雄邨遯吾, 1903, 「文學博士 雄邨遯吾君論文」, 藏原惟昶(編), 『日露開戦論纂』, 東京: 東京國文社.
- 藏原惟昶(編), 1903, 「滿州問題ニ關する七博士の意見書」, 『日露開戦論纂』, 東京: 東京國文社.
- 前原淳史, 2018, 「「七博士事件」の再検討: 「金井延日記」を中心として」, 『社会科学』 48(2).
- 清水唯一朗, 2013, 「日本の選挙制度—その創始と経路—」 『選挙研究』 29(2).
- 戸水寛人, 1901, 「侵略主義と道德」, 『倫理界』 2.
- , 1903, 「法學博士 戸水寛人君論文」, 藏原惟昶(編), 『日露開戦論纂』, 東京: 東京國文社.
- Cross, S, 1995, “Prestige and Comport: The Development of Social Darwinism in Early Meiji Japan, and the Role of Edward, Sylvester Morse”, *Annals of Science* 53.
- Haeckel, E, 1925(1890) “Algerische Errinerungen”, *Teneriffa bis zum Sinai*, Leipzig: Kroner.
- Howland, D, 2000, “Society Reified: Herbert Spencer and Political Theory in Early Meiji Japan”,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42(1).
- Nagai, M, 1954, “Herbert Spencer in Early Meiji Japan”, *The Far Eastern Quarterly* 14(1).
- Ratzel, F, 1897, “Ueber den Lebensraum. Eine biogeographische Skizze”, *Die Umschau* 21(1).
- Reulecke, J, 1977, “Population Growth and Urbanization in Germany in the 19th Century”, *Urbanism Past & Present* 4.
- Smith, W, 1974, “The Ideology of German Colonialism, 1840~1906”,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46(4).
- Unoura, H, 1999, “Samurai Darwinism: Hiroyuki Katô and the reception of Darwin's theory in modern Japan from the 1880s to the 1900s”, *History and Anthropology* 11(2-3), pp. 245~247.
- Weindling, W, 1981, “Theories of the Cell State in Imperial Germany”, In C. Webster(ed.), *Biology, Medicine and Society 1840-194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ikart, R, 1993, “The Origin of Social Darwinism in Germany, 1859-1895”,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 54(3).

제2부 러일전쟁 이후 유라시아 지정학 논의

Discussion of Eurasian Geopolitics after the Russo-Japanese War

발표 4

러일전쟁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 러일관계

Russo-Japanese Relations from the Russo-Japanese War to World War I

이나바 치하루 Inaba Chiharu (메이조대학교 교수)

日露戦争後から第一次大戦までの日露関係：

敵対から同盟へ

稲葉千晴（名城大学）

1. はじめに：日露戦争の終結

1905年9月5日、日露戦争を終結させるための日本とロシアの間の講和条約が、米ニュー・ハンブシャー州のポーツマスで締結された。条約の背景には、両国とも深刻な事情が隠されていた。日本海軍は、日本海海戦（1905年5月27-28日）によって、バルト海から遠征してきたロシア第二太平洋艦隊を撃破して、東アジアにおける制海権を掌握した。だが日本陸軍は、満洲において長春までの南満洲を占領できたものの、ロシア軍主力が待つハルビンまで攻め込むだけの軍事力を有していなかった。ロシア陸軍は、100万の兵力をハルビンに集中させ、北上してくる日本軍をせん滅させる作戦を準備していた。ただしヨーロッパから遠く離れた満洲において補給に苦しんでおり、南下して日本軍主力を撃退することは困難を極めた。満洲において長春を挟んで戦線は膠着し、両軍とも行き詰まった状況を打開できない。くわえてヨーロッパ・ロシアでは第一革命によって国内が混乱し、ロシア政府も戦争継続に危機感を抱いていた。

米大統領セオドア・ルーズベルトの仲介によって、日露両国の間で妥協が成立し、平和が回復された。両国間で合意された重要な点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

- ① ロシアは、韓国における日本の卓越した軍事・経済上の利権保有を承認する。

- ② 日露両軍は満洲から同時に撤兵し、満洲を清国に還付する。
- ③ 日露両国は、満洲の商工業の発展のため、列強に門戸を開放する。
- ④ ロシアは、清国の承認を得て遼東半島の租借権を日本に譲渡する。
- ⑤ ロシアは、清国の承認を得て長春・旅順間の鉄道を日本に譲渡する。
- ⑥ ロシアは、サハリン南部を日本に譲渡する。
- ⑦ ロシアは、極東ロシア海域における日本の漁業権を承認する。
- ⑧ ロシアは日本に敗北していないため、日本に抑留されたロシア兵捕虜の経費以外に賠償金を支払わない。¹

本稿では、講和条約締結後に日本が韓国と満洲をふくむ北東アジアにおける利権を、どのようにしてロシアと分割して確保していったかについて詳述する。日本は単独で韓国の併合を目指した。そしてロシアと共同で、中国領であった満洲に勢力を拡大していった。第一次世界大戦が終わるまでに、日露両国が東アジアで敵対から同盟に移っていく。その過程を明らかにしていきたい。

2. 日露戦争後の韓国と満洲の行方

1905年10月16日、講和会議の日本側全権を務めた小村寿太郎外相がアメリカ東海岸から帰国した。帰国する列車と船旅の途中で、小村は韓国保護条約や満洲に関する日清条約の草案「韓満施設綱領」を作成して、その導入を検討していた。10月27日の閣議で日本が、①に基づき韓国の

¹古屋哲夫『日露戦争』（中公新書、1966年）179-227頁。「日露講和条約」『日本外交史辞典』（山川出版、1992年）737-740頁。松村正義『日露戦争一〇〇年：新しい発見を求めて』（成文社、2003年）142-182頁。

外交権を掌握し、保護権を確立することと、講和条約で獲得した④と⑤の利権の譲与を清国に認めさせることが決定された。11月2日、韓国特派大使に伊藤博文が、清国特派大使に小村寿太郎が任命された²。

①に関しては、すでに日本は日露戦争勃発直後に韓国を軍事占領しており、実質的に韓国を支配下に置いていた³。1905年11月9日に京城（ソウル）に乗り込んだ伊藤は、同月17日に軍事力を背景に強引に第二次日韓協約（乙巳保護条約）を韓国側に結ばせた。統監府が置かれることになり、伊藤が初代統監となった。すでに同年7月29日、桂太郎首相と来日した米陸軍長官ウィリアム・タフト（William Taft）の間で結ばれた桂・タフト覚書で、米のフィリピン支配権と日本の韓国保護権が相互に承認された。また日本は8月12日に第二次日英同盟を結び、韓国の保護権をイギリスに認めさせた⁴。こうして列強からの支持も得て、韓国の植民地支配を推し進めた。1910年に日本による韓国併合が完成する。

講和条約を締結したとはいえ、日本は日露戦後ロシアによる軍事的な反抗作戦を恐れていた。日露戦争中に日本は2個師団を韓国に駐留させていたが、戦後に韓国から軍隊を容易に撤退させ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⁵。日本が日露戦争後も軍隊の駐留を続けたのは、韓国の植民地支配だけが目的ではない。

² 古屋、前掲書、212頁。

³ 稲葉千晴「軍事史から見た日本による韓国占領 1904年2月」『安全保障と国際関係』（内外出版、2016年）229-241頁。

⁴ 外務省編『小村外交史』下巻（紅谷書店、1953年）162-184頁。小林道彦『桂太郎：予が生命は政治である』（ミネルヴァ書房、2006年）195頁。千葉功『旧外交の形成：日本外交 1900-1919』（勁草書房、2008年）159-163頁。

⁵ 金正明編『朝鮮駐劄軍歴史』（巖南堂、1967年）25-30頁。

満洲に目を向けよう。日露両国は、講和条約で②のとおり満洲を清国に返還することを決定した。しかも③のとおり列強に満洲の門戸を開放する。当然のことながら、列強が満洲市場に参入することを認めている。その情報を事前に手に入れたアメリカの「鉄道王」エドワード・ハリマン（Edward H. Harriman）は、8月末に来日して、日本が手に入れる予定の⑤の南満洲鉄道（ロシアによって敷設された東清鉄道南部支線の長春・旅順間の鉄道）利権を譲り受けようと試みた。日本は戦争中の列強からの借款を返済するため緊縮財政を強いられており、政府内では大蔵省を中心にして満洲での莫大な投資に反対する勢力が主流であった。10月12日、南満洲鉄道と炭鉱などを含む付屬地域の開発に関して日米対等な条件でシンジケートを構築する桂・ハリマン予備協定覚書が締結された。ところが小村が帰国した10月16日以降、ロシアから賠償金を取れなかった代償として、占領していた満洲南部を清に返還するのを止めて、日本がその利権を確保するという方針に変更された。ロシアの反抗を恐れた軍部が、有事の際の兵站線として重要な南満洲鉄道を、日本が独占することを求めたに違いない。一方で③を反故にするためには、あらためてロシアとの間で満洲全体を独占する協議が必要となった。

④と⑤を日本が手に入れるためには、清国の承諾を得る交渉が必要だった。11月17日、特派大使に任命された小村が北京に乗り込み、駐清公使内田康哉と共に、清国の全権代表である軍機大臣の慶親王や直隸総督の袁世凱と交渉を始めた。日本側は、遼東半島の租借と南満洲鉄道の利権引継ぎだけでなく、満洲の門戸開放の阻止・安奉線の利権継続・満洲領である鴨緑江右岸の森林伐採権も要求した。ちなみに安奉線とは、日露戦争中に日本によって敷設された朝鮮国境の安東と奉天間の軍用鉄道のことである。講和条約でさえ受け入れがたいにもかかわらず、条約に記されていない事項まで要求されたことに対して、清国側が頑強に抵抗したのは当然である。小村は、受け入れ

なければ日露の軍隊の満洲駐留を継続させると脅し、強引に締結を迫った。ついに清国側が折れ、満洲に関する日清条約が調印された⁶。日本は南満洲の権益を手に入れ、大陸進出の橋頭保を得た。

日露両国は、1906年2月に国交を回復した。ロシアとの間で合意していた満洲からの撤兵は予定よりも早く進み、同年7月には両国とも撤兵が完了した。とはいえ、日本軍は鉄道守備を名目として、2個師団を南満洲に残していた。陸軍参謀総長として日露戦争を主導した元老の山県有朋は、ロシアが必ず復讐してくると確信しており、それに対する準備を始めた。具体的には陸軍の師団数を、日露戦争時の13個師団からほぼ二倍の25個師団に拡大することだった。だが戦後の財政難と満洲における軍事力均衡の観点から計画は縮小し、同年11月には7個師団だけの増設が決定された⁷。

清国から譲り受けた④と⑤の南満洲利権を、民政面から運営することが急務であった。1906年6月7日に、長春・旅順間の鉄道を運営する南満洲鉄道株式会社（満鉄）が設立された。初代総裁に台湾の民生長官を務めた後藤新平が任命された。同年8月1日、遼東半島の租借権と南満洲鉄道の付属地を管轄する関東都督府が創設され、大島義昌陸軍大将が都督に就き、有事の際に必要な軍政面を取り仕切った⁸。まだロシアとの対立は解消されておらず、軍事的な配慮も必要だったが、日本は戦争で疲弊した経済を立て直すため、南満洲の経営に着手した。

3. 第1次日露協約（1907年7月）

⁶ 『小村外交史』下巻、216-253頁。「満洲に関する日清条約」『日本外交史辞典』973-74頁。

⁷ 小林道彦『日本の大陸政策 1895-1914：桂太郎と後藤新平』（南窓社、1996年）128-35頁。

⁸ ワシーリー・モロジャコフ『後藤新平と日露関係史：ロシア側新資料に基づく新見解』木村汎訳（藤原書店、2009年）13-17頁。

満鉄の総裁に就任した後藤新平は、山県有朋のようにロシアを最大の敵国とみなしてはいなかった。彼は、ロシアが満洲を日本の経済圏に取り込むための潜在的なパートナーになりうる、利権を狙った他の列強から満洲権益を守るための協力者だと考えていた。ロシア側でも露外相のアレクサンドル・イズヴォーリスキー(Aleksandr P. Izvol'skii)を中心にして、日本との関係改善を模索する動きが生まれた。彼は、日露戦争中に英王室と連絡を取り、イギリスとロシアとの対立を解消しようと提案した。1904年4月8日に締結された英仏協商によって、イギリスがロシアの同盟国フランスとの植民地抗争に終止符を打ったことも影響している⁹。ロシアが、日露開戦で日本の背中を押したとみなしていたイギリスと和解すれば、東アジアで敵対する日本も政策の変更を迫られるとイズヴォーリスキーは期待した。

1907年2月、イズヴォーリスキーは、駐露公使本野一郎に日露協商の締結を打診した。ロシアは、インド・アフガニスタンにおけるイギリスとの対立を解消し、英露協商に向けた話し合いを進めており、英の同盟国である日本とも関係改善を図りたいと申し出た。彼は1906年末に満洲に駐留するロシア軍の撤退を表明し、日本側の不信感を取り払おうと努めた。フランスも東アジアの現状を維持するため日仏協約を結ぼうと計画しており、英仏両国は日露の接近を歓迎した¹⁰。フランスは、ロシアの同盟国として戦争中フランスを敵視していた日本と和解することで、東アジアにおけるドイツの伸張に対抗できると考えていた。日仏協約は1907年6月10日にパリで調印された¹¹。

日本がロシアとの関係改善を狙っていたのには、別の側面が存在する。韓国である。韓国統監の伊藤博文は、韓国を巡って戦争をはじめたロシアとの間で、それ以上朝鮮半島が火種となることを望んで

⁹ Keith Neilson, *Britain and the Last Tsar: British Policy and Russia, 1894-1917*, (Oxford: Clarendon Press, 1995), pp.248-249.

¹⁰ 麻田雅文『日露近代史：戦争と平和の百年』（講談社現代新書、2018年）148-49頁。

¹¹ 「日仏協約」『日本外交史辞典』699-700頁。

いなかった。伊藤は、イズヴォーリスキーの提案を受けて、この機会を逃すと韓国問題をめぐって日露関係は再び紛糾すると述べ、元老や閣僚に日露協商の締結を勧告した。首相の西園寺公望に連絡し、今後ロシアが韓国に介入できないようにするため、協商は好都合だと説いた。山県有朋も南満洲経営の進展のため、ロシアとの交渉が必要だとの意見を表明した¹²。

伊藤が憂慮した背景にハーグ密使事件がかかわっていることは明白である。高宗は 1906 年 1 月にソウルに着任したロシア公使ゲオルギー・プランソン（Georgii A. Planson）と秘密裏に接触した。プランソンは、ポーツマス条約とロシアの対韓政策は別物だという考えだったが、同年 5 月イズヴォーリスキーに日露関係を阻害するとたしなめられ、高宗との関係を断っていた。だが高宗は諦めず、1907 年 7 月にオランダのハーグで開催される第 2 回万国平和会議に密使を派遣し、日本による韓国支配の違法性を訴えようとした。会議の議長を務める駐仏ロシア大使アレクサンドル・ネリドフ（Aleksandr I. Nelidov）は、韓国人密使と面会することも拒否した。韓国人の参加を認めなかったのは言うまでもない。だが日本側は、第 2 次日韓協約が国際舞台で批判されるのではないかと恐れ、韓国密使の動きに細心の注意を払った。伊藤統監は、密使の影に潜んでいた皇帝の画策を知って激怒し、高宗を退位させた。7 月 24 日には第 3 次日韓協約を結ばせ、韓国軍を解散させ、日本軍駐留の継続と司法権・警察権の統監への移譲が決められた¹³。韓国は日本の保護国とされ、朝鮮民衆にとって日本に抵抗する手段は義兵闘争しかなくなった。

¹² 麻田、2018 年、150-151 頁。

¹³ 外務省編『日本外交文書』明治 40 年巻 1、425-453 頁[「日本外交文書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https://www.mofa.go.jp/mofaj/annai/honsho/shiryo/archives/>]。「ハーグ密使事件」『日本外交史辞典』824 頁。Sheila Miyoshi Jager, *The Other Great Game: The Opening of Korea and the Birth of Modern East Asia*, (Cambridge MA, Belknap Press, 2023), pp.439-442.

1907年7月30日、第1次日露協約がサンクト・ペテルブルクで本野一郎大使とイズヴォーリスキ外相の間で調印された。内容は、公開協約2条と秘密協約4条からなる。秘密協約でもっとも重要なのは、日本がロシアの外蒙古（モンゴル）における特殊権益を認める代わりに、ロシアも韓国での日本の優越的地位を尊重することを確認した点である。それ以外に両国の衝突を未然に防ぐため、ハルビンと吉林の間に、北満洲と南満洲の分界線を設けた。協約締結に先立ち、日露通商条約や漁業条約が結ばれ、日ロ経済交流の進展が期待された¹⁴。日本はロシアに韓国問題から手を引かせた。もはや日本の韓国併合に反対する列強はいなくなった。ロシアは一か月後に英露協商を締結し、イギリスとの和解を達成した。ドイツの孤立を図る三国協商の完成である。

4. 第2次日露協商（1910年7月）

満鉄総裁の後藤新平の夢は、満鉄とシベリア鉄道を乗り継ぎ、だれもがアジアからヨーロッパまで鉄道で旅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だった。ところがロシアが保有して満洲を東西に結ぶ東清鉄道（中東鉄道）は、赤字に苦しんでいた。一方で世界一周鉄道網の構築を諦めていないハリマンは、東清鉄道の購入に触手を伸ばし、可能ならば満鉄まで購入しようと考えていた。しかもアメリカは、清国が満洲で計画する新鉄道網への出資まで計画していた。のちにアメリカは、国際シンジケートを作って東清鉄道と満鉄を買収し、清国に返還した上で、列強が共同して満洲の鉄道事業を運営すると提案した。満鉄を成長させようと狙っていた後藤にとっては大いなる脅威である。

ロシア国内でも対日観の違いで対立が起きていた。極東ロシアを防衛するためには、軍隊の維持が必要だと主張する対日強硬派が、力を盛り返してきた。1909年秋、露蔵相ヴラディーミル・ココフツォー

¹⁴ 『日本外交文書』明治40年巻1、97-179頁。「日露協約」『日本外交史辞典』731-732頁。

フ(Vladimir N. Kokovtsov)は、強硬派を抑え込み対日融和を進展させるため、極東への視察に向いた。それを聞きつけた後藤は、清国による日露利権回収の動きを封じるため、伊藤博文にココフツォーフとの会談を提案する。伊藤もさらなる日露親善を求めており、露蔵相と会談するため日本からハルビンに向かった。10月26日、伊藤の乗る車内でココフツォーフと面会した。その後二人は市民や外国の領事たちと挨拶するため駅頭に降り立つ。突然銃声が鳴り響き、伊藤は安重根によって暗殺された。

ロシアの対日強硬派は、警備を管轄するハルビン駅で伊藤の暗殺を防げなかったことを理由に、日本がロシアと開戦するのではないかと恐れていた。イズヴォーリスキー外相は杞憂だと述べ、対日関係改善を指示した。具体的には、東清鉄道の国際シンジケートへの売却を止め、ロシア極東開発のために鉄道事業を継続する、日本と協力して満洲権益を維持することを決定した。1910年1月、日露両国はアメリカ提案を拒否した¹⁵。

1910年7月4日、列強の満洲への介入を防ぎ、清国の支配権を弱め、両国で満洲権益を独占するため、第2次日露協約が締結された。日露の緊密な協力によって、アメリカの満洲進出を防ぐことができ、日露再戦の危機は消滅した。なお協約では、特殊権益を有する地域、すなわち日本の南満洲と朝鮮半島、ロシアの北満洲での行動を互いに尊重することも決められた。日本が朝鮮半島で進める行為に関して一切かかわらないよう、ロシアに約束させたことになる¹⁶。同年8月29日、日本は韓国の併合に踏み切った。

¹⁵ 麻田雅文『満蒙：日露中の最前線』（講談社メチエ、2014年）64-87頁。

¹⁶ 『日本外交文書』明治43年巻1、106-197頁。「日露協約」『日本外交史辞典』732-733頁。

5. 第3次日露協約（1912年7月）

清国の領土内に敷設した東清鉄道から、ロシアが利益を得るのは並大抵ではない。というのは1900年の義和団事件の際に、東清鉄道は大打撃を被り、多くのロシア人が犠牲となったからである。沿線の警備のために鉄道守備隊を駐屯させており、莫大な経費がかかっている。利益があがらないからといって、近代化の進む清国が自らの力で新しい鉄道を建設するのを、15年前に結んだ協定で禁止するのは無理がある。その無理を押し通そうとすれば、軍事衝突に行きつく。1910年から11年にかけて、ロシアは武力をもって満洲から清国の影響力を排除しようと計画した。清国は外国からの蚕食を受けて国力が弱まり、国内では立憲派や民族派の革命諸団体が専制打倒の機運を高めていた。11年10月に長江（揚子江）中流域で起きた暴動が全国に波及して清国の権力は崩壊し、1912年1月に孫文を臨時大総統とする中華民国が南京で樹立された。だが華北で最強の軍隊を保有する袁世凱が、皇帝を退位させ、孫文を引きずりおろし、自らが大総統の椅子に座った。この辛亥革命によって、中国国内では権力の空白地帯が生まれた。

11年12月末に外蒙古が独立を宣言すると、ロシアは同国への影響力を強化する一方で、内蒙古にまで触手を伸ばした。日本は、東西に広大な内蒙古すべてがロシアの勢力圏に入るのを座視できず、満洲に接する内蒙古東部の権益をロシアに求めた。ロシア側にも日本と不必要な対立を避けようという配慮があり、新たな協定の締結が急がされた¹⁷。

秘密協定だけで成り立つ第3次日露協約は、1912年8月3日に調印された。北京を通る経度線を分界線とし、内蒙古の東側の権益を日本、西側をロシアに割り当てることが決められた¹⁸。日本の

¹⁷ 麻田、2014年、89-100頁。千葉、前掲書、246頁。

¹⁸ 『日本外交文書』明治45年巻1、43-92頁。「日露協約」『日本外交史辞典』733-734頁。

内モンゴルへの進出が始まった。

6, 第4次日露協約（1916年7月）

オーストリア皇太子がセルビアの若者に暗殺されたのが契機となり、1914年7月末に第一次世界大戦がはじまった。1914年末までにロシアは、東部戦線でドイツの攻勢にさらされる一方で、大部隊を動かしてオーストリア領のガリツィアを占領した。協商側にせよ同盟側にせよ、攻撃の主体が歩兵による銃撃戦と砲兵による砲撃戦だったため、開戦半年もたたずして武器弾薬が欠乏してきた。ところがロシアは、ヨーロッパ側ではバルト海での独潜水艦の脅威にさらされ、15年以降、黒海の出口はオスマン・トルコによって封鎖されていた。白海のアルハンゲリスクは半年も氷に閉ざされ、コラ半島北端のムルマンスクは首都ペテルブルクまでの鉄道が開通していなかった。外国製の武器弾薬を安定して輸入できる唯一の港は、極東のウラジオストクだけである。アメリカや日本からの輸入が期待された¹⁹。ただしアメリカはまだ厳正中立の立場に立っており、表向きに武器輸出は始めていない。

戦争がはじまると、8月上旬に日本の陸軍参謀本部は、ロシアに武器輸出を提案した。ロシア側にとっても渡りに船である。さっそくロシアは武器や軍需品を購入したいと申し出て、陸軍省砲兵本部代表団を組織し東京に向かわせた。ところが日本は、同盟国イギリスからドイツ植民地の膠州湾を制圧するよう要請され、8月23日連合国（三国協商側）側に立ってドイツとオーストリア・ハンガリーに宣戦した。すぐさま対独戦の準備をはじめ。9月10日ロシア代表団が東京に到着すると、対独戦を間近に控えた参謀本部は消極的になっていた。ともかく10月半ばには旧式の小銃45万挺・銃弾1200

¹⁹ 麻田、2014年、110-111頁。木村靖二『第一次世界大戦』（ちくま新書、2014年）61-75頁。

万発・大砲 76 門・砲弾 50 万発がロシアに売り渡された。さらに小銃 20 万挺・銃弾 2500 万発・砲弾 30 万発も年末までに提供される。くわえて三井物産経由で火薬 1360 トンがアメリカのデュポン社から日本経由でロシア極東に送られることも決まった。ロシアにとっては、海外からの最初の武器購入であった²⁰。

1915 年になると、ロシアはドイツ軍の大攻勢にさらされ、9 月までにポーランド（ベラルーシ西部やウクライナ西部を含む）・リトアニア・ラトヴィア・まで失う。ただし独軍も兵站線が伸び切って攻撃力が弱まったため、ロシア軍の 1000 キロメートルもの「大退却」は止まり、戦線は膠着した²¹。劣勢のロシア軍を支えるため、東京では武器だけでなく、原材料や軍需品の購入が活発化した。たとえばアルミニウムやアンチモニー、砲弾の信管 400 万個、旋盤 800 台、軍服用のラシヤ・軍靴・鍋までである²²。

1916 年にはロシア軍事債権の日本による引き受けも始まる。ロシア側から小銃 40 万挺・機関銃 5 千挺・銃弾 5 億発・大砲 800 門・砲弾 40 万発なども発注された。こうした緊密な軍事協力を維持・発展させるためには、新たな協定が必要なのは言うまでもない。日本側も交換条件を出してきた。ハルビン・長春間の鉄道を満鉄に売却する代わりに、軍事協力を進展させるというのだ。さらに満洲だけでなく中国全土の利権を日露で分割することまでが含まれた。ただしロシア側の反対により満鉄への売却

²⁰ バルイシエフ・エドワルド「第一次世界大戦期における日露軍事協力の背景：三井物産の対露貿易戦略」『北東アジア研究』第 21 号（2011 年）23-41 頁。バルイシエフ・エドワルド「第一次世界大戦期の「日露兵器同盟」とロシア軍人たちの「見えない戦い」：ロシア陸軍省砲兵本部の在日武器軍需品調達体制を中心に」『ロシア史研究』第 93 号（2013 年）25-46 頁。

²¹ 木村、前掲書、90-91 頁。

²² バルイシエフ・エドワルド「第一次世界大戦期の「日露兵器同盟」と両国間実業関係：「プリネル & クズネツォーフ商会」を事例として」『北東アジア研究』第 23 号（2012 年）193-215 頁。

は留保された²³。

同年7月3日、公開協約2条秘密協約4条からなる第4次日露協約が、ペトログラード（露首都の新名称）で調印された²⁴。実質上の日露同盟いえる。日本はロシアと攻守同盟を結び、列強の影響力が弱まった中国において、利権獲得に動く準備を始めた。

7, ロシア革命と日露同盟関係の終焉：結びに代えて

1917年3月15日、第一次世界大戦による市民生活の圧迫に耐えかねた労働者や兵士によって、ロシアのロマノフ王朝は打倒され、新たに臨時政府が樹立された。ロシア二月革命である。ところが臨時政府が戦争継続を決定したため国内で不満が高まり、11月7日にボリシェヴィキによってソヴェト政権ができた。1918年3月3日、ソヴェト政府は、三国同盟側と講和条約を結び、第一次世界大戦から離脱した。

イギリスとフランスにとって、ロシアの戦線からの離脱は、ドイツの軍事力を西部戦線に集中させること意味した。ソヴェト政権はドイツを背後から支援する許しがたい革命勢力だとみなされた。1917年末、シベリア鉄道とウラジオストクにある軍事物資がドイツ軍に渡らぬよう、英仏から日本に対して、シベリア出兵の要請があった。ソヴェト政権は、連合国間で不協和音を拡大させるため、秘密協約を含めた第4次日露協約を新聞に暴露する。それでも1918年8月、日本は連合国と共同でシベリア出兵に踏み切った。

²³ バルシエフ・エドワルド『日露同盟の時代 1914～1917年：「例外的な友好」の真相』（花書院、2007年）。Д.Б. Павлов, *Русско-япо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годы Перв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Первая мировая. Великая 1914-1918*, (Москва: РОССПЭН, 2014).

²⁴ 『日本外交文書』大正5年巻1、107-182頁。「日露協約」『日本外交史辞典』734-736頁。

第4次日露協約による日露同盟関係は露と消えた。以後日本は、共産主義を掲げるソヴィエト政権の打倒を目指し、1922年までシベリアに居座った。日露戦争後、対立から協調へと舵を切った日露関係は、再度きわめて緊張する。ただしロシア革命後も、ソヴィエト政権は表立って朝鮮半島に介入することはなかった。

러일전쟁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 러일관계: 적대에서 동맹으로

이나바 치하루 (메이조대학교 교수)

1904-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 해군은 1905년 5월 27-28일 쓰시마 해전에서 러시아 함대를 침몰시키고, 동아시아 해역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러나 일본 육군은 원래 하얼빈까지 점령하여 러시아 육군을 만주에서 몰아낼 계획이었지만, 병력이 부족하여 창춘 이남만 점령하는 데 그쳤다.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러시아 육군은 하얼빈에 백만 명의 병력을 집중시켰지만, 보급 문제가 있었으며 국내에서 러시아혁명이 일어나 일본군을 격파하지 못했다.

미국의 중재로 1905년 9월 5일 일본과 러시아는 포츠머스조약을 체결했다. 러시아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일본에 사할린 남부를 양도하고, 한국과 남만주의 지배권을 인정했다. 일본은 이후 1910년 한국을 강점했다.

1905년 12월, 일본은 청국과 만주 관련 조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청국 정부는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넘겨받은 랴오둥 반도의 조차권과 남만주 철도의 관리권을 인정했다.

일본은 러시아의 보복을 두려워해, 한국과 남만주에 주둔한 일본군을 철수하지 않았다. 반면, 러시아는 혁명을 진압하고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 개설 등 내부 개혁을 추진했다. 극동 지역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었고, 동아시아에서는 기존의 러시아 권익 유지만을 희망했다.

1907년 7월 30일, 일본과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제1차 러일협약을 체결했다. 북만주는 러시아, 남만주는 일본이 지배하는 기존 상태를 유지했다. 또한 비밀 협정을 통해 러시아가 한국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본은 러시아의 외몽골 권익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한국 강점을 반대하는 열강이 사라졌다. 한 달 뒤, 러시아는 영국과 영러 협상을 체결하고 영국과 화해했다.

1910년 7월 4일, 제2차 러일협약이 체결되었다. 일본과 러시아는 미국이 주장하는 만주의 문호 개방에 공동으로 반대하며, 각자의 권익을 지켰다. 비밀 협정에서 양국은 서로의 권익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사실상, 러시아는 일본의 한국 강점을 승인한 것이었다.

1912년 7월 8일, 제3차 러일협약이 비밀 협정으로만 체결되었다. 신해혁명 이후 러시아가 외몽골의 권익을 확보하려는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는 광대한 내몽골의 권익을 분할했다. 양국의 적대 관계는 사라지고 협력 관계가 형성되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속한 삼국 협상 측에 가담해 독일과 전쟁을 벌였고, 독일이 지배하던 칭다오(교주만)를 점령했다. 한편, 러시아는 독일과의 전투에서 열세에 놓였고, 무기와 군수품 부족에 시달렸다.

1916년 7월 3일 체결된 제4차 러일협약에서 일본과 러시아는 동맹 관계를 구축했다. 일본은 대량의 무기를 지원하며 러시아를 도왔다. 그러나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일 동맹은 종결되었다.

제2부 러일전쟁 이후 유라시아 지정학 논의

Discussion of Eurasian Geopolitics after the Russo-Japanese War

발표 5

냉전 전후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개념과 독일-러시아 관계

Geopolitical Concepts of Eurasia Before and After the Cold War and the German-Russian Relationship

요르그 도스탈 J.M. Dostal (서울대학교 교수)

Geopolitical concepts of Eurasia before and after the Cold War and the German-Russian relationship

Jörg Michael Dostal*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tory has not followed ideological schemes or graphic displays deriving from the study room of political scientists [*Stubenpolitologen*]. (...) As already stated by the ancient Greeks, even the gods cannot unmake what has already happened, thereby warning against activities that one would later had to feel sorry for.

Valentin M. Falin, *Politische Erinnerungen* (1993), my English translation.

Introduction: War in Eurasia

The Russian attack on Ukraine on 24 February 2022 constitutes a turning point of world history. This event blends in with the general decline of concepts of international law in world politics after the end of the first Cold War in 1991. During the Cold War period starting with conflict between the victorious powers over the post-WW 2 order at the Potsdam Conference in July 1945 and ending with the self-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on 26 December 1991, the assumption of a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USA and the Soviet Union had underwritten a bipolar global system. This system was nominally committed to international law as put forward in the United Nations (UN) Charter. The UN system was sub-divided between countries granted veto power in the UN Security Council (the permanent members USA, UK, France, Soviet Union and Nationalist China (since 1971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UN Assembly, which offers all member states representation but does not hold substantial powers.

In this context, conflict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was usually conducted in an indirect manner using proxy forces. Moreover, bipolarity included cooperation and conflict at the same time. Both sides tried to avoid escalation and did not hesitate to realize mutual gains, such as in efforts to lock in the geopolitical results of WW 2 by excluding the defeated powers Germany and Japan and newly emerging countries such as India and Brazil from great power status. The two sides also shared interests in avoiding further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beyond a small set of their own client states.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1 Gwanak-ro, Gwanak-gu, Building 51-1-417, Seoul 151-742, jmdostal@snu.ac.kr.

Overall, the Cold War period was characterized by asymmetric bipolarity. Throughout the entire period, the US enjoyed major competitive advantages in comparison to the Soviet Union. These included a significantly higher population, a much more productive economy and at least initially superiority in access to strategic resources. The US leadership was fully aware of its competitive edge in almost all fields and used the Cold War context to discipline domestic publics and allied clients and states by overblowing the assumed dangers of Kremlin offensive designs.¹ Most significantly, the US took advantage of the post-WW 2 new strategic situation by constructing a global empire based on a dense network of military bases. The US now enjoyed an almost unassailable position as a continental land power out of the reach of conventional military attack from competitors. Moreover, it took over from the UK the role as the main naval empire thereby combining land and sea power in an unprecedented manner.

By contrast, the Soviet Union remained essentially a land power. Its geographical position as the largest country on earth facing permanently frozen waters along its northern coastline severely limited the country's ability to project naval force due to a lack of ice-free harbours and the resulting difficulty to access the oceans. Russia controls a major share of strategic resources such as oil and gas. It belongs to the so-called 'strategic energy ellipse' that includes Russia, parts of Ukraine, Kazakhstan, Iran and Middle East countries. In addition to this region, Siberia also includes many as of yet unexploited strategic resources.² Post-1945, the Soviet Union gained geopolitical control of Eastern European states and installed client regimes based on its direct military presence and willingness to subsidize such states with Soviet energy resources delivered for free or at far below world market prices. When looking at Russia, many observers past and present have underscored the potential of the country to act as a great power in global affairs.³

¹ No stated author (1950) 'NSC 68: United States Objectives and Programs For National Security', April 14, 1950, in J. M. Siracusa (1998) *Into the Dark House: American Diplomacy and the Ideological Origins of the Cold War*, Claremont: Regina Books, pp. 211-263.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Document No. 68', confidentially circulated among US foreign policy-makers and kept secret for many years, is evidence for US confidence vis-à-vis the Soviet Union in the early stage of the Cold War. It states among other basic facts that the western camp enjoyed superiority in steel, coal, iron ore, crude petrol and cement production of 4 to 1, 3 to 1, 3,5 to 1, 7 to 1 and 5 to 1 in comparison with the Soviet Union and its client states.

² The concept of the strategic energy ellipse was developed in the Berlin-based journal *Osteuropa* (issue 9/10 2004). Nine maps showing Russian energy resource endowments are available here: <https://zeitschrift-osteuropa.de/hefte/2004/9-10/>. Note that maps seven and nine demonstrate the additional significance of Siberian resources further underlining Russia's economic and geopolitical potential.

³ To quote one representative German voice of its era, the national liberal politician Friedrich Naumann argued

In the context of ongoing war in Ukraine and Russia, one might understand Russia's military attack on Ukraine as an attempt of Kremlin decision-makers to defend the country's great power status. This status has been denied to Russia by US policy-makers ever since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One prominent example was the 2014 statement of former US President Barack Obama following Russia's annexation of Crimea that Russia constituted a 'regional power'.⁴ American strategists believed that a unilateral world order with the US as single hegemon had been issued in by the disappearance of the Soviet Union. They now demanded a so-called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which did never refer to international law but indicated in fact US rule (and the right of the US to unilaterally change such rules at any point in time). Since 1991, the US gained access to almost all Eastern European states that previously belonged to the Soviet alliance system during the Cold War period. Russian influence in these countries (and successor states) has not completely disappeared but is usually reduced to a minority stake and limited to smaller central European countries that are still heavily reliant on Russian energy resources. Apart from Belarus, only the non-state unit of Transnistria (belonging to Moldavia but still hosting a Russian army group that refused to withdraw in the post-Soviet period) can be said to be currently in an alliance with Russia.⁵

In the post-Soviet space, i.e. the territories of the former Soviet republics, geopolitical outcomes are more mixed. The US have ever since 1991 pursued efforts to separate post-Soviet states from Russia. In turn, Russia made efforts to retain or restore close alliances. As a result of this contest, domestic politics in many if not most former Soviet republics appears reduced to permanent contest between US- and Russia-backed forces. Apart from the case of the Baltic states who joined NATO in 2004 and subsequently started a policy of linguistic assimilation of local Russian-speaking minorities, the US and Russia are fighting over influence in Ukraine and heavily contest each other in states such as Armenia, Georgia and in Central Asia. As in

during WW I that Russia displayed 'an undeniable magic' only to add in a more pragmatic manner that 'permanent contracts with Russia are economically full of shinning perspectives since they will secure for our [German] industry a market of primary importance. (...) As far as things stand today, the Russian and German economies match each other fabulously' [*fabelhaft gut*]. See *Mitteleuropa*, Berlin: Verlag von Georg Reimer, 1916, pp. 168, 175. The current and all subsequent German sources are translated by the author.

⁴ J. Borger, 'Barack Obama: Russia is a regional power showing weakness over Ukraine', *Guardian*, 25 March 2014. On this occasion, Obama was keen to deny that previous US support for the separation of Kosovo from Serbia could be compared with the 2014 events in Crimea.

⁵ M. Martens, 'Transnistrien am Ende?',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8 January 2025.

the previous Cold War period, this contest often takes the form of conflict between proxy forces, such as in the case of Turkey's role in recent conflicts between Azerbaijan and Armenia and efforts of post-Soviet state leaders to announce potential or actual shifts in their geopolitical alignment in order to extract concessions from the great powers.

At the global level, the US pursued aggressive regime change policies targeting states that used to be aligned with the Soviet Union and later with Russia. The 1999 NATO war against the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consisting at this time of Serbia and Montenegro, over the separation of Kosovo from Serbia without a UN mandate might be considered the end of the post-Cold War interregnum in Europe. In fact, US grand strategy developed at the end of the Cold War continued to pursue a confrontational attitude vis-à-vis Russia.⁶ The focus was always on replacing former Soviet with US influence and on resisting efforts of regional powers to conduct their affairs independent from US veto power over their domestic and regional affairs.

In 2007, the former Supreme Allied Commander Europe of NATO and then-Democratic US presidential hopeful Wesley Clark mentioned that Pentagon officials had in 2001 drafted plans for regime change in seven countries over the next five years. The list of targeted countries included states that had formerly to various degrees been aligned to the Soviet Union (Iraq, Syria, Libya) and other countries of strategic interest to the US, namely Lebanon, Sudan, Somalia and Iran.⁷ Although presented in the context of the post-September 11, 2001 US declaration of the 'war on terror', most of the named countries had no previous connection with Islamist terrorist groups. Instead, their mostly secular leaderships held a long-term track record of fighting such groups. In any case, the US policies were subsequently implemented, although the time table was not kept and the current result is in most cases state failure and excessive suffering of local civilian populations. After the departure of former Syrian President Bashar al-Assad from the country on 8 December 2024, Iran now remains the

⁶ D. Milne, 'Paul Wolfowitz and the promise of American power, 1969-2001', in J.-F. Drolet and J. Dunkerley, Eds, *American Foreign Policy: Studies in Intellectual History*, Manchester (U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17, pp. 159-192. The 1992 'Defense Policy Guidance', drafted under the leadership of Paul Wolfowitz, and the subsequent 1997 'Project for a New American Century' (PNAC), heavily sponsored by US arms manufacturers, performed for the post-Cold War period the role of stating US grand strategy that can be compared with the role of NSC 68 (footnote 1) in the early 1950s (see pp. 180, 185).

⁷ 'General Wesley Clark: We're going to take-out 7 countries in 5 years', <https://www.youtube.com/watch?v=6Knt3rKTqCk>. Minute 1:25-1:34. On the same occasion, Clark mentioned the bombing of Afghanistan as an eighth case of US military action.

last country on the list that has not experienced regime change and/or state failure.

Nevertheless, the US decision-makers were realistic enough to conduct wars only against relatively weak opponents. US military triumph on the battle field over former Soviet-armed states such as Iraq was intended to act as a deterrence of potential geopolitical opponents. In most cases, the overall strategy was hostile action short of (visible) war such as arming of proxy forces against targeted governments, drone warfare (massively expanded under the Obama, first Donald Trump and Joseph Biden presidencies) and economic sanctions. US leaders were always willing to accept inconclusive outcomes of their interventions – as long as potential opponents were also paying a high price. The unilateral decision by the Biden administration to leave Afghanistan (concluded in August 2021) appeared to many observers as a new low point in US international standing. Shocking pictures of illiterate Afghani citizens trying to hold on to the wings of departing planes, hoping to share a ride in the way one might ride on the roof of a railway compartment, pointed to the total failure of US-led ‘state building’ and appeared to further question the future US role in international affairs.

Russia’s regime change war in Ukraine

Political assistance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came from the unlikely quarters of Vladimir V. Putin’s Kremlin when Russia attacked Ukraine in February 2022. This event quickly reshuffled all the geopolitical cards and resulted in a totally changed international agenda. The Russian military campaign succeeded in immediately liquidating previous international sympathy for Russia’s nominal support of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when targeting the US for deserved criticism). Far from constituting the result of previous strategic dialogue among broader strata of Russia’s stake holders, the decision to go to war was taken by a small group around President Putin intending to create facts on the ground. There was plenty of evidence that many sections of Russian society were as surprised as much of the international public about the start of military operations. After all, the US government had issued fairly precise predictions for the start of Russia’s attack.⁸ At the same time, many international observers were firmly convinced that US statements were supremely untrustworthy. In a previously untried style of ‘Maskirovka’ (Russian word for deception), Putin followed US predictions

⁸ K. Rogers and A. E. Kramer, ‘White House Warns Russian Invasion of Ukraine Could Happen at Any Time’, *New York Times*, 11 February 2022, <https://www.nytimes.com/2022/02/11/world/europe/ukraine-russia-diplomacy.html>

nearly to the letter, perhaps expecting to create more confusion on the side of opponents in comparison to supporters.

Evidence to the contrary was the difficulty of Russian state media such as RT to clarify the thinking behind the decision to go to war. When a less-than-confident Russian associate professor, Timofei Bordachev, was invited to explain to the senior RT journalist Oksana Boyko reasons for the attack, he termed events a ‘war of choice’ concerning ‘regime change’ in Kiev.⁹ This triggered Boyko’s correct response that ‘we in Russia have been decrying regime change policies in other countries for many decades, are you saying that Russia is now into the regime change game itself, and if it is what makes you believe that it can be more successful than some of its so-called partners, western governments?’ To this, Bordachev replied that ‘we are doing it not in a remote country, we are doing it in a country that is close to Russia, that is basically surrounded by Russia and is populated by the people who speak Russian’.¹⁰ Moreover, he suggested that Ukraine could have potentially engaged in nuclear proliferation with the help of the US at some future point and that Russia’s military operation would stop NATO enlargement for good, which triggered Boyko’s rejoinder that Russia would still need to normalize relations with its European neighbours. Overall, it appeared that Russian policy was not informed by principles other than the Kremlin’s interpretation of self-interest.¹¹

Long-standing critics of the ‘Putin regime’ (those who refer to him as Mister Putin rather than President Putin denying him any degree of domestic or international legitimacy) argue that ‘Putin’s Russia’ already holds a track record of military interventions in the ‘near abroad’ (the post-Soviet spaces of Chechnya, Georgia and elsewhere). However, these small (and often brief) wars were similar to previous patterns of US interventionism in being directed against militarily weak opponents. Some of them could be described as police operations. Others were according to the UN Charter (Article 51, sentence one) technically legal, such as Russia’s 2015 military assistance to the Syrian government then headed by former President Bashar al-Assad. At this point in time, Russia appeared to restore the geopolitical status quo in the Middle East by protecting the Syrian state leadership, which held a long-standing history

⁹ Oksana Boyko, *Worlds Apart*, ‘RT interview on Peace through sword? Timofei Bordachev, programme director of the Valdai Discussion Club’, 27 February 2022, <https://www.rt.com/shows/worlds-apart-oksana-boyko/550741-timofei-bordachev-ukraine-demilitarization/>, minutes 12:39 and 17:07

¹⁰ *Ibid.*, minutes 17:55-18:26.

¹¹ *Ibid.*, minutes 28:00-29:05.

of alliance with the Soviet Union and later Russia, against destabilization by neighbouring and western countries.¹²

One could argue, therefore, that Putin's earlier experiences with the exercise of military force were positive enough to trigger another operation in the case of Ukraine. One might even say that he was socialized into using military means due to his past positive experiences, such as in the case of the second Chechnya war or during the initially successful Russian military intervention in Syria which occurred at a moment in time when other powers had already exhausted themselves. Encouraging geopolitical opponents into a false sense of security and strength is certainly something that US strategists are able to understand as a concept. To put it differently, the terms of scale of Russia's war in Ukraine are certainly off the chart! It has now become the largest war in Europe since the end of WW 2. The Russian invasion started with an assortment of only 150,000 Russian soldiers, most of them taken from special units rather than the regular army, against the Ukrainian military consisting of around three times more soldiers. The war amounts to the attack of the largest European (and Eurasian) country, Russia, on the second-largest European country, Ukraine. Crucially, Ukraine had received pre-invasion substantial military assistance and training from the US and other NATO countries and profited post-invasion from US and NATO intelligence sharing and military and material support on an unprecedented scale.

It appears that the very historical closeness – different from friendship – between Russia and Ukraine triggered conflict that might be described along the lines of 'familiarity breeds contempt'. One must assume that Russian decision-makers firmly believed that rapid military results would be achieved, which would have turned further debate of their decision into an academic issue. However, the operation was from a military point of view poorly planned and suffered from 'fog of war' confusion as much as from the absence of clear political goals.¹³ Overall, one might suggest that Russia entered a trap that is comparable in

¹² J. M. Dostal, 'Transnational War in Syria. The Eisenhower Doctrine in the 21st Century?', *Studia Politica: Romanian Political Science Review*, 2016, 16(2): 179-217.

¹³ On military issues, see the account of an anonymous Russian soldier published post-invasion on numerous websites under the title 'The Adventures of Comrade Krieger', <https://slavlandchronicles.substack.com/p/the-adventures-of-comrade-krieger> and <https://slavlandchronicles.substack.com/p/the-adventures-of-comrade-krieger-478>. For political commentary, see the statement of a former RT journalist, E. Slavsquat, [i.e. R. Waggaman], 'War! There's no time to think. Comply', 3 March 2022, <https://edwardslavsquat.substack.com/p/war-theres-no-time-to-think-comply>.

significance to how the Afghani war undermined the standing of the Soviet Union – except that it is actually much worse. Political traps need someone setting them and someone else stepping into them. The words of Napoleon’s policy minister Joseph Fouché apply: ‘It was worse than a crime, it was a mistake’. One might also argue that the opposite of a deep truth – the long-term record of US power abuses in international affairs – can again constitute a deep truth, namely criticism of the behaviour of states with hegemonic aspirations must follow certain logical principles. The Russian state executive’s reliance on the might is right formula further undermines efforts to focus on the principles of the UN Charta. Multipolarity cannot be advanced by military means in any sustained fashion. War only breeds follow-up wars rather than lasting stability. Thus, countries should aspire to defend their interests by political means and alliance building as well as broad-scale diplomacy.

Nevertheless, the situation remains dynamic and the focus on morality in international affairs adopted by the critics of Russia is usually applied in a highly selective manner. The invasion did the opposite of what was expected: it quickly exposed Russian military weakness. Nevertheless, there were also some countervailing developments underlining that the war remains inconclusive. Following on Russian failure in its initial offensive operations, the subsequent shift to strategic defence on the Russian part succeeded in stopping Ukrainian counter offensive in 2023 and 2024 that was heavily sponsored by the US, Germany and other NATO countries. Since then, the Russian military regained the tactical initiative without achieving any decisive strategic breakthroughs. On the economic plane, the Russian economy displayed a perhaps unexpected degree of resilience. In particular, Russia succeeded in finding alternative markets for its primary export commodity of oil and gas.

The recent suggestion of US President Trump to reduce Russia’s income stream from oil exports by increasing oil production elsewhere would actually hurt economic interests of US domestic shale oil producers – already the highest cost producers – and of US allies such as Saudi Arabia.¹⁴ Moreover, high Russian military spending allowed the country’s industrial sector to recover and this ‘military Keynesianism’ resulted in real term wage growth in relevant sectors.¹⁵ Crucially, the main losers of the economic sanctioning of Russia and the boycott of

¹⁴ P. Lokshin, ““Die Weltwirtschaft wird es nicht aushalten”, sagt der Kremlchef”, *Die Welt*, 10 February 2025.

¹⁵ F. Jaitner, ‘Surprisingly resilient’, *IPS-Journal.eu*, 3 December 2024, https://www.ips-journal.eu/topics/economy-and-ecology/surprisingly-resilient-7954/?utm_campaign=en_1264_20241203&utm_medium=email&utm_source=newsletter.

Russian energy deliveries were EU member countries, namely Germany and many Eastern European countries that had previously been able to rely on cheap Russian energy imports for their export-oriented economies. The rapid increase in energy prices created negative effects for industrial sectors in Germany and deindustrialization is now broadly discussed as a major challenge in Germany and other EU countries.

It needs to be stress that the Russia-Ukraine war remains so far (February 2025) limited in scope. As in every other war, the level of cruelty on the battlefield highlights the self-destructive features of human creativity and inventive spirit – killer robots and drones make cold everyone with a pulse. At the same time, old and new styles of fighting coexist and the war also displays features of WW 1 trench warfare. Crucially, Russia and Ukraine both run the war in terms of recruiting soldiers along social class lines, namely they enlist from those sections of the male population that do not enjoy socio-economic privileges and are unable to leave their countries. On the Russian side, avoiding the drafting of soldiers on any significant scale helps to secure the acquiescence of the population. On the Ukrainian side, the initial willingness of parts of the population to defend the country has long been replaced by a strict draft regime moderated by bribery. The socio-economically privileged sections of the population have long left the country for Western Europe in order to be out of reach of the Kiev authorities. Another feature of limited warfare until the beginning of 2025 was that Russia continued to supply gas to 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Austria via pipelines passing through Ukraine. This was in turn paid for by allowing Ukraine to use a share of the Russian gas deliveries for domestic needs.¹⁶ This case of direct economic propping up of an enemy country by Russia points to the fact that the fighting on the ground is only part of a larger global conflict.

In order to further analyse causes of the Russia-Ukraine war, the paper will now turn to the question of Eurasia as a political concept. Afterwards, it will discuss four classical geopolitical concepts that appear relevant to explain the behaviour of policy-makers during the current crisis. Subsequent sections will focus on Russia's contested role in Eurasia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before turning to the history of German-Russian relations during and after the Cold War.

¹⁶ L. Kotltarova, 'Gastransit gestoppt: Braucht die Ukraine jetzt russisches Gas aus TurkStream? ', *Berliner Zeitung*, 3 February 2025.

Europe, Asia, Eurasia: Contested Boundaries

The question of boundaries between Europe and Asia and internal boundaries within Europe have always been contested. During the era of European colonial expansion, rival concepts of how individual European countries referred to regional, continental and global geography emerged and continue to influence contemporary debates. In this context, boundaries refer beyond issues of geography and map making to broader cultural, political, religious and other factors. To begin with geography in the narrow sense, the political boundaries within Europe are contested. It is not clear how the boundaries between Western, Central, and Eastern Europe should be drawn. Does the entirety of Germany belong to Western Europe? Where are the boundaries of Central Europe? Does it make sense to speak of Eastern Europe without including Russia? Do the Baltic states belong to Central Europe?

As for Eurasia concepts, they are easier to grasp from a purely geographical point of view. In the contemporary world, only two Eurasian countries exist, namely Russia and Turkey. Russia is in fact the largest European country by geographical extension and Moscow is the largest European city. Turkey is one of the main modernizing Muslim countries and includes the historical capital of the Ottoman Caliphate (the heads of the Ottoman dynasty used to also act as caliphs of Islam). This claim and the institution of the Caliphate were abolished by the secular authorities of Turkey in 1924. Previously, Constantinople (renamed Istanbul in 1930) was the historical capital of the Eastern Roman Empire until 1453 and by extension the centre of Orthodox Christianity. However, whether Russia and Turkey belong to Europe has always been contested on cultural, religious and political terms. Indeed, many observers past and present questioned whether Russia belongs to Europe due to its orthodox Christian religion and history of authoritarian statehood. The country's absence of participation in the European Renaissance and Reformation and its geographical isolation from Western and Central Europe suggested to certain authors that Russia is part of Asia.¹⁷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such cultural-religious arguments in favour of excluding Russia from Europe on political grounds might equally apply to Ukraine and perhaps even to other European countries with

¹⁷ For this line of argument, see E. Obst, 'Die geopolitischen Leitlinien des Europäischen Rußland', *Zeitschrift für Geopolitik*, 1924, 1(1): 5-19. For early German debates of Eurasia concepts and the future geopolitical role of Russia/the Soviet Union, see J. M. Dostal, 'Auf der Suche nach dem Dreh- und Angelpunkt der Geschichte: Die Eurasian-Debatte der Zeitschrift für Geopolitik (1924-1932)',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2016, 26(4): 29-72.

predominately Orthodox Christian religion such as Romania. At the same time, European opinion about Turkey's European role remains deeply divided. Is Turkey's contemporary focus on close relationships with Azerbaijan and other Central Asian states and its role in the Middle East pointing to its shift to Asia rather than Europe?

Briefly, one might conclude that modern concepts of Eurasia emerged in Germany,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after the end of WW 1 as a result of the major territorial and geopolitical changes that occurred at this point in time (the collapse of the Russian, Austro-Hungarian, and Ottoman Empires). US President Woodrow Wilson's concept and external imposition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in Eastern Europe' combined with the power interests of the victorious Entente powers France and Britain resulted in the reorganizing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along the lines of newly created nation states. However, these states included from the beginning significant national and linguistic minorities that were subsequently subjected to aggressive cultural assimilation policies in the interest of state building. The creation of the *cordon sanitaire* between Germany and Soviet Russia (since 1924 the Soviet Union) under the Versailles and subsequent imposed treaties separated the two main land powers of the region from each other.

Crucially, the new stat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were from the beginning depending on external support of Western European states (principally France and secondary Britain) for their survival. The exception from this pattern was Poland which aimed to assume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 of Jozef Pilsudski the role as leader in Central Europe. Poland's military success in the war with Soviet Russia (1919-1921) allowed to push the border between Poland and Russia far to the east resulting in the incorporation of the western sections of Ukraine into Poland. This success gave rise to the geographical concept of 'Intermarium', i.e. Pilsudski's efforts to create a unified geopolitical space of Eastern and Central European countries under Polish hegemony reaching from the Baltics to the Black Sea. In this context, 'Intermarium' was expected to include all regional states other than Bulgaria as a former German ally in WW 1. In addition, there were attempts to increase cooperation between subsets of new state actors, such as in the case of the so-called 'Little Entente' nominally aligning Czechoslovakia, Romania and Yugoslavia between 1921 and 1938 and backed up by France, and efforts to stabilize the Balkans or facilitate cooperation between successor states of the Austro-Hungarian Empire. What all these ideas had in common was that they were explicitly non-Eurasian, namely they did not conceptualize any European role for Russia and/or the

Soviet Union.

In more recent times and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Eurasian concepts were frequently raised by interested parties. The rise of Eurasian ideas occurred in the context of the failure of the EU to create a more unified European posture. In this context, one notable 'Eurasian moment' was the rejection by France, Germany and Russia of the US decision to attack Iraq in 2003 in the context of wrong US claims about Iraqi chemical weapons and in favour of efforts to allow UN weapons inspections to continue their mission in Iraq. In this very brief moment of alliance between French President Jacques Chirac, German Chancellor Gerhard Schröder and Russian President Putin, Eurasian political cooperation appeared to become an actual possibility.¹⁸ In Russia, Eurasian ideas have always been popular ever since the end of the Soviet Union. In 2010, Putin proposed in the context of a state visit to Germany the creation of 'a harmonised economic community from Lisbon to Vladivostok'.¹⁹ He also referred on the same occasion to 'our continent' underlining that he conceptualized Russia as part of Europe.

However, one must stress that Eurasian ideas are rejected or play no significant role in contemporary debates of many European countries. Instead, public opinion usually prefers the forming clubs of closely related countries. This applies to Europe's Nordic countries or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rejecting EU mass migration policies in favour of cultural and linguistic protectionism. Other countries such as Poland favour the further strengthening of transatlantic links or maintain efforts to continue privileged relationships with former colonies such as in the case of the (recently collapsing) idea of *France-Afrique*. Overall, the EU as an institution of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suffers from the fact that the 27 member states are not able to agree on any common geopolitical concepts of their shared future. Instead, internal divisions are growing and the great powers of our era (only one of them 'Eurasian') easily play the EU countries against each other.

Four classical geopolitical concepts of Eurasia

After briefly discussing some past and present political references to Eurasia, one must

¹⁸ No stated author, 'Irak-Konflikt: Paris, Berlin und Moskau gemeinsam für friedliche Lösung',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0 February 2003.

¹⁹ V. V. Putin, 'Article in the *Süddeutsche Zeitung* newspaper, Russia and Europe: From an Analysis of Crisis Lessons to a New Partnership Agenda', 25 November 2010, <http://archive.government.ru/eng/docs/13088/>.

nevertheless further explore the roots of the concept. These might be identified as ‘classical geopolitics’ in the sense that they have been influential in many countries and across different historical periods. Geopolitics is defined in the current paper as the influence of geographical factors on human history and policy-making. It needs to be stressed that geopolitical ideas are not necessarily ‘true’ in any objective sense but instead exercise mobilizing strength; they motivate policy-makers and sometimes the larger public to engage in practical activities that produce (and sometimes seemingly confirm) geopolitical concepts. Classical geopolitical concepts continue to influence today’s civilian and military leaders and the mass public.

On the one hand, privileging geographical factors in their influence on policy-making might be justified under certain circumstances. In particular, such factors often constitute one relatively stable background variable of policy-making. However, one must also highlight that classical geopolitics becomes much less useful when discussing issues of global elite cooperation that proceeds independent from geographical factors or issues of social class conflict (wars might be nominally fought between ‘nations’ but the victims of war are usually drafted from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groups). Finally, geographical factors can also change their relative significance over time and this is certainly the case in an era of melting poles and of a communication revolution that creates a much more global village in comparison to earlier eras. The four most influential concepts in the context of debates of Eurasia are as follows: (1) Halford Mackinder’s notion of the ‘pivot area’ (1904) and subsequently of the ‘Heartland’ (1919); (2) Eurasia ideas put forward by White Russians during and after the end of the Russian Civil; (3) Karl Haushofer’s vision of the ‘East-Eurasian continental bloc’; and (4) Nicholas J. Spykman’s ‘rimland’ concept of US geopolitical strategy. These four geopolitical accounts are now briefly discussed.

The origin of Mackinder’s thinking is his notion of the post-Columbian age. He suggests that the era of conquest and exploration of the earth based on naval expansion of the European powers came to a close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Further expansion of any particular state must now occur in the context of a zero sum game and in a ‘closed political system’.²⁰ Another major source of Mackinder’s ideas is to present world history as driven by eternal conflict between sea power and land power. Sea power derives from the control of

²⁰ Halford J. Mackinder,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The Geographical Journal*, 1904, 23(4): 421-437 (422).

harbours, strategic strong points and trade routes and by focusing on naval arms races to ‘lock in’ respective power advantages. Land powers are by contrast principally interested in improving the relative efficiency of their productive capabilities by means of state building and efforts to make the population more educated and more productive. In this context, land powers must primarily focus on their internal socio-economic infrastructure and bureaucratic capabilities. From Mackinder’s point of view, the era of railways of his own lifetime was bound to improve the relative strength of land powers vis-à-vis sea powers.

In a highly stylized sketch of world history, Mackinder suggests that the emergence of the Mongol Empire in the 13th and 14th centuries (sometimes referred to as Pax Mongolica) demonstrated the strategic significance of the large land bridge between Asia and Europe. In particular, the steppe lowlands reaching from Mongolia to Hungary, territories of today’s Poland and the Caucasus suggest that highly mobile ‘robbers of the steppe’ (Mackinder’s term) are potentially able to conquer and hold large territories facilitating the construction of Eurasian land empires. According to Mackinder, ‘Russia replaces the Mongol Empire’ and is the state controlling a ‘pivot area’, namely a region centred around a pivot location somewhere to the east of the Ural Mountains.²¹ This region is out of reach of sea powers for geographical reasons, namely it is very difficult to access from the sea and impossible to conquer due to its vast geographical scope.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1904, Mackinder speculates that Russian expansionism might endanger the position of the sea powers,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a German Russian alliance: ‘[O]versetting of the balance of power in favour of the pivot state [i.e. imperial Russia], resulting in its expansion over the marginal lands of Euro-Asia, would permit of the use of vast continental resources for fleet-building, and the empire of the world would then be in sight. This might happen if Germany were to ally herself with Russia’.²² In the same context, Mackinder warns, somehow incoherently, that China might become ‘organized by the Japanese, to overthrow the Russian Empire’ constituting the ‘yellow peril to the world’s freedom just because they would add an oceanic frontage to the resources of the great continent, an advantage as yet denied to the Russian tenant of the pivot region’.²³ The logical problem of

²¹ Ibid., p. 436.

²² Ibid.

²³ Ibid., p. 437, the citation is the final part of the article’s last sentence.

presenting Czarist Russia as *the* major land power of its time while also stating that Russia is only the ‘tenant’ of the ‘pivot region’ is bypassed only by Mackinder’s claim that the ‘freedom of the world’ is represented by the British Empire!

None of this is to deny that Mackinder’s elegant simplification of world history exercised a long-term influence on the thinking of Anglo-American and other policy-makers. In particular, Russia was in 1907 integrated into the alliance of France and Britain (the ‘Triple Entente’) and was motivated by Entente promises of territorial expansion at the expense of Austro-Hungary and the Ottoman Empire to participate in WW 1. French and British diplomats promised Russia annexations in East Anatolia and the control of the Dardanelles Straights.²⁴ Regardless of whether Mackinder had any direct influence on Entente grand strategy or not, one must still highlight that his claims about the ‘pivot’ were certainly wrong at the time of writing. His idea of a pivot somewhere in Siberia vastly overplayed the significance of this then very thinly settled region (the large majority of the population of the Russian Empire and of today’s Russia lives in the western and European part of the country).

In 1919, Mackinder shifted his position in the sense that he now argued that Germany rather than Russia might constitute the major danger for British political dominance in Europe. In line with the Versailles Conference effort to create the *cordon sanitaire* separating Germany and Russia territorially, he now stressed that control of Eastern and Central Europe was the main price in world politics. In order to make his case, Mackinder charged in a subsequently frequently cited statement that ‘[w]ho rules East Europe commands the Heartland; who rules the Heartland commands the World-Island; who rules the World-Island commands the world’.²⁵ To put it differently, Mackinder’s pivot area, now re-named Heartland but still representing essentially Russia, had to be contained by controlling the surrounding regions. In this context, he suggested that the Baltic Sea, Eastern Central Europe, Anatolia, Armenia, Persia, Tibet and Mongolia would hold the highest strategic significance to contain Russia from a geopolitical point of view.²⁶

²⁴ For Entente promises to Czarist Russia, see the 1916 ‘Sykes-Picot Agreement’ (the division of the Middle East by Britain and France) with the attached ‘Sazonov-Paléologue Agreement’ (promising Russia annexations in East Anatolia). Beforehand, the Entente also promised Italy in the 1915 ‘Treaty of London’ the annexation of half of Anatolia, Tirol, Trieste, half of the Adriatic coastline and most of today’s Albania as protectorate.

²⁵ H. J. Mackinder, *Democratic Ideals and Reality. A Study in the Politics of Reconstruction*, London: Constable and Company, 1919, p. 194.

²⁶ *Ibid.*, p. 141. These views were shared by other British imperial strategists such as Lord Milner, Lord Curzon

In fact, Mackinder was briefly after the publication of his 1919 book appointed by the British Foreign Office to assume the position of 'British High Commissioner to South Russia' in order to advise the White Russian military leader Anton I. Denikin in the Russian Civil War. At this time, the military strength of the White Russian forces was rapidly declining and Mackinder spent most of his brief visit at the beginning of 1920 in the Russian harbour city of Novorossiysk. He travelled further into the country for a single week in order to personally discuss the situation with Denikin. Thus, his actual experience of the pivot area was rather limited. After his return to London, he suggested at the end of January 1920 to the British Cabinet Office that it should encourage an alliance between Poland, Romania and Georgia and should extend limited support to all anti-Bolshevist states from Finland to the Caucasus. He further suggested that independent White Russian, Ukrainian and South Russian states should be created in cooperation with White Russian forces. This plan would have allowed a British naval presence in the Black and the Caspian Seas, denying Bolshevik Russia access to the former. His design of potential new borders met with the rejection of the Cabinet which was at this time not willing to engage in further warfare or efforts at state-making.²⁷ Retiring from active politics after this rebuttal, Mackinder spent the rest of his life continuing to stress the strategic significance of containing the pivot area and Heartland.

Turning next to the White Russian vision of Eurasia, one might suggest that their concept was very much the exact opposite of Mackinder's ideas. The White Russians stood in continuity with Great Russian ideas of an expanding land empire based on colonization and Russification of neighbouring peoples. In their view, expanding the pivot area was the very foundation of Russian statehood. They generally opposed the creation of new states on the territory of the former Russian Empire: '[t]he Whites' vision of where a future Russia would stand in the family of nations was so much at odds with the new world order being drafted at Paris by the victorious allies following WW 1 that there was very little place for them in this order. (...) White foreign policy was an epilogue to Imperial Russian foreign policy –

and Winston Churchill, see G. Kearns, *Geopolitics and Empire. The Legacy of Halford Mackind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 203. The term 'world island' refers in Mackinder's terminology jointly to the African, Asian and European continents.

²⁷ B. W. Blouet, 'Sir Halford Mackinder as British High Commissioner to South Russia, 1919-1920', *The Geographical Journal*, 1976, 142(2): 228-236. See also Kearns, *Geopolitics and Empire. The Legacy of Halford Mackinder*, pp. 203-213.

expressing the same concerns and dealing with them in the same manner'.²⁸

Such White vision of Russian culture-based empire was something British, French and other western policy-makers could certainly not agree with. White Russian victory in the Russian Civil War would have meant that demands for fulfilment of Entente promises vis-à-vis the Czar, namely Russian control of the Dardanelles and numerous annexations, would have re-entered the agenda. This would have questioned British naval dominance in the Baltic Sea, the Mediterranean and, by extension, firm control of the Suez Canal passage to Imperial India. France would have lost its newfound influence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In any case, these calculations meant that Britain was only interested to raise the price for Bolshevik victory in the Civil War by means of delivery of weapons to Denikin and other White generals. Once it became clear that the Bolshevik leadership would accept significant territorial losses in order to sustain regime survival and that the cordon sanitaire could be installed without any further Red Russian resistance, the western leaders lost any further political interest in the White Russians.

One might stress that visions of Eurasia did also emerge in a much more limited manner in the Red camp. While Soviet Russia remained nominally committed to the goal of world revolution in the early years of the Soviet state, subsequent pragmatic adjustments such as the covert alliance with Germany in military affairs between 1924 and 1933 produced a certain degree of interest in Eurasian ideas in Bolshevik circles and among the leadership of the Red Army in which many former officers of the Czar continued to serve. These ambivalent notions of Eurasian alliance were in Germany and elsewhere referred to as 'national communism' or 'national Bolshevism'. Sometime it was also suggested that the defeated Germany had been turned into a 'half-colony' and would only be able to re-emerge as an independent state by entering an alliance with the Soviet Union.

Thirdly, the German geopolitical thinker Karl Haushofer was deeply impressed by Mackinder's sophisticated exposition of British imperial strategy. After the defeat of Germany in WW 1, he became convinced that Germany's imperial leadership had been unable to understand the balance of forces in world politics due to their lack of geographical education and inability to think in terms of larger spaces. Germany's single-minded strategic focus on

²⁸ A. Shmelev, *In the Wake of Empire. Anti-Bolshevik Russia in International Affairs, 1917-1920*,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2021, p. 7. See also pp. 70, 90, 140-146.

Central Europe and alliance with weak allies against a stronger coalition suggested to him that any future German strategy to revise the results of the Versailles Treaty had to be based on a broader geopolitical approach. His starting point was that ‘geopolitics should and must become the geographical conscious [*Gewissen*] of the state’.²⁹

According to Haushofer, the German revisionist strategy needed to expand the space of contestation, namely it should focus on forming alliances with the colonized masses of East and South East Asia. From Haushofer’s point of view, this indirect strategy would allow the creation of a defensive bloc forcing the western powers to spread their forces more thinly: ‘The mere creation of a pressure-reflecting unity by the states most damaged by the War, which includes not only the former central powers Germany, Austria, Bulgaria, Turkey, but also Russia, China and Japan, would create much relief for them (...) [producing] a countervailing power against the merciless exploitation of current advantages by the US and the western powers, the main carries of racial prejudice and of the colonial stage of the world, i.e. the main barrier against the actual self-determination of peoples’.³⁰ He further suggested that the strategic goal was to ‘gain freedom of movement’ in utilizing ‘a Eurasian transcontinental [*Überkontinental*] policy not available in any other manner (...) if looked at from East Asia, from the Pacific coastlines, just as much as from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³¹ To put it differently, Haushofer was aware that North East and South East Asia had the potential to become the central arena of global geopolitics and that the potential of anticolonial nationalisms in India, China and elsewhere could be a powerful force to weaken the western colonial powers as Germany’s main opponents.³²

In the same context, the national conservative Haushofer also suggested that the ‘Soviet Federation’ [*Sowjet-Bünde*] (the term is his) might act as an important catalyst of anti-colonial Asian nationalism. The early Soviet policies in support of minority languages and non-Russian cultures were in his eyes a clever way of demonstrating to anticolonial forces elsewhere that they too could become free nations. As founder and main editor of the Journal

²⁹ K. Haushofer, E. Obst, H. Lautensach, O. Maull, *Bausteine zur Geopolitik*, Berlin: Kurt Vowinckel Verlag, 1928, p. 28.

³⁰ K. Haushofer, ‘Der Ost-Eurasiatische Zukunftsblock’, *Zeitschrift für Geopolitik*, 1925, 2(2): p. 86.

³¹ Ibid., p. 87. The end of the cited sentence is English in the original and refers to Mackinder.

³² F. P. Sempa, ‘Karl Haushofer and the Rise of the Monsoon Countries’, *The Diplomat*, 10 March 2015, <https://thediplomat.com/2015/03/karl-haushofer-and-the-rise-of-the-monsoon-countries/>.

of Geopolitics [*Zeitschrift für Geopolitik*] since 1924, Haushofer did edit the perhaps most realistic source of information in German language about the actual conditions inside of the Soviet Union. The Journal never sugar-coated reality and reported faithfully on the famine of the early 1930s, the putting down of a Georgian nationalist uprising and the factional clashes and purges within the Bolshevik party. At the same time, the actual achievements of the industrial transformation of Russia since 1929 were presented in a well-balanced manner. This objective approach was based on Haushofer's contacts with German military circles, cultivation of exiled Russian authors and by allowing German analysts and businessmen with a track record of travelling in the Soviet Union to report their experiences faithfully.

Haushofer's permanent interest in Soviet affairs was of course informed by his knowledge about this country's role in British geopolitical thinking. He felt that it would be unwise to engage in German-Russian antagonism on the grounds of transient ideological differences. Instead, he wanted to focus on shared interests in weakening the western powers. In addition, Haushofer believed that Japan's rapid economic modernization might act as a role model for other Asian states to follow once they reached the post-colonial stage. He strongly favoured Asian mutual political cooperation of the three potential main powers India, China and Japan. In this context, he became increasingly critical of Japanese colonization in Korea and rejected Japan's attack on China. It must be conceded, however, that Korean questions did not feature highly in his thinking. He considered the old Korean Empire a failed state and was sceptical about the future role of Korean anti-colonial nationalism. In particular, he thought that the Korean peninsula might be doomed to act as a buffer due to its close proximity to three much larger states, namely China, Russia and Japan. Overall, Haushofer deserves credit for being among the first western analysts to have recognized that the political transformation of Asia would bring down western colonialism and transform global geopolitics. He was free from racial prejudices and seriously interested in collaborating with Asians on an equal footing.

Conversely, Haushofer's thinking also had blind spots. While it is possible to consider him an original Eurasian thinker due to his early focus on Asia and the Pacific (as well as the Soviet Union), his strategic framework appeared less convincing in the European context. Specifically, Haushofer spent little effort to explain how Germany should relate to the main neighbouring states of France and Poland (the latter being the state separating Germany from the Eurasian Soviet neighbour). There are many indications that Haushofer believed that Germany should essentially continue to follow a carefully limited *Mitteleuropa* strategy of

aspiring to become the leading geopolitical actor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by means of economic cooperation and by utilizing the presence of German minorities in this region. One could argue that he expected the global alliance with anticolonial nationalisms elsewhere to primarily increase Germany's prowess closer to home.

Haushofer generally preferred to leave ambivalent issues in the air and was hesitant to engage in open political confrontation. His view of the Nazi regime and of Japanese militarism was that he was primarily an analyst rather than an activist and that it was necessary to 'ride the tiger' in order to avoid being mauled by it. In fact, Haushofer's position during the Nazi period was fragile and the claim that he was in charge of a Munich-based Institute of Geopolitics with 1000 employees was an invented story serving in the context of US psychological warfare during WW 2 in order to wrongly present him as Hitler's intellectual guru.³³ In fact, Haushofer never issued any clear-cut statements about what Germany as a state should do from a geopolitical point of view except that he always and unambiguously favoured German-Russian détente. He clearly understood that Hitler's decision to attack the Soviet Union meant that his geopolitical efforts had been in vain and was convinced that Germany was bound to lose the war.

Finally, a fourth classical author worth considering in the Eurasian context is the Dutch-born US-naturalized citizen Nicholas J. Spykman. This scholar must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long-term influences on US geopolitical strategy since WW 2. In particular, Spykman's understanding of global geopolitics combined earlier insights of Mackinder and Haushofer but firmly assumed the US position. For Spykman, the most important areas of the world are coastal zones since they host the largest populations, productive capacities, arable lands, and access to naval and land transportation. He suggested, therefore, that the coastal areas of the world constitute the main prize in world politics. Instead of searching for a centre of power inside of the Russian steppe as in the case of Mackinder's pivot area, he considers the continental coastlines (in his terminology the rimland) as the core concern of US geostrategy.

The US should aspire to control such zones by keeping the rimlands internally divided.

³³ D. T. Murphy, 'Hitler's Geostrategist?: The Myth of Karl Haushofer and the "Institut für Geopolitik"', *The Historian*, 76(1): 1-25 (8, 16-23). See also J. M Dostal, 'Die „Zeitschrift für Geopolitik“ zwischen 1933 und 1944: Vom eurasischen Kontinentalblock zum Zweiten Weltkrieg',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2019, 29(4): 3-46 (5-6).

This way, the appearance of any single Eurasian hegemon or bloc of Eurasian states out of reach of US power as well as any alliance between Eurasian land powers and rimland states should be avoided. Spykman's analytical focus on rimlands suggests, therefore, that he cannot be considered as an Eurasian theorist in any direct manner. Nevertheless, he shared with Mackinder an awareness that the heartland could be contained by control of the rimlands and with Haushofer the focus on the Asia-Pacific as one of the major zones of global contestation.³⁴

Thus, Spykman's emphasis on a truly global US strategy opposed multipolarity. Competing states should not be allowed to aspire to their own zones of influence out of reach of US interference. At the same time, Spykman rejected earlier US strategies such as the much more limited focus on the 'western hemisphere' of the American continent as expressed in the 1823 Monroe Doctrine. He demanded the US to create a truly global network of military bases in order to permanently deploy troops worldwide. Such US military bases should be constructed in a manner that would allow rimlands control from both directions (out of area for amphibious operations and by also occupying central locations inland). In combination with the direct deployment of troops in the rimland zones and enforcement of cooperation from local states, the US would assume the position of global hegemon replacing the Pax Britannica with Pax Americana.³⁵

In today's world, the US bases in Okinawa and Diego Garcia are prominent examples for out of area deployment. These bases allow access to Taiwan, Korea, Japan and the Chinese coastline in the former and to the East African, Arab peninsula, Iranian and Indian Ocean coastal zones in the latter case. Conversely, the US military base in Rammstein, Germany, is the main US base to run military and surveillance operations in the Arab world, North and East Africa and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It is located away from coastlines and in the heart of Western Europe. The largest US military base in Europe is currently being built near the

³⁴ On the significance of Pacific coastal zones, see N. J. Spykman, *America's Strategy in World Politics. The United States and the Balance of Power*,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42, ch. 5. See also comments on the need to balance Germany and Russia by not weakening one country too much at the expense of the other. He further stressed that '[i]t will be a world of power politics in which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demand the preservation of a balance in Europe and Asia', pp. 460-461. The US takeover of British positions after the conclusion of WW 2 and the emergence of the Soviet Union as a future challenger of the US are already taken for granted throughout Spykman's account, which was published at the moment in time when the Axis armies had advanced furthest in Eurasia.

³⁵ N. J. Spykman, *The Geography of the Peace*,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44. This pamphlet, edited posthumously by Spykman's assistant, is superior in its clarity of exposition in comparison to the 1942 monograph.

Romanian harbour city of Constanta, i.e. in the rimlands of Romania, to focus on Russia and other countries in West and Central Asia. To sum up, Spykman's strategic focus on the rimlands conceived during the time of the grand alliance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in WW 2 and his warning that Russia would emerge as future challenger to US hegemony continues to adequately explain US geopolitical behaviour in our contemporary world.

Soviet ideology and the 'Soviet people'

Finally, a brief note on Soviet ideology in the context of Eurasia debates is required. During the early years of post-revolutionary Soviet Russia (1917-1924) and the during the Soviet Union era (1924-1991), this state-empire was de facto Eurasian (and from 1945-1991 the principal actor of an expanded Eurasian alliance reaching further west into Central and Eastern Europe). During the entire period, the country's leaders were nominally committed to communist ideology with a global focus. However, the 'nationalities question' together with the poor economic performance always remained the Achilles heel of the Soviet state. Crucially, Soviet policy-makers failed to follow any consistent policies regarding national questions. Initially, the Soviet Union was committed to the so-called Leninist nationalities policy of running the Soviet Union along lines opposing previous Czarist Empire policies. Instead of Russification of urban elites and slow expansion of a Russian-speaking core to stabilize the periphery of empire, the Leninist nationalities policy promised equal treatment to all cultural, linguistic and religious groups. In Soviet Russia and the early Soviet Union, the Communist party was committed to develop national cultures. The party itself was also run along 'national' lines with regional leaderships drawn from local nationalities and a large share of activities conducted in local languages.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education systems and the development of national literature and national institutions was also pursued.

At the level of deceptive appearances, Joseph Stalin as the 'nationalities expert' of the Bolshevik party remained committed to the Leninist nationalities policy. In practice, however, the party's shift to rapid industrialization in the late 1920s, the subsequent famine and party purges of the years 1936-1938 and at other times displayed features that included the destruction of many cadres from all nationalities, the replacement of earlier generations of national party leaders by new figures and the emergence of another Soviet ideology of amalgamation of peoples and of rejection of 'petty-bourgeois nationalism'. Before, during and

after WW 2, members of many nationalities were deported from their home regions to other parts of the Soviet Union. Their former ‘national rights’ were withdrawn. The very contradiction of first assisting and then repressing national groups had traumatizing effects in many instances and is difficult to explain along purely rational lines. Namely, ‘there is in Stalin’s terror an element of sheer preposterousness which defies explanation’.³⁶ He certainly had carefully studied how the Czars expanded the Russian state territorially. Moreover, he arguably modelled his own efforts to gain access to previously lost and new territories before, during and after WW 2 along geographical lines earlier pursued by the Czars.³⁷ But one must still stress that Stalin was not ideologically committed to either Russian or Eurasian versions of empire. He rather set his own rules.

While some argued that Soviet ideology and the concept of the ‘Soviet people’ simply covered for the reappearance of great Russian nationalism, it must be conceded that Russian nationals suffered just as much from Stalinist purges and repression. In the post-Stalin period, the system underwent considerable liberalization and there were efforts to restore national cultural life while also propagating the parallel concept of the ‘Soviet people’. Some authors have suggested that the Soviet Union might be labelled as ‘the world’s first Affirmative Action Empire’.³⁸ Leaving aside the heavy US-American connotation of this particular political term, one can certainly say that Soviet policy was sometimes following affirmative action in a broad sense while at other times doing the exact opposite, namely targeting certain ethnic and linguistic groups for repression (such as Crimea Tatars, Germans and Koreans during WW 2). At the same time, one must stress the contradictions in propagating the rise of a ‘Soviet people’ while also running affirmative policies for minorities. This worked at cross purposes: ‘The Affirmative Action Empire required a constant practice of ethnic labelling and so inadvertently indoctrinated its population in the belief that ethnicity was an inherent, fundamental, and crucially important characteristic of all individuals’.³⁹

To put it differently, the ideological construct of the ‘Soviet people’ offered different

³⁶ A. Ulam, cited in S. Fitzpatrick, ‘Just like that’, *London Review of Books*, 40(7), 5 April 2018.

³⁷ V. M. Zubok, *A Failed Empire. The Soviet Union in the Cold War from Stalin to Gorbachev*,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7, pp. 36-46.

³⁸ T. Martin, *The Affirmative Action Empire. Nations and Nationalism in the Soviet Union, 1923-1939*,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p. 1.

³⁹ *Ibid.*, p. 449.

ideological investments to different audiences. On the one hand, the notion of the ‘Soviet people’ served the idea of building a ‘socialist empire’ utilizing ‘powerful ideology, nationalism, and social engineering to refashion society and elites’.⁴⁰ But this is only a partial explanation. In fact, Russian nationals were much more than others settled across all regions of the Soviet state. In this context, Soviet ideology allowed them to claim natural belonging to such places in the name of a shared ideology rather than in the name of a particular Russian cultural mission or of Russian nationalism. When the Soviet Union was dissolved in 1991 by Yelzin and other political leaders, ignoring attempts by the last Soviet President Mikhail Gorbachev to run a union-wide referendum on maintaining federal structures (opinion polls at the time suggested that the public was still perceptive of such concepts), the ‘Soviet people’ disappeared overnight leaving instead Russian-speaking minorities in many peripheral parts of the dissolved state.

The feeling of many Russians that they had been turned into outcasts combined with the further collapse in living standards and the rise of a ‘wild east’ robber capitalism produced another round of mixed ideological responses. Soviet values including the idea that ‘nationality’ should not be used in a manner that excluded Russians now coexisted with Eurasian ideas filling the vacuum left by the collapse of Marxist-Leninism as state ideology. One might suggest that many members of post-Soviet society in Russia and elsewhere suffered for good reasons from geopolitical nostalgia.⁴¹ The fact that the empire had been dissolved from within rather than being defeated by the US or other opponents in an open confrontation added to the feeling that Gorbachev had delivered a very poor outcome due to his failure to extract meaningful concessions in exchange for the withdrawal of the Red Army from Eastern Europe.

Russia’s role in Eurasia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Ever since the end of the Soviet Union,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Europe and the global role of Russia have been contested. In fact, Russia as Eurasian country and principal successor state of the Soviet Union remains singled out by the US as a major geopolitical opponent no matter whether the country represents a hostile (communism) or a complimentary ideology (neo-liberal capitalism). The frequently voiced hope of Russian ‘liberals’ (to the

⁴⁰ V. M. Zubok, op. cit, p. 61.

⁴¹ For an exceptionally insightful literary account of Soviet nostalgia, see Svetlana Alexievich, *Secondhand Time: The Last of the Soviets*, New York: Random House, 2016 (first published in Russian in 2013).

extent that they still exist domestically) that the country should become ‘a normal country’ appears in this sense out of reach of Russian policy-makers exactly because of the country’s uniquely Eurasian status. Namely, the rich resource endowment and large space of Russia tends to trigger the geopolitical phantasies of politicians in competing countries and namely of US actors ever since 1945. During the Boris Yelzin years (1991-2000), Russia repeatedly tried to join NATO. Others suggested that Ukraine and Russia should join the alliance together. But the US-led NATO initially only accepted former allies of the Soviet Union in Eastern Europe for membership in 1999. The unwillingness of US policy-makers to accommodate Russia in this context resulted already during the Yeltsin years in a shift in the Russian position increasingly favouring multipolarity and turning to China in order to balance against US concepts of a unipolar world order. In 1999, Yelzin stated that ‘[a] multi-polar world – that is the basis of everything’.⁴² This view resulted in closer Russia-China relations on the economic and military plane. Russia also supported a growing role of China in the post-Soviet space, especially in Central Asia, to gain an ally against US policy in this crucial region.

Western efforts to exclude Russia from a common European security architecture by means of unilateral NATO expansion were bound to trigger a reaction: ‘[T]his gambit was bound to lead sooner or later, as anyone with the least knowledge of Russian history and psychology could have predicted, to a return of the Cold War. Probably this was clear enough to the Western officials and analysts who pushed for NATO’s expansion. (...) They had built their careers on the Cold War. They didn’t want it to end’.⁴³ Under the leadership of Putin (2000-2008), Dmitry Medvedev (2008-2012), and Putin (2012-?), Russia faced increasing pressure from NATO, which now entered the post-Soviet space by allowing the three Baltic countries to join the ranks of the US-led alliance in 2004. While Putin had initially continued to favour closer collaboration with the West and especially with Germany (e.g. the 2001 speech partially delivered in German to the German parliament), he subsequently blamed the US for its course of excluding Russia and for its hegemonic geopolitical designs during the 2007 Munich Security Conference speech signalling that Russia would no longer aspire to détente with the USA.⁴⁴

⁴² B. Yelzin, cited in South China Morning Post, 12 December 1999 and in P. Snow, *China and Russia. Four Centuries of Conflict and Concord*,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23, p. 496.

⁴³ P. Snow, op.cit., p. 491.

⁴⁴ W. W. Putin, ‘Wortprotokoll der Rede Wladimir Putins im Deutschen Bundestag am 25.09.2001’,

In order to explain how the current war relates to competing geopolitical concepts of great powers (the US, Russia and China), one must first turn to the role of Ukraine in western geopolitical concepts. Briefly speaking, efforts to separate Ukraine from Russia serve to exclude Russia from access to Europe. In the concept of US strategist Zbigniew Brzezinski advanced in his 1997 book *The Grand Chessboard*, it is suggested that the US must aspire to become the dominant power in Eurasia: ‘For America [the author refers to the US], the chief geopolitical prize is Eurasia. (...) Now, a non-Eurasian power [i.e. the US] is preeminent in Eurasia – and America’s global primacy is directly dependent on how long and how effectively its preponderance on the Eurasian continent is sustained. (...) In that context, how America “manages” Eurasia is critical. Eurasia is the globe’s largest continent and its geopolitical axial. A power that dominates Eurasia would control two of the world’s three most advanced and economically productive regions. (...) All of the potential political and/or economic challengers to American primacy are Eurasian. Cumulatively, Eurasia’s power overshadows America’s. Fortunately for America, Eurasia is too big to be politically one’.⁴⁵

Brzezinski’s narrative combining visions of US imperial grandeur with paranoia assigned a prominent role to the political future of Ukraine advocating for its political separation from Russia: ‘Without Ukraine, Russia ceases to be a Eurasian Empire’ and ‘the loss of Ukraine was geopolitically pivotal, for it drastically limited Russia’s geostrategic options. Even without the Baltic states and Poland, a Russia that retained control over Ukraine could still seek to be the leader of an assertive Eurasian empire, in which Moscow could dominate the non-Slavs in the South and Southeast of the former Soviet Union. But without Ukraine and its 52 million fellow Slavs, any attempt by Moscow to rebuild the Eurasian empire was likely to leave Russia entangled alone in protracted conflicts with the nationally and religiously aroused non-Slavs’.⁴⁶ Furthermore, Brzezinski stated that ‘three [states] are geopolitically especially important: Azerbaijan, Uzbekistan, and Ukraine’ and clarified subsequently that

https://www.bundestag.de/parlament/geschichte/gastredner/putin/putin_wort-244966; ‘Speech and the Following Discussion at the Munich Conference on Security Policy’, 10 February 2007,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4034>.

⁴⁵ Z.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s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Imperatives*, New York: Basic Books, 1997, pp. 30-31.

⁴⁶ *Ibid.*, pp. 37, 92.

Ukraine is ‘[m]ost important’.⁴⁷

To be sure, Brzezinski’s role characterized by his playful pivoting from one geopolitical position to its very opposite must not be understood as direct exposition of US geopolitics. Rather, Brzezinski rhetorically flip-flopped in later writings invited Russia into a common security structure to deal with ‘current Middle Eastern violence’, further suggesting that a ‘coalition that involves, in varying degrees, also Russia and China’ might be forged.⁴⁸ What cannot be denied, however, is that US policy-makers are interested to utilize Ukraine and other states as tools of forward defence against geopolitical opponents. Moreover, US strategists are certainly keen to avoid any clos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EU countries since this would reduce the role of the US in Eurasian affairs. In order to secure US dominance in Europe and a veto role in Asia, ‘Europe and increasingly also Central Europe must be turned into an American protectorate “whose allied states [i.e. the European Union countries] remind one of vassals and tributaries of a former era”’.⁴⁹

Moreover, EU and NATO countries are expected to exclusively perform in the context of a transatlantic security community led by the US. The core role of a transatlantic Europe is to assist the US in the strategic containment of Russia and in serving in US-led ‘out of [NATO] area’ military missions. In turn, Russia should only be allowed to join this security community if it accepts the downscaling of its significance to that of an ordinary European state. Brzezinski suggests that Russia must be incentivized to do so by efforts to create ‘Islamic’ trouble spots in Central Asia producing burdens for Russia. He further argues that Russia should be advised to engage in decentralization by creating European, Siberian and Far Eastern republics. Adding to his geopolitical wish list, Brzezinski also believed that western leaders must isolate the political leadership of Russia in favour of engaging with Russian civil society and NGOs in the hope to identify and educate future generations of leaders.⁵⁰ To conclude, one might suggest

⁴⁷ Ibid., p. 121.

⁴⁸ Z. Brzezinski, ‘Toward a Global Realignment’, *The American Interest*, 17 April 2016, <https://www.the-american-interest.com/2016/04/17/toward-a-global-realignment/>.

⁴⁹ B. Rode, *Das Eurasische Schachbrett. Amerikas neuer Kalter Krieg gegen Rußland*, Tübingen: Hohenrain, 2017, p. 110 [the second part of the quote derives from Brzezinski]. This monograph remains the most comprehensive German-language rebuttal of Brzezinski.

⁵⁰ Ibid., pp. 106–116. For a more recent application of Brzezinski’s concepts, see also RAND Corporation, ‘Overextending and Unbalancing Russia. Assessing the Impact of Cost-Imposing Options’, 24 April 2019, https://www.rand.org/content/dam/rand/pubs/research_briefs/RB10000/RB10014/RAND_RB10014.pdf. This summary relates to a RAND monograph titled *Extending Russia. Competing from Advantageous Grounds* that

that Russia was welcome to join a common US-led security architecture once it had dissolved itself as a unitary state.

German-Russian relations: The Rise and Fall of ‘*Neue Ostpolitik*’

The final section of the paper will now briefly turn to the German-Russian relationship in the Eurasian context. A necessary starting point is to stress that German and Russian state building are historically deeply interrelated. The rise of the Prussian and Russian states produced before WW 1 two *de facto* land empires. From the point of view of authors such as Mackinder, the German and Russian Empires both belonged to the category of ‘empires of the steppe’. This view was appropriate in the sense that Germany’s core state of Prussia belonged in its eastern sections to the large Eurasian land bridge that extends all the way through to Mongolia. Thus, the state of Prussia belonged to Eurasia. At the same time, one must stress that the two states Prussia and Russia failed in their historical efforts to defeat Polish nationalism. The question how Poland could possibly be integrated into an alliance system of one or both states was open ever since the Polish state was reconstituted after WW 1. After 1945, the Law 46, Article 1 of the Allied Control Council of 25 February 1947 stating that the ‘Prussian State (...) is abolished’ weakened Germany’s Eurasian features. Nevertheless, one could argue that the alliance of East Germany (the GDR) and Poland with the Soviet Union during the era of the Cold War still had features of a Eurasian alliance. The GDR could also be understood as the successor state of Prussia and East German policy-makers did in fact increasingly recognize this issue when searching for new ideological resourc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80s.

Rather than to discuss the long histor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ermany/Prussia and Russia/the Soviet Union, the remainder of this section will focus on the ‘new eastern policy’ that was advanced by the social democratic German chancellor Willy Brandt (in office between 1969 and 1974) and his state secretary, close assistant and major strategist Egon Bahr. This new policy concerned shifts in the West German-Soviet Union, West German-Polish, West German-Czech and intra-German relations during the Cold War. The concluding sections will then examine subsequent stages, namely how German unification,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the post-Cold War period and the war in Ukraine affected the German-Russian relations until the current time.

was published on the same day.

To begin with, the essential paradigm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West Germany and the Soviet Union was the dual concept of ‘change through trade’ and ‘change by rapprochement’ [*Wandel durch Annäherung*], the latter a formula first advanced by Bahr in 1963. The second major ingredient was the selection of appropriate personnel to advance this agenda, namely the ability to coordinate effectively between principals (state leaders in the US, Soviet Union and West Germany) and trusted intermediaries that held enough delegated authority to engage in serious negotiations. Last but not least, these exchanges depended on mutual trust building over longer periods of time. The way to do so was the ‘policy of small steps’ (another Bahr phrase), namely to establish a small relatively stable group that would be able to deal with all questions as they arose.

Early seeds of what subsequently became the ‘new eastern policy’ first developed in the context of the ‘Berlin Crisis’ of 1961. This crisis concerned the future status of West Berlin at the time of the construction of the Berlin Wall. The East German authorities closed the border in Berlin with the backing of the Soviet Union resulting in a brief military standoff inside of the city between US and Soviet tanks. Briefly after the solution of the crisis, Bahr started to discuss the issue of fuel deliveries from the east to West Berlin with his eastern contacts. Procuring fuels from the Soviets for West Berlin was considerably cheaper in comparison to flying in resources or trying to deliver them by truck from West Germany to West Berlin. In this context, it was essential to agree any such policies with US handlers of West Berlin affairs. Brandt as the then mayor of West Berlin engaged in efforts to court US President John F. Kennedy while his assistant Bahr developed a long-standing ‘friendship’ with Henry Kissinger who later became National Security Advisor of US Presidents Richard Nixon and Gerald Ford and finally US Secretary of State between 1973 and 1975.

After the West German federal election of 1966, Brandt became foreign minister and after the 1969 election he became West German chancellor while Bahr became his state secretary of the chancellery. The primary goal of Brandt was now to substantially improve the relationship with the Soviet Union in order to increase West German freedom of action. In this context, a West German policy package of mutually complementary policy initiatives was put forward. This include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West Germany and the Soviet Union, mutual recognition of West and East Germany, but stopping short of considering this as the relationship between fully independent states, and the recognition of the post-WW 2 western borders of Poland and Czechoslovakia. The third point meant that West Germany would no

longer demand that the former eastern parts of the German Empire that had been ethnically cleansed of Germans at the end of WW 2 (or the Sudetenland) should be restored to a future unified German state. Recognizing the new western borders of Poland meant in turn that the Soviet policy of westward transition of Polish state borders, which had allowed the Soviet Union to regain the territories that were lost to Poland after the end of WW 1, was also recognized.

Brandt's policies and concessions resulted in a series of treaties signed by him as West German chancellor, namely the Moscow Treaty with the Soviet Union, the Warsaw Treaty with Poland (both in 1970), the Prague Treaty with Czechoslovakia (in 1973) and two treaties with East Germany, the more important one being the 1972 Basic Treaty normalizing relations in the sense that both states exchanged permanent representatives (the term ambassador was avoided). The two German states jointly joined the UN in 1973 and West Germany abandoned its former policy to break off relations with any state recognizing East Germany. The Soviet diplomat Valentin Falin, who had been involved in the preparation of the Moscow Treaty, was in 1971 appointed as new ambassador of the Soviet Union to West Germany while the 'friendship' between Bahr and Kissinger completed mutual channels of communication.

The reason for the various parties to successfully engage each other (namely West Germany and the two super powers, less so Poland and East Germany) was not that any clear agenda had previously been agreed. Perhaps the 'crisis as opportunity' motive is most appropriate to explain the numerous outcomes. On the one hand, Soviet authority in Central Europe was in crisis after Soviet tanks had put down the 1968 Prague Spring that many observers had considered the perhaps final opportunity to reform authoritarian state socialism. On the other hand, US foreign policy was focusing on the Vietnam War and efforts to appeal to Mao's China to isolate the Soviet Union. Kissinger believed in diplomatic linkages and dealing with all sides in a quid pro quo manner. This did not mean, however, that he was hesitant to put pressure on the Soviet side. The former Soviet ambassador and analyst of the foreign policy of both Cold War superpowers Falin quotes Kissinger as follows: 'Under the cover [*Deckmanteil*] of détente [*Entspannung*], we pushed forward our policy consisting of efforts to reduce the influence of the Soviet Union in the Middle East and, if possible, would totally crush them' [*ausschalten*].⁵¹ In summary, the question of who was fooling whom in the

⁵¹ Kissinger, cited in V. M. Falin, *Politische Erinnerungen*, Munich: Droemer Knauer, 1993, p. 259.

context of détente might never be fully solved.

On the economic plane, West German business with the Soviet Union rapidly took off starting prominently with the delivery of West German technology for the construction of gas pipelines in the Soviet Union, Poland and East Germany in 1970 [*Erdgas-Röhren-Geschäft*]. From the Soviet point of view, economic cooperation helped to prop up the Soviet economy. After all, the Soviet Union was already used to utilize oil and gas deliveries as tool to support its geopolitical allies – except that these countries were not able to pay for such deliveries in hard currency. Another significant development was Brandt's visit to Poland when signing the Warsaw Treaty. He offered apologies for German war crimes and, as a member of the SPD and political exile from Nazi Germany, was a credible person to do so vis-à-vis the Polish public. This left the crucial intra-German relationship and the East German-Soviet relationship as main variables in influencing the prospects of West Germany's new eastern policy. The intra-German relationship will not be discussed any further here because it lacks Eurasian dimensions. It is sufficient to highlight that the discovery of a GDR spy in Brandt's office resulted in 1974 in his unexpected resignation as chancellor suddenly ending the agenda of new eastern policy. As for East Germany's relationship with the Soviet Union, the GDR leader Erich Honecker knew that Soviet energy (and sometimes grain) deliveries allowed East Germany to sell some of these supplies to the west to procure western technology and consumer goods in exchange while facilitating higher standards of living in the GDR in comparison to Soviet living standards.

From the East German point of view, therefore, relations to West Germany and the Soviet Union were both critical and needed to be balanced in a manner that best served the GDR. The relationship between Honecker and the Soviet party and state leader Leonid Brezhnev during their personal meetings followed a pattern of mutual flattery punctuated by hard bargaining about special economic favours of the Soviet Union for the GDR as frontline state of the Soviet-led military alliance. There is evidence that Brezhnev enjoyed such bargaining and he playfully suggested that the GDR should not get too deep into debt with western creditors. Honecker highlighted in turn that only Soviet grain deliveries could help to avoid GDR grain purchases in Canada, which triggered Brezhnev's counter question how the GDR as a small country was ever able to get through the large quantity of Soviet oil deliveries year after year. In short, the Soviet Union was concerned that East Germany might start to display too much autonomy in dealing with the other German state while retaining at the same

time an interest to spoil the GDR as the teacher's pet of the state socialist camp.⁵² The relationship became much less pleasant, however, once the Soviet leader was forced to break it to Honecker in 1981 via an intermediary that Soviet oil deliveries would have to be cut substantially by 2 million tons a year.⁵³ Such cuts were in turn due to the general deterioration of the Soviet economy and the war in Afghanistan. The decline of the state socialist camp continued due to the military emergency rule in Poland and the decline in the price of energy resources further undermined the Soviet economy and the ability of the country to distribute resources to allies such as the GDR. In turn, this undermined the internal stability of the GDR.

At the end of the 1980s, the deep economic crisis in the Soviet Union and collapse of support for state socialism in the GDR and the other Soviet-aligned states in Eastern Europe meant that the Christian Democrat (CDU) Chancellor Helmut Kohl was suddenly placed in the position to emerge as chancellor of German unification. Kohl had a good sense of political timing by improving the relationship with Gorbachev at a moment in time when the unfortunate Soviet leader was running out of friends in other quarters including at home. His second asset was a record of good relations with the then US President George Bush. This allowed him in the context of bilateral dealings with Soviet and US leaders to sideline opposition from French and British leaders against reunification. From a geopolitical point of view, Germany essentially united at the expense of the Soviet (and soon only Russian) position. The feeling that a miracle had occurred and the fact that Gorbachev's actions (and inaction) could not be explained along the lines of exist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German optimism during this period appeared to suggest that the country was now surrounded by friends and that the end of history of power competition had arrived.

In the same context, some West German political scientists liked to think that the unified Germany would regain its status as a sovereign country. They failed to realize, however, that the one-sided 1994 withdrawal of what had become the Russian rather than the Soviet military from East Germany left West Germany firmly under the US military umbrella. Moreover, Germany had to abandon its own currency, which subsequently further limited its

⁵² See, e.g., K. Wiegrefe, 'Honecker and Breznev auf der Krim. Eine Aufzeichnung über das Treffen vom 19. August 1976', *Vierteljahreshefte für Zeitgeschichte*, 1993, 41(4): 589-619.

⁵³ A. Schötzel, "'Es war ein Schwindel sondergleichen". Gespräch mit Bruno Mahlow. Über die Zerstörung der Sowjetunion, deren Ursachen und die Frage, warum sich Moskau von der NATO täuschen ließ', *junge welt*, 16 May 2015.

geopolitical autonomy. The question during this period was implicitly whether or not the unified Germany and Russia could aspire to ever closer relations delivering ‘Eurasian alliance’. Some euphoric observers suggested that US unilateralism would no longer be viable due to increasing regionalisation of world affairs. The expected future economic dynamism of Germany, Japan and of numerous other middle powers vis-à-vis the US was thought to produce a post-Cold War order of ‘global politics [that] will be polycentric in structure, and plural in substance’.⁵⁴ However, the euphoria did not last long. On the one hand, German policy-makers quickly had their hands full with efforts to transform the East German economy in a manner that would deliver the promised higher living standards along West German lines. Mass unemployment in East Germany following the closure of the state-socialist enterprise and the subsequent demographic decline of the population demonstrated that West Germany was already seriously challenged to deal with 16 million East Germans let alone designated to assist Russian economic reform on a much larger scale. In parallel, Russia as a political actor further disintegrated during the Yelzin years.

All over Eastern Europe and within Russia, the transformation from state socialism to capitalism turned out to trigger substantial decline in life expectancies, demographic decline and social disintegration. The decade of economic transition during the 1990s proved highly disappointing across the former Eastern bloc and it was only in the new century that societies picked up economically. One might suggest that the German mass public and politicians across the spectrum still felt an obligation to be grateful to Russian leaders during this period. But Yelzin’s Russia appeared to be no longer politically promising and relations therefore stayed at the level of economic cooperation. Briefly before the end of the Kohl era, work on a gas pipeline from Russia to Germany passing through the Baltic Sea was started in 1997. This particular route meant that gas transit countries such as Ukraine and Poland would no longer be directly involved with the German-Russian energy partnership. From a geopolitical point of view, this meant closer cooperation.

During the years of Schröder’s chancellorship (1998-2005), Germany and Russia further expanded their cooperation in the energy sector. Putin and Schröder grew personally close and Schröder subsequently joined the supervisory board of Gazprom, the principal

⁵⁴ P. J. Katzenstein, ‘A World of Regions: America, Europe, and East Asia’,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1993, 1(1): 65-82 (p. 82).

Russian energy company involved in the Nord Stream project. At this time, German-Russian relations appeared to be good. Both of the then major political parties, SPD and CDU, included some Russia-focused politicians and lobbies. In the case of the SPD, many of the involved politicians were focused on potential economic benefits for their home regions rather than German-Russian relations as such. In the CDU, the relevant point men were relics from the Kohl era such as his former close assistant Horst Teltschik who later became the head of the Munich Security Conference. Overall, both German parties followed a business approach and efforts at political cultivation, cultural exchanges and education of a successor generation were lacking. Once the CDU member Angela Merkel entered the chancellery and stayed there (2005-2021), results of earlier rounds of business materialized, namely two pipelines were opened in 2011 and 2012, while Merkel suggested that [t]he purchasing countries and Russia are profiting in equal measures'.⁵⁵

On the surface, Merkel continued to run German politics as usual, namely submitting to the US in words in the hope that German economic interests would be left alone by the transatlantic 'partner'. What was ignored, however, was that the position of Poland backed up by the US (or the other way round) continued to harden. When the successor projects Nord Stream 2 with two additional pipelines, doubling the capacity of potential Russian gas transfers through the Baltic Sea to approximately 20 per cent of the EU's consumption, entered an advanced stage, the US Senate began to sanction involved German companies in December 2019. Rather than to discuss the issue in a political manner, German politicians including Merkel seemed to hope that keeping their heads down might allow to conclude the project. There were efforts to bypass sanctions by creating a 'foundation' that was supposed to conclude construction of the pipeline while removing liabilities for German corporations. Such cosmetic efforts failed to fool the US 'friends', however.⁵⁶ In parallel, the EU further disintegrated in the sense that one could observe the emergence of a multipolar Europe over divisive issues such as mass migration policies and now also energy security.

Briefly before the Russian attack on Ukraine in February 2022, the then new German

⁵⁵ No stated author, 'Merkel and Medvedev Open Baltic Gas Pipeline', *Der Spiegel*, 8 November 2011, <https://www.spiegel.de/international/europe/controversial-project-launched-merkel-and-medvedev-open-baltic-gas-pipeline-a-796611.html>.

⁵⁶ M. Klingemann, 'CDU-Vorwurf: Schwesig hat zur Klimastiftung nicht die Wahrheit gesagt', *ndr.de*, 6 December 2024, <https://www.ndr.de/nachrichten/mecklenburg-vorpommern/CDU-Vorwurf-Schwesig-hat-zur-Klimastiftung-nicht-die-Wahrheit-gesagt.puaklimastiftung100.html>.

Chancellor Olaf Scholz (2021-2025) attended his first meeting with US President Biden in Washington in which the latter suggested that the event of a Russian invasion would mean that ‘there will be no longer Nord Stream 2. We will bring an end to it’. He subsequently assured an irritated German journalist that ‘I promise you, we will be able to do it’.⁵⁷ After the start of the war, Germany no longer accepted further Russian gas deliveries through the Nord Stream 1 pipelines (the Nord Stream 2 pipeline never opened due to the US sanctions). On 22 September 2022, the four pipelines were sabotaged with explosives whose delivery required the skills of special command soldiers. The German authorities and media have ever since kept a very low profile in dealing with the investigation of the act of sabotage that brought the long-standing German-Russian *direct* energy partnership to a close (the delivery of Russian gas via intermediaries to Germany and other EU countries continues to some extent).

In the larger context, one must stress that Germany has declined economically and in terms of its relative significance as a country on the global scale in the 21st century. After the relative disappointment of German unification and the many years of Merkel stagnation characterised by the decline of the country’s infrastructure and failure to become an industry leader in growing economic sectors, Germany no longer represents an attractive socio-economic model. The earlier appeal of Germany’s ‘social market economy’ is long forgotten. Instead, the country increasingly constitutes a poor man’s version of the US with a comparable level of socio-economic disintegration, poor public education and pessimism about future prospects. Germany continues to lecture the world on various them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gender equality, but no longer has the capacity to lead in sectors that will have a global impact on future developments (Germany’s ‘green’ technologies fail to be competitive in comparison to Chinese and US manufacturers). In this context, visions of Eurasian alliance with Russia (or China) appear to be no longer relevant because the country is simply no longer a major actor that would be courted by others.

Crucially, the war in Ukraine and Russia represents at least in the eyes of the incoming second Trump administration primarily a proxy conflict between the US and Russia. Ukraine is welcome to utilize NATO weapons for as long as the country can keep its troops going, but the war is ultimately supposed to be ended in bilateral US-Russia negotiations. Neither Ukraine

⁵⁷ Forbes Breaking News, ‘We will bring an end to it’, 8 February 2022, minute 1:25-1:58, <https://www.youtube.com/watch?v=xIkBivlfV0>.

nor 'Europe' (the internally divided EU countries without Britain) are asked to participate in deal-making. On this, the US and Russia are actually in agreement. The Russian foreign minister Sergey Lavrov dryly remarked in this context: 'I don't know what the Europeans would do at the negotiating table'.⁵⁸ At the same time, the EU countries are given fair warning by the US that they will have to police any future settlement with troops on the ground. This is the perfect recipe to keep the Europeans busy and divided while making them directly face Russia. In this way, US troops are able to avoid any direct contact with Russian troops. Moreover, the rebuilding of what is left of Ukraine (a country that pre-invasion had a history of 20 presidents in 30 years) will also be handed over to the Europeans. In any case, one might suggest that the US achieved geopolitical goals in an impressive manner. Germany as competing industrial economy and some other EU countries face the permanent end of their energy partnership with Russia. Ongoing deindustrialization in Germany means that reindustrialization in the US, a country with significantly lower energy prices, becomes more feasible.⁵⁹ Moreover, deep divisions between Russia and European countries improve the relative influence of the US as an out-of-area balancer in line with the geopolitical ideas of Mackinder, Spykman and Brzezinski. These deep divisions help to check the rise of Eurasian competitors.

One cannot end without briefly looking at China's geopolitical strategy. At present, China and Russia form a geopolitical alliance that comes close to Haushofer's vision of an 'Eurasian bloc'. The rejection of Russia by the US and many western countries incentivized its policy-makers to turn east and to link up with China in an increasingly asymmetric partnership. Namely, the empire of the centre grows in significance in comparison to the pivot area. Just as in the case of the US, China is now a significant land and sea power at the same time. The country's industrial prowess is bound to also strengthen its geopolitical position and military strength. The concept of China's 'One Road, One Belt' (OBOR) of economic cooperation, combined with efforts to improve China's connectivity by adding new and expanding existing transportation corridors on land and sea and by expanding China's as of yet fairly limited system of maritime bases, point to a genuinely global strategy. Most of

⁵⁸ Tagesschau liveblog, 'Lavrov zweifelt Europas Beitrag zu Friedensgesprächen an', 17 February 2025, <https://www.tagesschau.de/newsticker/liveblog-ukraine-montag-468.html>.

⁵⁹ T. Kuczynski, *Letzte Geschichten aus dem Lunapark. Historisch-kritische Kolumnen zur Ökonomie der Gegenwart*, Köln: PapyRossa, p. 163.

China's OBOR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takes place in Eurasia with a notable focus o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mong other regions. In addition to Eurasia, OBOR activities also target the African continent and Central and Latin America, thereby challenging the Monroe Doctrine and other US geopolitical concepts. In other words, they are de facto global rather than Eurasian in scope mirroring Sypkman's concerns from the Chinese point of view.

As for the future of geopolitics, the lesson is that no middle or small power in Eurasia should follow any one-sided geopolitical approach. The idea to rely on any single great power to back up one's own security means in practice that middle and small powers can be easily forced to pick sides in (trade) wars. Permanent association with a single great power does not guarantee participation in a club of winners. Every country should therefore be keen to maintain a balanced portfolio (for lack of a better term).⁶⁰ It is here that the German policy is found lacking. The policy of Germany's outgoing government of social democrats (SPD), liberals (FDP) and Green party has been ever since February 2022 to deliver weapons to Ukraine and to engage in a war of words with Russia.

One might argue, however, that Germany's culture of political remembrance focusing strongly on the Holocaust means that the parallel death of 27 million Slavs in the context of the Nazi German attack on the Soviet Union in 1941 is no longer remembered adequately. Clearly, Germany should not engage in any military intervention or delivery of weapons to Ukraine (or Russia) for reasons of its historical association with devastating many regions in both countries. At the grassroots level, many Russians, Ukrainians and Germans were reconciled with each other at the end of the Cold War. Intervening in Ukraine (even if this would be termed 'peace keeping' in the event of a ceasefire at some future point) is not an appropriate task for Germany and is bound to open a new cycle of mutual conflicts in Eurasia. Thus, while the vision of future European or Eurasian integration remains alive at the level of political rhetoric, practical policy-making must strive to apply such concepts in an integrative rather than divisive manner. Not to lecture others about the correct interpretation of history would be a good starting point.

⁶⁰ J.-y. Shim, 'Korean Peninsula without USFK: South Korea must reckon with Trump's foreign policy' [interview with Moon Chung-in], *Korea Times*, 12 February 2025.

냉전 전후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개념과 독일-러시아 관계

요르그 도스탈 (서울대학교 교수)

이 논문은 먼저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현대 지정학의 변화를 개괄한다. 이후, 냉전 시기와 이후 정책 결정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고전적 지정학 이론에 대한 이해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네 가지 주요 지정학적 관점을 강조한다.

(1) 험퍼드 매킨더의 유라시아 중심지(pivot) 이론

(2)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의 제국 개념

(3) 칼 하우스호퍼의 '동유라시아 대륙 블록' 개념

(4) 니콜라스 스파이크먼의 해안 지역(rimlands) 통제 전략: 이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 세력이 미국의 세계적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막으려는 접근법

전반적으로 미국의 냉전기 및 이후 전략은 유라시아를 분열 상태로 유지하여 미국이 외부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러시아 및 기타 유라시아 강대국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큰 맥락에서 과거 독일과 러시아 간 협력의 기회와 현재 협력 붕괴를 분석한다. 논문은 독일과 같은 중견국(medium powers)이 미국, 중국, 러시아라는 세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독일의 정책은 고전적 지정학적 사고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과 유라시아의 통합 개념을 고려하기보다, 독일은 미국의 지정학적 목표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다.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미래에 대한 교훈은, 중소국(middle and small powers) 어느 한쪽에 치우친 전략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 하나의 강대국에 의존해 안보를 확보하려는 생각은, 결국 중소국들이 쉽게 (무역) 전쟁에서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강대국과 지속적으로 연합한다고 해서 승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국은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독일의 외교 정책은 부족한 점이 많다. 독일의 사민당(SPD), 자유민주당(FDP), 녹색당으로 구성된 독일 정부는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와 설전을 벌여왔다. 하지만 독일은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군사 개입이나 무기를 제공하면 안 된다. 냉전이 끝난 직후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독일인들은 서로 화해했다. 따라서 향후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개입하는 것은 설령 휴전 이후 '평화 유지'라는 명목이라 해도 적절하지 않으며, 유라시아에서 새로운 갈등을 불러올 것이다.

제2부 러일전쟁 이후 유라시아 지정학 논의

Discussion of Eurasian Geopolitics after the Russo-Japanese War

발표 6

전후 일본 외교에서 미중소 관계의 지정학적 해석: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일소국교정상화, 중일국교정상화 교섭을 중심으로

Geopolitical Interpretation of US-China-Soviet Relations in Postwar Japanese Diplomacy:
Focusing o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Japan-Soviet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and China-Japan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송병권 Song Byeong-Kwon(상지대학교 교수)

전후 일본 외교에서 미중소 관계의 지정학적 해석: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일소국교정상화, 중일국교정상화 교섭을 중심으로

송병권 (상지대학교 교수)

- I. 머리말
- II.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중소 문제
- III. 일소국교정상화 교섭과 미소 문제
- IV. 중일국교정상화 교섭과 미중 문제
- V. 맺음말-G2시대 중국요인의 등장과 인도태평양전략?

I. 머리말

지정학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국가권력의 기초와 국가 상호작용의 성격을 이해하고자, 지구적 공간 현상의 맥락에서 국가를 연구하는 것이라 정의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정학을 개념화하고 분류하는 방식도 역시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크게 사회문화론적 입장에서 나온 유기체국가론(the organic state theory)과 지리적 요소와 그에 영향을 받은 정채론이란 입장에 선 지리적 전략론(geostrategy theory)으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²²⁵⁾

유기체국가론에 입각한 지정학은 주로 독일지정학의 흐름이라 할 수 있는데, 생활공간의 개념을 처음 개념화한 라첼(Friedrich Ratzel)과 이를 계승하여 유기체(lifform, Lebensform, Organism)이란 개념의 논리적 귀결로 경제적 자족성 (Autarkie)을 제시한 쉘렌(Rudolf Kjellén), 그리고 ‘범지역(Pan-Region)’ 개념과 대륙블록의 정립을 통한 세계질서(Weltordnung)를 구상한 하우스호퍼(Karl Haushofer) 등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주로 생활공간, 민족, 민족의 성장에 따른 생활공간 확대를 위한 투쟁, 경제적 자족성 등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리적 결정론은 기본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각축을 전제로, 주로 영미적 지정학이라 할 수 있는데,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각축을 다룬 머한(Alfred Thayer Mahan), 심장지대론을 제시한 매킨더(Halford J. MacKinder), 여기에 림랜드(Rimland)의 중요성을 강조한 스파이크만(Nicolas J. Spykman)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리적 전략론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초승달지역, 림랜드, 지역주의, 세력균형과 완충지대론 등은 물론 미국의 봉쇄정책이란 개념도 포함될 수 있다.²²⁶⁾

키신저는 닉슨 시기의 외교를 다루면서, 지정학으로서의 대외정책(Foreign Policy as Geopolitics)이라 이름 붙였다.²²⁷⁾ 유럽과 아시아를 합성한 유라시아가 가리키는 구체적인 지리적 권역은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공간이 상상될 수 있다. 유라시아 국제정치라는 맥락에서 보면, 구소련지역에 해당하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이 대상으로 설정되기도 하지만, 동아시아 국제관계라는 맥락에서 보면 소련과 중국 지역에 주된 관심이 모이게 된다. 이 글에서도 일본의 유라시아 지정학 논의의 주된 대상을 소련과 중국으로 설정하였고, 일본의 지정

225) Martin Glassner, Cuck Fahrer, 2004, *Political Geography*, 3rd edition, Hoboken, N.J.: John Wiley and Sons, p. 270.

226) 송병권, 2023, 「전시기 일본의 ‘대동아지정학’적 지열질서 인식의 구조와 성격」, 『일본문화연구』 87, 184-187쪽.

227) Henry A. Kissinger, 1994, *Diplomacy*, New York: Simon & Schuster, pp. 703-732.

학적 인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규정성을 가진 미국을 포함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9세기 이래 지정학적 공간으로서의 동아시아 지역은 소련/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일본이 상호 인접 공간에서 패권을 다투는 지역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란 강대국 간의 패권 사이클이 작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를 거치면서, 동아시아 지역은 미국의 이해 관계를 포괄하는 지역이기도 했다.

한편, 지정학적 거리라는 측면에서, 소련/러시아, 중국을 바라보는 인식은 차별성을 보인다 할 수 있다. 유럽에 중심을 둔 소련/러시아는 구미에서 바라보면 위협과 불신의 대상이 되었으나, 동아시아에서 바라보면 온건하거나 자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편, 아시아에 자리 잡은 중국을 동아시아에서 바라보면 팽창적이고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유럽에서는 오히려 아시아 진출의 기회로서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도모하려는 인식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²²⁸⁾

근대 이후 일본에게도 대륙세력인 제정 러시아/소련과의 전쟁, 중국과의 패권 경쟁은, 결국 제2차 세계대전까지 전쟁으로 이어졌고, 해양세력인 미국과의 전쟁까지 도발하였으며, 결국 공교롭게도 미·중·소가 모두 속한 연합국과의 전쟁에서 패전하면서 전후 외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냉전의 한 축인 소련과 중국에 대하여 또다른 한축인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보면, 오후츠크해에서 동해,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연안선은 양날의 칼 역할을 했고, 일본은 한국과 더불어 대륙세력의 해양 진출을 막는 제1선의 방어벽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²²⁹⁾ 전후 일본의 외교는 미국에 협조하며 이익을 얻는 한편 자주적 행동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 속에서 ‘냉전의 수익자’라는 이미지로 해석되어 왔다.²³⁰⁾ 이 글에서는 전후 일본의 외교를 크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일소국교정상화 교섭, 중일국교정상화 교섭이라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여기에 지정학적 해석을 덧붙여 보고자 한다.

II.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중소 문제

제2차 대전 중에 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연합국이 내놓은 각종 헌장과 선언, 협정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이상주의·민주주의적 발상으로 ‘대서양헌장의 원리’이다. 강대국 이든 약소국이든, 승전국이든 패전국이든 평등하게 대응하여, 양쪽 모두에게 구속성을 부여한다. 대서양헌장이나 연합국 공동선언에서는 ‘영토 불확대’와 ‘민족자결’을 규정했고, 카이로 선언에서는 ‘영토 불확대’는 표명했으나 ‘민족자결’은 없는 대신, 만주와 타이완, 평후제도의 중국 반환과 한국의 독립이 규정되었다. (2) 현실주의적·권력외교적 발상으로 ‘알타협정의 원리’이다.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우위, 패전국에 대한 승전국의 우위를 규정했다. 알파협정에서 소련에 만주에서의 특권, 남사할린, 쿠릴열도의 영유를 인정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3) 현실주의적·권력외교적 발상에 냉전적 발상이 결합된 것으로, ‘포츠담 선언의 원리’이다. (2)와 마찬가지로 강대국과 승전국의 우위에 더하여, 미국 중심의 서방 권역의 소련 중심의 동방 권역에 대한 우위이다. 포츠담선언에는 ‘영토 불확대’는 표명했으나, ‘민족자결’이 없는 대신에 일본 영토를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에 더해 ‘우리(포츠담선언 참가국: 인용자)가 결정하

228) 岩下明裕, 2020, 「ソ連/ロシアの対中・対日外交から学ぶべき教訓」, 『国際政治』 201, 19쪽.

229) 서승원, 2014, 「21세기 동아시아 지정학과 한일 안보협력-수렴되는 중견국의 외교안보적 선택」, 『일본연구』 15, 391쪽.

230) 岡田美保, 2023, 「日ソ国交回復交渉—「冷戦の受益者日本」の意味をめぐる交錯」, 『国際政治』 209, 33쪽.

는 작은 섬들(such minor islands as we determine)'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남사할린이나 쿠릴열도, 오키나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회피되어 있다.²³¹⁾ 포츠담 선언은 남사할린의 '반환'과 치시마/쿠릴열도의 '인도'를 결정한 얄타협정을 그대로 확인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다.²³²⁾

패전 이후 일본의 과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필요했고, 그 결과로 연합군의 점령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1952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사실 연합국의 주요 구성국이었던 미국과 소련 사이의 세계적 수준의 냉전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의 측면에서는 내전을 동반한 중국과 한반도의 분단이란 흐름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과의 조기 강화가 단행됨으로써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전쟁 당사국이었던 중국 대표권 문제로 중국의 두 개의 정권이 모두 참여할 수 없었고, 소련은 참석은 했으나 서명에는 참여하지 않아, 절반의 강화조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냉전의 한 축인 해양세력 미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점령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독립을 회복하였고, 이후 미국의 영향력에의 안보 의존은 상수가 되었다.

미소 냉전의 격화에 따른 미국의 세계 전략에 따라, 덜레스(John Foster Dulles)는 소련이 대일강화에 참가하는 것이, 대일강화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간주하지 않는 입장이었다. 일본이 공산권에 편입되어, 일본의 잠재적 공업력이 소련과 중국에 가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덜레스가 주도한 '북방영토'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일본에 유리하고, 소련에 불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일본도 소련도 모두 불만이 남는 문제점이 많은 것이 되어 버렸다. 그 것은 소련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가하면 치시마/쿠릴과 남사할린 할양을 인정하고, 강화조약에서 타이완과 평후제도 처리에 관련한 영국과의 의견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북방영토를 거래 재료로 활용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덜레스는 강화조약에서 일본에서 오키나와, 오가사와라 등이 분리되어, 미국의 계속 지배하에 놓이게 되며 나타날 일본인의 반미 감정을 우려하였고, 일본인의 영토에 대한 불만을 소련에 향하게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북방영토'를 가지고, 미소 양국을 이간시켜 일본을 미국에 연결시키려는 거래 재료로 다룬다는 전략은 그 후, 1956년 일소국교정상화 교섭시에 덜레스가 강화조약 제26조에 따른 개입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²³³⁾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로 독립을 달성한 일본에게는 몇 가지 문제가 앞에 놓여있었다. (1) 강화조약 체결로 전쟁상태를 종결한 미국과의 관계에서 오키나와 등 일본의 영토가 여전히 미국의 지배하에 놓여있었다는 의미에서 점령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었다. 오키나와 반환 문제는 이후 일소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소련이 점유한 '북방영토'와 미국이 점령한 '오키나와'라는 문제를 두고 미국이 개입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고, '오키나와 반환' 교섭과정에서 등장한 '타이완 조항'은 중일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중일 간 논쟁의 요인이 되었다.

(2) 마찬가지로 소련과의 관계에서 이른바 '북방영토'가 소련의 점령하에 놓여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국교 단절 상태이므로, 여전히 전쟁 중이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작성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쿠릴/치시마 열도의 범위였다. 1949년 말까지 미국 국무성은 쿠릴/치

231) 梶浦篤, 1997a,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領土問題 (上)一条約の完成から調印まで」, 『外交時報』 1942, 63-64쪽.

232) 梶浦篤, 1997c, 「終戦と冷戦—北方領土占領をめぐる米国の対ソ政策」, 『政治経済史学』 369, 7쪽.

233) 梶浦篤, 1987, 「北方領土をめぐる米国の政策—ダレスによる対日講和条約の形成」, 『国際政治』 85, 112쪽; 梶浦篤, 1997b,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領土問題 (下)一条約の完成から調印まで」, 『外交時報』 1943, 104쪽.

시마열도에는 시코탄과 하보마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타당한 것으로 간주했다. 미일안보조약 체결이 시급했던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쿠릴열도의 범위를 의도적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소련과의 충돌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이다. 일본은 치시마/쿠릴 열도와 남사할린은 일본이 침략으로 탈취한 영토가 아니라 과거의 평화조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일본영토에 편입되었는데, 일본이 항복한 1945년 9월에 “일방적으로 소련에 포함되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²³⁴⁾ 일본과 소련 간의 영토 범위를 애매하게 한 것은 델레스의 전략이었다. 그는 일본과 소련 간에 영토 문제를 남기는 것으로 일본의 시선을 치시마/쿠릴열도의 북쪽에 집중시키고, 소련에 대한 일본의 내셔널리즘 고양을 노렸다. 즉 소련과 일본의 이간이 중요했다.²³⁵⁾

(3) 중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복잡했는데, 중국의 분단으로 인해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할 국가가 둘이나 존재했으며, 모두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중국대표권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중국의 대표권 문제가 발생했다. 영국이 주장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과 미국이 주장한 중화민국(이하 타이완)을 두고 국제적 합의가 조성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수상은 타이완과의 관계 개선과 중국의 존재가 양립하는 방향성을 기대하는 유보적인 입장이었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비준 과정에서 일본의 독립을 인정받기 위해 타이완의 대표권을 승인을 선택하였고, 중국의 정치적 관계는 단절되었다. 하나의 ‘중국’ 정부만을 선택하지 않으려는 일본의 ‘중국’ 정책은 1960년대까지 이어졌다. 냉전이란 제약 속에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일본은 ‘정경분리’라는 개념 구상을 통해, 중국의 정부 차원의 무역협정은 어렵지만 민간무역은 가능하다는 주장을 발전시켰다.²³⁶⁾

타이완은 전시에 연합국의 일원이었으며, 전후 유엔에도 참여하였다. 심지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기도 했다. 중국은 유엔에 비가입 상태였고, 소련 진영에 가담한 채 미국과는 대립하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미일안보조약과 결합되어, 일본에게 있어서 미일동맹은 일종의 상수라고 할 수 있었다. 만약 ‘중국’이 분단되지 않았더라면 일본에 좀 더 요구할 것이 많았겠지만, 타이완도 ‘중국’의 유일대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과 경쟁해야 했으므로, 1952년에 일본에게는 관대한 방식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 타이완이 일본에게 요구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중국’에서의 유일합법정부로서 대표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미일동맹의 기초에서 일본은 ‘정경분리론’을 주장하면서, 정치적으로는 타이완에 ‘중국’ 대표권을 인정하면서도, 중국과는 민간루트를 통한 경제교류를 계속하였다. 사실상 두 개의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1950년 소련과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고 소련의 세력권으로 편입되면서, 일본은 중국과의 정치적 적대관계를 해소하지는 못했다.²³⁷⁾

한편, 남사할린·쿠릴열도와 오키나와에 대한 미국의 더블 스탠더드도 확인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 작성과정에서 델레스가 작성한 「오키나와에 관한 각서」(1951.6.27.)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에서 오키나와에 대해서 일본이 주권을 포기한

234) 김승배, 2020,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동북아시아 비(非)서명국들 : 소련, 한국, 중국과 평화조약의 규범 보전」, 『일본비평』 22, 51-52쪽.

235) Tsuyoshi Hasegawa, 1998, *The Northern Territories Dispute and Russo-Japanese Relations. Vol. 1: Between War and Peace, 1697-1985*,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pp. 93~94 and 105 (김승배, 2020, 앞의 글, 52쪽에서 재인용).

236) 오승희, 2017, 「전후 일본의 인정투쟁과 중일국교정상화:: 하나의 중국론에 대한 인정론적 접근」, 『한국정치학회보』 51(1), 85-89쪽.

237) 이기완, 2010, 「일본의 대중(對中) 인식과 대중(對中) 정책」, 『통일문제연구』 53, 196쪽.

채 신탁통치가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에 무질서한 국제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드러나 있지만, 정작 남사할린·쿠릴열도도 귀속처가 결정되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보다는 국제관계가 무질서 상태에 빠져 일소 관계가 불안정해지는 편이 오히려 미국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발상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초안 작성시에 강화조약 제2조는 포츠담 선언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알타협정의 귀속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²³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중 영토관련 조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제2조 (c) 일본은 쿠릴/치시마 열도 및 일본이 1905년 9월 5일의 포츠머스 조약에 의해 주권을 획득한 사할린의 일부와 그것에 근접한 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제25조 본 조약의 적용상, 연합국이란 일본과 전쟁하고 있던 국가 또는 이전에 제23조에 열거된 국가의 영역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던 국가를 말한다. 다만, 각 경우 해당국이 본 조약에 서명하여, 비준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21조의 규정을 유보하여, 본 조약은 여기에 정의된 연합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도 어떠한 권리나, 권원 또는 이익도 주지 않는다. 아울러 본의 어떠한 권리나 권원 또는 이익도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도 앞에서 정의된 연합국이 아닌 나라를 위해 제한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제26조 일본은 1942년 1월 1일의 연합국 공동선언에 서명하거나, 동의하는 국가, 그리고 일본과 전쟁 상태에 있는 국가 또는 이전에 제23조에 열거한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이루고 있던 국가로, 본 조약에 서명국이 아닌 국가와 본 조약에서 정한 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양국 간 평화조약을 체결할 용의를 가진 것으로 본다. 단, 이러한 일본의 의무는 본 조약이 최초발효 3년후에 만료된다. 일본이 본 조약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국가와 평화적인 해결을 하거나, 전쟁 청구권을 처리할 경우, 그것과 동일한 이익은, 본 조약 당사국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밑줄: 인용자)

이 세 개의 조항에는 소련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없지만, 이 조항에 소련을 넣어 해석하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지정학적 함의를 파악할 수 있다. 제2조 (c)는 일본이 포기할 쿠릴열도, 사할린 등 영토에 대해서는 언급했으나, 이 곳이 실제 점령하고 있는 소련에 알타협정에 따라 귀속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제25조는 연합국을 구성하는 소련이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서명·비준하지 않았으므로, 소련에 어떠한 권리나, 소유권,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제26조에 따르면, 일본이 소련과의 교섭과정에서 다른 조약 당사국 보다 더 나은 조건의 이익을 제공하면, 다른 조약 당사국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즉, 실제 남사할린과 쿠릴열도를 점유하고 있는 소련이 이곳에 대한 주권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대서양 현장의 원리’보다는 현실주의적·권력외교적 발상에 냉전적 발상이 결합된 것으로, ‘포츠담 선언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었다.²³⁹⁾

Ⅲ. 일소국교정상화 교섭과 미소 문제

1950년대 유엔에 가입하지 못한 일본으로서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소련과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관계를 정상화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일본이 국제연합에 가맹하기 위해서는 소련과의 국교 수립이 문제였다. 소련은 평화조약에 쿠릴/치시마 열도와 사할린의 귀속 주체가 없었던 것과 평화조약을 통해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태평양에서 유지되며, 일본을 통

238) 梶浦篤, 1997a, 앞의 글, 66-67쪽.

239) 梶浦篤, 1997b, 앞의 글, 100쪽.

한 미국의 경제적 이익 증가, 그리고 군국주의 국가 일본의 부활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미국은 일본과 소련의 접근에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특히 덜레스는 일본이 소련과 평화조약을 맺음으로써 쿠릴열도나 남사할린이 정식으로 소련에 귀속되는 점을 우려했다. 그리고 반공의 방파제인 일본이 소련에 이어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할 경우, 미국의 봉쇄전략에 미치는 악영향을 경계했다.²⁴⁰⁾ 이를 1951년 8월 22일 상원에서 왓킨스(Arthur Watkins) 상원의원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극명하게 발언하고 있다. 미국에게 사할린과 치시마/쿠릴은 '가장 사할적인 방위지역'이며, 소련에게도 '전략적,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다. 치시마/쿠릴은 아시아 러시아(Asiatic Russia)로 향하는 해양 접근로를 가로막는 성벽이며, 오호츠크해는 '러시아의 호수'이므로, 러시아가 사할린과 치시마/쿠릴을 획득하면, 일본은 '또하나의 베를린'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세계의 안보를 위해서는 남사할린과 치시마/쿠릴을 일본이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⁴¹⁾

미국은 1955년 1월, 일소 국교정상화 교섭에 즈음하여, 소련과는 미국 자신이 국교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반대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단, 일소 간 교섭에서 기존의 강화조약, 미일안보, 일화평화조약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중국 정부와는 국교 교섭회복 뿐만 아니라, 무역확대에도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교섭 개시 이전에 미국은 일소 관계보다는 오히려 중일관계 개선을 우려했던 점도 있었다.²⁴²⁾

요시다 정권이 미국 중심의 '항미일변도' 정책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 했다면,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정권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확보된 독립 이후 외교정책을 대폭 수정하는 기회였다. 하토야마 수상이 소련과의 국교정상화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안으로 남은 아시아 문제의 해결과 전후 세계에서 좀더 폭넓고 독자적인 역할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독립'이란 실제 문제로서 미국으로부터 보다 큰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될 수도 있었으나, 모스크바와의 협조 노력을 일본의 국제적 지위에서의 근본적 변화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국과의 군사동맹에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다.²⁴³⁾

한편, 소련에서는 스탈린(Иосиф Сталин) 사후 흐루쇼프(Никита Хрущёв) 등 소련 지도자들의 평화공존 정책으로의 전환 속에서 대일 접근은 본질적으로는 경제문제가 아닌 미일 동맹의 승인 여부 문제와 일소관계를 중일관계와 독립된 문제로 취급하는 것과 같은 정치 문제였다.²⁴⁴⁾ 소련과의 사이에는 이른바 '북방영토'라는 문제가 가로놓여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하기로 한 치시마/쿠릴열도에 포함 여부를 두고 4개의 섬(과 그 부속 도서)이 문제의 핵심이었다.²⁴⁵⁾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에 대한 방어

240) 김승배, 2020, 앞의 글, 53-54쪽.

241) United Statee of America, 1951, *Congressional Record*, 97, Pt.8, pp. 10524-10526 (<https://www.congress.gov/bound-congressional-record/1951/08/22/senate-section>. 검색일: 2025.2.17.); 梶浦篤, 1997a, 앞의 글, 69쪽. 한편, 8월 24일에는 제너(William Jenner) 상원도 알타협정을 부인하고, 치시마/쿠릴과 남사할린에 대한 소련의 권리 확인을 거부하고, 알래스카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 체인으로 연결하는 열도를 완전히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nited Statee of America, 1951, *Congressional Record*, 97, Pt.8, pp. 10595. (<https://www.congress.gov/bound-congressional-record/1951/08/24/senate-section>., 검색일: 2025.2.17.)

242) 岡田美保, 2023, 앞의 글, 34쪽.

243) D.C. ヘルマン, 1969, 『日本の政治と外交: 日ソ平和交渉の分析』, 中公新書, 46쪽; 김옥렬, 1976, 「전후의 일소관계」, 『성곡논총』 7, 457쪽.

244) 김옥렬, 1976, 위의 글, 456쪽.

245) 소련과의 국교 정상화 교섭에서 문제가 되었던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영토 문제 보다는 소련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확보할 북치시마열도(쿠릴열도)와 사할린으로 일본인의 경제적 진

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했던 소련으로서는 남사할린과 치시마/쿠릴열도의 국제승인을 확보하여, 치시마/쿠릴열도의 범위 문제에도 결론을 내려 경계 획정을 하는 것이 안보상의 주요 과제였던 것이다.²⁴⁶⁾

일본은 강화조약과 미일안보의 틀 속에서 소련과의 국교회복을 도모하며, 유엔 가맹과 소련역류일본인 문제, 영토문제, 어업문제, 통상문제를 현안으로 설정했다. 그중 하보마이와 시코탄의 반환과 역류일본인 석방·송환을 교섭의 중점과제로 설정했다.²⁴⁷⁾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소련은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2개 섬을 반환하는 것으로 평화조약을 맺고, 전략적 가치가 높은 남은 2개 섬과 남사할린에 소련 주권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는 알타협정에서 소련에게 약속된 영토를 일본(나아가 미국까지)이 승인함과 동시에, 강화조약 및 미일안보에 바탕을 둔 미일관계를 소련이 승인하는 것을 도모했던 것이다. 소련의 논리는 쿠나시리, 에토로후를 포함한 쿠릴/치시마 열도에 대한 소련의 주권이 확정되면, 미군함정의 접근 금지라는 안보상의 목적이 일단 달성되는 것이므로, 해협통항 조항의 양보할 용의가 있었다.²⁴⁸⁾

일본도 초기에는 2개 섬의 반환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일본 국내 여론과 집권 자민당에서 4도 반환이란 강경론이 우세해짐으로써, 결국 평화조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는 채, 공동선언의 형식으로 국교를 수립하고, 향후 평화조약 교섭을 진행하기로 약속하였던 것이다. 일본 외교에서 상수로 등장하는 미국도 여기에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었다. 만약 소련이 점령한 북방 4개 섬을 일본에 반환하면, 오키나와 제도를 여전히 점령하고 있었던 미국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소련과 마찬가지로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오키나와 제도 북쪽에 있는 아마미 제도를 조기 반환함으로써 소련을 압박하면서, 법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북방 4개섬이 모두 일본영토라는 정치적 지지를 일본에 보냈다.²⁴⁹⁾ 소련과의 평화조약 체결에는 비록 실패하였으나, 일본은 소련의 승인하에 유엔 가입에는 성공하여, 국제무대에 명실상부하게 등장할 수 있었다.

일소국교정상화교섭의 전체상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일소 간의 경계획정’임과 동시에 ‘미소냉전의 경계획정’이기도 했던 두 가지 경계의 획정이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알타 협정에서 소련에 약속한 남사할린과 치시마/쿠릴 열도를 동아시아 냉전 시기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입각하여, 소련에 확정짓지 않도록 하려는 미국의 선택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해당 지역에서 소련의 주권이 승인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실제로 영토반환을 소련이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일소 간의 교섭이 시작된 것이었다. 미국에게는 남사할린과 치시마/쿠릴 열도를 승인하지 않는 것이, 하보마이·시코탄에 대한 일본의 반환 요구를 지지하는 것보다 중요했던 것이다. 미국은 영토문제 유보를 반드시 반대한 것은 아니었으나, 소련의 의도가 미군함정의 접근 저지를 위한 쿠나시리·에토로후 확보에 있다고 판단하여, 일본의 쿠나시리·에토로후 반환 요구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던 것이다.²⁵⁰⁾

출과 함께 북양어업의 수익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했다(鈴泉, 1956, 「日ソ国交正常化をいそげ」, 『医科器械学雑誌』 26(9), 16쪽).

246) 岡田美保, 2023, 앞의 글, 34쪽.

247) 岡田美保, 2023, 위의 글, 37쪽.

248) 岡田美保, 2023, 위의 글, 37, 39쪽.

249) 梶浦篤, 1994, 「奄美諸島の返還をめぐる米国の対日・対ソ戦略」, 『国際政治』 105, 123-124쪽.

250) 岡田美保, 2020, 「日ソ国交回復交渉の再検討—ソ連による日米安保の「受容」—」, 『国際政治』 200, 45-49쪽.

미일 간에는 소련의 주권승인과 2도 반환을 통한 국경확정의 양립 가능 여부를 두고 갈등 요인이 있었다. 소련에 대한 영토의 양보는 미일관계 특히 오키나와에서의 미국의 입장을 동요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의 미국 의존이 감소하고, 중소 관계가 확대되는 등 일본이 대외행동의 자유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²⁵¹⁾ 국경 확정이 주권 승인에 해당한다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약속한 것 이상을 소련에게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미국의 방침이 관철되었다. 이에 따라 일소 간에는 평화조약 체결이 불가능하고 일본은 하보마이·시코탄 반환도 확보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영토문제 유보를 전제로 일소 교섭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일소 간에는 영토문제를 미뤄둘 것인가, 평화조약으로 갈 것인가를 두고 갈등했다. 소련은 전쟁상태 종결을 선언하고 일본과 국교를 회복함으로써 점령지의 소련 귀속을 확정짓고자 했지만, 일본은 영토 문제를 포함한 평화조약 체결 교섭을 계속한다는 문구를 요구하며, 영토 문제 결착 없이 국교회복을 도모하게 되었다.²⁵²⁾

미국은 당초 미소교섭에 개입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교섭 최종 국면에서 개입 방침으로 전환하였다. 미국이 북방 4개섬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이유는 먼저, 미국은 일소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의 현상변경을 원치 않았고, 미일동맹 유지를 원했다. 일본이

일본이 사회주의 진영으로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중립화’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했고, 일소 관계정상화가 중국 공산정부 승인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²⁵³⁾

다음으로 미국은 치시마/쿠릴 열도와 남사할린의 소련 영유 인정을 저지하기 위해 개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냉전체제 하에서 치시마/쿠릴열도를 소련에 넘겨줄 수 없다는 전략적 판단이 그것이다. 소련이 하보마이·시코탄 반환 제안에 따라 미국은 일소정상화 교섭 과정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했다. 특히, 4도 반환이란 강경자세였던 시게미츠가 소련안 수용으로 기울자, 미국 대응은 급변하며, 이른바 ‘덜레스의 위협’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했다. 덜레스는 치시마와 류큐의 관계성을 중시하며, 만약 일본이 치시마/쿠릴을 소련에 넘겨주면, 미국은 류큐를 계속 보유하겠다는 ‘위협’을 가하며, 일본이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고 부추겼다. 또한 소련의 근거로 삼는 얄타협정은 평화조약에서 고려할 권고사항에 불과하므로 소련의 권리 인정을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소련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부연했다.²⁵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영토 처리 문제에서 치시마/쿠릴과 오키나와를 동렬에 놓는 것이 덜레스의 핵심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치시마/쿠릴은 현상유지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미국이 가장 고려했던 문제는 오키나와 문제와의 관련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원래 덜레스 국무장관은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를 미국의 신탁통치령으로 만들고자 했지만, 소련의 거부권 행사를 우려하여, 명목상은 일본의 ‘잠재적 주권’을 남겨두면서도, 사실상은 미군이 지배하는 군사기지를 유지하려는 입장이었으므로, 오키나와를 애매한 ‘외교의 회색지대’로 남겨두고 있었다. 즉, 오키나와는 미국의 ‘사할적인 안보상의 이익’을 위해 ‘사실상의 주권’은 미국이 가질 필요가 있으므로, 일본의 ‘잠재적 주권’은 거의 이름뿐인 것에 불과했다. ²⁵⁵⁾ 덜레스는 시게미츠 마모루(重光葵) 외무대신에게 소련과의 교섭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치시마/쿠릴 열도가 오키나와 제도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는 점, 즉 외국의 점령하에

251) 岡田美保, 2023, 앞의 글, 36쪽.

252) 岡田美保, 2020, 앞의 글, 48쪽; 岡田美保, 2023, 앞의 글, 44-45쪽.

253) 溝口修平, 2014, 「日ソ国交正常化交渉に対する米国の政策の変化と連続性」, 『国際政治』 176, 111쪽.

254) 溝口修平, 2014, 위의 글, 117쪽.

255) 梶浦篤, 1997b, 앞의 글, 102-103쪽.

있지만 잠재적 주권은 남아있다는 논리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덜레스는 미국이 이미 북오키나와(the northern Ryukyu) 즉 아미미제도(奄美諸島)를 반환했다고 선언했고, 소련에 대해 미국이 북오키나와를 이미 반환한 것처럼, 남치시마 즉 북방4도 반환을 압박하는 모양새였다. 덜레스는 치시마/쿠릴과 남사할린에 대한 소련의 권리 요구는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에 대한 미국의 권리 요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보면서, 소련이 치시마/쿠릴과 남사할린에서 나와야 한다면, 미국 자신이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에서 나와야 할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²⁵⁶⁾

미국의 이러한 개입 정책은 쿠릴/치시마와 남사할린에 대한 소련의 주권승인을 방지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었음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결국 소련이 2도 반환의 대가로 요구한 소련의 주권 승인을 하지 않았다. 비망록(Aide-mémoire)은 ‘덜레스의 위협’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이 사건으로 긴장된 미일관계를 수복하는 역할을 했다. 비망록의 해석에 대해 미국 정책을 법적 입장과 대응으로 구별하여, 일본을 ‘전면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입장을 건드리지 않은 채, 정치적 지지 표명을 한 것으로 보았다.

미국의 선택지는 제한적이었고, 상호 모순관계에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제 유지하면 미일관계가 악화될 수 있고, 미일관계에 유의하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였다. 아시아 냉전 구조를 낳은 미국 자신도, 이 구조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²⁵⁷⁾ 즉, 영토의 반환을 우선하고자 한 일본과, 소련의 주권 승인 회피를 우선하고자 한 미국과의 이해관계가 충돌했던 것이다.²⁵⁸⁾ 한편,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미소 강대국 사이에서 자주외교의 모색과 그 좌절’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일소국 교정상화교섭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의 의향에 반하면서 추구할 수 있는 ‘자주외교’의 한계선을 학습했고, 일본은 더욱 미일동맹 관계 내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외교를 펼치게 되었다.²⁵⁹⁾

소련과의 국교정상화는 해양세력에 속한 일본이 대륙세력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결정적 계기였다.²⁶⁰⁾ 이 시기 일본은 냉전의 다른 한 축인 대륙세력 소련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통해 국제연합 가입 문턱을 넘어서는데 성공하였다. 소련과의 국교 회복은 유엔 가입의 실현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동유럽 공산국가와의 수교로 이어졌다.²⁶¹⁾ 이 시기 소련과 함께 공산 중국이 일본에 대해 국교수립 의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륙세력에 소한 소련과 중국이 해양세력의 영향권 내에 속한 일본을 견인하여, 중립화로 이끌려는 지정학적 고려가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본도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미협상력을 높이면서도, 공산권 지역이 포진한 대륙세력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시장과 자원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국익을 증대하고자 했다.

지정학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대립과 갈등이란 전략지정학적 측면만이 아니라, 자국의

256) 坂元一哉, 1994, 「日ソ国交正常化交渉とアメリカーダレスはなぜ介入したか」, 『国際政治』 105, . 151-152쪽.

257) 溝口修平, 2014, 앞의 글, 123쪽.

258) 岡田美保, 2023, 앞의 글, 38, 43쪽.

259) 溝口修平, 2014, 앞의 글, 123쪽; 泉川泰博, 2006, 「日ソ国交回復交渉をめぐる日本の自主外交模索とアメリカの対日戦略」, 『国際政治』144, 142-143쪽. 그 외, 일소국교정상화가 중일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다고 경계했던 측면을 들 수 있다(이성환 2020, 「일본의 ‘북방4개섬’ 인식과 러일 국경문제의 전개」, 『비교일본학』 49, 121쪽; 坂元一哉, 1994, 앞의 글, 145-146쪽).

260) 嶺山正道, 1956, 「日ソ交渉を中心としてわが外交の方途を論ず」, 『中央公論』 71(11), (10월), 36-45쪽.

261) 김옥렬, 1976, 앞의 글 458쪽.

국력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가용자원의 확장적 확보를 도모하는 유기체국가론적인 속성까지 고려하면서,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은 일소국교정상화 교섭을 통해 두 초강대국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냉전 전략에 중요한 기여요인이 됨으로써, ‘냉전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중요한 선택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²⁶²⁾

IV. 중일국교정상화 교섭과 미중 문제

1970년대 미중 접근과 이에 따른 ‘닉슨 쇼크’는 일본에게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에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미중 대화에서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일본위협론을 제기했다. 아시아에서 철수할 미군을 대신하여 일본의 안보 능력 강화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로 이어지지 않을지 경계하면서, 미일안보체제 강화를 우려했다. 저우언라이의 일본위협론은 ‘타이완 조항’과 관련되어 있기도 했다. 오키나와 반환을 확정한 닉슨-사토 커뮤니케에서 타이완의 평화와 안전 유지가 일본의 안전에 극히 중요하다는 ‘타이완 조항’을 천명하였는데, 미중 데탕트에서 미국의 타이완 방위를 일본이 대신 담당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일본과 타이완 정치·군사적 관계를 단절시키는 과제가 중요했다.²⁶³⁾

중국은 소련을 가장 위협시켰으나, 경제적으로 성장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역시 경계했다. 1972년 중국을 방문한 닉슨(Richard Nixon)은 미일동맹을 통해 미국이 “팽창주의 총동과 역사”를 가진 일본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국의 “외교정책은 일본이 경제적 확장에서 군사적 확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능한 한 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을 미중 공통의 경계 대상으로 보고 관리하겠다는 의미였다. 다만, 이는 역설적으로 미일동맹 해체는 없다는 뜻이었다.²⁶⁴⁾ 이에 대해 키신저는 일본의 재무장은 중일 간의 세력균형 붕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미국의 정책은 “일본이 공격적 정책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는 이른바 ‘병마개론’을 개진하였고, 닉슨도 수뇌회담에서 미국의 영향력으로 일본이 한국 및 타이완에 대해 모험을 걸지 못하도록 저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²⁶⁵⁾ 일본의 팽창주의적 가능성을 억제하는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접근은 유라시아 지정학적 측면에서 소련을 봉쇄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중국 공산정부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일국교정상화보다 타이완의 법적 지위와 미일안보조약의 타이완 적용이 유지될 것인지 여부에 주목하였고, 중국 역시 국교정상화교섭이 미일관계에 좌우될 것을 숙지하고 있었으므로, 중일수교가 미일동맹에 가져올지 모르는 균열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고심했다. 키신저는 도쿄를 거쳐 베이징으로 날아가 저우언라이와 회담(1972.6.19.)하며, 중일국교정상화교섭을 반대하지 않으며, 일본이 핵무장, 해외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반대하고, 전수방위에 국한시킬 것이며, ‘타이완조항’은 물론 ‘한국조항’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다만, 중일수교가 미중수교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에는 우려를 표명했다.²⁶⁶⁾ 당연히 일본 정부도 타이완의 법적 지위와 미일안보조약의 타이완 적용 사안에 대해 대단히 주의를 기울이

262) 岡田美保, 2023, 앞의 글, ???쪽.

263) 손열, 2013, 「미중데탕트와 일본: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 교섭의 국제정치」, 『일본연구논총』 38, 260-261쪽.

264) 김승배, 2020, 앞의 글, 68쪽.

265) 손열, 2013, 앞의 글, 262쪽. 이에 대해서는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등 일부의 연합국이 주장했던 논리이자 미군의 오키나와 지배의 명분 중 하나였던,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키나와를 침략기지로 사용할지도 모르므로, 일본보다는 미국이 관리하는 편이 낫다는 해석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梶浦篤, 1997b, 앞의 글, 103, 105쪽.

266) 손열, 2013, 위의 글, 266쪽.

며 미일 관계와 중일 교섭의 양립을 도모하는 등 미국의 의식하며 교섭을 진행했지만, 키신저는 일본의 군국주의의 부활이라기보다는 닉슨 쇼크에 따른 일본 민족주의 독자노선의 등장에 의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지만, 미일동맹과 미일안보조약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중일국교정상화를 받아들였다.²⁶⁷⁾

중국은 중소대결 구도 속에서 미소모순을 이용하여 미중 관계를 타개하였듯이, 중일 관계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중국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소련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타이완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취했던 것이다. 따라서 중일국교정상화 실현의 최대 과제는 과연 일본이 타이완과 단교를 선언하면서 수교로 나올 수 있는가였다.²⁶⁸⁾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교정상화는 이미 체결한 중화민국과의 평화조약과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놓여있었다. 두 개의 중국 정부 모두 '하나의 중국'론에 입각해 있었으므로, 일본이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게 되면, 중화민국과는 국교를 단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1950년대 전반기, 요시다 정권에서는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두 정부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즉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두 개의 중국' 문제가 제기되었다. 1950년대 중반 하토야마 정권은 '두 개의 중국'을 중화인민공화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으로 설정하였고, 1950년대 후반 키시 노부스케(岸信介) 정권은 '두 개의 중국'을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중국'론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중화민국에 유리한 논리로 설정하였다. 1960년대 전반기,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정권은 중국 측이 제시한 대일 3원칙에 영향을 받아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논리를 채택했으며, 이는 '두 개의 중국'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려는 방향이었다. 일본은 대만이 곧 '대만인의 대만'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대만 독립' 노선에 대해서는 역제적인 입장을 취했다. 1960년대 후반,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정권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환하였고,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구분하여, 이를 '두 개의' 통합체로 보지 않고 각기 다른 상태에서 각각 유지되어야 할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보았다.²⁶⁹⁾

따라서 '타이완 문제'는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교정상화교섭에서 핵심 과제였다. 타이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의 구상을 두 개의 접근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는, 타이완을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주장을 유보한 형태로 중국과의 관계 구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일본은 하토야마 정권부터 사토 정권에 이르기까지 타이완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 공산정부와의 '잠정협정(Modus Vivendi)'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중국의 대일정책의 핵심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일본이 받아들이는 것이었으므로, '잠정협정'을 위한 정부 간 교섭을 거절하고, '민간외교'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타이완 문제를 유보한 채 중국과의 교섭은 결국 실현될 수 없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를 유보한 채 일본과의 교섭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타이완을 '타이완의 정부'로서 자유진영에 머물도록 서방측과의 정책 협조를 추진하여, 타이완의 법적 귀속을 확정시켜, '중화민국'의 법통을 주장하는 타이완이 정책을 전환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다. 1950년 이래 일본 외무성에서 검토했던 '2개의 중국' 즉, '이중대표제'라는 형식의 유엔 동시 가입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요시다 정권에서 추진한 중국 정책에서 '영미협조'는 타이완 문제라는 문맥보다는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는 반공정책에 다름 아니었다. 하토야마 정권 이후에 국제 합의라는 형태로 등장한 타이완 문제의 국제협조

267) 손열, 2013, 위의 글, 268쪽.

268) 손열, 2013, 위의 글, 262쪽.

269) 川島真, 2005, 「1971年以前日本の二中議政」, 國史館主辦 『「台灣1950-60年代의歷史省思-中華民國史專題第八屆討論會(第四場)」(2005.11.24. - 11.25), 12-13쪽.

론은 서방 세계의 주도권을 부탁하는 형태에 가까웠으므로, 일본이 타이완 문제의 해결에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실제 프랑스가 중국 공산정부에 접근하여, 타이완과의 국교 단절과 미국의 중국 공산정부에의 접근, 최종적으로 타이완 국민정부의 유엔 탈퇴(1971년)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추진한 서방세계와의 협조를 통한 타이완 문제의 해결은 최종적으로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²⁷⁰⁾

1960년대 후반부터 일본 정부는 타이완 문제의 법적 측면을 애매한 상태에 남겨두는 '1국 2정부'라는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사토 정권은 타이완 문제의 유보를 전제로, 중국 공산정부와의 정부간 교섭을 시도하면서, 국민정부가 중국의 정통적 지위를 유지한 채로, 실질적으로는 국민정부의 '타이완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일본이 추진한 장기적으로 국민정부의 '타이완화' 정책은 중국 공산정부의 경계심을 더욱 깊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중국의 양안 정부를 모두 승인할 수 있을 국제적 환경도 점차 사라짐에 따라 사토 정권도 중일 교섭의 결과로서 타이완과의 단교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기울어졌고, 최종적으로 타나카 카쿠에이(田中角栄) 정권도 중일국교정상화 교섭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이완과의 단교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1972년의 중일국교정상화로의 과정은 1950년대 이래 중일 쌍방이 외교공간에서 전개한 다양한 구상이 좌절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도달한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부동의의 동의'였다고 할 수 있다.²⁷¹⁾

'이중대표제'를 찬성하면서도, 중국의 유엔 가맹을 지지하지 않는 사토 정권의 일견 모순된 대응의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일본의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유엔 가맹 문제는 외무성 유엔국에게는 현상의 안보리 체제를 개혁하는 기회이면서, 일본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는 것의 대항조치로서,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는 구상이 있었다고 해서 이상하지 않다. 중국이 유엔에 가맹한다면, '일본은 중국에 대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어, 평소부터 주장해 온 아시아가 유동적인 안보리 상임의석을 가져야 한다는 제안에도 전망이 사라지게 될 것'이리고 보았으므로, 중국의 유엔 의석이 회복된다는 것은 일본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중대표제'를 둘러싼 미일 간 합의가 있었지만, 중국의 유엔 가맹을 전망하며, '이중대표제' 결의안의 통과를 목표로 삼은 미 국무성과, 타이완의 유엔 의석 확보를 중시하는 일본 측과의 사이에는, 미묘한 정책 차이가 존재했다. 미일 간의 정책 차이는 타이완의 안보리 의석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났다.²⁷²⁾

안보리 의석 문제를 둘러싼 미일 대립은, 유엔 중국대표권에서 '총회의 지지'와 '타이완의 지지' 중 어느 쪽을 중시할 것인지라는 딜레마를 상징했다. 미국은 '이중대표제'를 통과시켜, 안보리 의석을 중국에 귀속시키는 것은, 유엔 가맹국의 지지를 확보하여, 유엔에서의 타이완의 의석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타이완의 자발적 유엔 탈퇴를 막기 위해서도, 그 체면을 존중하는 전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미일 쌍방은 개별적으로 타이완을 설득하는 공작을 전개했고, 타이완은 '이중대표제'를 서서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마지막까지 안보리 의석에 대해서 양보할 마음이 없었다. 미중 직접 접촉의 최종 단계에 들어간 이후, 닉슨은, 국무성이 요구한 '이중대표제' 전술을 향한 로비활동을 유보시켰다. 닉슨은 키신저가 베이징에서 교섭을 마칠 때까지 최종적인 중국대표권 결정을 지연시켰고, 결국 일본이 미국에 기대했던 총회에서 '중국'대표권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닉슨 방중이 발표되었던 것이다.²⁷³⁾ 미중 접근은 타이완을 궁지에 몰았고, 사토 수상

270) 井上正也, 2010, 『日中国交正常化の政治史』, 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539-541쪽.

271) 井上正也, 2010, 위의 책, 542-544쪽.

272) 井上正也, 2010, 위의 책, 429-430쪽.

은 국민정부가 ‘타이완화’로 방향전환하기를 기대했다. 결국, 유엔 표결에서 ‘역중요사항지정안’이 부결되고, 타이완은 유엔 탈퇴 선언하였다. 결국 유엔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가 종결되면서,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였다.²⁷⁴⁾

한편, 오키나와 반환과 중소 분쟁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정부간 교섭을 시도한 미국 요인도 국교정상화 교섭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오키나와 반환 과정에서 미일안보조약에서 타이완의 안보는 일본의 안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타이완조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신하여 일본이 타이완의 안보에 관여하게 될 가능성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심각하게 우려하였다. 중국은 당시 최대의 위협이었던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고, 일본의 군사적 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미군의 군사적 전개를 용인·묵인하려는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결국, 중일국교정상화를 통해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였지만, 중화민국과의 관계는 공식적인 외교관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교류를 유지했는데, 이번에는 정경분리 원칙이 중화민국과의 관계에 적용된 것이다.²⁷⁵⁾

중일평화우호조약 교섭이 진전되자, 소련은 ‘일본국정부가 제3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때, 소련연방과 일본국과의 사이의 관계 발전에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여하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희망한다’고 공식성명을 발표하며 불만을 표시하였다.²⁷⁶⁾ 일본은 대소정책과 대중정책의 갈등 속에서 가급적 소련을 자극하지 않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반패권 조항을 배제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수용 불가능한 것이었다. 일본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이 조항이 소련을 겨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지만, 중국은 반패권 조항이 평화우호조약의 핵심 내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중국측에서 제3국 조항을 추가하는 일본측안을 수용하면서 중국의 소련 견제 의미가 담긴 반패권 조항과 일본측이 소련을 적대시하지 않으려는 입장이 반영된 제3국 조항 모두 포함된 최종안이 채택되어, 양국의 이중적 해석이 가능한 형태로 공동성명 최종안이 채택되었다.²⁷⁷⁾

1975년 초 중국 공산정부와 소련의 대일외교 공세가 격화되었다. 일본으로서는 중소 양국과 동시에 우호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으므로, 중국 공산정부와의 평화조약 교섭 중에 중국 공산정부가 제안한 소련에 대한 견제를 명확하게 드러내 준 ‘패권주의 반대’ 조항 문제와 함께, 중국 공산정부를 견제할 목적이 농후한 북방영토 문제를 유보한 채 선린우호조약체결 제안과 함께 중일 평화조약 교섭에서 ‘패권주의 반대’ 조항 삽입에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²⁷⁸⁾

일본 외교에서 미일우호관계 유지는 최우선과제였지만, 중일국교정상화는 미일관계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 즉, 미일안보와 양립하는 한에서 허용될 성질의 것이었다. 그럼에도, 최종 단계에서 미국측은 타나카 수상에 견해에 적극적인 찬성 표시를 하지 않았다. 1972년 8월 말 타나카 수상의 방미는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실현한다는 것을 미국에 통고하기 위한 것이었고, 미국의 아시아 외교 코스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했다. 미국은 중국에 접근을 도모

273) 井上正也, 2010, 위의 책, 433-439쪽.

274) 井上正也, 2010, 위의 책, 454-460쪽.

275) 오승희, 2017, 앞의 글, 92쪽.

276) 「日本国政府に対するソ連政府声明」(1975.6.17.), データベース「世界と日本」,
<https://worldjpn.net/>(검색일, 2025.1.30.).

277) 최은봉·오승희, 2012, 「냉전기 중국과 일본의 제한적 접근과 쟁점의 유보: 중일 평화우호조약의 교섭·체결 과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2(4), 71-73쪽.

278) 김옥렬, 1976, 앞의 글, 483-485쪽.

했지만, 미중국교정상화 자체는 서두르지 않았는데, 이는 타이완에 대한 의무, 미국내 반대파 설득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미일수뇌회담에서 중일국교정상화에 관한 미국의 양해를 얻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을 정도로 미일간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²⁷⁹⁾ 미중 회담(1972.2)에 닉슨은 ‘중국·타이완 쌍방이 “중국은 하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의의를 말하지 않음’이라고 하는데 머물렀으므로, 일본(타나카)이 한번이 국교수립을 지향한 것을 인정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²⁸⁰⁾

사후적으로 보면, 닉슨 정권은 중국 접근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중국’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타이완에서 미군 철수에 동의했지만, 동시에 타이완에의 안보 개입을 계속하기 위해, 일본이 대신 진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한다는 것을 중국측에 강조한 결과, 종래대로 일본 및 타이완과의 안보관계를 계속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타이완에 안보 개입에 관해서는, 미일안보조약에 기반하여 미군에 일본 영토를 사용하도록 약속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결과 중일국교정상화 교섭에서 단지 1952년 일화평화조약의 합법성을 중국정부측에 인정시켰을 뿐, 타이완과의 관계는 단교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²⁸¹⁾

V. 맺음말-G2시대 중국요인의 등장과 인도태평양전략?

해양국가 일본의 대륙으로의 욕망은 대륙정책으로 나타났고, 해양으로의 욕망은 대동아공영권으로 나타났다. 패전 이후 일본은 전후 냉전의 흐름 속에서, 대륙세력 소련 및 중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 ‘냉전의 수익자’로서, 역외 패권국 미국의 역내 서브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나갔다. 미국이 주도하는 봉쇄정책의 핵심 대상은 소련이었지만, 세계적 수준에서 냉전의 종결과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 속에서, 1990년이 이후 대륙세력 소련에 맞선 림랜드에 속하는 중국과 해양세력 일본, 그리고 미국이란 구도는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을 만들어 냈다. 미중 대결 추세가 가시화되면서, 일본은 대중 정책에서 ‘경쟁-협력’ 입장이 ‘경쟁’으로 기울고, 군사안보 정책에서 미국과의 ‘연대’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다.²⁸²⁾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전은, 구소련이 해체되고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으로 국가 발전의 중심이 경제발전에서 있는 동안에는 미국의 주도하는 국제질서가 형성되었는데, 러시아에 푸틴(Владимир Путин)의 강한 정부가 형성되고 중국도 개혁·개방의 성과로 군사력을 포함한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그 영향력이 미국의 기존체제를 위협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²⁸³⁾ 일본이 미·일 동맹의 재편에 적극적인 배경에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대 들어 미·중·일 사이의 경쟁 구도가 선명해지면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미·일 간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 역할 확대를 희망하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아베 정권의 ‘적극적 평화주의’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²⁸⁴⁾

279) 林金荃, 1987, 『戦後日華関係と国際法』, 東京: 有斐閣, 120-121쪽; 殷燕軍, 2006, 「1970年代の米中戰略交渉と日米中関係」, 『関東学院大学経済経営研究所年報』 28, 120쪽에서 재인용.

280) 別枝行夫, 1980, 「日中国交正常化の政治過程—政策決定者とその行動の背景」, 『国際政治』 66, 12쪽.

281) 伊藤剛, 1998, 「日米中関係における「台湾問題」—米中和解とその影響」, 『国際政治』 118, 118-119쪽.

282) 리한메이(李寒梅), 2022, 「국교정상화 50주년: 중일 관계의 향방은?」, 『성균차이나브리프』 10(4), 28쪽.

283) 김진호, 2018,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미중·한미관계 및 한중·북중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3(2), 95쪽.

284) 조양현, 2018, 「일본의 대한반도 전략인식-한·미동맹과 한반도 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외교』

냉전 초기 미국의 봉쇄정책은 대륙세력 소련의 봉쇄를 위해서는 림랜드에 해당하는 중국에의 접근이 중요하였으나, 중국의 공산화로 해양세력 일본과의 연계 속에서 동아시아 냉전에서 중소에 대한 봉쇄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 미중 접근과 중일국교정상화를 통해 미일 동맹에 중국을 연결시켜 소련을 고립시키는 전략 속에서, 중국의 성장은 용인되었던 것이다. 확보 대상이었던 림랜드가 이제 대륙과 해양으로 확장정책을 꾀하는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대두는 미국은 물론 일본에게도 새로운 지정학적 전략의 고민을 안겨 주었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의 배경은, 미일 동맹을 전제로 미중의 전략적 경쟁에 의한 전방위적 긴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가능성,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행동에 의한 복합 사태에 대비하여 인도-태평양과 동아시아 안보에서 일본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⁸⁵⁾

127, 124쪽.

285) 권혜수, 2022,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미일 동맹 쟁점 분석」, 『한일군사문화연구』 31, 70-74쪽.

참고문헌

- 권혜수, 2022,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미일 동맹 쟁점 분석」, 『한일군사문화연구』 31, 한일군사문화학회.
- 김승배, 2020,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동북아시아 비(非)서명국들 : 소련, 한국, 중국과 평화조약의 규범 보전」, 『일본비평』 22, 서울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김옥렬, 1976, 「전후의 일소관계」, 『성곡논총』 7, 성곡학술문화재단.
- 김진호, 2018,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미중·한미관계 및 한중·북중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3(2),
- 리한메이(李寒梅), 2022, 「국교정상화 50주년: 중일 관계의 향방은?」, 『성균차이나브리프』 10(4),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 서승원, 2014, 「21세기 동아시아 지정학과 한일 안보협력-수렴되는 중견국의 외교안보적 선택」, 『일본연구』 15,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 손열, 2013, 「미중데탕트와 일본: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 교섭의 국제정치」, 『일본연구논총』 38, 현대일본학회.
- 송병권, 2023, 「전시기 일본의 ‘대동아지정학’적 지열질서 인식의 구조와 성격」, 『일본문화연구』 87, 동아시아일본학회.
- 오승희, 2017, 「전후 일본의 인정투쟁과 중일국교정상화:: 하나의 중국론에 대한 인정론적 접근」, 『한국정치학회보』 51(1), 한국정치학회,
- 이기완, 2010, 「일본의 대중(對中) 인식과 대중(對中) 정책」, 『통일문제연구』 53, 평화문제연구소,
- 이성환 2020, 「일본의 ‘북방4개섬’ 인식과 러일 국경문제의 전개」, 『비교일본학』 49,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 조양현, 2018, 「일본의 대한반도 전략인식-한·미동맹과 한반도 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외교』 127, 한국외교협회.
- 최은봉·오승희, 2012, 「냉전기 중국과 일본의 제한적 접근과 쟁점의 유보: 중일 평화우호조약의 교섭·체결 과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2(4), 한국국제정치학회.
- Martin Glassner, Cuck Fahrer, 2004, Political Geography, 3rd edition, Hoboken, N.J.: John Wiley and Sons.
- Henry A. Kissinger, 1994, Diplomacy, New York: Simon & Schuster.
- 伊藤剛, 1998, 「日米中関係における「台湾問題」—米中和解とその影響」, 『国際政治』 118, 日本国際政治学会.
- 井上正也, 2010, 『日中国交正常化の政治史』, 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 岩下明裕, 2020, 「ソ連/ロシアの対中・対日外交から学ぶべき教訓」, 『国際政治』 201, 日本国際政治学会.
- 殷燕軍, 2006, 「1970年代の米中戦略交渉と日米中関係」, 『関東学院大学経済経営研究所年報』 28, 関東学院大学経済経営研究所.
- 岡田美保, 2020, 「日ソ国交回復交渉の再検討—ソ連による日米安保の「受容」」, 『国際政治』 200, 日本国際政治学会.
- 岡田美保, 2023, 「日ソ国交回復交渉—「冷戦の受益者日本」の意味をめぐる交錯」, 『国際政治』 209, 日本国際政治学会.

梶浦篤, 1987, 「北方領土をめぐる米国の政策—ダレスによる対日講和条約の形成」, 『国際政治』 85, 日本国際政治学会.

梶浦篤, 1994, 「奄美諸島の返還をめぐる米国の対日・対ソ戦略」, 『国際政治』 105, 日本国際政治学会.

梶浦篤, 1997a,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領土問題 (上)—条約の完成から調印まで」, 『外交時報』 1942, 外交時報社.

梶浦篤, 1997b,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領土問題 (下)—条約の完成から調印まで」, 『外交時報』 1943, 外交時報社.

梶浦篤, 1997c, 「終戦と冷戦—北方領土占領をめぐる米国の対ソ政策」, 『政治経済史学』 369, 政治経済史学会.

川島真, 2005, 「1971年以前日本の二中議政」, 國史館主辦 『「台湾1950-60年代的歴史省思—中華民國史專題第八屆討論會 (第四場)」, 2005年11月24 - 25日 . 國家圖書館.

坂元一哉, 1994, 「日ソ国交正常化交渉とアメリカ—ダレスはなぜ介入したか」, 『国際政治』 105, 日本国際政治学会.

鈴泉, 1956, 「日ソ国交正常化をいそげ」, 『医科器械学雑誌』 26(9), 日本医療機器学会.

別枝行夫, 1980, 「日中国交正常化の政治過程—政策決定者とその行動の背景」, 『国際政治』 66, 日本国際政治学会.

D.C. ヘルマン, 1969, 『日本の政治と外交：日ソ平和交渉の分析』, 中央公論新社.

溝口修平, 2014, 「日ソ国交正常化交渉に対する米国の政策の変化と連続性」, 『国際政治』 176, 日本国際政治学会.

蠟山正道, 1956, 「日ソ交渉を中心としてわが外交の方途を論ず」, 『中央公論』 71(11), 東京: 中央公論新社.

「日本国政府に対するソ連政府声明」(1975.6.17.), データベース「世界と日本」, <https://worldjpn.net/> 검색일, 2025.1.30.).

United Statee of America, 1951, Congressional Record, 97, Pt.8, Washington D.C.: USGPO(<https://www.congress.gov/bound-congressional-record/> 검색일: 2025.2.17.).

제2부 러일전쟁 이후 유라시아 지정학 논의

Discussion of Eurasian Geopolitics after the Russo-Japanese War

발표 7

지정학적 관점으로 본 푸틴의 유라시아 전략

Putin's Eurasian Strategy from a Geopolitical Perspective

이주연 Lee Ju Yeon(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지정학적 관점으로 본 푸틴의 유라시아 전략

이주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목차

- I. 머리말
- II. 러시아 지정학 전략의 배경: 신유라시아주의
- III. 러시아 지정학 전략의 재해석과 사례분석
 - 1. 러시아 대유라시아 지정학 전략의 변화
 - 2. 러시아의 대유라시아 지정학 전략 변화의 사례분석
- IV. 맺음말

I. 머리말

2014년 3월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병합되었다. 크림반도 병합은 그간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경제 지원을 하거나 가스분쟁을 일으킨 것과 다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자국 영토로 합병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주는 파급력은 컸다. 이를 두고 미드(Mead)는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문을 통해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소위 수정주의(revisionist) 세력이 탈냉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지정학의 시대가 귀환했다고 주장했다.²⁸⁶⁾ 반면 아이켄베리(Ikenberry)는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은 수정주의 세력이 아니고, 방해(spoiler) 세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자의 주장은 러시아와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에 둘러싸여 고립되어 있고, 미국이 구축한 세계질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전개했다.²⁸⁷⁾

두 연구자의 논쟁이 10년이 지난 현재 적어도 지정학 시대의 도래와 세계질서에 대한 러시아의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미드의 주장이 적합해 보인다. 왜냐하면 김성진이 주장한 것과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 우크라이나 NATO 가입을 두고 서방과 러시아 사이 지정학적 경쟁의 일환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⁸⁸⁾ 즉,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 지정학적 충돌의 관점에서 NATO를 통해 유라시아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서방과 유라시아 공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러시아 사이 지정학적 갈등이라면, 충분히 지정학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지정학 시대가 도래했다는 가정 아래 러시아의 대외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러시아의 지정학 관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대외정책을 지정학 관점으로 분석한 연구로 우선 코트킨(Kotkin)은 러시아가 지리적으로 태평양과 북극해를 제외하고 자연적인 국경이 없으며

286) Walter Russell Mead, 2014, "The Return of Geopolitics: The Revenge of the Revisionist Powers," *Foreign Affairs*,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14-04-17/return-geopolitics?check_logged_in=1 (검색일: 2024.12.22.)

287) G. John Ikenberry, 2014, "The Illusion of Geopolitics: The Enduring Power of the Liberal Order," *Foreign Affairs*,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14-04-17/illusion-geopolitics> (검색일: 2024.12.22.)

288) 김성진, 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의미와 영향」, 『슬라브학보』 제37권 2호, 6-10쪽.

로 역사적으로 외부의 침입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공격을 추구하는 팽창적 모습을 보였고, 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는 지리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트해 연안 국가를 제외한 구소련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서방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²⁸⁹⁾ 구소련 이외 지역의 러시아 지정학 전략에 관하여 레즈바니(Rezvani)는 구소련 지역에 대한 러시아 대외정책의 경우 NATO 확장에 대응한 보호적 성격에 가깝지만, 2015년 시리아 내전 개입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구소련 이외 지역의 경우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익을 얻기 위한 팽창주의적 성격이 있다고 분석했다.²⁹⁰⁾ 한편, 리글(Riegl)과 도보스(Doboš)는 러시아의 지정학 전략의 특징으로 러시아는 코소보 독립 사례를 근거로 구소련 지역에서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압하지야,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 남오세티야, 트란스니스트리아 등 미승인 국가를 경제·군사적으로 지원하여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²⁹¹⁾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지정학은 러시아의 대외정책 결정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대체로 러시아의 지정학 전략은 러시아의 공격적 팽창주의와 구소련 지역에서 러시아 영향력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물론 강정일이 지적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주변국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며 외부의 위협에 대응했고,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러시아의 팽창정책은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충돌을 발생시킨 것은 사실이다.²⁹²⁾ 그러나 단순히 러시아의 지정학적 전략을 팽창주의와 이에 따른 지정학 충돌로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서방과 지정학적 갈등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 국가와 협력 사례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는 주변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지역 강대국과 협력적 외교관계를 구축하며 서방의 국제적 고립 전략을 파훼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 지정학 전략이 단순히 갈등 지향적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러시아 지정학 전략이 갈등과 강압적 성격의 팽창 이외에도 협력 지향적인 지정학 팽창 전략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정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의 틀로 고전적 지정학이 아닌 비판지정학 관점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고전 지정학이 지리와 정치 관계 다시 말해 영토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다르게 비판지정학은 국가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서 세계에 대한 사상, 공간과 그 공간 조직에 관한 사상 등의 변화 그리고 정치적 목표 달성에 있어서 역할 등까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⁹³⁾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룰 러시아 지정학 이론은 두긴(Dugin)의 ‘신유라시아주의’이다. 후술하겠지만, 신유라시아주의는 푸틴 시기 러시아 대외정책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러시아의 지정학 전략에서 중요한 배경이 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두긴의 신유라시아주의는 21세기 변화한 세계질서와 러시아의 국내외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러시아 지정학 전략의 특징을

289) Stephen Kotkin, “Russia’s Perpetual Geopolitics,” *Foreign Affairs*,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kraine/2016-04-18/russias-perpetual-geopolitics> (검색일: 2024.12.19.)

290) Babak Rezvani, 2020, “Russian foreign policy and geopolitics in the Post-Soviet space and the Middle East: Tajikistan, Georgia, Ukraine and Syria,” *Middle Eastern Studies*, Vol.56, Issue.6, pp.878-899.

291) Martin Riegl, Bohumil Doboš, 2018, “Geopolitics of Secession: Post-Soviet De Facto States and Russian Geopolitical Strategy,” *Central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Security Studies* Vol.12, Issue 1, pp.59-89.

292) 강정일, 2019, 「러시아의 팽창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 지정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5권 2호, 151-153쪽.

293) 이정하, 2024, 「연구방법으로서의 비판지정학과 지정학적 상상력」, 『서양사연구』 제71집, 219쪽.

도출해 낼 것이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푸틴 시기를 전반적으로 다루지만,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기에 집중한다. 왜냐하면 푸틴의 외교정책 노선이 열린 정부 프리마코프의 ‘자주적 강대국 노선’에 영향을 받아 수립되었지만, 실제로 자주적 강대국을 지향하는 러시아의 대외정책이 푸틴 시기부터 성공적으로 실행되었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대외정책의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유라시아 지역으로 설정한다. 이때 유라시아라는 공간은 학자마다 정의가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신유라시아주의의 광의적 해석으로 영국과 미국의 범 아틀란티스에 대응하는 프랑스, 독일, 인도, 중국, 이슬람 국가 등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정의한다.²⁹⁴⁾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러시아의 지정학 전략이 단순히 구소련 지역에서 지역 강국의 위치를 넘어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²⁹⁵⁾

II. 러시아 지정학 전략의 배경: 신유라시아주의

지정학 이론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는가? 본래 이론은 보편성을 지향하므로 지정학 이론도 마찬가지로 어느 국가에나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러시아 지역학 이론에는 러시아가 지닌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지정학이라는 보편적 이론을 러시아의 지역적 맥락을 반영하여 러시아의 지역학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한 논쟁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이론의 보편성이 결여한다면, 러시아의 특수성이 반영된 러시아 지역학 이론이 하나의 이론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편적 지정학 이론을 수용한 러시아 지정학 이론이 현실의 상황을 반영하여 발전하면서 2000년대 이후 러시아의 고유한 지정학 이론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²⁹⁶⁾

이와 같은 관점에서 러시아 지정학 이론에 반영한 러시아의 특수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러시아의 환경요인이다. 러시아는 광활한 영토의 영향으로 자연환경에 국가가 보호받지 못하고, 동서 문명의 교차점이라는 지리적 위치로 다민족·다종교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외부 침략에 불안감이 있고, 국가 통합을 위한 정치적 사상이 필요하다. 둘째, 침략에 관한 역사의 기억이다.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13세기 몽골, 1812년 나폴레옹의 프랑스, 1941년 히틀러의 독일 등 국가 생존이 걸린 침공의 역사 기억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사적 기억은 자국의 방어를 위한 ‘방어적 확장주의’의 특징이 만들어졌다.²⁹⁷⁾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갈등과 러시아의 반서방주의이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체제 전환의 실패 이후 러시아는 서방과 협력하는 것에 부정적 인식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서방의 나토 확장과 민주주의 요구는 권위주의 체제인 푸틴 정부의 불안정성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나토와 민주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범퍼지역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반서방주의를 강화했다.

이와 같이 러시아의 특수성이 반영하여 만들어진 대표적 러시아 지정학 이론은 ‘신유라시아주의’이다. 해당 이론이 유라시아주의가 아니고, 신유라시아주의로 불리는 이유는 본래 유라시아주의는 20세기 초 러시아 망명가들을 중심으로 고전 유라시아주의가 형성되었지만, 이후

294) 권세은, 2009, 「지역연구 단위로서의 유라시아에 대한 일고」, 『중소연구』 제32권 4호, 205쪽.

295) 이진현, 2024, 「다극 세계질서의 주체로서의 문명국가와 지정학의 문제: 러시아의 이론과 현실을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34권 2호, 199-201쪽.

296) 권세은, 2024, 「현대 러시아 지정학에 대한 비판적 실재론적 이해」, 『아태연구』 제31권 4호, 86-87쪽.

297) Taylor McNeil, “The Long History of Russia and War,” Tufts Now, <https://now.tufts.edu/2022/03/31/long-history-russia-and-war> (검색일: 2024.01.10.)

구밀료프에 의해 재조명된 유라시아주의가 1980년대 두긴에 의해 정치화하여 신유라시아주의로 발전했기 때문이다.²⁹⁸⁾

유라시아주의는 서방도 아시아도 아닌 러시아 고유의 문명 정체성을 설명하는 개념이고, 유라시아주의가 주장하는 고유의 문명 정체성을 대외정책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신유라시아주의이다. 따라서 신유라시아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체성 차이는 국가 사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특히 차별화된 정체성이 정치화된다면, 특정 국가 사이의 지정학적 관계와 영토가 형성되기 때문이다.²⁹⁹⁾ 즉, 신유라시아주의가 추구하는 목적과 달성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러시아의 지정학적 목표와 전략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두긴이 주장한 신유라시아주의의 특징과 시사점을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의 지리적 특징을 고전 지정학 관점으로 파악한다. 특히 두긴은 신유라시아주의 관점에서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맥킨더의 심장부(Heart Land) 이론과 스파이크만의 림랜드(Rimland) 이론을 사용했다. 신유라시아주의의 지정학적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 간략하게 맥킨더와 스파이크만의 주장을 살펴보자면, 우선 맥킨더는 유라시아 동유럽 쪽 러시아와 아시아 쪽 러시아 대부분을 유라시아 중심(Pivot) 지역으로 설정하며 해당 중심 지역은 해상 세력의 접근을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건설함에 따라 기존의 해상 운송로를 대체 가능한 방법이 만들어졌기에 대륙세력은 해양세력의 견제를 받지 않고 성장하여 해양세력을 넘어선 시파워(Sea Power)를 형성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특히 만약 러시아와 독일이 동맹을 맺게 된다면, 대륙 세력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지역을 얻게 되어 세계 패권을 잡을 것이라는 논리를 강하게 피력했다.³⁰⁰⁾

반면, 스파이크만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 위치한 림랜드 지역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스파이크만은 “동유럽을 지배하는 자가 하트랜드를 지배한다. 하트랜드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섬을 지배한다. 세계섬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맥킨더의 주장은 틀렸고, “림랜드를 지배하는 자가 유라시아를 지배한다.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의 운명을 지배한다.”라는 명제가 더욱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러시아 지역에서 서부 지역만이 농업이 가능하고, 산업화가 우랄산맥 기준 서쪽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마저 지리적으로 장애물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대립이 실제로 발생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2차 세계 대전 사례와 같이 독일과 일본 연합과 같은 지배적인 림랜드 세력이 지정학적 승리를 거머쥘다면, 미국이 고립되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륙과 해양세력 사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³⁰¹⁾

고전 지정학 관점과 마찬가지로 두긴은 러시아가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지역의 하트랜드이고, 중국, 독일, 프랑스, 인도 등이 지정학적으로 림랜드 지역이라는 것을 동의했다.³⁰²⁾ 그러나 스파이크만이 림랜드 지역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다르게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림랜드 지역 국가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것이 신유라시아주의의 두 번째 특징이다. 좀 더 설명해보자면, 신유라시아주의는 미러갈등 상황 속 러시아의 지정학적 확장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가령 두긴은 러시아의 주적

298) 박혜경, 2014, 「신유라시아주의의 의미와 한계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 『노어노문학』 제26권 4호 378쪽.

299) 클라우스 도즈, 『지정학』 (교유서가, 2023), 160-197쪽.

300) 해퍼드 존 맥킨더, 『심장지대: 맥킨더의 지정학과 지리의 결정력』 (글항아리, 2022), 296-306쪽.

301) 니콜라스 존 스파이크먼, 『평화의 지정학』 (섬앤섬, 2008), 75-90쪽.

302) 알렉산드르 두긴, 『지정학의 기초: 러시아의 지정학적 미래』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0), 24쪽.

을 미국으로 설정하며 림랜드 지역 국가와 동맹, 전략적 침투 더 나아가 전 유라시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들과 협력이 필요하고, 적어도 해당 국가들이 미래 관계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게 만들어야 함을 강조한다. 결국 러시아의 지정학적 목표는 구소련 지역 복원, 동유럽 국가와 동맹관계 회복, 나토를 벗어나려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 그리고 이란, 인도, 일본 등 동부 대륙지역 국가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인 셈이다.³⁰³⁾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지정학적 확장정책은 지리적 범주로 보았을 때, 러시아의 남부와 서부 국경선이 대륙에 머물지 않고, 해안선까지 확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정학적 확장은 주변 국가의 영토를 정복 혹은 합병하는 수단이 아닌 유럽과 아시아 지역 강국과 반대 서양 전략동맹 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갈등적 수단이 아닌 평화적 수단으로 얻는 지정학적 이익인 셈이다.³⁰⁴⁾

결국 신유라시아주의가 주장하는 지정학적 확장정책의 본질은 유라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고, 더 나아가 림랜드 지역 강국과 협력을 추구하여 러시아가 지역 강국에 머물지 않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정학적 확장정책의 성공에 가장 유사한 역사적 시기는 소비에트 시기이지만, 소련은 당시 남쪽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그리고 극동 쪽의 중국과 협력을 이루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³⁰⁵⁾ 즉, 신유라시아주의는 무엇보다 림랜드 지역 강국과 협력적 외교관계를 통해 지정학적 이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지정학적 확장정책이 단순히 영토 확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셋째, 지정학적 확장정책의 동력은 러시아의 막대한 에너지 자원이고, 확장정책으로 얻게 될 이익은 선진화된 기술력이다. 두건은 러시아가 보유한 막대한 천연자원이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상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즉,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국가와 협력을 추구하는데 자원 수출이 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두건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소련의 기술력이 냉전의 패배를 가져왔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높은 기술력이 있는 국가와의 협력이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이 국가는 에너지 자원이 필요하지만,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 일본인 것이다.³⁰⁶⁾ 그리고 이처럼 특정 국가와 협력을 추구하기 위한 지정학 전략이 네 번째 특징이다.

지정학적 전략으로 두건은 유럽, 중동, 아시아의 지역 강국과의 협력, 특히 유럽의 경우 러시아가 독일과 지정학적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독일은 기술력이 높고, 러시아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과 지정학적 동맹을 맺기 위해 독일 중심의 유럽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영국 민족주의 분열을 지원, 프랑스의 자발적 참여 독려, 동유럽 지역에 방역지대 형성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신유라시아주의에서 아시아의 경우 인도가 지정학적 가치가 뛰어나지만, 인도는 아시아 전역에 영향력이 없으므로 동쪽의 일본과 중국과 협력적 관계를 중요시한다. 이때 중국보다 일본과의 협력을 우선시하는데 서방이라는 공동의 적을 만들기에 중국보다 일본이 더 편리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두건은 일본과 협력에 있어서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중국을 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⁰⁷⁾

303) 위의 글, 25-29쪽.

304) 위의 글, 33쪽.

305) 위의 글, 60-66쪽.

306) 위의 글, 145-152쪽.

307) 위의 글, 85-95쪽.

중동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와 다르게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보다 지정학적 거점을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란은 반미, 반대서양적 성향이 있으므로 이란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구하는데 이것은 서방의 포위 전략을 막아내는 부동향을 얻게 되는 이점이 있다. 한편, 이란과의 협력을 위해 아르메니아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튀르키예를 견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³⁰⁸⁾

III. 러시아 지정학 전략의 재해석과 사례분석

1. 러시아 대유라시아 지정학 전략의 변화

신유라시아주의와 러시아 지정학 전략은 완전히 동일한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과거 소련과 같은 강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러시아 민족주의자의 지지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 대외정책 결정에 신유라시아주의가 미치는 영향력에 관해 회의적인 입장을 찾아볼 수 있다. 가령 슬라펜토크(Shlapentokh)는 소련 붕괴 이후 푸틴과 러시아 엘리트의 지정학 인식과 두긴의 사상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푸틴이 신유라시아주의를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설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³⁰⁹⁾ 마찬가지로 칼리닌(Kalinin)은 러시아 엘리트들의 외교정책 인식과 신유라시아주의 사상과 적합성을 통계 분석한 결과 부분적 일치가 나타나므로 신유라시아주의 사상을 러시아 엘리트들이 완전히 이행하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³¹⁰⁾

이처럼 신유라시아주의에 관한 논란이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현실 러시아의 대외정책에서 보이는 지정학 전략이 신유라시아주의에서 제시하는 전략과 일정 부분에서 차별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가령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유라시아주의는 세계질서가 미국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고, 이와 같은 세계질서는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러시아와 미국 관계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제로섬 관계이다. 그러나 푸틴 1기 러시아 정부가 9.11 사건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공조했고, 메드베데프 시기 리셋(Reset)외교에 따른 미러관계 회복은 신유라시아주의에서 제시하는 기본적 가정에 오류가 있다. 또한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신유라시아주의에서 중국과 튀르키예가 일본과 이란과 비교하여 서방 세력에 가깝다고 평가하며, 견제 세력으로 분류하는데 이것도 현실의 외교관계 상황과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2014년 크림반도 병합으로 러시아 엘리트들의 정치적 이념에 신유라시아주의가 존재한 것을 파악할 수 있고, 특히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소위 ‘특별군사작전’ 시작하면서 푸틴의 판단에 신유라시아주의의 반서방 관점이 질게 반영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게 되었다.³¹¹⁾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두긴의 신유라시아주의 관점이 러시아 지정학 전략으로 모두 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대서양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독일과 일본과의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러시아 지정학 전략에서 신유라시아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신유라시아주의가 현실적인 상황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이론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따

308) 위의 글, 105-111쪽.

309) Dmitry Shlapentokh, 2007, “Dugin Eurasianism: a window on the minds of the Russian elite or and intellectual ploy?” *Stud East Eur Thought*, Vol.59, pp.215-236.

310) Kirill Kalinin, 2019, “Neo- Eurasianism and the Russian elite: the irrelevance of Aleksandr Dugin’s geopolitics,” *Post-Soviet Affairs*, Vol.35, Issue 5-6, pp.461-470.

311) Santiago Zabala and Claudio Gallo, “Putin’s philosophers: Who inspired him to invade Ukraine?” <https://www.aljazeera.com/opinions/2022/3/30/putins-philosophers> (검색일: 2025.01.19.)

라서 푸틴의 지정학적 관념(신유라시아주의)이 국제환경의 변화와 인식이 상호작용하여 지정학 전략으로 수립·실행한다고 가정한다. 즉, 신유라시아주의의 오류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환경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지만, 이것을 포용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신유라시아주의 이론에 현실의 상황을 반영한 이론의 확장 평가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로 권세은은 러시아 신유라시아 지정학의 특성을 팽창주의와 고립주의 성격 중 외부와의 갈등보다 내적 발전을 추구하는 고립주의적 성격이 더욱 크다고 분석했다.³¹²⁾ 다만 해당 연구도 국제사회 현실을 반영하여 러시아 지정학 전략을 분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신유라시아주의 관점과 러시아의 국제사회 인식과 대외정책을 분석 추가하여 러시아의 지정학적 전략의 목적과 노선을 살펴볼 것이다.

러시아의 국제사회 인식과 대외정책은 2023년에 발표한 ‘러시아 대외정책 개념’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³¹³⁾ 첫째, 서방으로부터의 자국의 생존권 보장을 강조한다.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를 위협국으로 인식하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하고 자국의 생존권과 발전을 위해 서방의 비우호적인 행동에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는 서방을 적대적으로만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방과 평등한 상호 이익이 존중된다면,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결국 러시아는 자국이 피해자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가해자인 서방이 러시아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서방과의 갈등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태도이다.

둘째,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질서 확립이다. 러시아는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패권 거부, 국제법의 강화 등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특히 특정 국가의 발전모델, 가치 등을 인정하고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다극화된 세계질서 구축을 위해 세계·지역적 차원의 안보 보장을 위한 국제 메커니즘 개선의 필요성을 적시하면서 UN의 역할 회복과 BRICS, SCO, CIS, EAEU, CSTO, RIC(러시아, 인도, 중국) 등 러시아가 강력하게 참여하는 메커니즘을 강조한다. 결국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이 배제되는 메커니즘을 거부하면서 러시아의 역할이 강조되는 다자기구가 다극화된 국제사회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셋째, 국제 및 지역에서 무력 사용의 조건이다. 유엔 헌장 51조(자위권)와 러시아와 동맹국에 대한 무력 공격 격퇴 및 예방, 평화 유지를 위해 러시아는 군대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치, 경제, 정보 통신 등을 활용한 비우호적 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진압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합법적으로 간주한다. 지역 안보 차원에서 동맹국에 대한 외부 간섭 시도를 억제하고, 지역 안보 보장을 위한 러시아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지만,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사용은 지양하고, 핵이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넷째, 테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다. 국제 테러 행위로부터 러시아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테러 분야의 다자간 협력 강화,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명시했다. 한가지 주목할 것은 극단주의 내용에서 네오나치를 포함하여, 극단주의(네오나치 포함) 조직이 국내외 정책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적, 외교적,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인터넷에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신나치주의 및 급진적 민족주의 포함)가 확산을

312) 권세은, 2024, “현대 러시아 지정학에 대한 비판적 실재론적 이해,” 『아태연구』 제31권 4호, 95쪽.
313) 해당 부분은 김혜진 편저, 『끝나지 않은 전쟁: 2023 러시아』 (다해, 2024), 이주연, 「러시아 반서방 대외정책의 현황과 전망」, 88-92쪽을 참고하여 작성했다.

지지할 것임을 밝혔다는 것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 세력으로부터 러시아어 사용자들의 보호를 침공의 명분으로 삼았고 현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네오나치를 지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극단주의에 네오나치를 포함한 것은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테러전, 사이버전 등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주장한 것이다.

다섯째, 국제 및 지역에서 러시아 문화 확산과 보호이다. 러시아는 비우호국의 루소포비아와 같은 적대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이미지를 강화하고, 특히 러시아어의 위상을 강화하길 원했다. 이외에도 러시아 공공외교를 발전시키고 러시아와 CIS 역내 러시아 정체성을 보호·발전시킬 것을 주장한다. 특히 러시아는 역사 왜곡, 루소포비아, 신나치주의 확산, 민족적 배타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나치 독일에 대한 승리, 유엔 창설에 대한 소련의 기여, 세계 역사에서 러시아 역할, 정의로운 국제사회를 위한 정확한 정보 확산 등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여섯째,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 지원이다. 러시아 이외에도 해외 지역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동포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것은 이전의 조지아 전쟁, 크림반도 병합, 우크라이나 전쟁 등 사례와 같이 해외 동포 보호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기존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해당 항목을 토대로 근외 지역의 해외 동포 보호 명목은 러시아 군사 개입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교정책의 지역별 우선순위이다. 러시아 외교정책 개념에 명시되어 있는 우선순위는 △근외지역 △북극 △유라시아 대륙(중국과 인도 포함)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슬람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유럽지역 △미국과 기타 앵글로색슨 지역 △남극 순서로 작성되어 있다. 우선순위에서 보이듯 러시아는 서방과의 관계보다는 근외 지역과 유라시아 지역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즉, 러시아는 서방과의 관계 개선보다 비서구 국가와의 관계를 증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별 우선순위로 보아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분열, 다극화, 블록화 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023년 러시아 대외정책 개념과 신유라시아주의의 시사점을 비교해 보면, 반서방 인식과 러시아 지정학 공간의 보호의 필요성 강조 그리고 린랜드 지역을 우선시하는 것은 유사하다. 즉, 전반적으로 세계질서를 바라보는 관점과 세계질서에 대응의 필요성 등은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러나 지정학 전략에서 주요 협력국에 관한 차이가 있다. 특히 신유라시아주의에서 강조하는 독일과 일본과의 협력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역내 다자기구보다 역외 다자기구인 BRICS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확장된 BRICS 플러스에 이란이 2024년에 가입했고, 튀르키예가 가입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신유라시아주의에서 이란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튀르키예도 협력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다르다.

신유라시아주의에서 중국과 튀르키예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과 다르게 러시아 지정학 전략에 중국과 튀르키예가 주요 협력국으로 변화한 원인으로 중국과 튀르키예가 주요 에너지 수출국으로 부상했고, 점차 반서방 정체성이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러시아에 부족한 기술력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국의 지정학적 가치가 일본을 대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 지정학 전략 변화 사례를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다.

2.러시아의 대유라시아 지정학 전략 변화의 사례분석

a.러시아의 대아시아 지정학 전략 변화: 일본에서 중국으로

일본이 반서방 연대 참여, 에너지 수요국, 기술력 공급국이 될 것이라는 두건의 주장과 다르게 일본과의 협력은 미진하다. 오히려 러시아는 서방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했던 중국과의

협력관계가 공고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우선 미중 갈등이 첨예화됨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 사이 미국을 견제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시진핑 집권 이후 기존의 중국 체제보다 권위주의 성향이 짙어지면서 러시아와 유사한 수정주의 형태로 정치체제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공통으로 NATO의 동진과 색깔혁명의 확장을 비난하고 있다. 러중은 공통적으로 NATO의 동진과 색깔혁명이 유라시아 공간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고립하려는 미국의 지정학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호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지정학 전략인 일대일로가 러시아의 물류망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지정학적 확장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도 하다. 물론 러시아의 지정학 전략 중 하나인 대유라시아파트너십이 일대일로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푸틴은 대유라시아파트너십과 일대일로는 경쟁적 관계가 아니고, 상호보완적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는바 양국의 지정학 전략의 충돌이 가시화하고 있지 않다.

경제적 요인으로 중국의 고속성장으로 세계 공장으로서 중국의 역할이 강화되었는데 이때 막대한 에너지 수요가 발생했고, 러시아가 이를 충당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2014년 크림병합 이후 러시아가 유럽으로 천연가스 수출이 어려워지자 러시아는 '시베리아 힘'을 개통하여 중국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판매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매년 사상 최대 교역액을 달성하며 양국의 경제관계가 긍정적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기술협력 분야를 살펴보면, 러시아와 중국의 기술 협력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기초과학기술이 뛰어나고 우주항공 분야에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기초과학기술력이 부족하지만, 기술의 상업화 4차 산업 시대 러시아가 부진한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력을 중국으로부터 해결하고 있다. 가령 5G, 양자통신, 위성항법시스템, AI, 반도체, 자원 관련 엔지니어링, 북극 개발, 스마트팩토리 등에서 성과를 얻고 있다.³¹⁴⁾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으로 지정학 전략의 필요성과 실질적 성과를 높이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사하고 있지고, 서방을 비롯한 자유주의 연대는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제재하여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와 에너지 개발 분야가 대체적으로 선진화된 서방의 기술협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러제재는 러시아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막대한 자원을 구매하고, 첨단 분야 기술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든든한 우방국으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일본이 아닌 중국과의 협력을 선택한 지정학 전략의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b.러시아의 대코카서스 지정학 전략 변화: 아르메니아에서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로

러시아 대코카서스 지정학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관계를 포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에서 러시아와 튀르키예 사이 직접 군사적 충돌은 없었지만, 아르메니아를 지원하는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을 지원하는 튀르키예 사이 신경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국은 튀르키예가 NATO 회원국이고, 자국의 전통적 우방국인 아르메니아와 부정적 관계에 있으므로 튀르키예에 대한 견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314) 이상준, 조정원, 2024, 「러시아와 중국의 과학기술 협력 강화 배경과 추진체계」, 『중소연구』 제48권 2호, 207-260쪽.

튀르키예에 대한 러시아 정책의 변화가 처음 감지된 것은 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이다. 1차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이후 러시아와 OSCE 민스크 그룹의 평화 중재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갈등은 점차 깊어졌고, 결국 2020년 9월 27일 2차 전쟁이 발발했다. 2차 전쟁의 경우 2016년 4일 전쟁과 다르게 전투가 국경선에 한정되지 않고, 간자, 스테파나케르트, 마르투니 등 도심 지역에서도 폭격이 발생했다. 전황이 아르메니아 측에 불리하게 진행되자 아르메니아는 휴전을 요구했고, 러시아의 중재로 11월 9일 휴전협정을 맺게 되었다. 휴전협정에 따라 러시아가 5년 간 약 2천 명의 평화유지군을 제공하여 군사 충돌을 막아주어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평화는 금세 깨지게 되었다. 2023년 9월 19일 반테러작전을 주장하며 나고르노-카라바흐에 대한 공습으로 아르메니아에 자치세력이 투항했고, 9월 18일 아르차흐 공화국 해체를 선언하며 2024년 1월 1일부로 국가기관 해산을 발표했다. 이로써 12만 명의 아르메니아계 주민 중 약 10만 명의 주민이 아르메니아로 피신했고,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아제르바이잔 편입으로 길었던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이 종식되었다. 또한 러시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평화유지군도 철수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아르메니아의 지정학적 가치보다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의 지정학 가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³¹⁵⁾

2차 분쟁에서 러시아의 태도는 1차 분쟁 시기와 다소 다른 점들을 찾아보자면, 첫째, 아르메니아는 러시아가 유라시아 지역에서 주도하는 EAEU와 CSTO 회원국으로 아제르바이잔과 비교하여 외교적으로 더 가까운 국가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2차 전쟁에서 러시아가 아르메니아를 지원할 것이라는 예측과 다르게 2차 전쟁에서 러시아는 아르메니아 측에 불리한 조건으로 휴전을 주도했다. 둘째, 푸틴은 튀르키예가 민스크 그룹의 일원이므로 분쟁 해결에 개입할 여지가 있음을 밝히며 튀르키예의 개입을 인정했다. 이것은 기존에 러시아가 3자(러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협상을 선호한 것과 다르게 제3의 국가를 인정한 것이다.

러시아의 대코카서스 지정학 전략 변화의 원인으로 첫째, 코카서스 지정학 전략의 힘의 투자 조정의 필요성이 증가이다. 2014년 크림병합 이후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첨예한 갈등이 발생했고,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로 주변 지역에 자국의 국력을 소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러시아가 코카서스 지역에 투사할 수 있는 역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둘째, 아제르바이잔의 지정학 가치의 증가이다. 일함 알리에프 정부는 친튀르키예, 근서방, 근러시아 대외정책과 같이 균형 외교를 실행하고 있었고, 아제르바이잔의 경제·안보 관계가 러시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 가령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자원의 의존도가 낮지만, 수입의 15% 이상을 러시아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2015년 기준 무기 수입의 8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제르바이잔의 전략적 가치도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아르메니아 측을 지원하는 것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

셋째, 튀르키예에 대한 지정학 인식의 변화이다. 본래 튀르키예는 중동지역에서 유일하게 NATO 국가이므로 서방 세력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튀르키예가 점차 권위주의가 심화함에 따라 서방이 요구하는 자유주의와 다른 정치 발전이 이루어졌다. 게다가 NATO

315) Kirill Krivosheev, "The Cost of Russia's Friendship with Azerbaija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Carnegie Russia Eurasia Center*, <https://carnegieendowment.org/russia-eurasia/politika/2024/05/the-cost-of-russias-friendship-with-azerbaijan?lang=en>

회원국 중 반러시아 경향성이 떨어지고, NATO 관계에서 레버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측면에서 터키스트림이 완전히 가동하게 된다면, 러시아 제재를 우회하여 유럽에 천연자원을 수출할 가능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2014년 크림병합 이후 서방과의 갈등이라는 국제수준의 환경변화와 지역 수준에서 새로운 에너지 판매처와 서방의 고립을 무력화할 수 있는 지정학적 림랜드 형성의 필요성이 증가했으므로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의 가치가 높아져 아르메니아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정학 전략의 수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VI. 맺음말

본 연구는 러시아의 대유라시아 지정학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두건의 신유라시아주의의 시사점을 적용했다. 그러나 신유라시아주의가 현실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는바 2025년 러시아 대외정책 개념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러시아 지정학 전략을 재해석했다. 분석결과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와 같이 강압적 방법으로 영토를 획득하는 확장정책 이외에도 중국과 튀르키예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외교적 협력을 통한 지정학적 확장정책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향후 러시아의 대유라시아 지정학 전략의 수정이 가능한가? 본 연구의 시사점을 토대로 예측해보자면, 적어도 푸틴 시기까지 지정학적 확장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푸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과의 관계가 완전히 제로섬 관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서방이 국제사회의 소수이고, 세계다수인 글로벌사우스 국가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외교형 지정학적 확장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러시아의 외교형 지정학적 확장정책의 변화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우선 푸틴 정부가 붕괴하고, 서구주의 엘리트가 집권하는 경우이다. 이 시나리오의 경우 러시아 내에 푸틴을 대체할 수 있는 유력 정치가가 존재하거나, 러시아의 신유라시아주의 경향을 대체할 지정학 노선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 푸틴을 대체할 수 있는 정치가가 없고, 신유라시아주의를 대체 할 수 있는 이론적 사상도 부재하다.

두 번째 시나리오로 중국과 튀르키예가 친서방 노선으로 변화하여 러시아 고립전략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해당 시나리오 중 중국의 친서방 연대 편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중국은 노골적으로 G2 지향하고 있고,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튀르키예의 경우 에르도안 정부가 교체될 경우 다소 친러시아 노선에서 친서방 노선으로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튀르키예가 세속적이지만, 이슬람 정체성이 있으므로 서구주의 정체성과 다소 거리감이 있으므로 완전히 친서방 노선으로 대외정책이 변화하기 어렵다.

한편, 러시아의 외교형 지정학 확장정책의 사례를 중국과 튀르키예로만 설명하는 것은 부족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외에도 인도, 이란, 인도네시아 등 양자차원의 협력 사례와 BRICS를 통한 글로벌사우스 지정학 전략을 추가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주장하는 러시아의 지정학 전략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정일, 2019, 「러시아의 팽창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 지정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5권 2호, 151-153쪽.
- 권세은, 2009, 「지역연구 단위로서의 유라시아에 대한 일고」, 『중소연구』 제32권 4호, 205쪽.
- 권세은, 2024, 「현대 러시아 지정학에 대한 비판적 실재론적 이해」, 『아태연구』 제31권 4호, 86-87쪽.
- 권세은, 2024, “현대 러시아 지정학에 대한 비판적 실재론적 이해,” 『아태연구』 제31권 4호, 95쪽.
- 김성진, 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의미와 영향」, 『슬라브학보』 제37권 2호, 6-10쪽.
- 김혜진 편저, 『끝나지 않은 전쟁: 2023 러시아』 (다해, 2024), 이주연, 「러시아 반서방 대외정책의 현황과 전망」, 88-92쪽.
- 니콜라스 존 스파이크먼, 『평화의 지정학』 (섬앤섬, 2008).
- 박혜경, 2014, 「신유라시아주의의 의미와 한계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 『노어노문학』 제26권 4호378쪽.
- 알렉산드르 두긴, 『지정학의 기초: 러시아의 지정학적 미래』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0).
- 이상준, 조정원, 2024, 「러시아와 중국의 과학기술 협력 강화 배경과 추진체계」, 『중소연구』 제48권 2호, 207-260쪽.
- 이정하, 2024, 「연구방법으로서의 비판지정학과 지정학적 상상력」, 『서양사연구』 제71집, 219쪽.
- 이진현, 2024, 「다극 세계질서의 주체로서의 문명국가와 지정학의 문제: 러시아의 이론과 현실을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34권 2호, 199-201쪽.
- 클라우스 도즈, 『지정학』 (교유서가, 2023).
- 해퍼드 존 매킨더, 『심장지대: 매킨더의 지정학과 지리의 결정력』 (글항아리, 2022).
- Babak Rezvani, 2020, “Russian foreign policy and geopolitics in the Post-Soviet space and the Middle East: Tajikistan, Georgia, Ukraine and Syria,” Middle Eastern Studies, Vol.56, Issue.6, pp.878-899.
- Dmitry Shlapentokh, 2007, “Dugin Eurasianism: a window on the minds of the Russian elite or and intellectual ploy?” Stud East Eur Thought, Vol.59, pp.215-236.
- Kirill Kalinin, 2019, “Neo- Eurasianism and the Russian elite: the irrelevance of Aleksandr Dugin’s geopolitics,” Post-Soviet Affairs, Vol.35, Issue 5-6, pp.461-470.
- Kirill Krivosheev, “The Cost of Russia’s Friendship with Azerbaija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Carnegie Russia Eurasia Center, <https://carnegieendowment.org/russia-eurasia/politika/2024/05/the-cost-of-russias-friendship-with-azerbaijan?lang=en>
- Martin Riegl, Bohumil Doboš, 2018, “Geopolitics of Secession: Post-Soviet De Facto States and Russian Geopolitical Strategy,” Central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Security Studies Vol.12, Issue 1, pp.59-89.
- G. John Ikenberry, 2014, “The Illusion of Geopolitics: The Enduring Power of the

Liberal Order,” Foreign Affairs,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14-04-17/illusion-geopolitics> (검색일:
2024.12.22.)

Santiago Zabala and Claudio Gallo, “Putin’s philosophers: Who inspired him to
invade Ukraine?”
<https://www.aljazeera.com/opinions/2022/3/30/putins-philosophers> (검색일:
2025.01.19.)

Stephen Kotkin, “Russia’s Perpetual Geopolitics,” Foreign Affairs,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kraine/2016-04-18/russias-perpetual-geopolitics> (검색일: 2024.12.19.)

Taylor McNeil, “The Long History of Russia and War.” Tufts Now,
<https://now.tufts.edu/2022/03/31/long-history-russia-and-war> (검색일: 2024.01.10.)

Walter Russell Mead, 2014, “The Return of Geopolitics: The Revenge of the
Revisionist Powers,” Foreign Affairs,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14-04-17/return-geopolitics?check_logged_in=1 (검색일: 2024.12.22.)

제3부 종합토론

Comprehensive Discussion

- 구자정 Koo Ja-Jeong(대전대학교 교수)
- 석주희 Suk Ju Hee(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정준영 Jung Joon-Young(서울대학교 교수)
- 송희영 Song Hwi-Young(영남대학교 교수)
- 손석의 Sohn Suk Eui(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서인원 Seo In-Won(독도학회 이사)
- 최덕규 Choi Deok-Kyoo(고려대학교 교수)

구자정 (대전대학교 교수)

고전지정학의 형성에서 러시아 문제가 가지는 함의를 정면으로 다룬 이진일 선생님의 이 발표문은 러시아/소련/우크라이나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간 한국 러시아사학계에서 관심 있게 다루지 않았던 러시아에 대한 고전지정학자들의 관점과 시각에 대한 소개와 분석을 통해 해당 국가 연구자들이 인식하지 못한 채 감옥에 갇혀 있던 “인식의 감옥”을 깨닫게 해준다는 점에서 관련 학계와 관련 연구자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 서양사학계는 양적 질적으로 크게 팽창했으나 그 팽창의 이면에는 러시아사 연구자들은 러시아사 연구자들끼리, 독일사 연구자들은 독일사 연구자들끼리 소통하고 학술적 논쟁을 진행하는 각국사 학회의 분절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본 발표문이야말로 왜 이 분절을 넘어서야 하는지 왜 각국사 연구자들의 소통이 필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본 발표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루소포비아”의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는 글이라 사료됩니다. 현재도 그렇고 냉전기도 그렇고 심지어 19세기 이전 근대 시기에 도 러시아의 행동과 그 행동 이면의 동기에 대해서는 러시아 측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상황이 지속되었는데, 이 글에는 그러한 오해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토론자 개인적으로도 마한에 대해서는 다소 아는 바가 있었으나, 랫젤과 쉘렌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기에 본 발표문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럽을 횡행하던 지정학 기반 “러시아공포증”이 어떠한 동기와 배경에서 태동하여 작동하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이러한 지정학적 관점이 20세기 초 독일 제2제국의 러시아 정책에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었는가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역사적 연원 중 하나가 20세기 초 독일 제2제국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독일이야말로 우크라이나 태동의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1918년 러시아 혁명기 첫 우크라이나 국가의 등장에서 독일의 정책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시기 우크라이나는 전 국토가 독일군의 지배 아래 있었고, 독일이 후원한 헤트만 스코로파드스키 정권은 실질적으로 작동한 최초의 우크라이나 독립 국가였습니다. 독일군의 점령이 없었다면, 오늘날 발트 3국 역시 독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독일이 강제한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은 우크라이나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독일군 총사령부의 행보에서 발표문에서 다룬 러시아 문제에 대한 중부유럽의 지정학적 사고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나치 독일 제3제국에서 관련 사안은 잘 연구되어 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에서 더욱 중요한 시기인 제1차세계대전 말기 독일 제2제국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책과 그 지정학적 배경은 잘 탐색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국가유기체론에 입각한 지정학적 사유가 이 시기 독일의 동방정책에 미친 실질적 영향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결의 질문입니다. 일견 본 발표문에 내용의 근거로 사용된 일부 텍스트 그 자체가 그 자체로서 “루소포비아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이를 문의드리는 이유는 해당 텍스트들이 논지의 근거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분석 대상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지리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역사, 문화적으로도 러시아가 동양과 서양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인식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와 이해를 나누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게도 오랫동안 공유되어 왔다. 러시아 스스로도 이 둘 사이 어디에도 소속을 정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내부적 자각과 충돌의 과정을 겪는다: “러시아에서 이 양가성은 동과 서 사이의 일종의 존재적 불확정성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다시 말해 거의 3세기 동안 불가항력적으로 몹시 성가시게 이 사회의 자의식의 정중앙을 관통해 온, 진정한 지리적 정신분열증이라고 할 수 있다”를 보게 되면,

때로 루소포비아적 성향으로 지적받기도 하는 연구자 Mark Bassin의 이 텍스트는 물론이고 발표문에 인용된 키신저의 저작 역시 “로마식 보편 정교국가”를 지칭했던 모스크바 러시아(동로마 모델: Tsardom)나 표트르 대제 이후의 러시아 제국(서로마 모델: Empire)의 역사적 배경, 또는 유라시아주의와 같은 동서를 모두 아우르는 러시아 정체성에 관한 러시아인들 자신의 설명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들 지정학자들의 설명에는 독일인의 피가 흐르는 왕조(로마노프)와 프랑스어가 사실상 공용어였던 엘리트의 지배 아래 제국 시기 귀족작위 소유 민족집단은 폴란드인이었던 전형적 “다민족 보편국가”였던 러시아 제국 스스로가 내세우던 공식적 보편제국 정체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토론자의 결론으로는 러시아의 정체성을 “동과 서” 사이 갈등으로 보는 것보다는 동로마 기반 동슬라브 정체성과 서로마 기반 서구 정체성이 혼재된 보편국가의 그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라시아주의”라는 러시아 자체의 지정학적 사유에 미친 고전 지정학의 영향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이를 질문드리는 이유는 사실 멀리 제정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러시아 사상사의 계보학적 궤적에서 “서구와는 다른 러시아의 특수한 길”을 주창하던 슬라브주의자들의 그것은 (그들의 범슬라브주의가 범게르만주의를 많은 부분 따른 것처럼) 사실상 독일의 Sonderweg 테제를 따른 것이기 때문이며, 오늘날 회자되는 유라시아주의라는 러시아 토착의 지정학적 사유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Sonderweg Russlands”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인데, 발표문에 나오는 몇 내용들은 그 주어를 “독일”에서 “러시아”로 바꾸면 구밀료프나 두긴과 같은 2세대 또는 3세대 유라시아주의자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 해도 믿기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그 내용들이 흡사하고 흥미로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한이 바라본 러일전쟁과 러일해전’ 토론문

석주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 글은 러일전쟁을 주제로 마한(A.T.Mahan)의 저서에 기초하여 러시아와 일본의 해양 전략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마한의 해양전략이라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러일전쟁에 대한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러일전쟁은 동북아해양영토에 대하여 역사적, 정치적, 군사적 관점에서 중요한 맥락을 제시합니다. 우선 필자가 서술한 바와 같이 러일전쟁의 결과 일본은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러일전쟁은 동북아시아 해양영토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국가 간 해양에 대한 극명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마한이 분석한 바와 같이 러시아가 패배한 직접적인 요인은 요새함대라는 원칙의 실패, 공격과 방어의 균형 붕괴, 속도의 부족 등 전술 실패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요인은 필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해양을 관리하는 능력’ 또는 해양을 보는 인식에 대한 두 국가 간 차이가 아닌지 혹은 리더십 요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해양력에 대한 러시아, 일본 두 국가 간 인식의 차이는 본문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필자가 서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광대한 영토와 거대한 인구에 힘입어 적에게 자신을 내맡기며 생존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러시아 함대를 뤼순항구에 집중하도록 하거나 재정적 압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정보와 전술로 해양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동해해전에 관한 서술에서도 러일 간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로제스트벤스키의 해군전략은 실패한 반면, 도고 제독은 신속한 정보와 전술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은 주로 마한의 시각에서 해양전략과 전술에 기반하여 러일전쟁의 상세한 상황을 기술 분석하였습니다. 필자가 주목한 마한의 해양전략 외에도 보급 능력이나 요새 방어 실패 등 다른 맥락에서도 러일 전쟁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러일전쟁 당시 일본 본토의 지원과 만주지역의 일본군 보급 능력이 전쟁 승리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뤼순함대가 요새에 포를 상륙시키고 포대를 지원하는 것 외에 요새 방어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는지, 러시아는 함대를 오직 방어로만 인식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생존경쟁과 영토 팽창’ 토론문

정준영 (서울대학교 교수)

흥미로운 발표 잘 읽었습니다. 1903년에 일어난 제국대학 7박사 사건은 후술할 러일전쟁의 개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상적, 정치적 맥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공부하는 지식사회사 혹은 학술제도사의 관점에서는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한 대학교수에 대해서 그 발언을 ‘학적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의 논란, 다시 말해 대학의 자유 혹은 자치自治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저의 관심은 애초부터 이 후자에 관련된 것입니다만, 해외출장 중에 온 전화에 얼떨결에 토론을 수락하고 말아서 이렇게 이 토론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사상의 전문가도, 당시 독일사상에 대한 해박한 학식도 없는처지에 이런 토론이 과연 가능할까 걱정입니다. 발표자 선생님 및 청중께서 양해해주시다면, 일반 청중의 입장에서 이 발표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이라든가 약간의 의문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 무거운 부담을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읽기에 이 발표는 1903년 7박사 사건에서 개진된 러일전쟁개전론의 논리에서, 에른스트 헤켈과 프리드리히 라첼로 이어지는 독일 특유의 사회진화론 흐름과 이를 대표하는 지정학적인 개념인 생존권生存圈, 즉 ‘레벤스raum’이 사상적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를 매우 치밀하고, 그리고 흥미롭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헤켈과 라첼이 ‘레벤스raum’을 제시하게 되는 사상적 전개과정 및 그 정치사회적 맥락을 정리하고 계시는 2장의 부분은 이 발표의 백미 중 하나로 ‘사회진화론의 독일적 맥락 및 그 전개과정’을 이해하려는 독자에게 크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 발표의 중심주제가 되는 이른바 7박사사건은 당시 일본 메이지정부가 취했던 입장이었던 타협적인 만한교환론滿韓交換論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국가의 생존”이라는 논리로 러시아와의 개전을 주장했으며, 이 여론몰이를 통해 실제로 러일전쟁이 발발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일본의 학계에서는 이들이 주장했던 ‘국가의 생존경쟁’이라는 논리적 근거와 사상적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발표자께서는 ① 그 건의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했던 도쿄제국대학 교수 오노즈카 키헤이지小野塚喜平次가 건의서와 같은 해에 출간한 『정치학대강政治学大綱』의 참고문헌에 라첼의 저서인 『정치지리학Politische Geographie』이 언급되어 있다는 점, ② 이 라첼에게 큰 영향을 미친 스승이 헤켈인데, 이 헤켈을 경유해서 사회진화론을 수용했던 것이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였으며, 국가유기체설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노즈카 등 7박사는 내부적인 의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라첼의 영토팽창 이론과 상당히 유사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서, 러일전쟁을 전후해서 일본의 사상계를 풍미했던 이른바 사회진화론의 사상적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써, 독일의 집단주의적인 사회진화론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계십니다. 과연 흥미로운 문제제기이며, 당시 일본에서 사회 진화론적 관점이 어떻게 제국주의적 팽창과 사상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흥미로운 열쇠 중 하나가 아닐까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표자의 조심스런 연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독일과 일본에서 전개되었던 영토팽창 논의의 사상사적 맥락에 대한 탁월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과연 양자 사이에 직접적인 관

계성 혹은 영양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게 불가능하다면, 양자의 사례를 같이 놓고 갖고 다름을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피상적인 감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만, 궁금했던 지점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엽적인 질문입니다만, 오노즈카가 7박사 사건 무렵에 쓴 저서의 참고문헌에 라첼의 저작이 들어 있다는 사실은 발표자께서 잘 설명해주셨습니다만, 과연 그것만 가지고 ‘헤켈-라첼’ 류의 ‘레벤스raum’ 개념 혹은 그 비슷한 논지의 영향을 오노즈카가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노즈카의 『정치학대강』 본문에서 참고문헌에 있는 라첼의 책이나 그 주장은 어떻게 언급되고 있을까요? 둘째, 첫 질문보다는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만, 오노즈카나 러일전쟁 당시 제국대학 교수들이 제시했던 영토확장의 논리라는 것이, 그것을 심지어 ‘생존권’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꼭 헤켈이나 라첼 특유의 이론적인 사유를 매개하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울 만한, 그렇게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연하자면, ‘생명선生命線’이든 ‘국가의 생존경쟁’이든 개념의 새로움은 확실히 있었지만, 러일전쟁 개전론에서 제기되는 발상 그 자체는 다소간 상식적이어서 전통적인 병학兵學이나 전술론에서도 나올 수 있을 법한 것들이고, 당시 사회진화론의 흐름 안으로 두고 봐도, 스펜서와 맬서스의 논의 지형 속에서 도출될 수 있을 만하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반문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발표자께서도 다케베 돈고의 논의에서 언급하셨듯이 말입니다. 애초에서 라첼의 ‘레벤스raum’ 자체가 이른바 지적인 유행어처럼 부상했던 것이 1910년대, 1차 세계대전 전후였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칠박사 집단이 제시했던 영토팽창론의 사상적 배경으로 이 ‘레벤스raum’에 착목하는 것은, 혹시 시대착오적 해석으로 비칠 위험성이 없지 않을까요? 설령 오노즈카 스스로가 그랬다고 해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2장의 독일논의와 3~4장의 일본논의가 이처럼 직접적이고 명확한 사상적인 영향관계를 설정하기 어렵다고 했을 때, 오히려 당시 지구적 차원에서 지정학적으로 전개되는 국제상황 속에서 이것을 동시 발생적으로 성립되고 연쇄된 ‘사상의 연쇄’라고 한다면,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같이 본다는 것은 단순히 영향을 따지는 문제를 넘어서, 독일의 사례로 일본의 사상적인 전개를 상대화하고, 반대로 일본의 사례로 독일의 사상적인 전개를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의 ‘글로벌 히스토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마지막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감상에 가까운데요, 그만큼 여러 가지 흥미로운 생각꺼리를 많이 주시는 좋은 발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황한 말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러일전쟁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러일관계’ 토론문

송휘영 (영남대학교 교수)

오늘 이나바 치하루(稲葉千晴)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나고야의 메이쥬 대학교(名城大学)에 재직하고 계시는 이나바 교수님은 국제정치사(國際政治史)가 전공이시고 특히 러일관계사(日露關係史), 러일전쟁(日露戰爭)에 관한 연구로는 일본 최고의 연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나바 교수님의 발표에 토론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로 일본 고문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관련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러일전쟁 이후 러일관계에 제대로 코멘트가 가능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이번 발표를 통해 러일전쟁 이후 동아시아의 질서재편 과정에서 「제1차 러일협약」 ~ 「제4차 러일협약」이라는 협력(동맹)관계가 있었다는 내용은 많은 공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한반도와 만주의 이권을 두고 당시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한 러시아를 상대로 러일전쟁을 일으킨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유될 만큼 큰 도박이었지만, 사전에 영일동맹, 카츠라=태프트 협약 등의 안전장치 위에 개전을 하였고, 뤼순해전 봉천 전투 등을 승리로 이끌면서 결국 동해해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동아시아의 제해권을 장악하기는 하였지만 당시 일본은 재정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곤란을 겪으면서 미국의 중재로 1905년 9월 포츠머스 조약에 조인하게 됩니다.

그 결과, 청일전쟁과 같은 전쟁배상금은 청구하지 않았지만 일본은 동아시아의 변방국가에서 일약 제국주의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시아의 신흥 강국으로 등장시킵니다. 미국의 중재로 맺은 포츠머스 조약에서 일본이 얻은 주된 이권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 ①러시아는 일본에게 남부 사할린 섬을 할양한다.
- ②러시아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한다.
- ③러시아는 뤼순항과 남만주 철도의 조차권을 일본에 할양한다.

러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확립하였고, 이후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하며 제국주의 국가로서 본격적인 침략의 행보를 본격화 합니다. 반면 러시아는 전쟁 패배로 인해 국내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였고, 1905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며 차르 체제의 기반이 약화하여 1917년 러시아제국의 붕괴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러일전쟁의 역사적 의미는 첫째, 유색인종(아시아) 최초의 서양 열강에 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국가로서 최초로 서양 열강에 승리하며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제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식민 지배를 받던 아시아 국가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으나, 일본은 이후 서양열강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침략국이 되었습니다. 둘째, 포츠머스 조약으로 인해 일본은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했는데, 이는 1910년 대한제국의 강제 병합으로 이어졌고, 한국은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셋째, 세계 질서의 변화인데, 러일전쟁은 서구 열강 중심의 세계 질서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은 이후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넷째,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확대로 연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 이후 제국주의적 야망을 더욱 키우며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침략을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러일전쟁과 그 이후 러일협약 등 러일관계의 변화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①러일전쟁과 그 이후의 협상은 국제 정세와 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국제 관계에서의 힘의 균형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②러일전쟁과 그 이후의 협상이 오

늘날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기초를 제공하는 사건이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907년 7월의 <제1차 러일협약>과 1912년 8월 <제3차 러일협약>, 1916년 7월 <제4차 러일협약>에서는 “협약(協約)”, 1910년 7월 <제2차 러일협상>에서는 “협상(協商)”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협상과 협약은 국제적 조약, 조규로서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당시 용어로서 그렇게 사용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독도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울릉도 망루(3곳)는 동해해전 이전인 1904년 9월에 설치했고, 같은 해 1904년 9월 24일 독도 망루 설치를 위한 조사, 1905년 8월 19일 준공과 더불어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업무 개시(6명 주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독도에 설치한 망루는 러일전쟁과 무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독도망루도 러일전쟁에 대비하여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설치했다는 것은 맞는 사실인지 어떤지요?

참고로 이나바 교수님의 대표 저작을 제시합니다.

<이나바 치하루(稲葉千晴) 교수의 대표 저작>

稲葉千晴著, 『明石工作：謀略の日露戦争』<丸善ライブラリー158> 丸善 1995年.

稲葉千晴著, 『ロシア外交史料館日本関連文書目録 1(1850-1917年)』ナウカ, 1996年

稲葉千晴著, 『ロシア外交史料館日本関連文書目録 2(1917-62年)』ナウカ, 1997年

稲葉千晴(監修), 『イラスト図解 日清・日露戦争』(イラスト図解シリーズ), 日東書院, 2010年.

稲葉千晴著, 『バルチック艦隊ヲ捕捉セヨ：海軍情報部の日露戦争』 成文社, 2016年.

稲葉千晴訳/ コンスタンティン・プレシャユフ (著), 『日本海海戦：悲劇への航海』上・下, NHK出版、2020年.

‘냉전 전후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개념과 독일-러시아 관계’ 토론문

손석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 논문은 러시아(소련)와 ‘유라시아’ 개념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을 둘러싼 지정학적 중요한 이슈들을 다룹니다. 러시아(소련)가 유라시아를 어떻게 ‘상상’했는지와 그것이 우크라이나-러시아 관계의 현재 발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합니다. 이 논문은 러시아가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준 전략적, 역사적 정당화에 대해 설명합니다.

저는 특히 러시아 영토를 둘러싼 지리적 요인-북쪽의 얼어붙은 바다-이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전략적 관심을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유럽 역사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것이 저자가 언급한 미국과 러시아 군사 작전의 ‘개입주의(interventionism)’ 유형에 대한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군사 작전은 지리적 이유로 미국 본토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수행되는 반면, 러시아는 이웃 국가들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다릅니다.

저자가 설명한 러시아의 유럽과의 관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슬라브 민족의 민족주의나 인종/민족 정체성의 역할이었습니다. 미국이 외교 정책에서 민족주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민족 정체성이 러시아와 미국의 전략적 사고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구조와 제도가 국가의 이익과 전략을 형성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부에 대한 지원 등이 러시아의 영향력 확장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왜 푸틴은 민족적 상상과 역사적 연결을 통해 러시아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러시아의 행동 정당화의 근원은 무엇 일까요?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맥락에서 독일-러시아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두 국가는 항상 어려운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 복잡한 양자 관계의 지리적 배경과 1990년대 이후 협력의 근본적인 갈등 원인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This paper covers a wide range of geopolitically critical issues surrounding Russia (Soviet Union) and its perspectives on the concept of “Eurasia”. How Russia (Soviet Union) ‘imagined’ Eurasia and how it is historically connected to the current development in Ukraine-Russia relations are quite profound, as it delves into both strategic as well as historical legitimation of Russian behaviors towards neighboring states.

I personally found how geopolitical factors surrounding Russian territory-frozen waters on the northern borders-shaped Russia’s strategic interests towards Europe. Though I am not an expert on history of Europe, I believe this became the foundation for different types of ‘interventionism’ the author mentions about US and Russian military operations. While the US military operations are, for geopolitical reasons, conducted on remote regions away from the American soil, Russia’s relations with immediate neighbors were largely defined by the fact that it

is physically connected them.

I do not believe that comparing the types of interventionism between Russia and the US i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of this seminar. All the same, what I found most intriguing about the author's description of Russia's relations with Europe is the role of ethnic nationalism or the idea of racial/ethnic identity of the Slavs. Could the ethnic identity explain the differences between Russian and American types of strategic thinking, given that the US had hardly been influenced by ethnic nationalism in terms of external policymaking?

Personally, I believe that structure and institutions shape national interests and strategies. Given that perspective, could it be that Russia's war on Ukraine or its support for Assad government in Syria, etc. is a part of Russia's interests in extending the sphere of influence? If not, why does Putin feel the necessity for justifying Russian behaviors by appealing to ethnic imaginations and reconstructing historical connections? Put simply, what is the source of Russia's legitimation of its actions?

Lastly, I would like to ask the significance of German-Russian relations in the geopolitical context. I understand that the two states have always had difficult relations, but could you elaborate on geopolitical background on this complex bilateral relations and what you believe to be the fundamental source of conflicts (and post-1990s cooperation)?

‘전후 일본 외교에서 미중소 관계의 지정학적 해석’ 토론문

서인원 (독도학회 이사)

이 발표문은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전략, 측면에 대해 전후 일본의 외교에 있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일소국교정상화 교섭, 중일국교정상화 교섭이라는 사례를 들어 미국관계와의 지정학적 해석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강화조약 관련 미국은 연합국을 대표로 강화조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공산주의 확대 방지를 위한 일본영토의 미군 기지화하려는 의도와 일본 정부의 비징벌적인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정치적 공작에 의해 동북아시아의 영토문제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 채 미해결로 남게 되었다.

1949년 9월23일 소련이 원폭 소유를 발표하고 10월 1일에는 중국 본토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면서 극동에서의 냉전구조는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연합군최고사령관 맥아더의 연두 성명은 일본의 자위권을 강조하고 1월 31일에 방일한 미통합참모본부(JCS) 브래들리(Omar Nelson Bradley)의장은 오키나와와 일본의 군사기지 강화를 성명했다. 그리고 7월에는 경찰예비대(자위대 전신) 창설과 해상보안청의 증강이 점령군으로부터 지령되어 일본은 재군비로 진행되었다. 이런 사항에서 시볼드는 미국의 국익에 관계있는 문제로써 안전보장의 고려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47년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핀란드 각각 강화조약을 맺었다. 타국의 강화조약을 비교하면 일본의 강화조약은 원래 대체로 같아야 하는데 미국의 냉전 정책에 의해 관대한 강화조약이 되었다. 이 강화는 국내경제와 국제관계를 평화로 발전시키고 세계의 자유 제국의 대부분이 향유하는 기회를 일본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되는 강화가 된 것이다. 일본과의 강화조약은 복수의 강화가 아니라 화해의 강화라고 말할 수 있고 일본을 국제사회에 위엄과 평등, 기회로 복귀시키고 비징벌적인, 비차별적인 조약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타이완, 평후제도 귀속을 불명확하게 하고 이 지역을 영유해야 하는 중국정부에 대해 국제간 일치가 없는 결과, 국제적으로 불안정을 남기게 되었다.

일본은 쿠릴열도 및 사할린 일부와 인접 제도의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있다. 이것은 알타협정, 포츠담선언으로 예상되었던 조항이 실현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련에 반환 혹은 인도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소련의 불참가를 예상하고 알타협정의 구체적인 실현에 대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련에의 반환 인도는 규정하지 않았다.

1953년 12월 아미미오시마(奄美大島)의 일본 반환할 때 발표된 성명에서 덜레스는 극동에 위협과 긴장의 상태가 존재하는 한 미국은 오키나와에 있어 현재의 권력과 권리를 계속 행사한다고 결의를 표명했다. 이것은 극동아시아의 국제적 긴장이 해소될 때까지 미국이 반영구적으로 오키나와를 지배하려고 하는 ‘블루 스카이 포지션’의 논리이다.

게다가 덜레스가 제안한 4도 반환론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것이 냉전을 배경으로 일소 간에 영토분쟁의 요소를 뿌려두면 미군 주둔의 정당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센카쿠제도 문제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역외균형 전략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남쿠릴 4도 문제는 1956년의 일소공동선언이래, 반세기이상 그 해결이 미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냉전시대 미일동맹을 외교의 축으로서 서구 진영에 속한 일본은 남쿠릴 4도 문제를 정치적인 면에서 소련과 화해하지 않는 이유로 영토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러나 냉전 후의 일본외교에서 이 문제는 장애가 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러일 관계는 냉전시대의 일소관계와 비교하면 확실히 정치·경제·안보·문화 등 모든 면에서의 교류를 통해 신뢰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영토문제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평화조약이 아직도 체결되지 않고 양국관계는 정상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관계가 개선되고 신뢰조성이 진행되어도 영토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긴장이 재연되거나 대립이 가속화되는 위험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

일본의 애매모호한 2도 반환, 2도 반환 후 교섭을 통한 2도 반환, 3도 반환, 4도 반환 등의 정책들은 러일양국이 영토문제를 협상하는 데에 러시아에게 혼란을 주었고, 러시아는 이를 이용해서 자국영토의 영유권 강화를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의 민족주의 고양으로 인한 우경화는 양국간의 영토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힘들게 하고 있다.

중일국교정상화 이후 센카쿠제도 문제는 판단 보류로 중일정상간 합의를 했으나, 2012년 9월 일본정부가 센카쿠제도를 국유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런 계기로 미국 오바마정부는 그동안 센카쿠제도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왔으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회귀 정책으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태도로 바꿨다.

중국도 국가 안보와 발전의 이익에 부합하는 현대 해상 군사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주권과 해양 권익을 보호하고, 해양 강국 건설을 위한 해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동아시아지역 국가들간 분쟁이 예상된다. 동중국해 상공에서의 ADIZ 설정,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조성, 센카쿠제도 영공·영해에서의 침범 행위는 중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 정세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센카쿠제도, 쿠릴열도, 독도에 대해 일본에서 영토문제가 논의될 때 사용되는 용어가 고유의 영토라는 단어이다. 지금 일본에서 고유의 영토는 모든 의문을 제기하는 개념으로 정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설은 1959년에 개발된 정치적 용어로 1950년대 러시아와의 쿠릴열도 분쟁에서 만들어진 논리와 함께 하나의 세트가 되었다.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쿠릴범위에는 남쿠릴 열도인 쿠나시르, 에토로후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당시의 공유된 인식과 델레스 제안에 의한 쿠릴 4도 일괄반환을 국가 정책으로써 내세울 밖에 없었던 현실을 감안해 1950년대부터 내세웠던 것이 북방 영토 용어이고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개념이다. 델레스 제안 배경에는 일본의 쿠릴열도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에는 오키나와 반환을 요구하는 우려를 해소하고 러일 간 영토문제라는 분쟁상태를 지속시키는 것이 미국에 많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러일양국이 급속하게 우호관계로 개선되는 것에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고 러일간의 영토문제에 개입하여 양국 우호관계 개선을 방해하였다. 이런 분위기로 인하여 일본 외무성은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쿠릴열도 중에 쿠나시르·에토로후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최초로 나온 시기는 1951년 3월 「하보마이반환간청에 관한 결의」에서 하보마이를 일본 홋카이도 일부로 보고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정의한 데에서 나왔다. 그리고 1956년 2월 11일 모리시타 정부차관은 국회답변 정부통일견해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강화조약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 쿠릴 2도(쿠나시르·에토로후)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정부의 견해이다. 쿠나시르·에토로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쿠나시르·에토로후가 일본의 영토인 것은 1855년 시모다 조약에 의해 러시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러시아측은 영토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일본은 쿠나시르·에토로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양국간에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않았다.

쿠릴열도(북방영토)라는 것은 하보마이, 시코탄, 쿠나시르, 에토로후의 4도를 지칭하지만, 1964년 6월 외무차관 통지에 의해 이전에 쿠나시르, 에토로후를 가르켰던 남쿠릴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북방영토’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북방영토라는 용어는 러일교섭때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통용되지 않았던 용어였지만,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정리해 가는 도중에 정치적 용어로 발전하여 쿠릴 4도를 북방영토로 부르게 된 것이다.

「맷은말-G2시대 중국요인의 등장과 인도태평양전략」에서 전후 일본 외교와 미중소 관계의 지정학적 전략과 동일하고, 냉전, 신냉전이 있는 한, 미중소 관계의 지정학적 해석은 유사할 것 같은 데, 전후 지정학적 관계와 현재의 지정학적 관계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참고문헌

서인원, 「1950년대 일본 고유영토설의 정치적 분쟁화 모순점에 대한 고찰」 『영토해양연구 제 15호』, 동북아역사재단, 2018.6

, 「일본 군사력 증강 관련 법체제 정비에 대한 고찰」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7호』, 한일군사문화학회, 2019.6

, 「센카쿠제도 관련 중일양국의 해양정책 변화와 동아시아 안보의 현황에 대한 고찰」 『한일군사문화연구 제30호』, 한일군사문화학회, 2020.10

, 「남쿠릴열도 영토분쟁 해결의 비현실성과 정치적 분쟁화에 대한 고찰」 『독도논총 제 11권 제1·2호』(통권 제12호), 독도조사연구학회, 2020.12

, 「일본 영토정책이 가지는 지정학적 함의에 대한 고찰」 『독도연구총서』, 독도재단, 2022.12(공저)

,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나타난 동아시아 영토갈등 기원론의 법리 검토」 『한일군사문화연구 제36호』, 한일군사문화학회, 2022.12

‘지정학적 관점으로 본 푸틴의 유라시아 전략’ 토론문

최덕규 (고려대학교 교수)

1. 발표문의 의의

2010년대 이후 학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관련 저작의 출간과 성과가 축적된 연구 분야 가운데 하나가 지정학이다. 19세기 말 국제관계 분야의 새로운 연구방법론으로 각광 받았던 지정학은 제2차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부침을 겪었지만 세계 공간을 지리환경에 따라 구분하고 그 공간에 가치를 부여했던 지정학은 오늘날 다시 부활하고 있다. 이는 단일화된 세계가 다극화 되면서 지구를 지리 공간별로 분류하였던 지정학의 효용성에 대해 재발견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발표문에서 다루고 있는 푸틴의 유라시아 전략은 10년 전부터 러시아 정부가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아시아로의 전환(turn to Asia)”과 관련이 깊다. 러시아와 아시아, 특히 중국과의 연결 문제는 현 상황에서 러시아의 실존과 연관되어 있는 최우선의 과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이번 학술회의에 발표된 “지정학적 관점으로 본 푸틴의 유라시아 전략”은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푸틴의 유라시아 전략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시기에 집중하여 러시아 대외정책의 변화를 정리한 것은 발표문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발표자는 20세기 초 러시아 망명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전 유라시아주의가 1980년대 러시아 정치사상가 두긴(A.Дугин)에 의해 “신유라시아주의”로 발전하였음을 설명했다. 신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1) 러시아의 환경요인 2) 방어적 확장주의 3) 반서방주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 발표문은 푸틴의 지정학에 대한 기본 윤곽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보완 사항

이 발표문을 논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 지정학과 유라시아주의에 대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발표문에서 인용된 국내 대부분의 연구에서 러시아 지정학과 유라시아주의에 대해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연구와 구분이 되는 이 발표문 고유의 독창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발표문은 국내 업적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해당 주제에 대한 정리는 질 되어있으나 이 글의 우수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독창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바란다. 참고로 동북아역사재단은 “2023 NAHF 포럼” 「신냉전의 도래와 문명의 충돌 - 중국의 인류운명공동체와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를 중심으로」에서 스웨덴 쇠데르텐 대학의 마크 바신(Mark Baasin)교수를 연사로 초청하여 “러시아-유라시아에서 대유라시아로 지정학적 상상의 진화(FROM RUSSIA-EURASIA TO GREATER EURASIA: THE EVOLUTION OF A GEOPOLITICAL IMAGINARY)”에 대한 발제를 들은 바 있다. 마크 바신의 발제도 발표문의 논문화 작업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둘째, 독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러시아 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이 발표문은 푸틴의 러시아 지정학을 주제로 하였음에도 러시아 자료를 전혀 인용하지 않았다. 이는 논의의 폭을 스스로 제한하는 한계를 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 자료를 활용할 경우, 유

라시아주의에 대한 서방과 러시아 연구자들의 인식 차이라든가, 활용하고 있는 자료의 차이가 어떻게 그들의 러시아 지정학에 대한 견해에 반영되었는가 등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정학에 대해 국내 번역서를 활용하는 것 보다는 원본을 인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표문의 4-5쪽에서 발표자는 매킨더(H.J.Mackinder)의 “역사의 지리적 중심축”을 번역한 “해퍼드 존 매킨더 지음, 임정관·최용환 옮김, 『심장지대: 매킨더의 지정학과 지리의 결정력』(글항아리, 2022), pp. 303-304”를 인용했다. 그러나 이 번역서는 번역 오류가 산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문 내용을 삭제하여 번역하였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용에 주의가 요망된다.

Mackinder H.J.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i>The Geographical Journal</i> , Vol. 23, No.4, 1904 p. 436	
This might happen if Germany were to ally herself with Russia. The threat of such an event should, therefore, <u>throw France into alliance with the over-sea powers, and France, Italy, Egypt, India, and Corea would become so many bridge heads where the outside navies would support armies to compel the pivot allies to deploy land forces and prevent them from concentrating their whole strength on fleets.</u>	
해퍼드 존 매킨더 지음, 임정관·최용환 옮김, 『심장지대: 매킨더의 지정학과 지리의 결정력』, 글항아리, 2022, pp. 303-304.	토론자 번역
만약 하나 독일과 러시아가 합병했다면 금세 이 가능성은 현실이 될 우려가 있다. 만약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u>프랑스로서는 하는 수 없이 해외의 모든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여러 나라의 해군이 각각 상륙부대를 지원해서, 내륙의 동맹국가들에 지상병력을 강화시키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추축세력이 그 함대의 건설에 전력을 쏟을 수 없도록 할 것이다.</u>	독일이 러시아와 동맹이 된다면, 이는 현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적인 사태는 <u>프랑스가 (英美日) 해양 국가들과 동맹을 체결하도록 할 것이고, 프랑스, 이탈리아, 이집트, 인도 그리고 한국(Corea)은 해양 국가의 해군들이 육군을 지원하는 교두보가 될 것인바, 추축국 동맹은 이에 대응한 지상군을 배치해야만 함으로써 함대에 전력을 쏟지 못하게 할 것이다.</u>

발표문에서 “매킨더는 특히 만약 러시아와 독일이 동맹을 맺게 된다면, 대륙 세력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지역을 얻게 되어 세계 패권을 잡을 것이라는 논리를 강하게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번역문을 충실히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번역본에는 매킨더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언급한 부분을 이유없이 삭제해 버리고 상상의 번역으로 점철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매킨더의 지정학이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는 그의 논문이 러일전쟁 직전에 발표되었음에도 전쟁의 경과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프랑스가 러시아 발트 함대의 극동 파견 계획을 고려하여 영불양탕트(1904.4.8.)를 체결했던 사실과 인천에 상륙한 일본군이 압록강을 넘어 러시아의 여순 요새를 배후에서 공략하여 함락시킨 사실 등은 로제스트벤스키 함대가 쓰시마 해전에서 참패한 원인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2025년 독도연구소 국제학술회의

러일전쟁과 영토의 지정학적 조명

러일전쟁과 유라시아 지정학의 변천